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2021.10

(사)한국정당학회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2021. 10.

(사)한국정당학회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2021. 10.

(사)한국정당학회

#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 국 정 당 학 회

연구책임자: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성조(순천대학교)
이선우(전북대학교)
장영덕(인하대학교)
연구보조원: 정다빈(한국외국어대학교)


사 업 기 간 : 2021. 07 ~ 2021. 10


본 연구보고서는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Ⅱ.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 5**

1.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 5
2.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 8
3.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사업 현황 ····· 13
   1)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 13
   2) 공약이슈지도 ····· 15
   3)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 17
5. 해외사례 탐구: 유권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구현 ····· 19
6.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모델 제안 ····· 25
7. 디지털 정책선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 30
   1) 법제도적 과제 ····· 30
   2)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디지털 격차의 문제 ····· 32

**Ⅲ. 전문가 델파이 조사 디자인 ····· 33**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 33
2. 정책영역별 정책이슈 및 키워드 도출 배경 ····· 34
   1) 정치/행정/사법 ····· 34
   2) 재정/경제/복지 ····· 46
   3) 국방/통일/외교통상 ····· 53
   4) 산업자원/건설교통 ····· 77
   5) 교육/인적자원 ····· 83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91
   7) 과학기술/정보통신 ····· 98
   8) 보건의료/환경 ····· 106

Ⅳ. 정책영역별 분석 ····· 115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15
1) 정치/행정/사법 ····· 116
2) 재정/경제/복지 ····· 121
3) 산업자원/건설교통 ····· 125
4) 교육/인적자원 ····· 128
5) 문화/체육/관광 ····· 132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37
1) 정치/행정/사법 ····· 138
2) 재정/경제/복지 ····· 144
3) 국방/통일/외교통상 ····· 148
4) 산업자원/건설교통 ····· 156
5) 교육/인적자원 ····· 159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164
7) 과학기술/정보통신 ····· 168
8) 보건의료/환경 ····· 173
3. 소결 및 정책선거 전망 ····· 179
1) 정치/행정/사법 ····· 179
2) 재정/경제/복지 및 산업자원/건설교통 ····· 179
3) 국방/통일/외교통상 ····· 180
4) 교육/인적자원 ····· 181
5)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181
6) 과학기술/정보통신 ····· 182
7) 보건의료/환경 ····· 183

Ⅴ. 결론 ····· 184

참고문헌 ····· 189

부록 ····· 195

# 표 목차

<표 2-1>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 9
<표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작성지침 양식 ····· 10
<표 2-3> 연도별 희망공약 제안하기 접수 건 ····· 15
<표 3-1>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 59
<표 3-2> 2016년~2021년 한국의 국방예산 ····· 63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 115
<표 4-2>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16
<표 4-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16
<표 4-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17
<표 4-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18
<표 4-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19
<표 4-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0
<표 4-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1
<표 4-9> 재정/경제/복지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1
<표 4-10> 재정/경제/복지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2
<표 4-11> 조세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3
<표 4-12> 재정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3
<표 4-13> 공정거래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4
<표 4-14> 사회복지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4
<표 4-15> 사회적경제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5
<표 4-16>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5
<표 4-17> 산업자원·에너지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6
<표 4-18> 건설교통 및 부동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7
<표 4-19>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7
<표 4-20>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8
<표 4-21> 교육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29
<표 4-22> 노동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0
<표 4-23>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1
<표 4-24>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2
<표 4-25> 문화/체육/관광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2
<표 4-26> 문화/체육/관광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3
<표 4-27>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4
<표 4-28>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5
<표 4-29>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6
<표 4-30>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6

<표 4-31> 1, 2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변화 ····· 137
<표 4-32> 정치/행정/사법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8
<표 4-3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39
<표 4-3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0
<표 4-3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1
<표 4-3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2
<표 4-3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3
<표 4-3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3
<표 4-39> 재정경제복지 영역 정책이슈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4
<표 4-40> 재정경제복지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5
<표 4-41> 조세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5
<표 4-42> 재정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6
<표 4-43> 공정거래 이슈 하위키워드 1,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7
<표 4-44> 사회복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결과 비교 ····· 147
<표 4-45> 사회적 경제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48
<표 4-46>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순위 ····· 148
<표 4-47>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149
<표 4-48> 통일 및 남북관계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51
<표 4-49> 국방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52
<표 4-50> 외교/안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54
<표 4-51> 통상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55
<표 4-52>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56
<표 4-53> 산업자원·에너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57
<표 4-54> 건설교통·부동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58
<표 4-55> 농업해양수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59
<표 4-56> 교육/인적자원 상위 키워드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0
<표 4-57> 교육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1
<표 4-58> 노동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2
<표 4-59> 청년/여성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3
<표 4-60> 노인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4
<표 4-61>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64
<표 4-62>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5
<표 4-63>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6
<표 4-64>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6
<표 4-65>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167
<표 4-66>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순위 ····· 168

<표 4-67>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168
<표 4-68>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69
<표 4-69> 연구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71
<표 4-70> 정보통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72
<표 4-71>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순위 ····· 173
<표 4-72>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174
<표 4-73> 공중보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75
<표 4-74> 의료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76
<표 4-75> 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178

# 그림 목차

<그림 2-1> 매니페스토 사이클 ····· 7
<그림 2-2> 희망공약 제안 작성 화면 ····· 14
<그림 2-3>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 ····· 16
<그림 2-4>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 17
<그림 2-5>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메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 18
<그림 2-6>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목록 ····· 19
<그림 2-7> 호주 유권자 교육 센터(AEC for Schools) ····· 21
<그림 2-8>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s, UK.) ····· 22
<그림 2-9>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메니페스토 웹페이지 ····· 23
<그림 2-10> 영국 노동당(Labor Party)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 23
<그림 2-11> 영국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과 녹색당(Green Party)의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 24
<그림 2-12>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 프로젝트(Vote Smart) ····· 25
<그림 2-13> 폴리피디아 플랫폼(Polipedia Platform) 구성안 ····· 28
<그림 2-14> 폴리피디아를 통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모델 ····· 30
<그림 3-1> 델파이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33
<그림 3-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48
<그림 3-3>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 58

# 요약문


○ 유권자의 지지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사회경제적 배경, 후보자에 대한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이 크나 정당 및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 또한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임.

○ 한국 선거 과정은 여전히 정책선거 부재로 인해 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서도 정책선거 구현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임.

○ 특히,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과 지적 세련도(sophistication)의 향상과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터넷 인프라와 다양한 네트워킹 플랫폼의 확대 공급을 통해 시민의 지식 정보환경을 빠르게 개선하였으며,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한국의 선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민주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연구는 2022년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정책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연구 도출하여, 이러한 키워드들을 연계 활용하는 효과적 정책선거 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정치정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정책선거 사업 추진 모델을 제안하고 디지털 시대에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유권자들에게 최적화된 선택(informed decision)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전문가 집단 심층 토의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영역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지만 여전히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는 제도적으로 온전하게 정착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선거 관련 플랫폼 개발이나 제도적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 빠르게 발전되어 사회 각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정책선거 분야에도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정책선거 모델의 개발을 고민해봐야 함.

○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와 함께 인류가 그간 발전시켜 온 다양한 ICTs 기술들이 온라인 비대면 공간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정책선거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모델 개발은 중요한 당면과제임.

○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확대된 정보환경을 바탕으로 대량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을 구축하고 활용할 줄 아는 스마트 시티즌(smart citizens)의 등장은 개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들(희망공약 제안하기,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정책·공약 알리미)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시티즌(digital citizens)의 요구에 충분한 수준은 아님.

○ 따라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위한 정책선거 추진모델로 개별 공간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정보들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언제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platform)으로써 가칭 폴리피디아(Polipedia)를 제안함.

○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오픈 소스 정책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정책 수요자)와 후보자(정책 공급자)가 함께 소통하며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고 매니페스토의 선순환 구조를 폴리피디아 플랫폼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정보의 유통 과정 속에 가짜 뉴스(fake news)나 허위 정보(misinformation) 등의 확산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플랫폼 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팩트체크(fact-check)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사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제고될 것임.

○ 또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폴리피디아로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제도적 적응을 넘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확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책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정책선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며 그 결과를 다음 선거로 연계할 수 있는 일종의 환류(feedback) 구조를 구현하고 선거정책의 생산-공유-평가라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디지털 정보 기반의 세련된 유권자들의 존재가 보편화될 수 있으며, 정보 기반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의 구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 정책영역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 이슈 및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8개의 정책영역(정치/행정/사법, 재정/경제/복지, 국방/통일/외교통상, 산업자원/건설교통, 교육/인적자원, 문화/언론/관광/스포츠, 과학기술/정보통신, 보건의료/환경)을 발굴하고 각 영역별 정책 이슈 및 세부 키워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2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의 주요 정책이슈와 상위키워드 및 하위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는 역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될 것으로 보임.

○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이 항상 가장 높은 정책이슈이고, 사법개혁의 경우는 최근 주요한 정책 쟁점으로서 그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위키워드 수준에선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법원개혁, 지방균형발전 등이 주요 공약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유사한 맥락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나 검찰수사권조정 등 대표적인 하위키워드들 또한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이외에는 권력구조 개헌 등이 꽤 중요성이 높은 상위키워드로 응답되었는데, 그럼에도 개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다른 개헌 이슈들의 경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한편, 상위키워드와 하위키워드 조사결과 간에 다소간 차이가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았음.

○ 예컨대, 정책이슈로서 지방자치는 특별히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데 반해, 지방균형발전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각 2, 3위로 그 응답률이 최상위권에 들었음.

○ 또한 이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균형발전 이슈의 하위키워드인 수도권과밀화해소의 경우 역시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전 분야의 하위키워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오는 등, 본 정책 이슈도 대선에서 대단히 높은 중요성을 지닌 공약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에 사회안전 정책영역에서는 비록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그 응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이슈 정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정책영역에서 다른 상위키워드나 하위키워드에 포함된 것들 가운데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된 공약 이슈는 특별히 없었음.

○ 재정·경제·복지 영역의 상위키워드에서 조세기조와 연금정책, 아동육아, 소상공인 지원, 소득보장의 중요성이 높게 조사되었음.

○ 재정·경제·복지 영역의 하위키워드에서 법인세, 상속증여세, 공평과세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관심이 높았으며 기초생활보장제나 보육서비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

○ 국방·통일·외교통상은 지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핵심 정책 영역임. 특히,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는 한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해당 정책 영역은 통일 및 남북관계, 국방, 외교 및 안보, 통상의 정책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정책 이슈에 대한 상위키워드는 통일 및 남북관계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교류협력,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경협, 통일인식으로 구분하였

고, 국방 이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북핵문제, 사이버안보, 자주국방, K-방산으로, 외교 및 안보 이슈는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 다자외교, 공공외교, 개발협력,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강화, 미중무역갈등, 디지털 무역(DEPA), GVC 재편, 자유무역협정, 무역장벽확대 등으로 구분함.

○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는 1, 2차 모두에서 외교/안보로 나타남. 2순위로는 통일 및 남북관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한반도가 처한 안보 및 외교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모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정책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상위키워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같은 맥락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이슈에서도 한미동맹, 남북교류협력, 북핵문제 등 남북문제 혹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중요도를 보임.

○ 구체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의 하위키워드에서는 정전협정/체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개성공단 등이 중요하다고 나타남.

○ 주목할 만한 것은 개성공단, 이산가족, 남북철도연결, 남북교역 등이 상위에 집계되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 국방 정책 이슈에서는 군처우개선(군인권), 방산비리개혁, 한미동맹, 미중관계, 방위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순으로 집계됨.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하위키워드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의 사이버 인력의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방위산업 기술의 국산화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최근 KF-21 출시와 함께 주목받은 것으로 보이며, 한미미사일지침의 종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외교/안보 정책 이슈에서는 상위키워드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재외국민의 하위키워드로 재외국민보호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냄. 이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 외에 K-pop/한류, ODA, 다자안보협력, 미중패권경쟁 등의 하위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조사됨. 특히, 공공외교나 개발협력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교환경의 유리한 조성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통상 정책 이슈에서는 환경 관련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집계됨.

○ 하위키워드 중에서는 환경규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부각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환경규제로 무역장벽이 생기고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임.

○ EU의 탄소배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높은 순위로 집계되었는데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무역장벽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한국의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도체 경쟁, 기술패권경쟁도 중요한 하위키워드로 집계되었고, 이는 국가 간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의 상위키워드에서 주거안정, 부동산세제 및 규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제조업 지원 등의 순으로 중요성이 조사되었음.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에 대해서는 단연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도가 높았고 이후 에너지 및 산업 부분에 관한 관심이 높았음.

○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의 하위키워드 조사에서 임대주택, 재건축, 보유세, 광역교통망 확충, 차세대산업지원, 중소기업 고용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방안 등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동산 문제와 (재)분배 영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아짐과 동시에 후보자 간 견해차가 명확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러한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공약 간 내적 정합성을 가지는 것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 정책영역은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고령화 등 네 가지 정책 이슈를 포괄하고 있음. 교육 정책 이슈는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인프라 문제를 다루고 있고, 노동 정책 이슈는 청년, 여성, 노인 고용 문제 및 노동자 안전망, 노동 현안 등을 포괄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논쟁이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해결방안이 시급한 청년, 여성, 노인 계층에 대한 이슈도 교육/인적자원 정책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하였음.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청년 일자리였고, 다음으로 저출산, 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노후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 분야 중에서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슈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육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대학구조조정, 사교육비 경감, 학교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음.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노동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사망사고 책임 강화, 노인일자리 중 취업지원제도가 중요한 키워드로 채택되었다. 이외에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도 우선순위로 나타나서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차별 인식 격차, 디지털성범죄 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젠더폭력, 젠더갈등이 중요한

사회갈등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외에 여성 건강검진 확대, 청년공공주택 등이 우선순위로 채택되었음.

○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국민연금 강화, 맞춤형 공동주택 등으로 나타났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 영역에서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음.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청년 일자리였고, 다음으로 저출산, 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노후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저출산-돌봄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으나 1차 조사 결과, 5순위였던 노후 보장(고령화)이 4순위가 되었음.

○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청년 일자리, 저출산, 돌봄, 고령화 등 청년 문제와 인구 변화 이슈가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했고, 교육 관련 이슈들이 다소 하락한 것이 특징임.

○ 교육이슈 하위키워드를 보면 1차 조사 결과처럼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교육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교인프라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사교육비 경감, 대학구조조정 순으로 나타나 대학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학교인프라 개선, 사교육비 경감 등의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가 상승하였음.

○ 노동이슈의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도 취업지원제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정채용, 사망사고 책임 강화,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나타나서 1차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육아휴직, 성차별 인식 격차, 청년공공주택, 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나타나 우선 순위 그룹에 큰 변동은 없었음.

○ 2차 조사 결과,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역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국민연금 강화, 맞춤형 공동주택 순으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그리고 4차산업혁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임. 이에 따라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해당 분야의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지난 공약들이 반복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엄밀한 평가 없이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청년, 노인 분야는 정당 간 차별성이 낮아 유권자 선택의 폭이 좁고, 노인 공약은 공약 제시가 미흡함.

○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책선거 어젠다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약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해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의 주요 정책이슈와 상위키워드 및 하위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는 언론 및 방송개혁과 문화 정책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언론 및 방송의 경우, 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항상 중요한 정책이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특히 중요성이 높은 공약 이슈로 조사되었을 것이라 사료됨.

○ 문화 정책이슈의 경우, 상위키워드 수준에서 그 응답률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하위키워드 중에선 문화인프라 확충과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등 문화의 질적·경제적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슈들이 대선 공약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집계됨.

○ 반면, 정책이슈로서 관광과 스포츠 분야는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문화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관광산업 진흥에 직결된 하위키워드이기 때문인지 K-관광콘텐츠 개발의 경우 그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왔고,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지 국내관광, 특히 로컬관광의 중요성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응답됨.

○ 무엇보다도 도쿄 올림픽 시점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인지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성이 높은 하위키워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로 보임.

○ 결론적으로 볼 때,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에서 주요 대선 공약은 언론 및 방송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시될 소지가 커 보이고,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의 내용적 수준 제고에 관한 이슈들과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이슈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커 보임.

○ 관광과 스포츠 정책이슈의 경우, 중요한 공약으로 다수가 포함될 것 같아 보이진 않으나, 일종의 스몰딜로서 꽤 영향력 있는 개별 공약들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영역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 ICT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 영역임.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국가이며,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당 정책 영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연구환경의 정책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정책 이슈에 대한 상위키워드는 과학기술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초/기반연구, SW/인공지능(AI)으로, 정보통신은 정보보호, 디지털경제, 디지털뉴딜, 디지털무역(DEPA)의 키워드로, 연구환경은 R&D와 지식재산으로 구분함.

○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환경을 제외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중요하다고 집계됨. 각 정책 이슈에 해당하는 상위키워드 중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높

은 순위를 나타냈고, 기초/기반연구, SW/인공지능(AI)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남. 이 같은 응답은 과학기술의 경우 향후 사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핵심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디지털경제, 정보보호의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디지털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정보보호는 개인의 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이슈에서의 하위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생명과학, 융합적 사고력, 교육 및 인력양성, ICT/융합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키워드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생명과학도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정보통신 이슈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 관련 키워드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특히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5G의 보편화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보건의료/환경 정책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의 환경문제는 해당 정책 영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해당 정책 영역은 공중보건, 의료, 환경의 정책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정책 이슈에 해당하는 상위키워드로는 공중보건의 경우 코로나19, 질병관리로 구분하였고, 의료의 경우 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개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위기, 그린뉴딜, 대기오염, 자원순환, 해양/수자원으로 구분함.

○ 정책 이슈 중에서는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환경의 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정책 이슈별 상위키워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에서는 코로나19가, 의료에서는 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개혁이 모두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환경에서는 기후변화/위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이들 상위키워드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기후변화/위기로 이는 기후변화가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이슈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특히 공공의료 계획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의료개혁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중보건 이슈 중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관련 키워드들이 중요하다고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에서의 하위키워드 중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백신접종, 국가검진사업, 방역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 중 감염병 예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의료 이슈에서는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공공병원, 의료법 개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집계됨. 특히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인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논란이 함께 존재함.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적자가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육성, 의료법개정 등도 주요 키워드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병원이나 의료법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환경 이슈에서의 하위키워드로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해양생태계 등의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나타남. 하위키워드 중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 생활과 함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임.

○ 지구온난화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는 자연재해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의 키워드도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미세플라스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 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따라서 선거 과정 가운데 유권자가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소비자로서 정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잘 구현해 줄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치 체제는 분명 모범적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한국에서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상하였으나, 정책선거 관련한 여러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서 정책선거 부재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있어 왔음.

○ 우리 선거가 보다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보화 혁명에 힘입어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지적 세련도(sophistication)가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데 있음.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일반시민의 지식 정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왔고, 이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 선거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민주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정책선거를 활

성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대량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구현이 가능해진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는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 개별 정당의 정책 이슈별 공약이나 정책을 파편화되고 분산된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정책 수요나 관심에 따라 정책들을 정당별, 이슈별, 또는 지역별로 선택 분류하여 비교할 수 있고, 그러한 비교 작업을 통한 개별 유권자의 평가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간편하게 공유하고 소통 가능해야 함.

○ 쌍방향의 소통형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제고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은 상시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역동성을 더하게 될 것임.

○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정책 경쟁과 비교→정책토론과 의견 공유→선거 참여→메니페스토 평가→다음 선거과정이라는 선순환의 상시적 구조가 구현된다면 디지털 시대 정책선거는 더욱 효율적이고 역동적 전개가 기대됨.

○ 한편, 정보화 시대 유권자들이 새로이 경험하고 있는 정보 불확실성과 불충분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선거 구현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 및 지방 권력 선출이라는 두 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열리는 2022년을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 정책 분야들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연구 도출하였음.

○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 플랫폼 구축과 그 콘텐츠로써 정책 키워드 도출 작업은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책 이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정책 중심의 선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결국, 본 연구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어젠다와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여 유권자들의 정책선거와 정보기반 투표(informed decision)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보기반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존재함.

○ 또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선거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책선거 사업 추진모델을 제안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에 대한 장벽과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정책선거가 다수 유권자 저변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함.

# Ⅰ. 서론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유권자의 지지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사회경제적 배경, 후보자에 대한 선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 못지않게 정당이나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 또한 선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범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책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유권자는 정당을 매개로 정기적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며, 정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발굴, 선거에 공천하며 동시에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공약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다.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소비자로서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선거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잘 실현시켜 줄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 선거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 많은 관련 행위자들의 노력과 연구에도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조진만 2010; 정회옥 2012; 조희정 2012; 유성진 2014). 사실 민주화 이후 전국단위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항상 정책선거 부재와 그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 언론과 학계의 단골 주문 메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지역주의나 인물중심주의 등 우리 선거의 고질적 특징과 함께 상대적으로 정책이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성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서도 정책선거 구현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라는 이유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선거에서 3김의 퇴장과 함께 인물중심주의나 지역주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념이나 세대 등 다른 선거 요인들이 주요 균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는 선거 환경의 변화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정회옥 2012; 유성진 2014).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후보자 간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방 등 단골 비판 메뉴들은 정책 경쟁이 우리 정치에서 설 땅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대통령선거 레이스도 아직 정당 간 대결 구도가 2021년 10월인 현재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 간 공약 비교나 정책 대결 보다는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 그리고 폭로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과 지적 세련도(sophistication)가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데 있다. 유권자들의 보편적 교육 수준의 지속적 향상과는 별도

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터넷 인프라와 다양한 네트워킹 플랫폼의 확대 공급을 통해 시민의 지식 정보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왔다.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책기반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한국 선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민주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정책선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대통령 및 지방 권력 선출이라는 두 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열리는 2022년을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 정책 분야들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연구 도출하여, 이러한 키워드들을 연계 활용하는 효과적 정책선거 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호기심만 있을 뿐, 각 정당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정보환경의 한계가 전제된다면, 투표 선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실제로 정당들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과 이후 본선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선택을 요구받게 되지만, 출마 후보들의 개인 신상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정보 외에 후보들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기획 기사 형식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거주지로 배송되는 후보자 정보나 대표 공약 정보 외에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 정책 분야 및 현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반복된 회의와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라 할 만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내고 개별 정책 영역 별로 과연 어떤 어젠다와 키워드들이 있는가 정리하여 제안하는 작업은 내년 대선의 정책 선거 촉진을 위해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 시대(digital age) 정보통신기술(ICTs) 혁명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를 넘어 다양하게 확대된 정보 소스를 갖게 됨에 따라 유권자 정보환경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 지식 기반 정보환경의 변화가 유권자들의 혼란과 정보 갈증을 푸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떠도는 온갖 허위정보(m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의 범람으로 유권자들이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정보 불충분의 문제를 겪게 되는 모순적 상황도 목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세대, 교육수준, 계층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의 차이가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넘어 정치적 불평등(political unequality)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곳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 유권자들이 새로이 경험하고 있는 정보 불확실성과 불충분의 문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구현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선거 및 정치 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의 영향력 확대를 급속하게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유권자 중심의 효과적 정책선거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 2. 연구 내용과 방법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정책선거 추진의 역사 및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추진 운동의 경과,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최근 선거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선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어 온 정보통신혁명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소위 언택트(un-contact) 트렌드가 선거과정 및 정치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평가 방향성을 모색한다. 즉,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정치정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정책선거 사업 추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기존에 선관위가 운용 중인 정책선거 추진 사업(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공약이슈지도 홈페이지,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등)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진단한다. 이러한 대안적 정책선거 추진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선거 모델이나 제도가 정착된 선진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며, 나아가 디지털 시대 정책선거 확산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제약 요인 및 제도 등 개선 사항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선관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최적화된 선택(informed decision)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심층 토의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영역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핵심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 연구진을 중심으로 심층 토의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도출해 내고, 다가오는 제20대 대선의 주요 영

역별 핵심 정책 어젠다와 키워드를 선별하고 순위를 매겨 제공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책 어젠다 및 키워드를 발굴하여 유권자들의 정책선거와 정보기반 투표(informed decision)를 지원하고, 동시에 최근 선거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책선거 사업 추진모델을 제안하여 정책선거가 다수 유권자 저변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 1.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선거에서 공약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하는 정책적 약속이며, 이러한 정책들을 비교하여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하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표출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책 공약에 반영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선출된 공직자는 공약을 통해 정책활동의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이현출 2005). 따라서 대의제 하에서 정치인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의 의사와 정책 선호를 잘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유권자의 이해가 효율적으로 반영된 공약을 매개로 한 정책선거가 잘 이루어질 때 대의민주주의는 더욱 안정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선거는 말 그대로 정책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권자의 투표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선거는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김욱 2012).

물론,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는 정책이나 공약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크게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 등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첫 번째인 사회학적 관점은 유권자들의 투표는 자신들이 소속되어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Berelson et al. 1954), 특히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계층 등 사회경제적 배경 등 집단의 특성에 큰 초점을 둔다(Lazarsfeld et al. 1944), 다음으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주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리적인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거나(Campbell et al. 1980),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업적 등 개인의 성향이 유권자의 지지에 기준이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Norton and Wood 1993),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유권자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입장을 가질 만큼 지적으로 세련된(sophisticated) 수준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투표를 결정한다고 본다(윤종빈 2016). 이에 반하여 경제학적 관점은 유권자를 합리적(rational)이라 전제하며,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 하에서도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함을 주장한다(Downs 1957). 즉, 유권자들은 정당 혹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공약들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이해와 선호에 더욱 근접한 쪽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책 제안들을 유권자들이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issue)이 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하여 정당과 후보자 간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핵심 정책 분야의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한 투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책선거는 주로 경제 투표(economic voting)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투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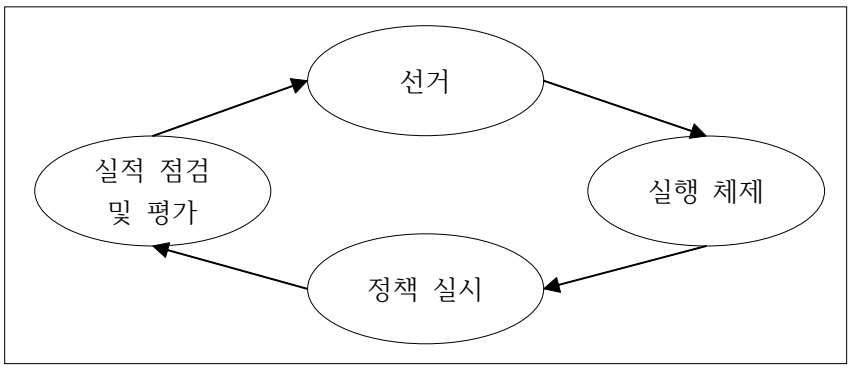
태이론인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또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회고적 투표는 선출직 공직자의 지난 임기 동안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성격에서 승인과 반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며(Key 1966), 전망적 투표는 현재 효용과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후보에게 통해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Fiorina 1981).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원리는 결국 과거에 이행되었던 정치인들의 업적 수행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투표 행위와 관련된다(엄기홍 2017). 따라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미래의 실현 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로서 전망적 투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 선거를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였던 공약의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의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다. 결국 정책선거는 유권자의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시민(informed citizens)이 주체가 되는 정보 기반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 구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는 정책을 매개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과 정당을 연계함과 동시에 높은 유권자 수준에 맞춰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적 입장 및 이념에 대한 명확성을 표명하고 정책적 역할과 책임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단이 된다(윤종빈 2016). 매니페스토(manifesto)란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약을 의미한다(김영래 2006).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증거(물)'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하여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변형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이후 어원의 의미와 동일하게 정치집단이 유권자들에게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검증받는 핵심적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장우영 2008, 124).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정당이 총선 후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제시된 공약이라 정의된다(Ramsden 2005, 420). 즉, 일반적인 공약과는 다르게 매니페스토는 공약의 목표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실현을 위한 재정적인 근거 및 로드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이현출 2006).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도 구체성 및 현실성이 높은 수준들의 정책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욱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게끔 만들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매니페스토는 정당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압박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현 방안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정당과 유권자 간의 정책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윤종빈 2016).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미국에서는 정강 정책(Platform), 독일에서는 선거강령(Wahlprogramm), 일본은 정권 공약 등 약속(Pledge), 계약

(Contract) 등 다양한 의미로 다수의 국가들로 확산되어 활용되어 왔다(김영래 2008),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탬워스(Tamworth) 지역의 선거에서 당시 보수당의 당수였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약 19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과 자유당 모두 매니페스토를 문서화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매니페스토의 발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 총선거마다 주요 정당은 매니페스토[1)]를 발표하고 있다(이현출 2006). 이러한 영국에서 매니페스토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선거-실행 체제-정책실시-점검과 평가-선거로 이어지는 정책적 사이클의 선순환적 운영을 의미하며,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형성이 정책 중심의 유권자선택형 선거 및 정치가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김영래 2008). 또한 영국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당 매니페스토(party manifesto)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의 정책 대결이 수행되고 있다(김재용 2006).

**<그림 2-1> 매니페스토 사이클**




영국의 매니페스토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여, 그 해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매니페스토는 영국과 다르게 지방 차원에서 먼저 도입되어 중앙정치보다는 시민운동 차원 또는 시민사회단체(NGO)에 의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김영래 2008). 그리고 일본은 시민 수준에서 확산한 매니페스토를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지방 차원에서 활발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형태인 로컬 매니페스토(local manifesto)라는 개념을 창출시켰다(김재용 2006). 이후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를 공표한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치의 변화를 통하여 일본의

1)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의 스타일은 1935년 보수당의 매니페스토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으며, 영국의 일반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 당시 노동당의 수장인 토니 블래어(Tony Blair)가 집권할 당시에 발표하였던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다(김욱 2008).

중앙정치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소네 야스노리 2006).

오래전부터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매니페스토와 정책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고(Robertson 1987), 정당 또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매니페스토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정책수행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희민·리처드 포딩 2007). 결국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책선거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 2.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과거 한국에서의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주의는 모든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며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김영래 2008). 이러한 모습은 민주화 이후에도 다수의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많은 관련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있는 연고나 인물 중심의 투표행태가 여전히 한국 정치문화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에서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와는 다르게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선거 및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조진만 2008). 2006년 2월 1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2)]'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기존의 낙천·낙선운동과는 다르게 정책을 기반으로 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당시 언론의 관심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출발하였다(김욱 2008). 한국에서 첫발을 내디딘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 홍보, 정당 및 후보자 교육, 그리고 매니페스토 평가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유권자를 상대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오수길 2006). 그리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학회와 언론사와 협업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셀프(SELP), 파인(FINE) 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장우영 2008). 아래 <표 2-1>은 한국에서 관련 학회와 언론사 등이 중심이 되어 그 동안 발전시켜 온 다양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2)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이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 이름을 바꾸어 선거 외에도 생활문화와 사회적 책임 등 매니페스토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까지도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표 2-1>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 명칭 | 스마트 (SMART) | 셀프 (SELF) | 파인 (FINE) | 매니페스토 (MANIFESTO) | 드림 (DREAM) |
|---|---|---|---|---|---|
| 개발 | 한국정책학회, 조선일보 |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동아일보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당학회 |
| 평가항목 | Specifc (구체성) Measurable (측정가능성) Achievable (달성가능성) Relevant (적실성) Timed (시간계획성) |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Empowerment (자치역량 강화) Locality (지역성) Feedback (이행계획) | Feasibility (실현성) INterativeness (반응성) Efficiency (효율성) | Specifc (구체성) Measurable (측정가능성) Aimed (소망성) National (포괄성) Identicial (독창성) Financial (재원조달 가능성) Timed (시의적절성) Eifficent (경제성) | Dream (꿈/비전) Affiliation/ Adjustment (연계성) Means (수단의 적절성) Responsiveness (반응성) Efficiency (효율성)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p. 20 <표 6> 일부 재구성.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 등 매니페스토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역시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매니페스토 도입기에는 유권자는 물론이고 정당에서도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 참여의 주체자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3]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공약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참공약(매니페스토)[4] 선택하기'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3)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에 대한 감독사무업무 외에도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와 정책정당으로의 정당의 발전과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한국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초창기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매니페스토를 '참공약'이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이현출 2004).

실시 기한,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매니페스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매 선거 시 매니페스토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표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작성지침 양식**

| | 내용 | 비고 |
|---|---|---|
| 매니페스토 작성 | • 현황과 문제점<br>• 목표<br>• 이행 방법<br>• 이행 기간<br>• 재원 조달 방안 | • 분량은 정책 1개당 A4 1-5매 이내에서 자유로이 작성<br>• 정책을 성명하기 위한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

출처: 김재용(2019) p.147 <표 6-1> 발췌

다음으로는 학회나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과 연대하여 정책선거와 관련된 학술회의를 지원 및 개최하고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의 정책·공약 알리미와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제공 받은 매니페스토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며 정책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국회의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각기 각층의 노력으로 인해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한국 정치 과정에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는 제도적으로 온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책선거에 대해 최근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윤종빈(2016)에 따르면,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이념 및 정책이 중요한 투표기준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2010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2010년 이래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인지도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니페스토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제20대 총선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분석한 정회옥(2016)의 연구에서도 매니페스토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 전체의 약 12%밖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유권자와 동떨어진 채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과거 정치발전을 목표로 시민단체에서 도입되어 각종 선거들을 통하여 중앙정치로 성공적으로 확산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주요 정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와 실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최정진 2020). 또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기준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연구되고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유권자들에게는 매니페스토는 익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선거 관련 플랫폼 개발이나 제도적 전환이 한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 빠르게 발전되어 사회 각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정책선거 분야에도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정책선거 모델의 개발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와 함께 인류가 그간 발전시켜 온 다양한 ICTs 기술들이 온라인 비대면 공간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정책선거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모델 개발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 3.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디지털(digital)이란 0과 1의 이진법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며, 나아가 그것을 분석하고 유통하는 도구이자 기술을 말한다. 영어 단어 digital의 라틴어 어원은 손가락을 의미하는 digitus로 고대에 손가락을 통해 숫자를 헤아리던 경험에 기원을 둔다(김범수·조화순 2021). 이진법 기반의 디지털 원리는 컴퓨터가 정보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되며, 따라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smartphones)이나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s)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등 정보통신기술(ICTs) 관련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다.

ICT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디지털 인프라의 확산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사물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위 네트워크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상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촉진하게 되었다(van Dijk and Hacker 2018).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은 원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platforms)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즉,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네트워크화된 개인은 확대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김범수·조화순 2021; Wellman et al. 2003).

최근 디지털 전환은 소위 4차 산업혁명(4th Revolution)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5년에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처음 세상에 소개된 개념으로, 슈밥은 2016년 6월에 개최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에 소개된 디지털 패러다임이 기술의 고도화와 적용 범위의 확장을 통해 사회 구조 전반에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전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가상 현실(VR, Vitural Reality), 그리고 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다양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초연결성과 초융합성의 알고리듬에 기반하여 빠르게 전환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거치게 되면서 시민의 성격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예상되는 바, 다수의 학자들은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 정보력과 연결성이 증강된 개인들은 네트워크 시민(networked citizens) 또는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김범수·조화순 2017; 이민화 2017; 이재묵 2018). 호모 모빌리언스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확대된 정보환경을 바탕으로 대량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을 구축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진화된 인간의 유형, 즉 일종의 스마트 시티즌(smart citizens)을 일컫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망과 연결망은 정치 참여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Matsusaka 1995; Lassen 2005; Larcinese 2007), 참여와 선택의 질(quality)을 제고하여 정보기반의 식견 있는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를 구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강화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마트 시티즌의 등장은 개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항상 긍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정보가 반드시 사실(truth)만은 아닐 수 있으며,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과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와 허위 정보(misinformation)의 이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종종 제기되고 있다(오세욱 외 2017; 황용석 외 2018). 또한 개인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의 수준 차이에 따른 정보 불평등의 문제도 정보 민주주의 사회의 또 다른 해결과제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Hargittai 2002; Gainous et al. 2013).

더욱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의 편향성 문제로 발생하는 소위 반향실 효과(echo-chamber)의 문제인데,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이 무작위로 폭넓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Sunstein 2009; 2011). 이러한 끼리끼리의 선택적 연결망은 편향된 네트워크의 고착화로 이어져 개인의 생각이 자신의 선입견에 갇히는 소위 필터 버블(filter bubble)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문제는 특히 정치 사회적 진영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된 사회 양극화 시대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노정규·민영 2012; 금희조 2013; 한규섭 외 2013).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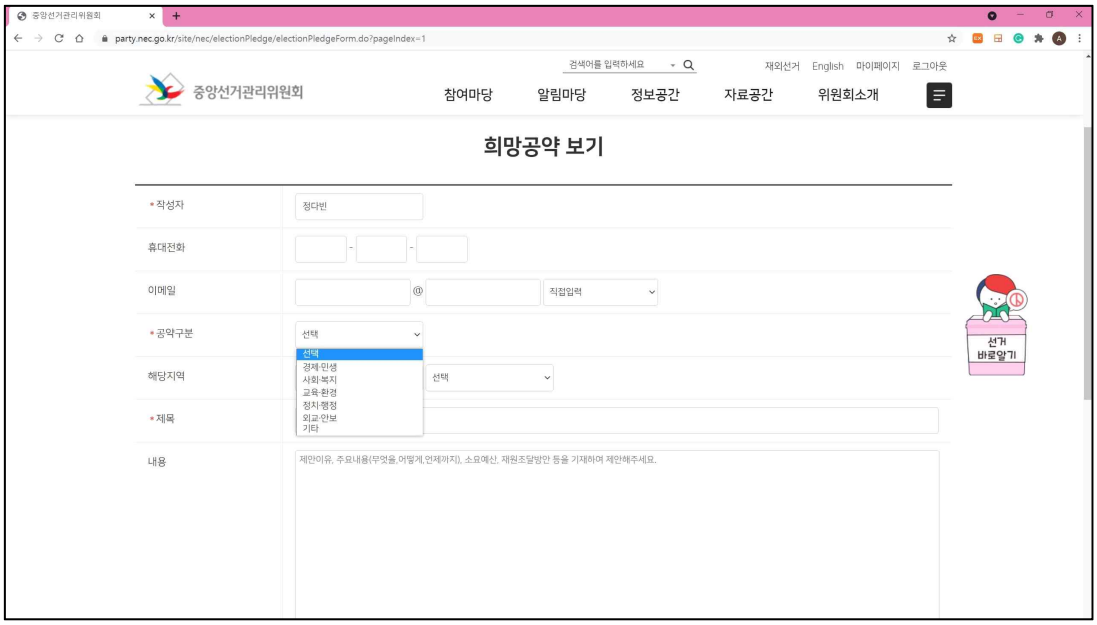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며 정책선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며 유권자들이 공약 및 정책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정책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중앙선관위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정책선거 추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적 정책선거 활성화 사업으로는 희망공약 제안하기,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그리고 정책·공약 알리미 등이 있으며, 선관위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1)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나선 정당이나 출마 후보자의 공약에서 시작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선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공약 발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희망공약 제안은 국민 모두의 생각과 일상으로부터의 요구가 담긴 희망공약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희망공약은 E-book으로 제작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정당 및 후보자가 참고하여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책 의제화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림 2-2> 희망공약 제안 작성 화면




희망공약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2,602건이 접수(2021년 10월 1일 기준)되었고,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400개의 공약이 제안되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 최대 추천 게시물(3호선 지하철 연장 및 지하철역 신설)[5]은 총 3,568개의 추천을 받았으며, 최다 조회 게시물(청소년 사회 공헌 봉사제도)[6]은 13,820번 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약 12,000개의 공약 중 단 1개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게시물들이 다수였으며, 조회 수가 10,000건 이상이 되는 게시물은 최다 조회 게시물 외에 앞서 언급된 최대 추천 공약 게시물뿐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단 2개의 희망공약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최근에 등록된 게시물은 2021년 3월 26일에 올라온 것이었다. 또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당시에는 약 4,500개의 공약들이 폭발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바로 다음연도에는 단 4건만이 접수되었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약 2,000건에 가까운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도에 따라 공약 제안에 확연하게 큰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연도에 선거가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아래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희망공약 제안은 그 건수에서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전국단위선거가 치러지는 해당연도에는 제안 수가 1,0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3호선 연장 및 서성복역(환승센터 포함) 신설'을 제목으로 2019년 12월 23일에 제안되었다.
6)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 제도'를 제목으로 2014년 3월 26일에 제안되었다.

<표 2-3> 연도별 희망공약 제안하기 접수 건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제안 수 | 4.545 | 4 | 1.824 | 6 | 1.566 | 135 | 2.987 | 9 | 1.524 | 2 |
| 선거 유무 | ○ | X | ○ | X | ○ | ○ | ○ | X | ○ | X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따라서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공약 제안'은 약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여전히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 다수 유권자 층에게 희망공약 제안 사업 채널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거실시 여부에 따라 활성화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 또는 당선자에게도 선거철에만 단발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니페스토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 2) 공약이슈지도[7)]

중앙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신문고의 민원빅데이터[8)]를 활용하여 2020년 2월 19일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https://issue.nec.go.kr)'를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원빅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누리집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작업의 결과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여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로 지역별 분류를 하고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를 추출하여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민원 빅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1위가 '아파트'로 주택청약 및 분양, 설계·시공 관리 및 시설물 하자보수 등 부동산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주택에 이어 2위 키워드는 '교육' 3위는 '교통' 4위는 '학교'인 것으로 집계되어 상위 정책 이슈가 대부

7) 해당 사이트는 현재(2021년 10월 초)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202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1,008개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09년부터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월간 민원동향, 각종 사회 현안 및 주요 정책 관련 민원 분석 자료 등을 1,270여 개의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민원인을 살펴보면 30대가 37.9%(3,923,799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40대 30.1%(3,110,022건), 50대 14.0%(1,451,875건)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장 사회경제 활동에 활발한 세대일수록 정책 민원에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 여건에 따라 10~20대는 '수능·취업·군대', 30~50대는 '아파트·교육·교통', 60~70대는 '세금·소득·농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어, 연령대에 따라 관심 현안이 다소 차별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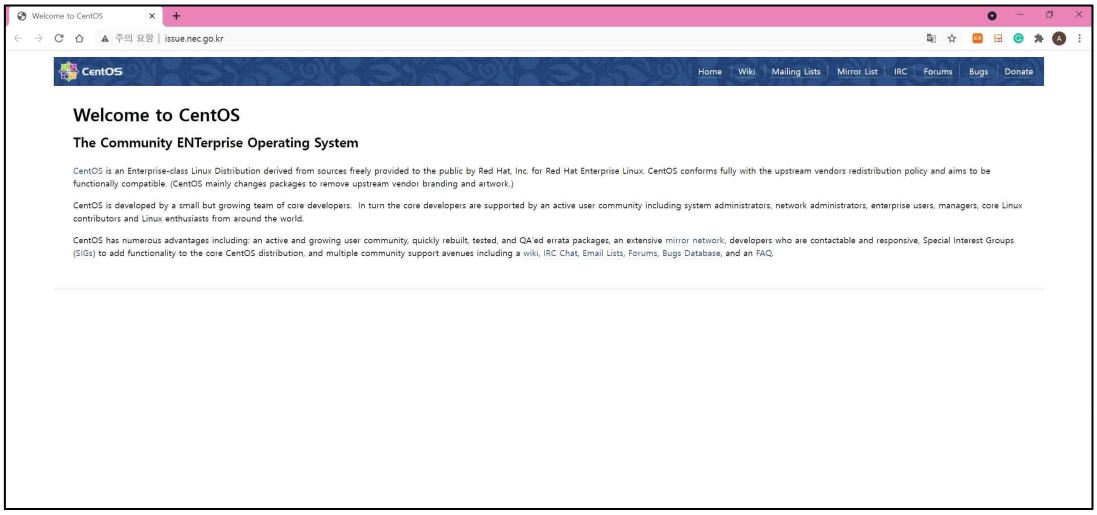
**<그림 2-3>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0)

지역별 현황은 경기 41.7%(5,190,612건), 서울 20.6%(2,564,164건), 인천 6.3%(780,376건), 부산 4.9%(609,629건), 대구 3.4%(425,799건) 순으로 인구가 많고 아파트 공급·신도시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3곳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위 민원 키워드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민원 빅데이터를 유권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차이점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정책 제안에 그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의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림 2-4>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 3)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들을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각 정당의 공약 이행 평가를 돕기 위해서 선거기간 전후로 정당·정책정보시스템 사이트(http://party.nec.go.kr)를 개설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이트 내에 각 정당의 10대 주요 정책과 후보자의 5대 공약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쉽게 찾아보고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로 전면 개편되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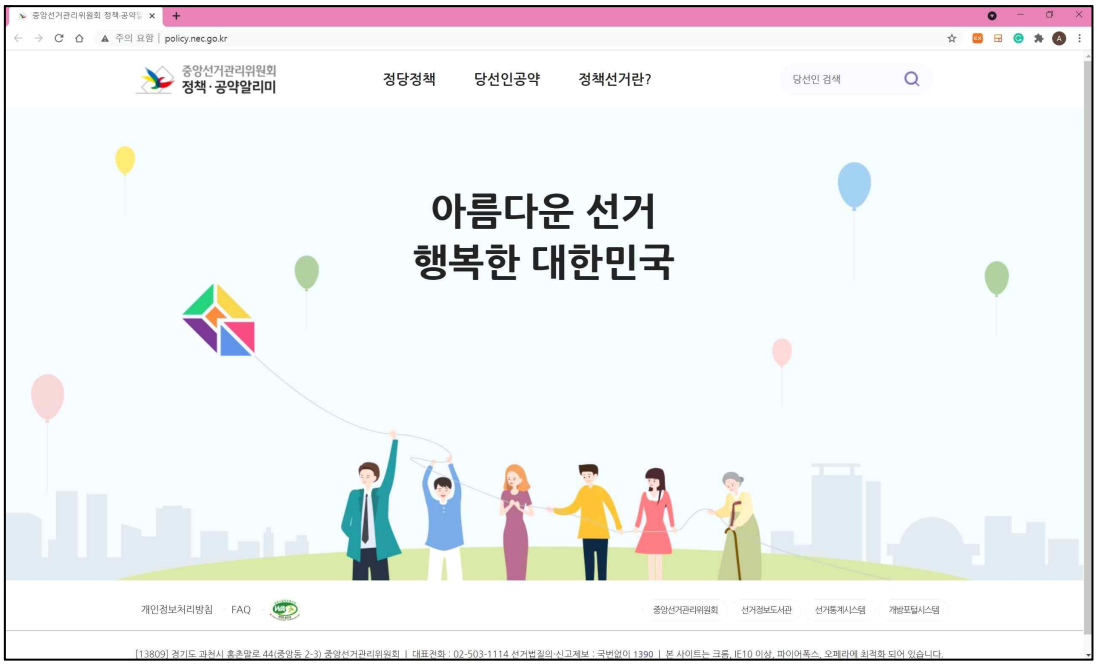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는 각 선거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선거 상태에 따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변경되고 있는데,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당선자의 공약만이 하위 탭(tab)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현시점에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비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현재는 최근에 치러진 3대 전국단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주요 정당 정책과 출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당선자 공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 정책의

9)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로 개편된 이래, 현재 해당 도메인(http://party.nec.go.kr)으로 접속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메인 홈페이지(https://nec.go.kr/site/nec/main.do)로 자동 연결되고 있다.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참여했던 모든 정당이 표시되고 있으며, 10대 정당 정책목록과 함께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매니페스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의 경우에는 문서파일(pdf 형식)로 업로드가 되어있어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림 2-5>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메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특히 지역별로 출마 후보 및 공약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5대 공약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주된 정책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 또는 공약을 클릭하였을 때에는 팝업창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책마다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팝업창에서 정보가 바뀌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즉, 아래의 <그림 2-6>과 같이 2개 이상의 팝업창이 동시에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 또는 후보자 간의 정책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에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한편,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가 충분히 유권자 저변에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간 탭을 클릭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즉,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 외에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간 > 기타정보 보기 순으로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정책·공약 알리미 즐겨찾기 섹션[10]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선관

10) 2021년 9월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기존보다 접속을 위한 클릭 수가 감소하였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야 눈에 들어온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림 2-6>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목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처음 접속을 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유권자들 즉,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ty)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권자들에게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정책 선거 관련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5. 해외사례 탐구: 유권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구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거관리기구(Election Management Body, EMB)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형성 배경과 역할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배경이 반영된 이유로 그것을 하나의 공통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음선필 외 2014). 또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앙정부나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관리기구를 발전시켜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최근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관점에서 선거관리기구

를 법적 지위와 위상, 상설 여부, 운영 주체, 당파성 허용 여부, 독립성 확보 여부, 권한 배분(중앙집중형 vs 분권형) 등의 복수의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다(음선필 외 2014).

1998년에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선거제도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등의 공동 프로젝트로 설립되어 선거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전문성(professionalism) 그리고 신뢰성(trust)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신뢰할 만하고(credible) 투명한(transparent) 선거 과정을 촉진하고자 설립된 에이스(ACE: Administration and Cost of Elections) 프로젝트는 비록 유형과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한 국가의 선거관리기구는 공통적으로 크게 5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11] 선거관리기구(EMB)의 대표 기능으로는 투표권 및 투표자격 확인(determining who is eligible to vote), (선거, 정당 및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련 참여자의 등록(nomination)의 수령 및 심사(receiving and validating the nominations of electoral participants), 투표 실시(conducting polling), 개표관리(counting votes), 그리고 개표결과 집계(tabulating the vot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ACE 프로젝트는 유권자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유권자 교육과 정보 제공(Voter Education and Information)"을 각국의 선거관리기구들이 주요 기능으로 추가하고 있는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ACE 프로젝트의 정보에 따르면, 시민교육과 관련된 EMB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은 주로 선진민주주의 국가들보다는 주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emerging democracies)을 위주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12] 다만, 에이스 프로젝트 또한 유권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선거관리기구 고유의 영역으로 한정해 두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유권자 교육을 담당하는 민관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때 유권자들로부터 선거에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informed choices)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3]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다면, 현재 본 보고서에서 모색하고 있는 선거관리기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유권자 정보 제공 관련 온라인 사이트의 적절한 해외사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호주 선거관리기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센터는 살펴볼 가치가 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ion Commission)는 공식적으로 유권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센터(AEC Education Center, Ace for School,

---

11) https://aceproject.org/ace-en/topics/em/emc/emc02d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12) 예를 들어, 국가별 선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유권자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국으로는 부탄(Bhutan), 캄보디아(Cambodia), 케냐(Keny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싱가포르(Singapore),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태국(Thailand) 통가(Tonga)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추가로 민주적 가치 증진, 민주주의 정치과정 관리, 그리고 활발한 시민권(active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선거관리기구에게 유권자 교육 관련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한 사례로서 코스타리카(Costa Rica)와 레소토(Lesotho)가 언급되고 있다.

13) https://aceproject.org/ace-en/topics/em/emc/emc02d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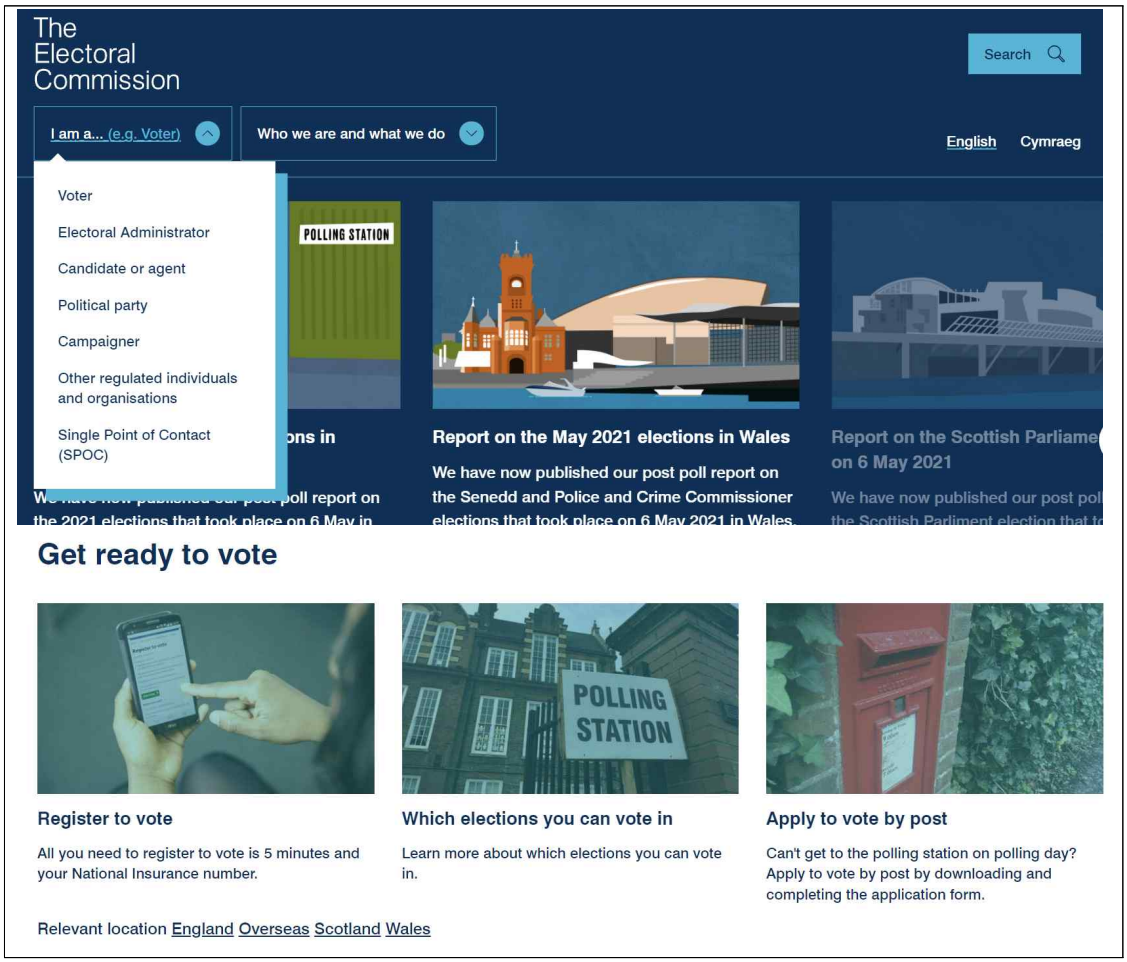
<그림 2-7> 참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 또한 주요 정당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는 투표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웹페이지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14)]

**<그림 2-7> 호주 유권자 교육 센터(AEC for Schools)**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를 운용하고 있지만, 선거에 관련된 각 주체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웹페이지가 운용되고 있을 따름이다(<그림 2-8> 참조). 유권자 섹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유권자 등록 절차,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그리고 우편 투표 신청 관련 정보 뿐이다. 영국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의 기능을 나열하고 있는데, 주된 기능으로는 정당 등록과 신청(party registration and applications), 선거 법규나 규제 관련 조항(enforcement work and electoral law), 그리고 선거 자금 보고(financial reporting) 등 업무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14) https://education.aec.gov.au/visit-us/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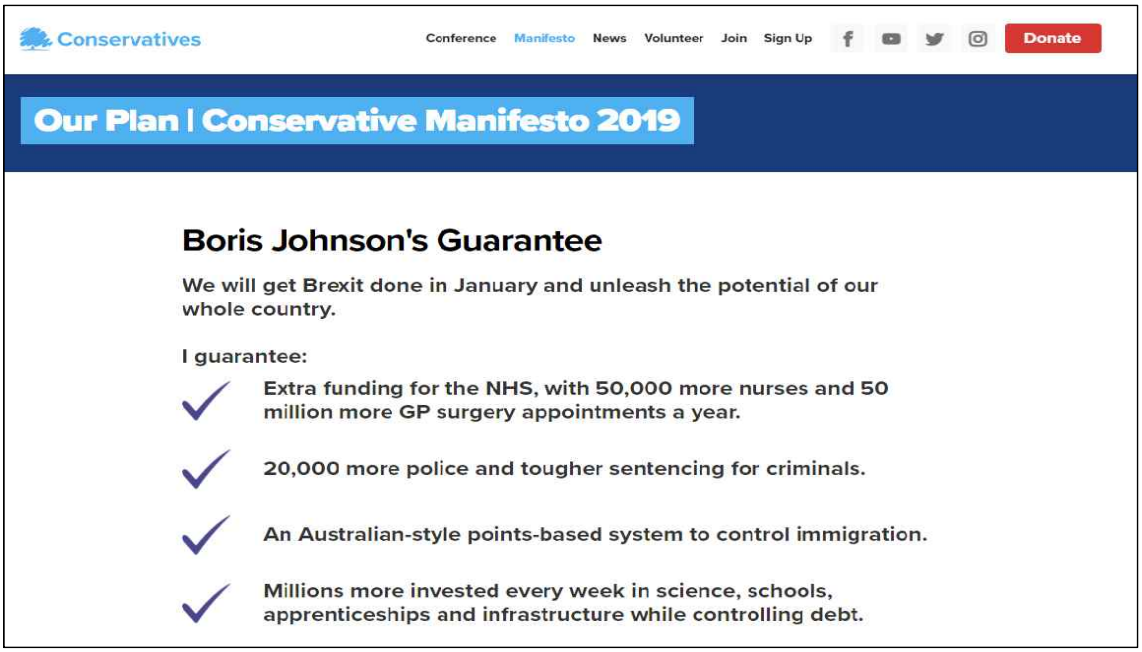
<그림 2-8>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s, UK.)




출처: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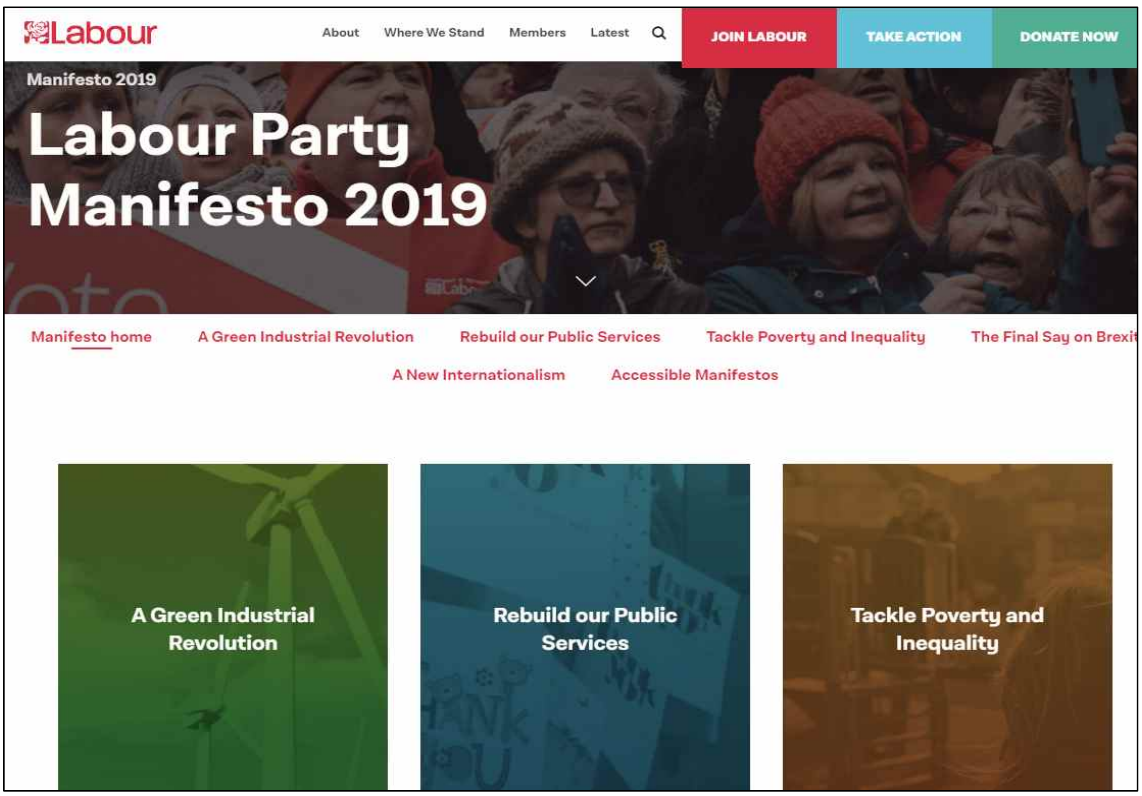
그렇다면, 영국에서 유권자들은 정책선거 관련 공약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영국은 주요 정당 별로 총선에서 공약과 매니페스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웹페이지에서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분야별 개별 정당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 가능하다. 현재도 가장 최근의 총선이 치러졌던 2019년 당시의 노동당(Labor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그리고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Party)의 매니페스토 관련 정보 공개를 각 정당의 웹페이지의 독립적 관련 탭(tab)을 통해 여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정강 정책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검색도 손쉽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개별 정당이 독자적으로 주요 정책 분야별 공약을 제시하고, 매니페스토 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유권자 입장에서 만약 고정 지지 정당이 없이 복수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여 정책과 매니페스토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투입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결코 수월한 작업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림 2-9>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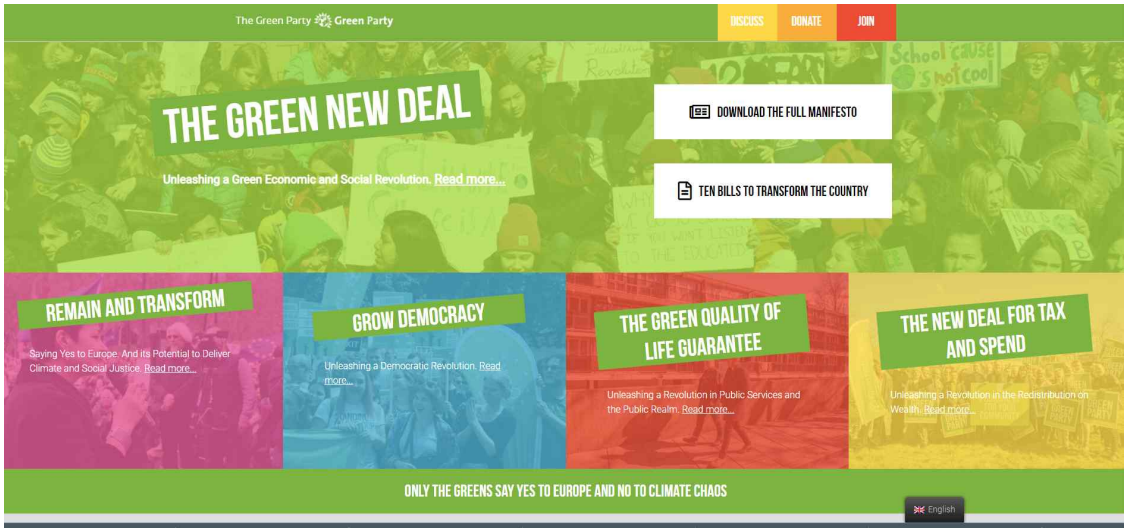

출처: https://www.conservatives.com/our-plan

<그림 2-10> 영국 노동당(Labor Party)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출처: https://labour.org.uk/manifesto-2019/

<그림 2-11> 영국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과 녹색당(Green Party)의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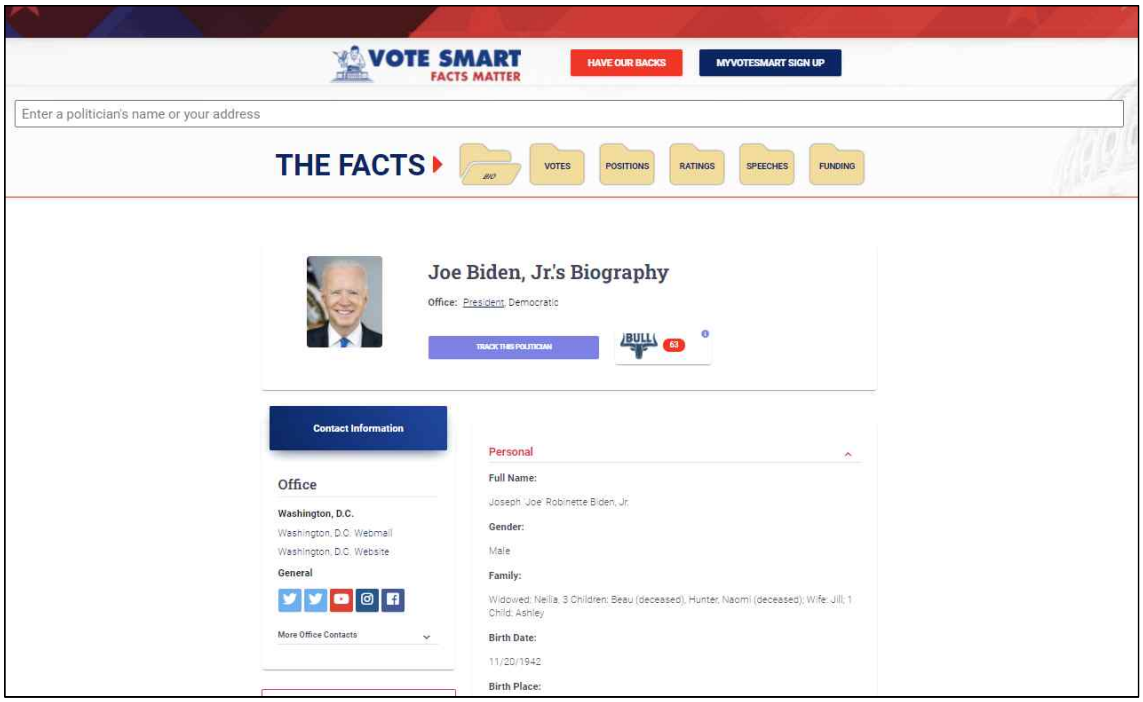

출처: https://www.libdems.org.uk/plan; https://campaigns.greenparty.org.uk/manifesto/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비정부기구(Non-profit organizations, NPOs) 활동이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이러한 비정부 기구들이 유권자들에게 공약 이행 여부 등 그들이 선출한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투표 선택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소위 현명한 유권자 프로젝트(Vote Smart: The Voter's Self Defense System)가 있는데, 유권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개인 이력 bio, 정책 투표 이력 votes, 정책 포지션 issue positions, 외부 평가 Ratings and Endorsements, 연설 정보 speeches, 그리고 정치 자금 정보 funding)에 접근 가능하다.[15] 인터넷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컴퓨터나 모

15) 현명한 유권자 프로젝트는 과거에 Project Vote Smart로 불리었으나, Vote Smart: The Voter's Self Defense System으로 공식적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https://justfacts.votesmart.org/를 통해

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들이 관심 있는 정치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그림 2-12> 참조). 영국이나 다른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전통적으로 정당보다는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는 미국 선거 모델에 부합하게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정당 단위보다는 개별 정치인이나 출마 후보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2-12>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 프로젝트(Vote Smart)




## 6.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모델 제안

2020년 OECD가 발간한 “The OECD 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DPGF”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포괄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성숙도가 제고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DGPF 보고서는 총 6가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 - 디지털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 (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시민 주도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 을 제시하며 신뢰성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사용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OECD 2020b).[16] 이를 바탕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다.

16) OECD는 2013년 이래 33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고 발표해오고 있는데,

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정책선거 모델 구상과 관련하여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 정부는 데이터와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 업무 영역 및 범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 디지털 전환은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단편적(piecemeal)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OECD 2020a). 따라서 플랫폼 정부 모델은 정부 서비스 하나하나의 개별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시민) 개개인의 맞춤 수요형 디지털 전환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플랫폼 정부 모델은 과거의 전통적 정부 중심 거버넌스 모델(아날로그 정부 1.0)과 국민 중심 정부 2.0 모델(인터넷 기반)을 넘어 모바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확대된 민주성 구현을 위해 시민 개개인의 수요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부 3.0 모델[17]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반 정책선거 모델은 정부 3.0 모델에 부합하게 공공 정보의 투명한 개방과 적극적 공유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일방적 정보 제공 방식을 지양하고 쌍방향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김성태 2013). 즉, 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빈번하게 개입하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부 서비스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중심의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관리자로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플랫폼 기반 모델을 지향하여 정치 중립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역시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해당 사업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시티즌(digital citizens)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간과 정책 및 공약이 제공되는 공간, 그리고 빅데이터 정보가 제공되는 공간이 각각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성과 효율성은 물론이고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정책선거 관련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접속 시기의 선거 개최 유무, 즉 선거기간 여부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도 측면에서 편차가 크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전국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연도에는 유권자를 포함하여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책선거 포털(portal)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하

---

한국은 2019년 평가에서 디지털 정부 부문(1위), 플랫폼 정부 부문(2위, 영국 1위), 열린 정부 1위, 데이터 기반 정부(3위, 영국 1위, 덴마크 2위), 시민주도형 정부(4위, 덴마크 1위, 콜롬비아 2위, 영국 3위), 선제적 정부(12위, 콜롬비아 1위) 등을 종합하여 종합 디지털 역량 평가 1위(영국 2위, 콜롬비아 3위, 덴마크 4위, 일본 5위)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하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적어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17) 정부 3.0은 국민 개인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국정운영시스템으로, 기술융합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의 수단으로써 개방, 공유, 협력, 창조를 시대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김성태 2013).

지만,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이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사업의 활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비선거시기에 사이트에 일반 사용자의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위한 정책선거 추진 모델로서 개별 공간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정보들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언제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platform)으로서 가칭 폴리피디아(Polipedia)를 제안하고자 한다.[18)]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오픈 소스(open source) 지식 백과로서 위키피디아(Wikipepia)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모든 유권자들에게 참여가 열려있고, 그러한 지식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선거 개방 플랫폼을 개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희망공약 제안하기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나의 인터넷 공공 광장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유권자(정책 수요자)와 후보자(정책 공급자)가 각각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에서 양자가 함께 소통하며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고 매니페스토의 선순환 구조를 폴리피디아 플랫폼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다.[19)]

그러나 오픈 소스 정책 플랫폼을 통해 만약 다양한 행위자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게 되면, 정보의 유통 과정 속에 가짜 뉴스(fake news)나 허위 정보(misinformation) 등의 확산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정책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의 재생산과 유통에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뢰성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에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면 정보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에 유리할 수 있다.[20)] 그리고 플랫폼 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팩트체크(fact-check) 등의 최소한의 규제[21)]를 통하여 신뢰성 요인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며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면, 유권자(정책 수요자)와 정당 및 후보자(정책 공급자)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제고될 것이다.

결국 폴리피디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흩어진 정책 정보들을 한 곳으로 수집, 종합하여 중복되는 정보를 처리하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유권자와 정당 및 후보자,

---

18) 폴리피디아는 정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olicy와 대표적 인터넷 기반 오픈 소스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합성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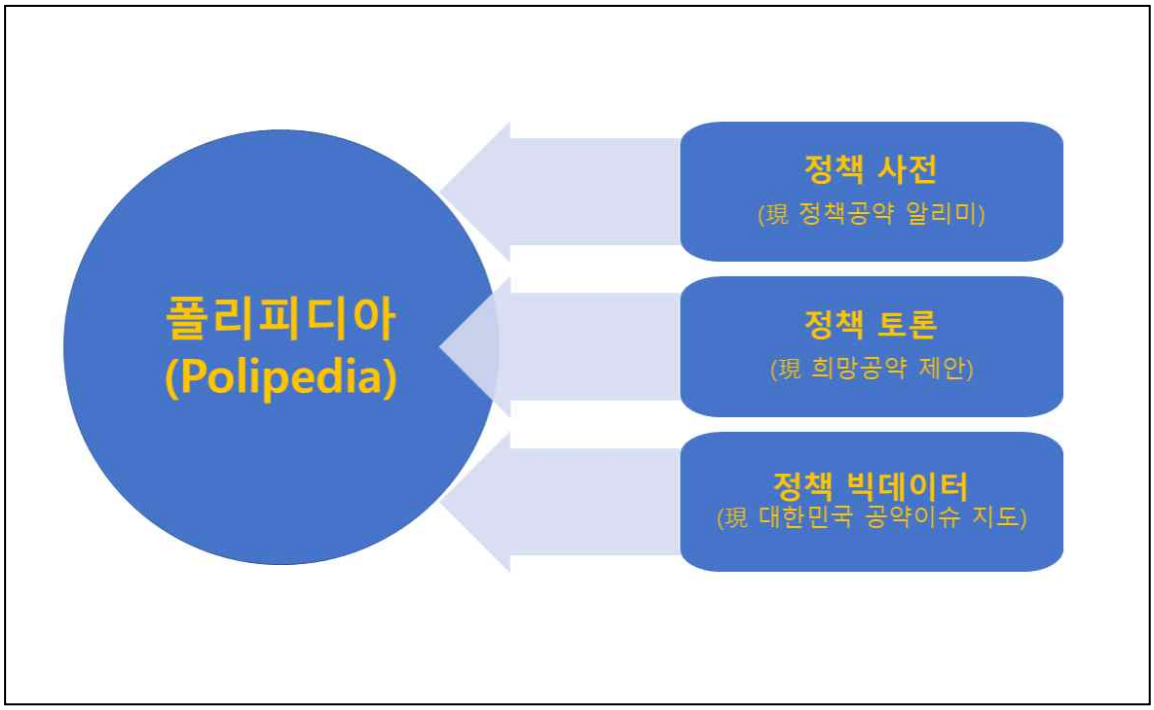
19) 조희정(2012)은 과거 한 연구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 생산(오픈 소셜 위키 매니페스토 플랫폼)-홍보(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PR)-매니페스토 평가(모바일 매니페스토 평가)의 소위 3단계 소셜 매니페스토(Social Manifestos)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폴리피디아-소셜미디어 홍보 모델-플랫폼 기반 매니페스토 평가 모델도 기본적으로 조희정(2012)이 제안한 모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 결국, 개방형 정책 거 플랫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요구된다.

21) OECD는 플랫폼으로서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만 자리해야지 그 이상의 규제나 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20a).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의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와 기여자가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며 동시에 다각적인 감시 체계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당 간, 후보자 간 비교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고, 이에 더하여 각 정책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매니페스토 평가 도구로써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림 2-13> 폴리피디아 플랫폼(Polipedia Platform)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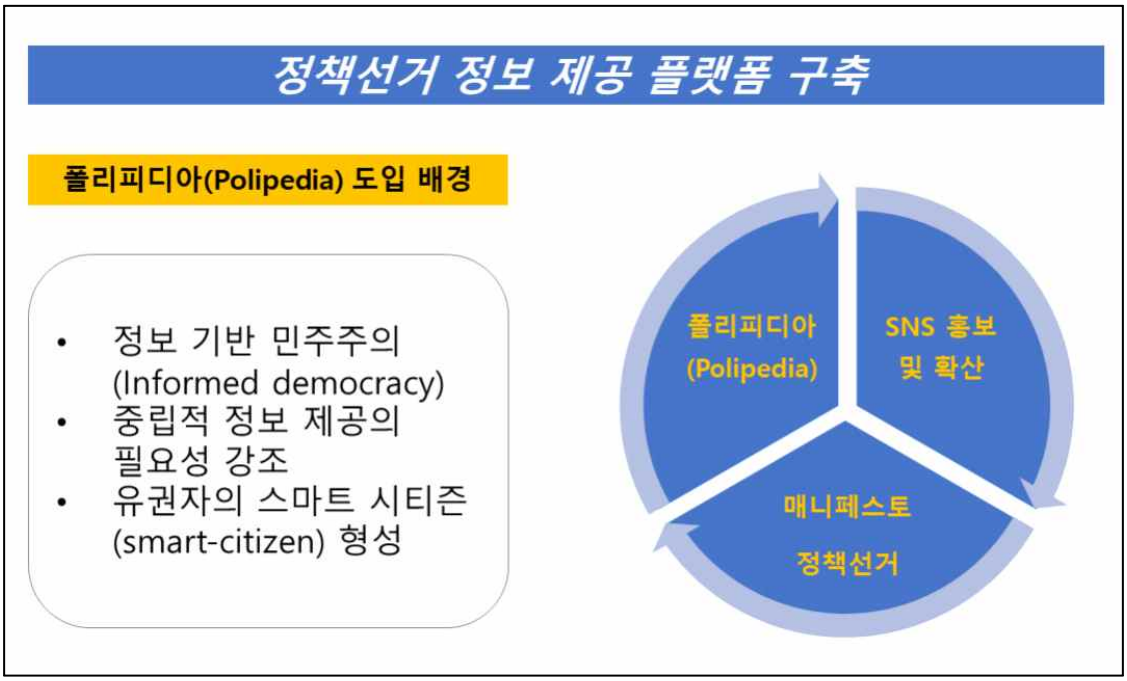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소위 스마트 시티즌(smart citizens)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폴리피디아는 다수의 사용자층에 폭넓게 개방되어야 하며, 또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22] 즉,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폴리피디아로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2) 폴리피디아 플랫폼은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와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시민 정치 모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확증 편향과 필터 버블로 얼룩진 소위 탈진실 시대(post-truth)에 인공지능(AI) 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시민의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즌(smart citizens) 모델과 일맥상통한다. 스마트 시티즌 모델과 관련하여서는 연세대 사회과학디지털 센터 홈페이지(http://cdss.yonsei.ac.kr) 참고.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그러하듯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아이디 생성과 로그인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사용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여느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아이디(ID)로도 자유롭게 로그인하여 정책선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라는 접근 과정에서의 초기 비용을 줄여주고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폴리피디아에서 생산 공유되는 정보들이 자연스레 외부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소셜미디어가 담고 있는 민주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을 매니페스토 사업과 접목한다면 정책선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조희정 2012).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의 제도적 적응을 넘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확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책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정책선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책과 공약이 형성되고 전파되며 이러한 정보들이 선거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공약들이 실제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음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말에 정책 플랫폼을 기반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를 진행하여 이전 선거공약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정책선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며 그 결과를 다음 선거로 연계할 수 있는 일종의 환류(feedback) 구조가 구현되어야 한다. 즉, 폴리피디아 플랫폼하에서 환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니페스토의 역동성과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폴리피디아 플랫폼이 선거정책의 생산-공유-평가라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디지털 정보 기반의 세련된 유권자들의 존재가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보 기반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의 구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 폴리피디아를 통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모델




## 7. 디지털 정책선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정보통신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ites)를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적용하는 데는 제도적 장벽뿐만 아니라 선결과제도 존재한다. 물론, 온라인 정책선거 플랫폼의 성공적이고 안정적 운용의 전제는 대량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사용자들의 상시적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과 완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기본 토대보다 더 중요한 선결과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과정이 어떤 위기나 위협에도 노출되지 않게 하고 빠른 변화가 초래할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구현이라는 본질적 가치 및 목적,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부합성 여부도 제도 변화에 앞서 함께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 1) 법제도적 과제

선행연구는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후보자 및 정당 정보를 담고 있는 선거공보와 선

거공약서의 제작, 게시, 배포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와 제66조(선거공약서)의 여러 제약 조항들을 매니페스토 플랫폼 구현의 제도적 저해 요인으로 상정한 바 있다(조희정 2012). 특히, 해당 조항에서 공보와 공약서에 대한 설명이 주로 책자형에 한정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매니페스토 게시가 주로 선관위 홈페이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항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플랫폼 관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든 바 있다.[23] 다만, 이러한 법적 조항의 제약과 모호성 속에서도 만약 중앙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정책선거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공직선거법 제66조의 제약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정책선거 플랫폼의 상시적 운용에 따른 공식선거 운동 기간 준수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이다. 참고로 유권자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및 상시 선거 운동 구현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59조와 93조는 그에 대한 장벽으로 종종 거론되어왔다.[24] 그런데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2 판결을 통해, 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2007헌마1001)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제 논리 중심에는 결국 금권선거 또는 선거비용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제어가 자리 잡고 있는바,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접근성만 보장된다면 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거 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선거 운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해당하는 정책선거 플랫폼에서의 상시적 발언과 활동이 자칫 사전선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사용자인 유권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25]

---

23)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 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7항).”

24)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물론, “선거 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기간)이 2항의 예외 조항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예외의 경우로 인정,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질 수도 있다. 다만, 여전히 우리 공직선거법은 소셜미디어나 SNS, 그리고 온라인이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다.

### 2)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디지털 격차의 문제

정책선거 플랫폼이 상시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개방되고, 선거 정보의 온라인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가정할 때, 플랫폼을 통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전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관위가 적절한 팩트체크(FactCheck) 알고리즘을 상시로 운용하여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포나 확산을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플랫폼 관리자로서 선관위가 정보의 게시 및 유통 과정에 팩트체크를 매개로 개입하는 경우에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선거 플랫폼 구현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선관위가 유권자(정책 수요자) 뿐만 아니라 정당 및 후보자(정책 공급자) 등 관련 주체로부터 정파적 성향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허위 정보 게재 및 유통에 대한 사용자 규제는 기존의 법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2조 4항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한 출마 후보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2021년 1월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익명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나 출마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통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한편, 유권자들의 계층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의 차이가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넘어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Hargittai 2002; Gainous et al. 2013).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모바일 기기나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20~30대의 소위 MZ세대와 달리 고령층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은 정책선거 모델의 디지털 전환에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26]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환경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개인의 경제적환경이나 계층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 경우에도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디지털 인프라 보급 수준에 대한 현황 조사도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6) MZ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빠른 변화에 유연하며,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으로 종종 설명된다.

# Ⅲ. 전문가 델파이 조사 디자인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본 연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유권자들의 정보 기반 투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적실성 있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통령선거에서의 주요 정책 이슈 및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묻는 델파이 조사를 계획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해 주요 정책 영역으로 정치/행정/사법, 재정/경제/복지, 국방/통일/외교통상, 산업자원/건설교통, 교육/인적자원, 문화/체육/관광,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의 총 일곱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정책 영역에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갖춘 연구진이 중심되어 정기적으로 심층적인 토의과정을 통하여 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상위 및 하위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이슈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계획하였으며, 본격적인 델파이 조사에 앞서 이슈 및 키워드 도출을 위한 신뢰성,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확보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림 3-1> 델파이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7대 주요 정책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부록 1> 참조), 연구용역 수행기관이자 전문가 그룹인 한국정당학회의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 영역과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 이슈 및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먼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음으로는 각 정책 영역별로 중요한 정책이슈 2개와 각각의 상위 키워드 5개, 하위 키워드 2개를 선정하고, 제시된 정책영역, 정책이슈 그리고 키워드들 외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중복 사항 제거 및 정책영역 재분류, 키워드 추가 등 전반적인 수정 작업을 걸쳐 약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선정과 정책이슈 및 상위·하위 키워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부록 3> 참조).

## 2. 정책영역별 정책이슈 및 키워드 도출 배경

### 1) 정치/행정/사법

#### (1) 정치개혁

먼저 정치개혁 분야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다시 크게 선거제도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운영 기제들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원칙, 선출된 입법대표자의 작동 및 운영 방식과 규범, 그리고 국민과 선출된 공직자를 연결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집약하는 기구인 정당의 작동 및 운영 방식과 규범에 관한 분야를 망라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가. 선거제도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 선거공영제, 여성 대표성, 사전선거운동 기간, 표현의 자유 확대, 투표 시간

대의민주주의란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하여금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국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정치시스템으로, 그 성공 여부는 잘 작동하는 선거제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번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주된 개혁공약의 화두로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개혁은 주요 이해관계자, 그중에서도 특히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 등 핵심적 이해관계들이 걸린 사안이라 그 발전적 변화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 시행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거대 양당의 점유율을 낮추고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 다원주의적 정치선호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비례대표 수의 확대는 이뤄지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급조되는 등 오히려 개혁 방향에 크게 역행하는 양상까지 보였던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선거제도개혁 중 현재 상당 부분 왜곡된 채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관련 공약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소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제도개혁에 있어 선거구획정의 문제 역시 주요한 공약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정수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지역대표성,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정당 다원화 차원의 비례대표 수의 확대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공영제 확립과 관련해, 현재는 사후적 선거보전금이 정책선거보다는 실비 위주에 치중되어 있어, 본 이슈 또한 대선 과정에서 개혁 공약으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편, 그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각 정당이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지역구에 30%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수반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여성 대표성의 제고를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은 그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여성 대표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본 이슈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측면에선 그간 선거부정을 막는다는 취지에서의 과도한 규제 위주 공직선거법이 자유롭고 정책지향적인 선거 경쟁을 추동하지 못해왔단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의 사전선거운동 기간 확장이나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이 공약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도 투표 시간의 연장 등 정치 참여 차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확장하는 내용의 공약이 제시될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 **나. 정당개혁:** 공천제도, 지구당 복원, 국고보조금 개선, 정치자금법

정당은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유권자와 정부 등 정치권력을 연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정당은 정책 공약과 공직후보자를 내서 민의를 집약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정부 또는 정치권력을 획득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선거제도 개혁 이상으로 정당개혁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각급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공약 이슈로 떠오를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우선, 정당개혁의 핵심은 공천제도의 개선 또는 합리화에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대선 이후 꾸준히 공직후보자 선출에 당원투표 등 상향식 기제들이 도입되어왔지만, 전략공천 등 여전히 당 지도부의 입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평당원들의 권리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층의 재생산을 방치함으로써 정당민주화의 수준을 고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정당개혁의 주요 일환으로 공천제도 개혁이 공약 이슈로 떠오를 소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구당 부활론 또한 확산 추세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정당개혁 이슈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당 폐지 이후로도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 등이 계속됐고, 특히 지구당 폐지가 원외 정치인한테 과도하게 불리한 구조를 구축해온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오히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문제도 정당개혁의 논쟁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늘 지적되어왔다. 원내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및 할거주의를 강화하고 군소정당의 성장 등 정치적 다원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왔단 점이다.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금제의 개선 역시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될 소지가 커 보인다.

한편 정치자금법 이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바, 늘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신인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의 취지에서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지는 등 공직후보자들에게 자금모집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 규제의 완화가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선거과열로 이어지지 않게끔 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엄존한다. 따라서 본 이슈 역시 대선에서 정치개혁 관련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 국회개혁:** 인사청문회, 상시국정감사제, 행정입법감독, 국회국민청원, 불체포특권

국회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민의를 수렴하고 입법을 전담하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책임을 지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상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 주체이면서도 국민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항시 개혁의 대상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측면 또한 매우 강하다. 따라서 국회개혁 이슈는 매 선거마다 중요한 공약 사항들로 떠오르게 되며,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간 국무위원급 공직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 혹은 정책철학 등에 관한 건설적 검증을 넘어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을 둘러싼 과도한 사생활 논란으로 비화됐던 경우가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여야 정당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이슈로 부상할 개연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단기간에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심층적이고 실효적이기보단 피상적인 감사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이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나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선정적인 폭로성 이슈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따라서 상시국감제를 도입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감독을 보다 실효성 높은 견제 기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상시국감제의 도입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그간 현행 국회법하에선 상위법인 법률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하위법인 행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자꾸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즉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 의도를 벗어나 행정부가 행정입법 등을 통해 월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시도할 위험성은 여전히 상재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본 이슈는 국회개혁 관련 공약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회국민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개혁 또한 시민사회 등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현재는 국민동의청원에 요구되는 서명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회 내 청원 전담 상임위를 두자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이슈 역시 대선 과정에서 하나의 공약으로 떠오르게 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도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목적에서 보장되어온 것이나,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남용되고 있단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아 왔다. 따라서 본 이슈 역시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법개혁

사법개혁 분야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크게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경찰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된 형사소송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로서, 사법권력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입해 하나의 행위자가 비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일컫는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받고, 억울하게 형을 받는 사람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불편부당한 형사소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인 셈이다.

#### 가.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장직선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위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 형사소송 단계에서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단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이렇듯 비대한 재량권을 견제할 내외부적 수단들이 미미한 탓에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 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에게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이른바 6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부 단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당 일각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도 계속 제기되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본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게 될 공산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독점적 통제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장악과 이에 따른 독립성 논란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추가적인 제도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공수처 관련 이슈들이 다양한 내용의 공약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시민사회 등은 검찰권력의 축소에 더해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의 구축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검찰권력의 진정한 독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취지에서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 즉 검사장직선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또한 현재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가 계속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검사장직선제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중요한 공약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법원개혁**: 국민참여재판, 무작위 사건배당, 판결문 공개,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법원개혁 이슈로는 현재 제약 조건들이 적지 않은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일종의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재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 방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법원개혁에 관련된 주요 공약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사건 무작위 재판 배당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법원개혁의 한 부분이다. 현재도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 이뤄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청와대 등 권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배당에 개입함으로써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행정체계를 법원행정처와 분리시키고 배당의 무작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공약 이슈로 제안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법관의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고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원개혁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판결문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경우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되는 쪽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반해, 정작 가장 핵심적

이라 할 형사사건의 경우 여전히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이슈 또한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이고 법원의 신뢰를 고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시적인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행 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사법관료제 형태의 인사구조를 개선하고 법원 조직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이슈의 경우 역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안될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 경찰개혁**: 지방자치경찰, 정보수사 분리, 경찰대 폐지

우선, 자방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검찰개혁으로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의 조직적 분산을 기하고, 자치경찰로 하여금 민생 및 치안 관련 사법행정을 전담토록 하는 경찰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특히 향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숙의될 가능성도 있어, 자치경찰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공약 이슈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개혁의 주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경찰의 수사 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의 분할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된 경찰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을 보유할 시 이 또한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사건조작과 사찰의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력 분산의 요체로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역시 이번 대선에서 공약 이슈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한편, 경찰대 출신의 순혈주의에 따른 경찰 고위직의 독식 문제는 경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수사지위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찰이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부조리를 야기할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 이슈 또한 대선 공약으로 제안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개헌

헌법 개정, 즉 개헌 이슈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태동한 현행 헌법이 권력구조 및 기본권 차원에서 더는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단 공론으로부터 꽤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형태를 다루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현행 대통령제의 유지에서부터 내각제나 준대통령제 등 보다 분권적인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단 입장까지 다양한 부류들이 존재하며, 기본권 역시 여러 층위에서 변화된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근간의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단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 권력구조:** 대통령연임제,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한국에서 개헌의 지향점과 관련해선 그 선호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의 순서로 그 선호도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러했듯,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은 미국과 같은 연임제를 그 핵심으로 하며, 이 유형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 또한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준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그중에서도 권력구조 이슈가 부상하게 될 시 각 정당의 공약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연임제를 채택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나. 기본권:** 안전권, 생명권, 주거권, 정보기본권

현행 헌법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안전에 대한 권리 즉 안전권을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실히 보듯, 자연환경의 변화와 환경오염 등은 인간의 삶을 급격히 위협하고 있어 안전권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개헌이 추진될 시 생명권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생명을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다면, 그야말로 인권의 전통적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이슈가 공약으로 제기될 경우 안전권과 생명권에 관한 공약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거권을 헌법상 사회권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국가가 이를 적절히 보장하지 않을 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시켜야 한단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급증하면서 이렇듯 주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이슈가 공약으로 제기될 시 주거권 또한 공약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한편, 정보화가 우리의 정치 및 사회생활의 방식 전반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단 인식하에 그 정보화의 과정에서 변형되는 기본적 권리들을 확정하고 개헌을 통해 이를 헌법적 보장의 대상으로 고양시키자는 논의가 이른바 정보기본권의 포함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이슈가 공약으로 제기될 시 이 정보기본권 이슈가 공약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최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선출된 대표자들이 유권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과 대안 모색의 움직임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그간 주로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이 과점 되며, 유권자의 의사에 기초한 다양한 정치적 수요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삽입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다름 아니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 차원에서 주로 도입하는 제도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민발안제의 경우, 국민의 입법수요를 국회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시 국민 발안으로 입법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화시킨다는 장점이 계속 거론된다. 아울러,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상 책임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제안될 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역시 포함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주민의 정치참여도를 고양하고, 유권자와 보다 가까운 정치과정 전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측면들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 역시 그간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공약에서 개헌이 공약으로 제안될 시, 주민투표제의 확대 및 강화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법률 수준을 넘어 헌법에 명문화하잔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주민투표법의 경우, 투표금지 대상이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주민의 직접 참여수단으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를 반감시키고 있단 지적이 그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는 관료 주도의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간주된다.

### 라.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사회적경제, 동반상생성장, 토지공개념, 소비자보호(소비자주권)

한국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대통령직선제를 필두로 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뤘고,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특히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이 시급한 단계에 진입했단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론 부의 과도한 집중을 개선해야 한단 기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이슈가 주요 정당들의 선거공약 속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극화의 해소 등 사회 공동적 가치 및 이익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업자 등 사회경제 행위자 전반이 사회연대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룩해보자고 하는, 이른바 사회적경제 혹은 동반상생성장의 개념이 대선 공약 중에도 개헌적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급격한 심화 속에서 다시금 헌법적 원리의 하나

로서 토지공개념의 중요성이 강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토지로 인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개선 의지 역시 좀 더 구체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등으로부터 여실히 드러났듯, 소비자주권 역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등 자본권력과 소비자 간 구조적 불균형의 완화란 경제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소비자주권이 헌법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단 입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또한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공약으로 제안될 시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4) 지방자치

한국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현재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차지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사결정을 스스로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는 앞으로도 발전해가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자치 확대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공약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 지방정부:** 지방정부 법제, 지방정부 입법,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지방행정체계 개편

한국의 지방정부들은 법제 및 입법의 측면에서 그 주체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현재 조례 수준의 입법밖에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법제적 측면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을 시에는 이조차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헌을 전제하든 그렇지 않든 대선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제 및 입법 능력 향상에 관한 공약이 제안될 개연성은 분명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또한 매우 강하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책임성을 갖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단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및 재정독립성 향상의 이슈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 한국 지방행정체제는 너무 구시대적일 뿐 아니라, 특히나 현 디지털 시대에 적합성이 떨어지며, 심지어는 지역감정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단 비판이 계속 있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제화 시대권력구조를 선도하고 지역경제력 강화 및 주민참여 그리고 지방분권 확대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슈에 관한 공약이 제안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의회:** 구성원 전문성, 정책역량 강화, 사무직인사권, 지방의회 다양화

그간 지방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상 별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에서 보듯, 최근에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확대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란 점이 확실해지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과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전됨에 따라 이들이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사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변화되었는데, 이 또한 지방의회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 최근의 강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역량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등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단 취지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될 소지가 작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되어오던 사안이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의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최근 마련되었다. 본 개정은 주민의 지방의회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해보고자 하는 최근의 지방자치 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더욱 본격화하잔 취지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도 채택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다. 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 해소, 행정수도 이전, 지역혁신성장거점 조성

현재 한국은 극심한 수도권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균형발전의 기회가 계속 축소되기만 하는 치명적인 악조건에 처해 있다.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들은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내놓았지만, 별반 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회 세종청사 이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정수도의 지속적 분산 이전 등 균형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을 인프라의 지방이전 정책은 계속 정책적 화두로 남게 될 소지가 매우 커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역혁신성장거점 조성 등의 이슈들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 (5) 사회안전

사회안전 분야는 국민의 일상적 민생에 직결되어 있어, 마치 공기와도 같은 국가 기능의 핵심적 역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안전 능력 개선 및 향상과 관련된 정책 이슈들 역시 각급 선거 국면에서 항상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어왔다. 사회안전 이슈는 크게 치안, 교통안전, 그리고 재난 안전 등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가. 치안:** 코로나19 관련 위법, 지능범죄,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아동 폭력

최근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여파가 전사회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위법 행위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을 포함한 제반 대책의 마련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의 여진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이슈 성격의 정책공약이 중요하게 제시될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는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사기 수법이 지능화하고 고도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능범죄는 주로 일반 국민이 그 피해자이고, 다중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 또한 이에 해당해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범죄 대응 관련 이슈들이 치안 분야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한편, 성평등 이슈 공약으로, 최근 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정책 이슈들이 포함될 소지도 매우 클 것이다. 그간 다양한 층위의 선거 등에서 이미 성평등 개선 공약으로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엄벌 정책이 제시되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이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은 투표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거 국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슈들이 정당 및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 폭력 등의 피해 사례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인데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그 피해 사례들이 급격히 펴져 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정당들로서도 주요 공약으로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아동 폭력 이슈 관련 공약이 상당수 제안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안전:** 스쿨존 교통안전,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전후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이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해당 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조

치가 실제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향후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대선에서도 추가적인 강화나 개선 관련 공약이 제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4차 산업혁명의 진척과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전환 속에서 최근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정치권과 시장(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매우 역력해 보인다. 이런 현실적 변화 속에서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또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개발 관련 이슈 또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상기 이슈들이 정부의 안전 인프라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단 정책적 입장들이 교통안전 관련 공약에도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재난안전:** 위험방지체계, 총체적 지역접근, 재난불평등, 기후변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2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관련 이슈들이 급속히 사회적 의제들로 부상하였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위험방지체계의 개선 및 향상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코로나19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인재형 참사에 있어서도 위험방지체계의 발전적 구축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서 각 정당들의 공약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한편, 재난안전 대책으로서, 재난 피해를 당한 해당 지역 단위 수준에서 예방과 조치,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단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총체적 지역접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위험방지체계 구축의 문제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이슈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관련 공약이 제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규모와 성격의 재난임에도 장소와 시기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질 수 있고, 재난 사망자의 다수가 빈민층이며, 재난 발생 당시와 그 전후의 극복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은 다양한 연구와 관찰을 통해 계속 입증되어온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재난불평등의 이슈 또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츰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정책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의 중요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 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가 재난안전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대응하는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정책시스템 구축 관련 이슈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 중 하나로 도출될 소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재정/경제/복지

#### (1) 조세

재정경제 분야의 공약을 조세, 재정, 공정거래, 사회복지지출로 나누어 살펴보자. 국가가 과세와 지출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기구의 역량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되어왔고 그러한 점에서 조세· 재정 분야는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가. 조세정책 기조:** 증세논쟁, 조세부담율, 직·간접세비율, 공평과세

우선 조세와 관련하여서는 증세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를 공약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립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대되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바 이번 대선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의 수준을 포착하는 지표로 조세부담률이 종종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나타내는 주된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0%에서 2019년 20.0%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도 OECD 국가 평균인 24.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27] 특히, 조세부담률은 증세여부와 관련되어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세의 양적 수준이 아닌 조세수입 항목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조세 중 어떠한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느냐는 경제의 활력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떠한 집단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조세 항목들 사이의 구성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공정한 과세라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개념이며 담세능력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과 동일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관념을 포괄한다(조한석 2003; 고영우 2020).

---

27)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검색일: 2021년 8월 15일)/

**나. 기업과세:** 법인세율,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인세공제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의 수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기석도 2019; 이영환 2019).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적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편에서는 법인세율 유지 혹은 인상을 통해 과세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 및 일자리 관련 재정의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렬한바,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논쟁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업 과세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세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 과도한 임원 인센티브,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논의될 것이다.

**다. 개인 과세:** 소득과세, 금융과세, 상속·증여세, 부유세

다음으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금융과세는 세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관련하여 소득세율과 최고세율 부과구간의 조정과 각종 공제제도의 개편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대 이전과 직접 관련되므로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세진·김준현 2021). 상속세는 1999년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각종 공제를 대폭 축소해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중소 기업인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혹은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증세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회 내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 왔다. 코로나19를 경과하면서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도 부유세를 통해 재정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의견이 증대되고 있다.[28] 부유세는 이는 중산층에 대한 광범위한 증세를 피하면서도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반대로 부자에 대한

28) 작년 1월 로이터통신(Reuters)과 입소스(Ipsos)가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이를 지지하는 등 부유세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증대되고 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lection-inequality-poll-idUSKBN1Z9141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음 대선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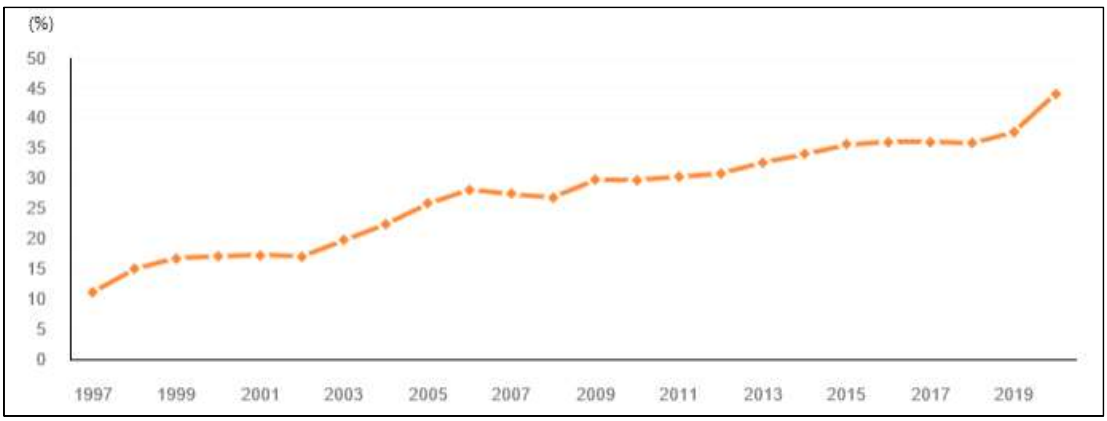
### (2) 재정

국가재정의 관리에 대해 총량적 재정규율을 통한 한도액 관리, 배분적 효율성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 운영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 등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재정건전화:** 국가부채비율, 통합재정수지, 재정준칙 법제화

우선, 재정의 규모와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 375조 원에서 2020년 512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29]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작년도에 847조 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1,338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화의 양상에서 중요한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아래 <그림 3-2>와 같이 2015년 35.7%에서 2020년 44%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중 국가채무비율[30]

물론, 국가의 지출 증가가 곧바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적정한 정부지출의 수준

2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검색일: 2021년 8월 9일)

3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9 (검색일: 2021년 8월 9일). 본 지표가 사용한 국가채무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위 홈페이지를 참조.

이나 정부의 재정기조 자체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정도영 2016; 하연섭 2016).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국가부채의 적정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재정의 악화로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끼치며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막대한 부채를 남겨놓는 것은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로 부담을 이전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아직 국가재정 여력이 튼튼하고 부채의 비중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성급한 긴축재정은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져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재정지출 관리와 관련되어 국가부채 비율 관리나 통합재정수지관리 등 국가재정에 대한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 놓고 이의 달성을 강제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fiscal rules)'[31]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나. 재정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세출개혁, 조세탈루 억제, 국유자산관리

재정효율화 방안은 운영적 효율성으로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원희 2017, 45).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성과를 명확히 하며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재정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해 신규 재정투자 사업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된 바 있다. 위 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의 불명확, 평가항목의 임의성 등이 지적된 바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될 것이다(이세진 2021). 이와 관련하여 세출개혁과 조세탈루 억제, 국유자산 관리, 재정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 유사 및 중복 사업을 통폐합, 성과평가의 결과 반영, 부정 집행 감독 및 재정환수 등이 주요한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재정학회 2021, 54).

**다. 포용적 재정운영:** 복지재정, 균형발전예산, 국민참여예산

사회복지의 경우 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장의 정체와 가계소득의 위축으로 사회보험료 등 세입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한 번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며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예산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재정에서는 사회보험료의 기여와 수익의 비율

31)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하연섭(2016) 또는 한국재정학회(2021) 등을 참조.

의 조정과 조세기반 제도의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재정학회 2021, 62). 앞에서 언급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지방 균형이나 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 등이 반영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에서 이러한 사회포용적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정과정의 국민참여를 증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하였다. 국민참여의 방식과 숙의 과정에 대해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 (3) 공정거래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집중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러 이슈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이 제기될 것이다.

**가. 재벌규제:** 총수지배약화, 일감몰아주기, 금산분리

재벌규제는 한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경제적 집중과 수직적 관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우선, 총수일인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 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의 수단이다. 이는 공정거래에 반하는 유리한 조건을 통한 거래행위이며 사실상 불법적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논의될 것이다(박상인 외 2015).

또한, 금산분리는 지분보유를 통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였을 때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화 되는 등 과다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금산분리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두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낳고 금융산업을 경쟁력을 높이자는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나.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기술보호, 공공조달, 집단소송제, 전자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공약 역시 선거 시기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대기업 집단과 경쟁을 하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나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점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최근 전자상품권의 일종인 '포인트머지'에 대한 집단환불 사태로 드러난바 전자금융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관련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된 바 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유동 인구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등이 결합하여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직접적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논의될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사회경제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보험료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논의될 것이다.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지역상권은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증가와 식자재마트 등 대형유통점의 위협 속에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 (4) 사회복지

**가. 소득보장:** 기본소득, 기초자산,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 부의 소득세(NIT)

사회복지 분야는 무상급식 논쟁 이후 노령기초연금 이슈를 경유하며 선거정치적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분야이다. 우선, 최소한의 소득보장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정책제언들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혹은 일정한 나이에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부의 소득세[32] 역시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강화방안이

32)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현금 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논의될 것이다.

**나. 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직역연금개혁

연금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연금의 확대 여부나 공적연금의 개혁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령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2014년 기초연금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점차 지급액이 확대되어 왔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의 확대 여부, 국민연금과의 연계의 유지 여부, 추가 재정마련 방안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이번 대선에서도 이 문제들이 다시금 논의될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향후 근로 세대의 부양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다. 아동/육아:** 아동수당, 보육 서비스, 육아휴직

아동 및 육아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일 가정양립' 이슈와 관련되어서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현재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지급범위와 금액의 조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취학 이후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의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들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논의와 휴직 기간의 소득 보전 확대 등이 논의될 것이다. 기타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등 보육 서비스 확대 역시 논의될 것이다.

### (5)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33] 기존의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활성화,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 등

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775 (검색일: 2021년 8월 10일).

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제도:** 법률 정비, 기금조성, 교육과정 확대, 공공부분 ESG 원칙 도입

우선, 제도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실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혁신적인 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을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나. 기업지원:** 판로지원, 기업활성화, 지역사회 확산, ESG 관련 기업지원 강화

둘째, 기업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다. 신규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창업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과 관련해 ESG 원칙을 준수한 기업의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도시재생

셋째, 사회적 경제를 통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이크로 금융 등 금융지원이 논의될 것이며 환경, 보건, 복지, 교통, 범죄예방, 공공관리 등 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혹은 마을 만들기 관련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 3) 국방/통일/외교통상

국방/통일/외교통상은 지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국방과 통일, 이를 위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는 한국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분야는 역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책 분야이다.

해당 정책 분야는 구체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 국방, 외교 및 안보, 통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세분화 하여 구체

화하였다. 그리고 주요 사안들의 선택과 구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각 정당의 대선 및 총선 정책공약집, 신문 기사, 정부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되도록 최신 이슈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1) 통일 및 남북관계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 중 통일 및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국내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역이다. 시기와 정파성에 따른 인식과 정책 방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일 및 남북관계는 상존하는 안보위협 속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프로세스, 남북대화, 북미대화, 남북미정상회담[34]

한반도 평화체제는 상존하는 안보위협을 해결하고, 통일 한국으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 전제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종전선언' → '평화협정 체결'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진다.[35] 명칭과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역대 정부가 모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해당 주제는 향후 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대화, 북미대화, 남북미정상회담은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요한 의제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한 차례의 남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중 2018년의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의 남북미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상호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간 대화인 만큼 더 중요한데 정상회담 외에도 남북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대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화의 방향, 의제설정, 방법 등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국내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만

34)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9·19 공동성명'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35)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65774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큼 향후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남광규 2016).

**나. 남북교류협력:** 이산가족, 남북철도연결, 생태계복원/DMZ, 스포츠교류/단일팀[36]

남북교류협력은 "남과 북이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분단 상황의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의 삶과 의식을 점진적으로 동질화해 나간다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되었다(이찬호 2012). 남북교류협력이 남북 간 정치·군사적 갈등과 북미관계 등 대내외 환경 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음에도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남북교류협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2018년 9월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 역시 남북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교류협력 중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협력분야이다. 2000년 1차 상봉 이후 2015년까지 20차 상봉이 이뤄졌으며, 현재 이산가족 등록자는 133,530명에 달한다.[37] 이중 생존자가 47,31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맞물리며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38] 따라서 남북철도연결은 대북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내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남북 간 DMZ 생태계복원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의제이다. DMZ는 남북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천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참여정부 당시 남북교류의 전초지역으로 주목받았다. 뿐만 아니라 DMZ는 생태계복원 협력과 함께 남북연결도 및 철도 사업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수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단일팀을 포함하여 남북 간 스포츠교류는 스포츠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논쟁(조우찬 2017)에도 불구하고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비록 1991년 단일팀 구성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단일팀 구성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1972년 데탕트를 이끈 핑퐁외교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교류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36)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국군포로', '유해발굴'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37)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view.do?id=338&mid=SM00000129&limit=10&eqDataDiv=REQUEST&eqIndex=0&page=1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38) 남북철도 연결은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과 부산-나진을 잇는 동해선이 언급되고 있으며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결도 계획하고 있다.

**다. 비핵화:** 비핵화 프로세스, CVID/PVID[39], 6자회담, 대북제재[40]

비핵화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해소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중요 의제이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적절한 비핵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된다. 예컨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이 논의되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무산으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논의는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정착도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에 처해 있으며(신범철 2019), 이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 외에 남북 및 북미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의제인 만큼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등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원칙으로 북핵문제 대한 해법을 규정하고 있다. 정권교체 등에 따른 미국의 협상력 약화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 동력을 살리는 데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위의 원칙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비핵화를 위한 다자회담인 6자회담은 2008년 중단되었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고 비핵화의 평화적인 추진을 위해 재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41] 6자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당사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개발 및 핵 보유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경제 흐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한데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제재 완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42] 북핵문제와 대북제재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대북제재도 주요 정책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

39)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 PVID: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40)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주한미군철수'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41) "안보리, 비확산 고위급회의 북한 핵·미사일 규탄…비핵화 조치·대화 촉구," https://www.voakorea.com/a/6247680.html (검색일: 2021년 9월 17일).

42) "정의용 "대북 유인책으로 제재 완화 검토할 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12445.html#csidxd72f64ac2ee1be9b35d3d9f1b4d127a (검색일: 2021년 9월 23일).

**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정전협정/체제, 9·19 군사합의[43]

《판문점 선언》의 제3조 제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44]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하였다.[45]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협정은 종전선언 이후 북미 간 평화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 간 역학관계가 복잡한 만큼 평화협정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김재한 2018). 따라서 평화협정의 의미와 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는 현재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에 의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전(停戰)은 종전(終戰)이 아닌 만큼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전체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전과 종전에 관한 논의와 보편적 인식이 필요하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로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46] 본 합의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합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비판도 제기된다(문성묵 2020). 따라서 향후 군사합의의 지속적인 이행 및 평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 남북경협:** 개성공단, 남북교역, 금강산관광, 경제특구[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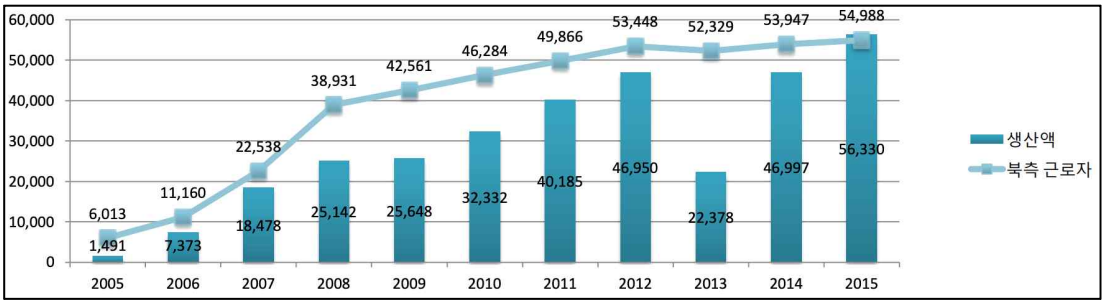
남북경협(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은 민간교류로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등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1988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분야이지만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43)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판문점선언'과 '주한미군철수'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44)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2166.html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45) "문 대통령 "野,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 없어" 비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4/109375282/2 (검색일: 2021년 9월 23일).
46)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https://www.mnd.go.kr/mbshome/mbs/agreement/subview.jsp?id=agreement_020201000000 (검색일: 2021년 9월 18일).
47)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위탁가공'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의존을 높임으로써 평화를 모색하는 형태로 한국의 대북 관여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최규빈 2020).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경협인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간 교역, 금강산관광, 경제특구 등이 논의될 수 있다.

2004년 운영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과도 같다. 하지만 개성공단 역시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현안에 따라 2013년, 2016년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 가동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북한이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과 교류 사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명확한 사업이고, 남북관계 조율을 위한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김현정 2019),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동 재개 등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그림 3-3>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출처: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남북교역은 1988년 《7·7선언》으로 교역이 허가된 이후 '5·24' 조치의 장기화와 2016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교류 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사업이다. 하지만 남북교역 역시 2016년 초 북한의 도발 이후 잠정 중단 상태이다. 최근 통일부는 민간업체들 간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48] 경제교류는 정치적 갈등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48) "통일부 "민간업체들, 남북 물물교환 교역 위한 비대면협의 지속","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26510868?OutUrl=naver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표 3-1>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 구분 | '89~02 | '03~10 | '11~16 | '17~20 | 계 |
|---|---|---|---|---|---|
| 반입 | 2,066 | 5,082 | 5,447 | 11 | 12,607 |
| 반출 | 1,505 | 5,953 | 4,763 | 33 | 12,254 |
| 계 | 3,571 | 11,035 | 10,210 | 44 | 24,861 |

출처: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금강산관광은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1998년 개시 이후 2008년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격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민간교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교류는 경제교류와 함께 경색된 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정책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위한 공약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남북 경제특구는 남북경협의 한 부분으로 2018년 《9·19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된 상태이다.[49] 남북 경제특구 조성은 경협을 통해 남북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남북통합, 나아가 통일의 촉진을 지향하기 때문에(박훈민 2020)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바. 통일인식:** 통일교육, 북한이탈자주민, 평화인식, 북한인권, 대북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쳐 44.6%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KBS에서 진행한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역시 통일보다는 교류협력을 유지하며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70.7%였지만 2021년에는 58.7%로 하락하였다.[50] 통일인식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통일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제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인식, 즉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국립통일교육원(www.uniedu.go.kr)이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통일 관련 체험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평화통일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

4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B0O0L7I1M5W1R0U3G1M1A9A5D7V2 (검색일: 2021년 9월 23일).

50) "[데이터 인사이트] 통계로 보는 '2021 통일의식',"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31 (검색일: 2021년 9월 25일).

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3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51]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일반국민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동일한 존재로 잘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4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6%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말투나 외모, 사고방식과 행동약식 등이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고, 통일 이후 국민 통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인식 역시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에 필요한 심리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고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는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지만 물리적 도발이 발생하게 되면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20대의 경우 협력의식은 크게 하락한다(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21). 대북인식에 대한 개선 역시 평화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국방

국방 분야는 상존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의제이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념을 막론하고 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국방 관련 공약을 핵심 의제로 내놓는다. 하지만 국방개혁이나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 가. 국방개혁: 군처우개선(군인권), 방산비리개혁, 징병제/모병제[52]

국방개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51)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52)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군사법제도개혁’, ‘국방문민화’, ‘여군확대’, ‘예비군/동원훈련’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2.0'을 제시하였다.[53] 국방개혁에는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는데 군인권 문제, 방산비리, 징병 및 모병제, 군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군인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군대 내 고질적인 문제로 계급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왕따, 성추행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군대의 조직력은 전투력과 직결되는데 위와 같은 인권 문제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력을 헤치며, 결국 전투력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 군인권 개혁은 병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나아가 군입대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개혁 역시 국방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015년 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육·해·공군의 전방위적인 방산비리를 적발하였다. 비리 규모가 1조원에 이르렀는데 이중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0억 원에 달했다.[54] 방산비리는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다양한 기체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설계 관련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군의 전투력 저하로 연결된다. 현 정부에서도 방산비리에 대해 1.5배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이다.

징병제/모병제 문제도 국방개혁에서 논의 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며,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책공약이다. 군인권 문제와 열악한 병영 환경, 인구 감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적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종탁 2021).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유력 주자들 역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55] 이에 내년 대선에서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나. 북핵문제:** 한미동맹, 미중협력/미중관계, 북미회담[56]

북핵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다. 한국의 경우 북핵은 안보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핵문제는 또한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국방 등의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매우 복합적이고 민감한 의제로 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책공약으로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53) 국방개혁 2.0, https://reform.mnd.go.kr/mbshome/mbs/reform/subview.jsp?id=reform_010100000000 (검색일: 2021년 9월 24일).

54) "드러난 방산비리 1조… 해군만 8400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7151817842332 (검색일: 2021년 9월 24일).

55) "이재명도, 홍준표도 '모병제 도입'…"청년·부모 표심 잡아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8000603 (검색일: 2021년 9월 25일).

56)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한미일 안보협력', '핵우산', 'THAAD/사드', '전술핵배치'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북핵문제는 특히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이는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준오 2018). 강대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데 한국은 정권에 따라 한미동맹의 강화 혹은 한중협력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 안보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경중과 동맹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핵문제의 해법에 있어 역대 정권 모두 한미동맹을 중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대선 공약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협력과 미중관계 역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변수이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미중관계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간 적극적인 협력과 협상이 필요한데 미중 간 북핵정책이 다르고 미중관계가 경쟁관계로 돌입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최우선 2018). 이러한 상황은 미중관계가 경쟁관계로 격화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관계를 잘 활용해야 하는 만큼 관련 주제에 대한 공약 제시가 가능하다.

북미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키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7] 실제로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북미대화가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미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다. 자주국방:** 방위산업육성, 전시작전권환수, KAMD/Kill-chain[58], 주한미군[59]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면서 민감한 주제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과 방식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자주국방에서 '자주(自主)'의 개념에 상이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주'가 단순히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에서의 자주인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은 중요한 의제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오는 대선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

57)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시작되면 한반도 문제 풀린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5504900?OutUrl=naver (검색일: 2021년 9월 26일).

58)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ill-chain: 타격순환체계(공격형 방위 시스템),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탐지한 뒤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

59)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주한미군', 'KF-X 프로젝트', '미사일주권'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방위산업육성은 앞서 언급한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하는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닉슨독트린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의 첫 단계로 군사무기의 국내 제조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하였다. 그 결과 최근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인 한편 세계에서 7번째로 SLMB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국방연구개발의 발전과 방위산업육성일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8위로 향후 방위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 축적에 따른 신형 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육성이 국방 분야의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다.

**<표 3-2> 2016년~2021년 한국의 국방예산**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국방예산(조) | 41.6 | 45.2 | 50.3 | 46.7 | 50.2 | 52.8 |
| GDP 대비(%) | 2.20 | 2.28 | 2.43 | 2.59 | 2.69 | 2.63 |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KAMD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KAMD는 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시스템이고, Kill-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지휘통제체계 등 북한 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 위해 선제 타격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간 106조 7천억 원의 방위력개선비를 투입하기로 하였다.[60]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문제는 주한미군철수와 연관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군사주권으로서의 자주를 의미하는데 주한미군철수가 곧 자주국방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가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경하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고, 민감한 만큼 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60) "[국방부]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수립,"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903/15/BBSMSTR_000000010021/view.do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라. K-방산:** 기술국산화, 우주산업/개발, 차세대전투기, 방산수출[61]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은 1970년 포탄, 소총 등 군사무기의 국내 제조를 시작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출고되었고, 한국형 SLBM 개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방위산업은 안보 효과 외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이며, 방산 수출 순위는 세계 10위 내에 진입했다.[62]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국산화는 1970년 ADD설립 이후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은 대부분 기밀에 해당한다. 한국은 2021년 6월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63]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의 국산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방위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으며 첨단기술이 응용된 무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시제기를 선보였다. 이는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로 2026년까지 테스트 비행을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뿐만 아니라 KF-21은 수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기술국산화는 자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우주산업/개발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이 집약된 분야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우주강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주전을 대비하고 있다.[64] 그만큼 우주는 방위산업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산업은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열악한 만큼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우주 안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산업/개발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이다.

방산수출은 K-방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2010~2014년 7개국에서 2015~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 이 중 영국은 한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다.[65] 방산수출 품목도 다각화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FA-50 군용기와 로켓탄, 잠수함과 호위함, 자주포, 총기류 등이 있다. 이 중 K-9 자주포는 주력 수출품목으로 2000~2017년 세

---

61)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민군융합'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62) "[기고] "굵직한 수출로 K-방산이 세계적으로 각인되길","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3/25/KV73QYKB4NCIXP2APWT2HJ26SE/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63) 법령에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64) "미국의 국가방위우주체계 구축(NDSA) 현황,"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813/1/BBSMSTR_000000100072/view.do (검색일: 2021년 9월 18일).

65) "韓 무기수출 점유율, 사상 첫 세계 10위권 진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0/2020031002897.html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48%를 차지하였다.[66]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방산수출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므로 주요 정책공약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마. 사이버안보:** 사이버전문인력양성,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보안, 사이버공격대응[67]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안보가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솔라윈즈 사태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는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68] 미국 의회는 솔라윈즈 사태 이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사이보안보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69]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러시아, 독일 등은 2010년을 전후로 사이버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이웃나라 중국도 2016년에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며 사이버전을 대비하고 있다. 북한 역시 6,800여 명 규모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0]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6년 사이버전문사관의 첫 임관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명의 임관자가 배출되었을 뿐이다(심재용·김병조 2019).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전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3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처음 발간하였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71] 그렇지만 2019년 처음 관련 전략을 수립한 만큼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특히 사이버보안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솔라윈즈 사태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보안의

---

66) "차세대 전투기 최종조립·자주포 수출…K 방산에 '단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31646&ref=A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67)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북한사이버공격'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68) 솔라윈즈(SolarWinds) 사태란 한 해킹 단체가 솔라윈즈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오리온(Orion) 플랫폼을 해킹한 사건이다. 오리온 플랫폼은 기업에서 운영중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미국의 많은 정부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컸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 사태는 러시아의 범죄자 그룹 다크사이드(DarkSide)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한 사건으로 소행으로 기업이 '완전 정지' 사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에너지 고갈 사태가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었다. "세계는 사이버 전쟁중...북 해킹에 항의도 못하는 한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5756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69) "北, 작년부터 남한 의료·과학기술 분야 집중 해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2801070830129001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70) "2020년 국방백서," https://www.mnd.go.kr/mnd_book/DefenseWhitePaper/2020/02_2020_mnd_contents/index.html#p=6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71)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01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사이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는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고도화 될 전망이므로 관련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외교/안보

외교/안보는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 영역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이 같은 안보위협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과의 외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안보는 주요 선거 때마다 핵심 정책공약으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가. 한미동맹:** 전시작전권환수,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연합훈련, 쿼드, 한미미사일지침[72]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북핵문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한국 안보의 근간이 되어 왔다. 비교적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성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축이며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도 한미동맹 이슈는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동맹 이슈 중 전시작전권환수 문제는 앞서 제시한 자주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1년 말까지 전작권의 환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20년 10월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 내 환수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이견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작권환수는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 제시될 수 있다.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였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특히 미군 범죄, 민간인 폭행, 기름 유출, 발암물질 검출 등 기지 환경오염, 탄저균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OFA로 인해 미군은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현실로 인해 SOFA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긍

72)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감축'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정적이라면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데 SOFA 개정 등 관련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전쟁 억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한미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쿼드(Quad)는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쿼드 정상들의 첫 대면회의가 개최되면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쿼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쿼드의 목적이 대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쿼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종료되었다.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탄도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남북을 포함하여 동북아 국가 간 군비경쟁이 안보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한중관계:** 미중패권경쟁, 북한문제, 사드갈등, 반중여론, 문화공정[73]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만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의 주요 행위자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처럼 한중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한중관계 이슈는 선거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관계는 더욱 주목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대선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중패권경쟁은 한중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패권경쟁이 한국의 외교 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중관계 강화라는 대 중국 관여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변창구 2016). 하지만 미중패권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다. 이는 북중관계의 특수성 때문인데 정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권에

73)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한중FTA'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의 역할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론은 다음 정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사드갈등은 한중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다. 2016년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사드갈등은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드갈등으로 인해 양국 국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는 반중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0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주변 4강 중 최근 5년 새 한국인들의 적대감이 가장 큰 폭(16.1% → 40.1%) 늘어난 한편, 우호감은 가장 큰 폭(50% → 20.4%)으로 줄어든 나라였다.[74]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2030 세대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75] 이는 향후 한중관계의 양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처럼 반중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에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자세와 문화공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중 문화공정은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 주요소로서 그 양상이 더욱 첨예해 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반중여론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다. 한일관계:** 위안부/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역사문제, 정상회담,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관계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양국 국민 간 상호 혐오 정서까지 확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회담마저 계속 무산되면서 정치적 갈등의 깊이는 계속 깊어지고 있다. 한일관계 역시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기시다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였는데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이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도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한일관계 미

74) "한국은 속국에 문화도둑…전세계 '반중감정' 들끓는 이유,"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5/469265/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75) "젊은 세대의 반중(反中),"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0032.html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한 만큼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충분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받을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76] 한국 어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역사문제이다. 그리고 역사문제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체결한 GSOMIA는 우리 정부가 일본과 처음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파이브 아이즈 확대 구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GSOMIA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정보교류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관계 혹은 한·미·일관계를 고려하면 GSOMIA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

### **라. 공공외교:** K-pop/한류, 문화외교, 국가브랜드[77]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다.[78] 정부 중심의 전통외교 방식과 달리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며, 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이를 통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의 조성은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도 직결된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공공외교를 더욱 중시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의 지형과 행태가 점차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자산은 K-pop 등 한류이다. K-pop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하기 시작했으며 BTS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UN 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등 국가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pop 외에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공공외교 자산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76) "경남 환경·시민단체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 들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0631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77)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스포츠외교'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78)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가 있다. 문화외교는 공공외교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의 방식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음식, 의복, 스포츠 등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외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공공외교가 국가 차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79] 국가이미지의 제고는 국가브랜드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가브랜드는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국민, 상품, 기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이준원·김유경 2018). 이에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2013년 폐지되었다. 국가브랜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대선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 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다자개발협력, 인도적지원[80]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81] 한국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또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ODA(공적개발원조)는 개발협력의 일부로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18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ODA 규모의 증가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사업의 중복 등 예산 사용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자개발협력은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에 분담금 납부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한국은 2015년 이후 약 600만 달러의 원조규모를 유지하고 있다.[82] 반면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사회·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적고,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83]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발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79) 국가브랜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등의 유무형 가치들의 총합을 가리킨다.
80)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유무상원조'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81)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82) 'ODA 원조규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87&stts_cd=168701&freq=Y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83) KOICA, 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HDP Nexus) 실행 방안 연구, https://lib.koica.go.kr/search/media/img/CAT000000043355?metsno=000000017007&fileid=M000000017007_FILE000001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바. 다자외교:** 다자안보협력, 중견국외교(믹타), 신남방/신북방정책, 동북아 지역 안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입장에서 다자외교는 양자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외교수단이다. 특히 한국은 복잡한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 지역기구에서 능동적인 다자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외교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유일하게 실질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없는 지역이다. 동북아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주변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이고, 이로 인해 동맹 등의 양자관계만 설정되어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이 있지만 역내 복잡한 역학관계와 군비경쟁 등으로 인해 다자안보협력은 요원한 상태이다. 6자회담이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이지만 결국 중단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안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자안보협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자안보협력과 동북아 지역 안보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이다.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가 등 중견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협력체이다. 믹타는 다자주의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연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협력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신북방정책 역시 한국의 다자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특정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환경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특히 미중 경쟁관계의 격화라는 외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협력정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 정책을 통해 한국 다자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핵심 외교정책으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다음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사. 재외국민:** 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선거, 한상네트워크[84)]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의 수는 약 270만 명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하면 약 750만 명이다.[85)] 향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증가하고,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증가하게 되면 재외국민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84)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재외동포', '출입국 편의'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85)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에 관한 공약이 제시된 바 다음 대선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코로나19 외에도 분쟁지역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992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재외국민의 선거도 중요한 의제이다.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의 수는 현재 약 214만 명이다.[86] 이는 19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87] 하지만 재외국민선거의 경우 투표 장소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우편투표를 고려하기도 하는 등 재외국민의 증가와 더불어 재외국민선거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중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인 한상네트워크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기업인, 재외동포 경제인 간 교류를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88]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상들이 활동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주목할 만 하다.

### (4) 통상

2020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3.3%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2018년에는 82.5%까지 기록하였다.[89] 수출을 통해 한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통상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이 대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

#### 가.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경쟁, 보호무역, 수출입규제[90]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의 통상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91] 미중무역갈등은 공급사슬의 왜곡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키고

86) “‘214만표’ 재외국민 우편투표 내년 대선 가능할까,”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ew.asp?nNewsNumb=002676100005&ctcd=C03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87)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7.2%,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수는 32,807,908명이다.
88)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에는 총 53개국 4,482명(해외 790명, 국내 3,692명)이 참여하였다. 한상넷, https://www.hansang.net/hansang/hansang_convention/pg_summary_18.do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89) “무역의존도 15년만 최저, 코로나19 여파,”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1420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90)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환율변동’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91) “해외진출 국내기업 41% ‘美-中 갈등이 가장 부담 큰 통상이슈’,”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6/106605455/1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있다. 한국은 무역갈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높은 나라로 지목된 바 있다.[92]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수출과 기업의 이익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경쟁은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ICT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중국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고자 한다. 한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특히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역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보호무역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부추겼다. 보호무역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해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이로 인한 보호무역의 확산 등이 한국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무역 보호주의, 탈세계화가 예견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호무역의 확산과 심화로 인해 수출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 **나. 환경기준강화:** EU 탄소배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 그린딜, USMCA 환경기준 강화[93]

보호무역의 확산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글로벌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각 선진국들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은 민감한 문제이다.

유럽 그린딜은 2020년 3월 채택된 유럽의 기후 법안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와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린딜 투자액으로 1조 유로를 책정한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이다.[94] 유럽의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환경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EU의 탄소배출 강화와 이에 따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인데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는 한국의 대 EU 수출에 어려움을

---

92) "중 무역전쟁 가장 취약한 나라, 세계무역기구(WTO) 순위,"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80723075757127 84a01bf698f_1/article.html?md=20180731134116_R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93)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하여 새롭게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수입품에 대한 환경기준의 강화를 말한다.

94) "유럽 그린딜을 향한 여정, FIT FOR 55를 살펴보자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90285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줄 것으로 예상된다.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북중미 대륙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규제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EU나 북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다.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FTA, RCEP/CPTPP[95], 한미FTA, 한중FTA

한국은 현재 17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고, 4개의 지역 및 국가와 서명/타결 중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지역화의 심화로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말미암아 보호무역이 확산,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73%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호무역의 확산과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틀을 잘 활용하여 통상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동아시아FTA인 RCEP은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국은 RCEP 가입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2019년 기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50% 이른다.[96] 미중 무역갈등과 환경기준 강화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FTA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최영미 2014). RCEP과 함께 CPTPP도 중요한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냈다. 한국은 현재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가입 이후 아·태지역 통상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97] 한미FTA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위기가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한미 경제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이번 2월, 2단계 서비스 무역과 투자 규정, 시장 개방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중 FTA가 심화될 경우 양국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

9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을 말한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며,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96) "'세계 최대 FTA 대비하라'…코트라, RCEP 설명회 개최,"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1319

97)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준비 차질 없이 진행 중,"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8453&cID=10401&pID=10400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관련 논의가 필요하며, 각종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에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라. 무역장벽확대:** 환경규제, 기술규제, 비관세규제[98)]

미중 무역갈등과 이로 인한 보호무역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의 심화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EU 등 지역 경제협력체는 해당 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환경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통상환경이 바뀔 경우 수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유럽 뉴딜 등 환경규제가 주요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인데 환경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제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환경규제에 관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제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있다. 2020년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만 해도 3,300여 건으로 조사되었다.[99)]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이 휴대전화와 배터리 등에 적용하는 기술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00)] 비관세규제 역시 보호무역을 위한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기술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비관세장벽이 확산할 경우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의 확산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은 만큼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 디지털무역(DEPA):** 글로벌 빅데이터, 디지털세, 초국가 전자상거래[101)]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디지털무역(디지털경재동반자협정,

98)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무역기술장벽', '수출입규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99)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출범," https://blog.naver.com/koreareg/222214828972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100) "정부, 중국에 "휴대전화·배터리 기술규제 완화해 달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6MW075042320903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101)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 콘텐츠 수출', '디지털 통화'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DEPA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회원국으로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칠레 3국이 있지만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디지털무역협정 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102]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무역을 더욱 확산할 것이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무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빅데이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시 빅데이터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대규모 자원을 투입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빅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등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세도 주목할 만한 키워드이다. 디지털세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136개국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매출을 올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디지털세는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바. GVC 재편:** 기술패권경쟁, 디커플링(탈중국화), 디지털 전환[103]

GVC(Global Value Chain)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며, 원료 조달과 가공, 조립과 판매 등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과정을 특정 기업이나 국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서 분업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GVC 재편이라 한다. 미중 무역갈등 이후 GVC 재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와 안보의 가치를 묶는 GVC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남방정책 등 새로운 진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 재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커플링(탈중국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102) “미국,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검토,”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7211335001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103)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GV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반중국 무역연합’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가 진행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화로 개편되고 있다.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탈중국화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104]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패권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의 양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기술주도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패권경쟁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ICT 기술 발달에 의한 디지털 전환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이 디지털 무역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무역이 가속화 하면서 무역비용 감소, 무역 품목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비교우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1) 산업자원(에너지)

**가. 제조업지원:** 차세대 산업지원, 혁신 클러스터, 부품소재 국산화, 스마트공장

우선, 산업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조업 지원 방안, 벤처기업 지원 방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이 예상된다. 제조업은 고용을 책임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제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제조업의 혁신 방안으로 차세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수소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에너지원과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분야이다. 이러한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차세대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공약들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이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제조혁신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기존의 단순한 산업 네트워크의 지리적 집중을 넘어 산업행위자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리적 영역내에서 통합하여 혁신의 창출과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 산업재구조화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적 공급망 운영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산업 분야

104) “GVC 재편 나선 美… 한국도 동참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ZA091YR (검색일: 2021년 9월 25일).

의 국산화 혹은 다변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출발점이자 최종재 생산에 필수적인 존재로 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선결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를 통해 공급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지속되어 논의될 것이다.

**나.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창업지원, 고용지원, 수출지원, 물류유통지원

상당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혁신적 사고와 기업가적 정신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과 대기업과의 경제력 불균형 심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역시 적지 않다(이건우·신호균 2020).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과 함께 물론 인력난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이들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 고용지원, 시장진출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유통물류 거점 기지 건설 등을 통해 물류유통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KOTRA나 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는 해외인증 획득지원, 수출 관련 교육과 대출 지원 등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서린·최장우 2021). 이러한 지원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스타트업 등 신규 산업의 경우 다양한 규제철폐나 세제 혜택, 예비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신규고용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제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논의될 것이다.

**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저탄소 산업 육성, 탈원전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조림사업과 탄소 포집기술 등을 활용)로 상쇄하여 순배출량 '0'(net-zero, 넷제로)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박영석 외 2021, 2).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서명국들은 2050년에 이르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과 관련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작년 10월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수력, 풍력. 폐기물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한다. 정부에서

도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량 기준 당시 7%대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010년 686만 toe[105]에서 2015년에 1,329만 toe, 2018년에는 1,784만toe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106]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바 이와 관련된 공약들이 제시될 것이다. 기금조성과 세제 지원 등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 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등을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 (2) 건설교통 및 부동산

건설교통 및 부동산분야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과세 인상 등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공약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임대차, 부동산 세제, 교통인프라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도심재건축, 신도시건설, 주거비지원,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상향

우선,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신도시 및 주택공급 계획,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확대가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한 입장은 정치진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신규주택 공급 방법과 형태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은 주택마련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마련 방안과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도심지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재건축은 신규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재건축을 통한 가격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전체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국민 주거 수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현재 14㎡(4.2평)로 지나치게 낮은 편이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105) 석유환산톤. 원유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발열량의 단위.
106) e-나라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1&param=001 (검색일: 2021년 8월 8일).

**나. 부동산세제 및 규제:** 보유세, 거래세, 임대차규제, 대출규제

둘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세분될 수 있다(오승규 2020).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바 있다. 여기서는 상속 증여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의 적정 수준이나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대한 사회화의 수준에 대해 사회 내 견해가 크게 나뉘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는 이미 선거정치에서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필두로 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 여부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과세표준의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크게 인상된 바 있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를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거래세를 낮추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한, 최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를 도입한 소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임대차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규정을 완화하여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과 현재의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엄격히 하여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 교통인프라:** 수도권 GTX 확충,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철도교통 확충, 공항 및 항만확충, 고속도로 지하화

셋째, 교통인프라 측면에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철도 사업 등 광역 교통체계 마련, 고속도로의 확충과 지역간 연계 등이 논의될 것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을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 등과 연계하여 광역 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비용지원 혹은 보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그 밖에 지역별로 공항과 항만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며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라. 건설산업지원:** 공정건설계약, 하도급규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해외시장진출 지원

건설산업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다. 우선, 건설산업에서 불공

정 계약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발주자나 대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여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제가 논의될 것이며 특히 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작업장 내 안전조치나 위생, 휴식시간 보장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3) 농업해양수산

최근 들어 농업은 6차산업[107]이라 불릴 정도로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고령화, 낮은 농가소득, 정주환경 미비 등 문제점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농어촌과 관련하여 농수산인 소득보장, 가축 전염병방역 및 안전, 농식품 산업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농수산인 소득보전:** 농산물 수급안정, 자연재난시 농가구호, 농산물 가격보존, 농가직불제

농수산인의 경우 소득이 불균등하고 자연재해 등의 피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농가평균소득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FTA 등 무역체제의 변화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태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농어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민우·김민지 2019). 이와 관련하여 직불제, 수급안정, 가격 보존, 기초소득 등 소득보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직불제란 정부가 시장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재정을 집행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방식을 뜻하거나 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전 성격의 보조제도를 의미한다(이민우·김민지 2019)” 농가소득지원제도의 핵심인 직불제는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과 같은 국제적인 배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농업 소득보장의 기본적 틀이 되어왔다. 순직불금 예산은 2012년 약 9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6천억 원가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08] 이러한 이유로 농업과 관련하여 직불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한편, 최근 농업인 기본소득 혹은 농민수당에 대한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다. 농업인 기본소득제나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

107) 6차 산업이란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2·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08) e-나라지표 농림축산부 직접지불금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9&param=002 (검색일: 2021년 8월 9일).

본소득이란 원래 보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나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직업 등 범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실화나 농어업인 연금제 등 역시 농어민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논의될 것이다.

**나. 가축전염병:** 가축방역, 동식물검역, 가축백신지원, 살처분보상

둘째,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여 전염병 유입을 막고 가축방역과 백신지원을 통해 전염병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방역 인력 부족이나 미비한 보상규정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입의 위험에 맞서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농식품 안전:**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 안전인증제, 농산물 위생검사

또한, 농축산물 위생관리는 식탁 먹거리와 직결되는 만큼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이슈로 대선에서 농축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2017년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식품안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가 있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관리와 함께 HACCP(안전관리 인증 기준) 관련 지원 강화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조사 강화 등의 공약이 제기될 것이다.

**라.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식품 R&D, 식품수출단지, 식품테마파크

마지막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공약이 논의될 것이다. 관련하여 스마트농업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업인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농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남기포 2020, 60). 스마트농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면 재배시설과 관련하여 스마트팜[109]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주로 시설원예, 축산, 과수농업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자동화 지원 방안이나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지원 등은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바,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

109) 스마트팜(smart farm)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온실(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시설농장을 의미한다(장영주·김태우 2019).

원 방안과 식품수출단지 및 테마파크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 5) 교육/인적자원

교육/인적자원 정책영역은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고령화 등 네 가지 정책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교육 정책 이슈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인프라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 정책 이슈는 노동자 안전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현안은 물론 고용 및 일자리 주제도 포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 논쟁이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해결방안이 시급한 청년, 여성, 노인 계층에 대한 이슈도 교육/인적자원 정책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하였다.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 정책 이슈의 상위 및 하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주요 정당이 교육/인적자원 분야 정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검색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 정당들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제기된 정책 영역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현재 주요 정당 경선 후보자들의 공약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 (1) 교육

교육 정책 이슈는 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교육 거버넌스, 교육 인프라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크게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교육과정 및 체계에 대한 부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제도, 제반 시설 등을 포함하는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돌봄교실, 보육교사, 유연근무제, 아동수당

주요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선거에서 이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돌봄교실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장생활과 돌봄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획일화된 근무형태보다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나아가 일자리 확대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 초중등교육:** 사교육비 경감, 민주시민교육, 자사고/특목고, 학재개편, 혁신학교

초중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주로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의 다양화, 다양화로 인한 불평등 증대, 공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침에 따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공교육 정상화 논의 속에 혁신학교의 지속 및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초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평준화 사이 균형점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역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될 것이며, 보다 큰 틀에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학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편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육:** 대학구조조정, 입시개혁, 국립대 육성, 4차산업혁명, 국가장학금 확대

그 동안 주요 정당들은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확대 등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공약들을 제시해왔으며, 이러한 어젠다들은 역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지방분권 측면에서 국립대 무상등록금 등 국립대 강화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국립대 육성사업 확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국공립대 중심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등의 공약이 제시된 바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를 포함한 수시, 정시 비중 조정 등 입시제도 개혁 어젠다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다음 선거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논의들이 대학생 학비, 입시제도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향후에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문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에 어떻게 대학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는 어젠다 역시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라. 교육 거버넌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육감 선거

어린이집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 논의와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고 운영하는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당은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 선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같은 주요 교육행정주체들 간에 위상 재조정 및 관계 설정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정당들 사이에서 학교 교육 정치화를 비판하면서 전교조의 역할을 비판하고 있고 이와 관련지어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거론하고 있어 교육 거버넌스 분야에서 전교조 이슈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차기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출마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무관심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교육감 선거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 교육 인프라:** 학교인프라 개선, 교원양성체계 개편, 안전한 학교, 각종 고시 부활

교육과정 및 교육 거버넌스에 못지않게 교육 환경, 학교 안전 등 교육 인프라 문제 역시 중요한 영역이다. 제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안전한 등하교, 로컬푸드 공급, 학교 석면 시설 정비 등의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학과목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양성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주요 교육 주체들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에서 사법시험 부활, 사법시험 및 로스쿨 병행 등이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노동

노동 정책 이슈는 청년 일자리, 여성 고용, 노인 일자리, 노동자 안전망, 노동 현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크게는 일자리 문제 이슈가 심각한 계층 즉 청년, 여성, 노인의 고용 분야 그리고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노동자 안전망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 현안을 포함하는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청년 일자리:** 공정채용, 비정규직 감소, 지역인재채용, 창업지원, 청년고용할당

청년 실업률이 약 10%로 장기화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관련 주요 공약이 되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사가 청년층이 되면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현금지원, 대출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고용 증가를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어젠다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감소, 청년고용할당, 지역인재채용 등의 정책은 물론 창업지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 성별 임금격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약계층여성, 비정규직 여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출산율 제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정당들이 여성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 여성 노동 관련 공약들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간접적인 기업 지원이나 취업 알선을 넘어서서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제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콜센터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여성 문제나 취약계층여성의 고용 개선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개선하는 어젠다가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 노인 일자리:** 취업지원제도,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정부사업 일자리, 자영업 지원, 수당인상

최근 선거에서 노인 관련 공약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들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이다. 주요 정당들은 일자리 확대와 수당 확대를 축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자리 확대는 정부사업 일자리의 단순한 확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한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서서 노인 일자리의 성격과 위상을 재검토하는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며, 자영업 지원 및 고령 친화적 사업장 구축과 같은 노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라. 노동자 안전망:** 사망사고 책임 강화,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인 사회 이슈가 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산재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약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재계는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의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내실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지적되는 등 산재 문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 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자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 노동현안:**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직업훈련 강화, 고용유연화, 연공서열제 개혁, 노동이사제

이 외에 노동현안으로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권 분야의 공약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강화가 논의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공약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노동개혁을 어젠다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고용유연화, 연공서열제 개혁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논의와 이러한 정책들은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3) 청년 및 여성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는 청년 복지, 청년 주거, 젠더 갈등, 여성 안전, 여성 건강, 저출산, 여성대표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청년 정책 이슈에서는 청년 일자리 외에 취업난 속에 놓인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망 제공을 위한 청년 복지 이슈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룬다. 여성 정책 이슈에서는 청년층 사이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중점과제인 저출산 이슈 그리고 여성 안전, 건강, 대표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가. 청년 복지:** 학자금 대출, 청년실업부조, 청년구직수당, 최저임금, 대학등록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은 실업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진출의 출발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에 힘들어 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외에 복지 정책 구체화와 다각화를 통해 청년들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약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종합적인 복지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청년 주거:** 청년공공주택, 주거금융 지원, 1인 가구, 신혼부부, 대학 기숙사

청년 1인 가구 중 약 1/3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추산될 정도로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심각하다. 따라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중요하며, 가족형성 출발점에 놓인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제도 개선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정책들은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시행

되고 있는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반한 차별화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다. 젠더 갈등:** 성차별 인식 격차, 여성가족부, 젠더폭력, 여성할당제, 군복무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서 젠더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포용적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는 젠더 갈등의 주요 원인인 여성가족부 폐지, 군복무 논란, 여성할당제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성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성차별에 대한 인식 격차를 생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고, 젠더 갈등 이슈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등 젠더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출되고 있기에 젠더폭력 예방에 대한 공약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라. 여성 안전:** 디지털성범죄, 폭력예방교육, CCTV, 안심귀가서비스, 성매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이 일상에서 성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57%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CCTV, AI 기술 등을 활용한 여성 안전 강화 대책, 안심귀가서비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정당들이 여성 안전 관련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 있어 실효성 있고 정당별로 차별화된 공약 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여성 건강:** 건강검진 확대, 분만인프라 구축, 생리대 지원, 여성 관련 암 예방,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여성 건강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의해 구분되는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성차별, 성폭력 문제 못지않게 여성 건강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이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 건강과 관련한 정책이나 의료체계는 특정 신체 부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사각지대가 많기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여성 관련 질환의 건강검진 확대, 여성암 관련 예방 및 조기 검진, 분만 인프라 구축 등이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미적 기준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강화되면서 성형,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여성 건강을 저해할 수 있기에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으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라. 저출산:**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시술비 지원, 다자녀 장학금, 산후조리비용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저출산 관련 공약들을 제시해왔고, 현 정부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주요 핵심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자녀 장학금 등 국가가 육아와 보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면,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족 형태,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예측, 대비하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마. 여성대표성/성평등:** 여성가족부, 성평등위원회, 비례대표제, 여성관리자,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주류화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을 요구해왔다. 여성의 위상이 달라지고 전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관리자 확대,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전담관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30세대 남성 표심을 확보한다는 이유 하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대표성 제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여성대표성 강화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젠더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 노인/고령화

노인 정책 이슈는 노인 돌봄, 노인 주거/교통, 노인 여가, 노후 보장(고령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약이 필요하고, 노인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무상교통 이슈 등의 정책을 다룬다. 노인 여가 분야는 경로당, 노인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다룬다. 노후 보장(고령화) 분야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약을 살펴본다.

**가. 노인 돌봄:**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국공립요양시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치매 노인을 돌봄에 있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지원센터 증설,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을 제시하였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는 노인 관련 공약 중에서 치매 관련 이슈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맞물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개선 등의 공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유사한 대책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노인 돌봄 관련 공약들을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노인 주거/교통:**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농어촌 공영택시, 무상교통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부부, 자녀 동거노인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노인 주거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영구임대주택, 맞춤형 공동주택 등 보다 보편적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교통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노인들에 비해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농어촌 공영택시, 대중교통 할인 등의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 노인 여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존엄한 죽음, 노인생활체육, 평생교육, 경로당 개편

노인 여가와 관련하여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경로당을 생활복지관 혹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재편하는 공약이 제시된 바가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도 제시되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요 정당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 건강, 여가, 생활체육,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등의 이슈를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 노후 보장(고령화):** 국민연금강화, 기초연금액 인상, 정년연장, 퇴직연금강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중요해질 것

으로 전망된다. 은퇴 이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 인구들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강화, 퇴직연금 강화 등의 대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연장 등을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1) 문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들이 축적될 때마다 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이슈들 또한 계속 변화해간다. 현재 한국 역시 이렇듯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는 문화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 또한 파생시키는바, 각급 선거 공약상으로도 이 같은 이슈들이 포함될 여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겠다.

**가. 문화사회**: 디지털 문화화, 비대면 문화화, 지역문화 발전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장기적인 문화사회 차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디지털 문화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해오던 수많은 사회적 행위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대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사회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문화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 행위 양식 관련 규범이나 규칙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급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디지털 문화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현실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규모 재난 상황까지 중첩됨에 따라 비대면 문화화 현상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디지털 문화화와 비대면 문화화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이 대거 공약으로 채택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수도권과밀화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급격한 쇠퇴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적 문화사회의 침체로 이어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등 각 지역의 문화사회 보존 및 복원은 지방자치나 균형발전 등과의 연관성에 비춰볼 때 지역 문화사회의 진흥 및 주민 삶의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발전 방안 역시 이번 대선에서 공약 중 하나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나. 문화경제**: 저작권 확충,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K-콘텐츠산업 진흥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토대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창작의 자산이자 유인 체계라 할 저작권은 콘텐츠산업을 위시한 문화경제의 토대이자 선순환적 발전의 핵심일 뿐 아니라, 현재는 신기술기반 서비스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불확실성에 의해 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문화경제 발전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현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 확충 관련 공약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융합, 창의성, 디지털콘텐츠를 핵심 자원으로 삼는 초연결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문화경제에 있어서의 경쟁력 구축에도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AI 기술 체계에 더해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사고력과 의사소통기술, 창의력 등의 교양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공약에도 문화경제의 부흥을 위한 융복합 인재 양성 공약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부문을 꼽자면 단연 콘텐츠산업이며, 이를 수출로까지 연결시키는 K-콘텐츠산업은 문화경제에 있어 가장 큰 수익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연예기획사들이 출시한 언택트 공연 등은 수백억 원대의 티켓 수익으로 이어지며 코로나 시대 K-콘텐츠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 만큼 향후로도 K-콘텐츠산업 진흥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계속 고려될 것이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외교**: 신한류 확산, 국제 문화교류,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

최근 문화외교는 한국 외교에 있어 필수적인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외교의 중요성은 일반 국민은 물론 외교부에서조차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외교에 있어서의 소프트파워의 가치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문화외교 역시 적잖은 관심을 받게 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외적 측면에선 앞서 언급한 K-콘텐츠산업 수출에 기초한 신한류 확산이나 점증하는 국제 문화교류 차원에서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까지도 문화외교의 일면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의 보전 및 복원이라는 대내적 효과까지 기할 수 있는 정책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신한류 확산,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그리고 전톤문화의 계승 및 홍보 등이 공약 사항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문화시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문화인프라 확충

정부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풍요로운 문화예술적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적 수준을 선진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은 나름대로 이렇듯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화소비 지원 강화, 문화가치의 회복 및 확산, 그리고 문화인프라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 이슈에 관한 공약들이 제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언론 및 방송

한국에서 그간 언론 및 방송 관련 개혁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였다. 통상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책무를 지닌 이른바 '권력 제4부'에 해당한다고들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언론과 방송의 정치 및 경제권력 등을 향한 치우침 및 이에 따른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의심 탓에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작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대대적인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당 입법안들은 현재도 언론과 방송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언론 및 방송 관련 공약들이 다수 제안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선 정당과 후보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가. 언론개혁**: 가짜뉴스,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편집권 독립, 미디어바우처제, 지역언론 지원

우선, 현재 방송을 포함한 언론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개혁 및 예방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가짜뉴스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기사 및 보도의 파급효과가 급속하고도 매우 치명적으로 변해버린 현 시대의 기술적 조건 속에서 가짜뉴스의 생성 및 유포는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명예훼손 등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짜뉴스 제어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에 의해 주요한 언론개혁 관련 공약으로 제안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편, 방송을 포함한 언론개혁에 있어 현재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는 언론중재법 입법으로 보인다. 이는 법안 명칭 그대로 언론의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해 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언

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의 개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위에 언급한 가짜뉴스의 예방을 위한 개혁 조치들로 추진된 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들이 가짜뉴스의 예방이란 본래 취지 이상으로 보도 등 언론 본연의 기능 위축 등에 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선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정 이슈에 관해서도 공약들이 제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간 한국에선 언론개혁의 중대한 한 요소로서, 정치권 또는 언론사주나 광고주 등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취재 및 보도 독립성의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기사 및 보도의 주체인 언론인들이 사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언론사가 정치권 또는 광고주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시 해당 언론의 기사나 보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으로 기대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한 정책 이슈로 편집권의 독립이나 미디어바우처제의 도입 관련 공약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재정적 위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지방언론 등에 대한 지원 이슈 역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안될 개연성이 있다. 건강한 지역언론은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민생에 매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위기 등 다양한 악조건들로 인해 최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방송개혁**: 공영방송 독립성, 방송수신료제, 광고운영 규제

오늘날 언론 매체들 가운데서도 방송이 지니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과거 활자 매체인 신문 등이 지녔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됐고, 이미지 및 영상이 주를 차지하는 방송이 시청자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정치사회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등 정치권 및 대기업 등 경제권력과 방송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여타 언론 매체들에 비해서도, 최근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시청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의 방송수신료제의 현실적 개편, 그리고 기업 등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자율성 증대 차원에서의 광고운영 규제 등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 이슈로 포함될 개연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포털개혁**: 포털 뉴스편집 폐지, 알고리즘 공개, 아웃링크 도입, 댓글실명제

어느샌가 인터넷이 일상화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도래했고, 매체 환경 또한 포털이 사실상 기사 등에 접근하는 데 있어 주된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포

털의 언론기능 확대 및 여론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화가 적잖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정보를 인터넷 화면상의 상단에 올리는가 하는 '정보의 배열'이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계속 논란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뉴스편집을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맡기는 대안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공개되어야 한단 여론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해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자동 연결해주는 아웃링크제에 대한 요구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서, 결국은 포털의 뉴스편집을 통한 선별적 정보 제공에 대해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는 규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알고리즘 공개, 그리고 아웃링크의 도입 등이 공약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포털의 댓글실명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그 사회적 논란이 만만치 않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익명성이 지켜져야 한단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통을 예방하고 신뢰도 높은 인터넷 문화의 형성을 위해 댓글실명제가 필요하단 입장도 있다. 이렇듯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 정책 이슈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는 각자의 정책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이의 존폐를 둘러싼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관광

관광은 산업, 국내외 교류, 문화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들과 연관성이 작지 않은 이슈에 해당한다. 특히, 그 특성상 지역문화 등과의 관련성 또한 높아 지방자치나 균형발전 등의 이슈와도 일정 수준 이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관광 관련 정책이슈들이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관광 관련 상위키워드는 크게 국제관광, 국내관광 그리고 산업관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국제관광**: 방역인프라, 국제행사 유치, K-관광콘텐츠 개발, 외국인관광 지원 인프라

국제관광 정책들은 해외 인구의 국내로의 안정적인 유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외화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다시금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관광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제관광 정책이슈들 역시 대선 과정에서 일부 공약 이슈로 채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코로나 시국임을 고려하면 방역인프라 지원 등은 국제관광

장려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행사의 적극적 유치나 K-관광콘텐츠의 개발 등은 국제관광의 내용적 차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광 정책이슈 관련 대선 공약으로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외국인관광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관광강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어둘 것이므로 이 역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관광**: 교통숙박연계 관광, 로컬관광, 안보관광 자원개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간 계속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관광 등에 제한이 가해지자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유독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특히 관광업계 등으로서도 해외관광 수요가 사실상 부재한 조건 속에서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관광 정책이슈들 또한 대선 공약에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공급자는 관광수익을 내도록 장려하고 수요자는 지역 특유의 문화자원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관광 진흥 정책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관광을 산업 차원에서 진흥해볼 목적하의 교통숙박연계 관광사업 지원이나, 남북분단의 현 상황적 요인을 참작한 안보관광 자원의 개발 등도 이번 대선 공약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산업관광**: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의료관광, 4차산업 체험관광, 교육관광

한국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산업 분야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산업관광 정책 이슈들 또한 이번 대선 공약에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의 눈부신 고속 산업화의 현장들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국내 및 국외 관광객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정책 등이 흥미로운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막대한 투자와 개발에 의해 한참 발전 중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장들이나, 이전부터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한국의 의료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정책 등 역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들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스포츠

스포츠 정책의 경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모두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이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프로야구나 축구 등 프로스포츠 종목들의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산업부문이 될 수 있고, 지방 인프라 측면

에선 공동체의 주요한 자산으로 기능한다. 한편 아마추어 체육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교육 효과, 시민들의 공동체를 둘러싼 단합도의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및 경제 공동체의 활력소 역할 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몇몇 스포츠 정책 관련 공약 이슈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가. 생활스포츠**: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역체육 공동체화,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한국의 스포츠 현장은 오랫동안 실상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극소수의 엘리트 선수 자원을 일찍부터 선발하고 이들을 프로급 내지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키워내는 것이 한국 스포츠의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반면, 생활스포츠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만 정책이 집행되다 보니 그간 생활스포츠 영역은 그 물적·문화적 인프라가 모두 잘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해줄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나 인프라 확충 등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지역스포츠 인프라의 확충이나 지역체육 공동체화 정책 등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스포츠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게끔 해줄 아마추어 체육교육을 다양화하는 정책 등도 대선 공약 이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스포츠경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융복합 사업화, 지역·사회적 자본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이미 대단히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잉글랜드 또는 스페인의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등은 이미 해당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 지 꽤 오래된 분야들이다. 특히 정보통신매체 환경의 변화로 어디서든 스포츠를 중개로 실시간 즐길 수 있게 된 현재의 상황하에서 스포츠경제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스포츠를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이슈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다뤄질 소지가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사업 육성에 수반되는 명품브랜드의 창출이나 산업 및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스포츠 관련 제품의 개발 등 스포츠를 지역 및 전국 단위에서의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이슈도 전략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프로스포츠팀은 해당 지역의 공동체적 자산으로서 공동체 주민을 단합시키고 해당 지역경제에도 적잖이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자본이 될 수 있을 것인 만큼,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팀을 육성하는 정책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 스포츠외교**: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스포츠 교류협력, 스포츠 한류

오늘날 스포츠외교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 간 민관 차원의 국제협력 무대일 뿐 아니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수반하는 대규모 정책 이슈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로부터도 동시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구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나 국제 대회에서의 선전은 국민들의 단합을 촉진하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국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국제스포츠 영역으로의 한국의 진출 및 이를 통한 역할과 비중의 확대는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스포츠 교류협력, 그리고 스포츠 한류의 촉진 등은 모두 상당히 중요한 정책 키워드들로서 대선 공약으로도 제안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영역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 ICT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 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국가이며,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 후보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20대 대선에서도 해당 정책 영역은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1) 과학기술

**가. 기초/기반연구:** 생명과학, ICT[110]/융합, 컴퓨팅 인프라[111]

기초/기반연구는 특정분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로 과학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기초/기반연구가 반드시 필

110)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말한다.
111)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항공우주', '의약학'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고, '공학'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요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과학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만큼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도 생명과학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3세로 10년 전보다 3.1세 증가하였다.[112] 평균수명의 증가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20대 대선에서 관련 정책공약이 주요 의제로 제시될 수 있다.

ICT 융합이란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되어 다른 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장희선 2014). 그리고 ICT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ICT 융합을 위한 이노베이션 플랫폼 및 이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ICT 융합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을 창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키워드이다.

컴퓨팅 인프라도 기초/기반연구를 위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만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얻기 위해 분산 컴퓨팅 기술, 고성능 컴퓨팅 기술,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 등의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에서 정보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슈퍼컴퓨터를 둘러싸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인프라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 **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113]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로 AI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또한 ICT 기술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로봇, VR,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많은 각종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 인공지능인 것이다. 미국은 2016년 백악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중국 또한 국가 차원에서 AI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기술패권을 주도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는 등 연구기반에 대한 정책적, 인식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112)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heckFlag=N
113)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규제혁신', '디지털혁신', '일자리미래', '미래차'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만하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초연결사회의 기반이 되는 지능화 혁명의 시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적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닌 분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 사업체는 6,700여 개이고,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점유율은 78%, 글로벌 기업은 22%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의 경우는 정반대로 국내기업이 24%,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은 76%에 달하여 데이터 분석에 격차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114]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의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블록체인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이 활용 가능한 분야는 금융거래를 비롯하여 헬스케어, 보험, 인증, 전자투표 등 거버넌스와 관련한 공공분야 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 **다. SW/인공지능(AI):** 융합적 사고력, 교육 및 인력양성, 인공지능 윤리[115]

SW/인공지능(AI)은 미래의 기술을 선도할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사회 진화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회를 진화시키는 것 외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준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지금 존재하는 인간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적 사고란, 과학, 인문사회, 디자인, 문화예술 등 서로 다른 영역의 혼합을 통해 이뤄지는 사고를 말한다. 현대의 기술은 한 가지 지식이 아닌 여러 영역의 융합에 의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의 방향이 필요하다. 교육 과정에서도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SW/인공지능, 융합적 사고력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주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는 등 연구기반에 대한 정책적, 인식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인력의 양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공

11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www.kdata.or.kr/

115)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소프트웨어 진흥법', '특허권'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지능이 활용, 확산되면서, 기술의 오남용,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인식적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정보통신

**가. 디지털 뉴딜:** 디지털 격차해소,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116]

디지털 뉴딜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2.0'의 부분으로 31개의 대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17]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은 ICT 기술 강국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격차이다. 디지털이 보편화 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지식과 함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거 정책공약의 경우 디지털 접근이 용이한 계층은 정책공약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소외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기술은 빅데이터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5G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의 지원하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 제기될 수 있다.

SOC 디지털화는 의미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의 아날로그식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컨대 공항, 철도, 도로 등에 디지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항공기 탑승의 간소화 등도 실현할 수 있으나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

116)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메타버스', '비대면산업', '지능형 정부'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고, '5G 고속도로'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17) 디지털 뉴딜, https://digital.go.kr/front/intro/introMain.do

**나. 디지털 무역(DEPA):** 글로벌 빅데이터, 초국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 콘텐츠 수출[118)]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디지털 무역(디지털경재동반자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DEPA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회원국으로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칠레 3국이 있지만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디지털무역협정 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119)]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무역을 더욱 확산할 것이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무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빅데이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시 빅데이터를 중시하고 있다. 디지털세도 주목할 만한 키워드이다. 디지털세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으로 OECD에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다.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 데이터보호[120)]

정보보호는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년 간 개인정보가 약 4,700만 건이 유출되었다고 한다.[121)] 정보보호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커머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수입 증대에도 중요한 만큼 기업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118)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디지털세', '디지털통화'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19) "미국,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검토,"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7211335001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120)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21) "3년간 개인정보 약 4700만건 털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8500027&wlog_tag3=naver (검색일: 2021년 10월 9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데이터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중요한 자료들이 해킹이나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경우 데이터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며, 핵심기술의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의제이다. 최근 해킹의 의한 기업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122]

**라. 디지털경제:** 디지털화폐, 디지털커머스, 데이터경제[123]

디지털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개발 등 경제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특히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바꾸었는데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13조 6천억 달러, 중국의 규모는 5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124] 한국의 경우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디지털경제 규모 역시 크지 않지만 디지털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만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폐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CBDC)와 가상화폐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의 경우 투자열풍이 불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화폐는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CBDC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의 경우 CBDC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또한 CBDC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125]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커머스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한국의 디지털커머스 매출은 1천 41억 달러로 세계 5위였다.[126] 2022년에는 약 2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

122) “국내 중소기업 셋 중 하나, 1년내 해킹당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63766629210296&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1년 10월 7일).

123)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핀테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고, ‘구독경제’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24) “디지털경제 '날개'…글로벌 2위 우뚝,”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600254/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125) “한국은행 CBDC, SK㈜ C&C·네이버·카카오 3파전,” https://www.fnnews.com/news/202107121502278140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126)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지난해 세계 5위…중국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60000030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전망하고 있다.[127]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때에도 디지털커머스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디지털커머스는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보편화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디지털의 특성상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데이터경제라고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있는 자료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데이터경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명되었다. 데이터의 가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3) 연구환경

#### 가. 지식재산: 핵심/원천기술, 기술보호/활용, 혁신기술[128]

지식재산은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이에 대한 권리가 곧 지식재산권이다.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을 차지하였을 때와는 인터넷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129] 여기에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콘텐츠를 기반 개인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중에서도 핵심/원천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원천기술이란 특정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위해 근간이 되는 기술로 미래 사회 발전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이 제시되고 있다.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

127) "'내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224조' 전망,"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5_0001603277&cID=13001&pID=13000 (검색일: 2021년 10월 6일).

128)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국제표준화'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고, '영업비밀/특허침해', '특허 부가가치'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29) "BTS·승리호 덕에 상반기 지식재산권 8.5억달러 흑자…사상 최대,"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24/I6EBV44D2BDWBO3YO735IS5KX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혁신기술과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로 차세대 컴퓨팅 인공지능의 응용과 활용, 바이오 혁명, 5G, 디지털 트윈스 등의 기반기술을 제시하였다.[130] 미래기술의 선점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첨단기술에서 빠른 성장을 보인 한국은 더욱 주목해야 한다.

### 나. R&D: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비, 민관협력/투자확대[131]

R&D는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말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간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R&D는 산업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R&D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선도하는 만큼 기업의 발전이나 국가의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R&D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D를 통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1월, R&D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 R&D 예산은 30조원에 이르는데 여러 제약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부담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정부담은 줄이고,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위의 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의 확대는 연구의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혁신 기업 167개 중 한국의 기업은 불과 4곳에 불과하다. 또한 혁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10%에 이른다.[132] 많은 혁신기업들이 연구개발비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R&D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D의 민관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민관협력과 이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보다 효율적인 R&D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 3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출범하였다.[133]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을 위한 민관협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민관협력은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민간의 자본 및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용이하다. 다만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

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정책브리프』 2021년 11호.
131)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연구윤리', '국방 R&D', '지역/관료주도형 R&D', '기술규제', '예비타당성'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32) "글로벌 혁신기업 167개 중 韓 기업은 4개 뿐…R&D 늘려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699 (검색일: 2021년 10월 9일).
133) "민관 R&D 협력…자율주행 '융합형 레벨4+' 도전," https://www.etnews.com/20210324000128 (검색일: 2021년 10월 4일).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8) 보건의료/환경

보건의료/환경 정책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의 환경문제는 해당 정책 영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매번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20대 대선에서도 관련 정책 공약은 주요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정책 분야는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의료, 환경의 정책 이슈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상위키워드와 하위키워드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의 도출은 각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비롯하여 신문기사, 정부자료 등 자료를 참고하였고, 되도록 최신 이슈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1) 공중보건

공중보건은 환경위생의 개선, 전염병의 예방, 개인위생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포함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방역/K-방역, 백신생산, 백신주권[134)]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이다.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대규모 감염을 유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확산 초기에는 경제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신접종이다. 현 정부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면역 이후에도 집단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파감염 등 백신접종의 어려움도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현

134)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백신여권', '거리두기'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재로서 백신접종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인 만큼 백신접종에 관한 이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 및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 수 있다.

방역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이슈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한국의 다양한 방역 사례들이 세계 언론에 비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방역에 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방역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시스템과 관리 등의 의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백신생산과 백신주권문제도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백신을 수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백신의 자급률(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은 27.3%에 불과하다.[135]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 수급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신주권의 확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나.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 국가검진사업, 의료비지원[136]

질병관리 역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재명 후보는 현충원 참배 이후 첫 일정으로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였다.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새로운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질병관리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 바로 감염병 예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 관리 이전에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감영병 예방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국가검진사업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비만, 시각, 청각 등 공통검사 항목 외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B형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을 추진하고 있고,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135) "머나먼 백신주권…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률 27%에 그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7011006&wlog_tag3=naver (검색일: 2021년 10월 7일)

136)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예방접종', '호스피스/완화의료'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C형 간염에 대한 국가검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새로운 질병의 확산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제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의료비지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의료비지원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쟁점이 제시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과 논의가 필요하다.

### (2) 의료

의료 정책 이슈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의료개혁의 상위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상위키워드는 세분화된 하위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는 공중보건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이다.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등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오는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137]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절감을 강조하였다. 2017년 시행된 보장성 강화로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원에 달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8] 특히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취약계층의 본임 부담률이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과 의료의 경우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향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의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쟁점도 부각되고 있다. 2017년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실제 보장률 상승은 1.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정부의 목표는 62.6%에서 70%까지 높이는 것).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여 보장률이 상승하지 못한 것은 투입 대비 의료기관의 비보험 진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서남규 외 2021). 특히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증세로 이어지고, 증세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건강

137)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보험료인상', '임신/출산비지원'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38) "'文케어' 환자 부담 9조원 감소…건보 보장률 상승 1.6%p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6412 (검색일: 2021년 10월 4일).

보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오는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의료:**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육성, 공공의대, 의료질[139]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의료의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을 보면 하위 10개 병원은 사립대학교 병원이었고, 상위 10개 병원은 국립대 병원이었다(상위 10개 병원 중 2개는 사립대 병원).[140]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에 관한 쟁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공병원, 공공의대 등은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현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하여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육성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정원 확대는 실효성이 없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공의료에 관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문제가 다시 화두 되었다. 공공의료에 관한 쟁점은 향후 더욱 첨예해 질 수 있는 의제이기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의료개혁:** 의료법개정, 수술실 CCTV, 의료권력, 의료수가[141]

의료개혁 또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개혁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과거 의약분업 사태 때에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의료계의 파업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 가중되면서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료법개정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의사면허에 관한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일 것이다. 의사면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어려웠다. 만약 범죄를 저질러도

139)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과잉진료/과소진료', '의대정원'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40) "경실련 "공공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민간보다 높아..공공의료 확충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QDSR41 (검색일: 2021년 10월 5일).

141)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의료파업'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의사는 법 집행 기간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정지될 뿐이다. 반면 변호사, 국회의원, 법무사 등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 및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큰 쟁점이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의사들은 감시를 받게 될 경우 어려운 수술을 기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의료법개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의료권력에 대한 쟁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사는 합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료권력은 또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권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공공의료 문제가 쟁점화 되었고, 의료계의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료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의료법개정 등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료권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쟁점이 존재한다. 의료수가는 공공의료와도 관련이 되는데 비급여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실제 필요한 과에서는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대형병원은 투입한 자본에 비해 수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해당 환자를 잘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3) 환경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점차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으며, 생활의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의 변화는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파성을 떠나 보편적인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하게 논의될 의제이다.

#### 가. 기후변화/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142)]

기후변화/위기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UN

142)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탄소배출권', '화석연료', '탄소국경세'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가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명시하였다.[143]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제이다.

기후변화/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최근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수학적 예측 가능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구과학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작물 재배지 상한선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생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산업화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각 국가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발전 역시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144]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 **나. 자원순환:** 미세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업사이클링, 폐기물재활용[145]

자원순환 문제도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자원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데 자원의 낭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대량의 플라스틱 발생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0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공포하여 시행

143) "기후 변화는 인권 달린 문제…유엔 인권이사회 처음 명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9_0001608420&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144) "그린 뉴딜,"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do (검색일: 2021년 10월 8일).

145)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순환센터', '제로웨이스트'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경우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 약 5조 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해양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146]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47]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8]

업사이클링과 폐기물재활용 역시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149]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순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은 일부 기업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녹색산업[150]

그린뉴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한다. 그린뉴딜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환경문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제도와 인력 마련,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또한 화력발전 등 기존의 에너지생산을 대체하고, 탄소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풍력, 태양광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R&D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

146) “돌고 도는 플라스틱, 결국 우리 몸으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4259.html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147) 폐기물부담금제도, https://www.budamgum.or.kr/

148) “일회용 주사기와 다른 규제 받는 일회용 부항컵…“폐기물부담금 면제해야,”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44 (검색일: 2021년 10월 7일).

149) “폐기물에 새 생명…GS샵·스타벅스, 업사이클링 제품 선보여,”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98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150)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순환경제’, ‘수소경제’, ‘도시숲’ ,‘스마트그리드’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산업화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각 국가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한다. 현 정부는 향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 까지 환경 분야 일자리 8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151] 하지만 지나친 녹색산업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 한중협력, 저감조치[152]

대기오염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이다. 대기오염은 인간이 직접 호흡을 통해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등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하였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황반변성 발병 증가가 보고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15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54] 다행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농고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증가, 화석연료 발전, 중국발 미세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발 황사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던 대표적인 사안이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의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

151) "녹색산업 투자 확대...2025년까지 환경분야 일자리 8만 개 창출," 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2501397160 (검색일: 2021년 10월 9일)
152)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산성비', '저녹스보일러'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53) "미세먼지에 눈 아프다 했더니…황반변성 위험,"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7161700017?input=1195m (검색일: 2021년 10월 11일)
154) "자동차 초미세먼지가 치매 부른다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05000795 (검색일: 2021년 10월 11일).

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중 협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난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다시 한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양국 간 대기오염 협력은 탄소중립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155]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만큼 양국 모두 대기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발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해양/수자원:**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폐기물[156]

해양문제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해양폐기물 문제, 오염수 문제, 기름유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한다. 2007년 발생했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양오염의 경우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양수자원은 인류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만큼 해양생태계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온난화 문제와도 연관된다. 대기 중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며 바다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해양순환은 느려진다. 또한 해수 온도의 상승은 해양 생물들의 이동으로 이어지며, 많은 경우 북쪽이나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 나아가 부화율, 성비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종국에는 해양 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 간 산호초의 1/4 이상이 사라졌다.[157] 해양생태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은 남해와 동해 등 천혜의 바다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오염은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등 대규모의 오염 외에 인간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 해양쓰레기는 인간의 생활환경 뿐 아니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국제적인 환경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언급되었다.[158]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은 많은 어민들의 경제적 터전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155) "中장관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 꺼낸 文…왕이 '베이징 공기질 좋아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4GOYWE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156) 최초 도출했던 하위키워드 '상/하수도'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인 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고, '지하수'는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삭제하였음.

157) "산호초 죽음은 해양생태계 교란 신호…인류도 위험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10328.99027008610 (검색일: 2021년 10일 2일).

158)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273 (검색일: 2021년 10월 10일).

# Ⅳ. 정책영역별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당 및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고, 유권자의 정책 선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영역과 이슈 및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와 더불어 각 정책영역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7개의 정책영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각의 정책이슈 및 상위, 하위 키워드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51명의 전문가들이 응답을 완료하였다(결과는 <부록 2>를 참조).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 연번 | 정책영역 | 평균값 | 순위 |
|---|---|---|---|
| 1 | 정치/행정/사법 | 3.204 | 2 |
| 2 | **재정/경제/복지** | **1.408** | **1** |
| 3 | 국방/통일/외교통상 | 3.939 | 4 |
| 4 | 산업자원/건설교통 | 5.245 | 6 |
| 5 | 교육/인적자원 | 3.979 | 5 |
| 6 | 문화/체육/관광 | 6.551 | 7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3.633 | 3 |

1차 델파이 조사는 정책 이슈 및 키워드 선정에 앞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하였으며, 재정/경제/복지 정책영역이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정치/행정/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국방/통일/외교통상, 교육/인적자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간 등수 값의 차이는 미세하였다. 그리고 산업자원/건설교통, 문화/체육/관광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영역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후순위에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정치/행정/사법

**<표 4-2>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응답 빈도 | 응답률 |
|---|---|---|---|
| 정치/행정/사법 | 정치개혁 | 39 | 76% |
| | 사법개혁 | 24 | 47% |
| | 지방자치 | 15 | 29% |
| | 개헌 | 14 | 27% |
| | 사회안전 | 8 | 16%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치/행정/사법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정치개혁이고 2순위가 사법개혁이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 개헌, 사회안전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행정/사법 영역의 이슈들 중에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비교적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대두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음을 시사하는데, 정치개혁의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그리고 사법개혁의 경우 검찰 및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들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강한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 키워드 | 빈도 | 응답율 | 순위 |
|---|---|---|---|---|
|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 | 36 | 71% | 1 |
| | 국회개혁 | 26 | 51% | 4 |
| | 정당개혁 | 18 | 35% | 6 |
| 사법개혁 | 검찰개혁 | 27 | 53% | 3 |
| | 법원개혁 | 18 | 35% | 6 |
| | 경찰개혁 | 10 | 20% | 11 |
| 지방자치 | 지방정부 | 11 | 22% | 10 |
| | 지방의회 | 10 | 20% | 11 |
| | 지방균형발전 | 33 | 65% | 2 |
| 개헌 | 권력구조 | 20 | 39% | 5 |
| | 기본권 | 6 | 12% | 13 |
| | 직접민주주의 | 2 | 4% | 14 |
| | 경제민주주의 | 14 | 27% | 9 |
| 사회안전 | 치안 | 2 | 4% | 14 |
| | 교통안전 | 2 | 4% | 14 |
| | 재난안전 | 15 | 29% | 8 |

정치/사법/행정 영역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 등 정치개혁 이슈 관련 상위 키워드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사법개혁의 경우도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정책이슈 중요도 조사 결과에 부합하게 개별적으로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속한 상위 키워드들이 비교적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큰 셈이다. 다만, 정치/행정/사법 분야에서 지방자치 관련 상위 키워드 중 지방균형발전이 전체 2순위로 나타나고 개헌 상위 키워드 중 권력구조 개헌이 전체 5순위로 집계되었음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이긴 하나, 그럼에도 지방균형발전 및 권력구조 개헌의 경우 개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약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4-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39 | 7 |
| | 선거구획정 | 33 | 15 |
| | 선거공영제 | 11 | 55 |
| | 여성대표성 | 10 | 57 |
| | 투표시간 | 2 | 62 |
| 정당개혁 | 국고보조금 개선 | 36 | 13 |
| | 정치자금법 | 33 | 15 |
| | 지구당복원 | 22 | 35 |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23 | 32 |
| | 상시국정감사제 | 23 | 32 |
| | 행정입법감독 | 21 | 36 |
| | 국회국민청원 | 17 | 42 |
| | 불체포특권 | 12 | 54 |

정치개혁 분야에서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앞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상위 키워드인 선거제도 개혁 이슈들 중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및 선거구획정이 대선 공약으로서 상대적으로 꽤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치개혁 분야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상위 키워드로 조사됐던 정당개혁의 경우, 오히려 하위 키워드에선 국고보조금 개선 및 정치자금법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회개혁의 경우 상위 키워드로선 정당개혁보다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데 반해, 하위 키워드들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개혁과 상시국정감사제의 도입 정도만이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44 | 1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37 | 11 |
| | 검사장직선제 | 14 | 49 |
| 법원개혁 | 국민참여재판 | 18 | 38 |
| | 무작위 사건배당 | 16 | 44 |
| | 판결문 공개 | 28 | 23 |
|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33 | 15 |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38 | 8 |
| | 정보수사 분리 | 38 | 8 |
| | 경찰대 폐지 | 14 | 49 |

사법개혁 분야에서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앞서 검찰개혁이 상위 키워드 가운데서도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찰수사권조정이 전체 하위 키워드 중에서도 전체 1위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11위로 꽤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이미 기구가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집계된 하위 키워드가 없었고, 법관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정도가 전체 15위로 비교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상위 키워드 비교에선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던 경찰개혁의 경우, 하위 키워드에선 자치경찰제와 정보수사 분리가 모두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검찰개혁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권력구조 | 대통령연임제 | 41 | 4 |
| | 의원내각제 | 23 | 32 |
| | 준대통령제 | 18 | 38 |
| 기본권 | 안전권 | 24 | 30 |
| | 생명권 | 18 | 38 |
| | 주거권 | 40 | 6 |
| | 정보기본권 | 15 | 46 |
| 직접민주주의 | 국민발안제 | 20 | 37 |
| | 국민소환제 | 33 | 15 |
| | 주민투표제 | 26 | 25 |
| | 주민예산참여제 | 17 | 42 |
| 경제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28 | 23 |
| | 사회적 경제 | 14 | 49 |
| | 동반상생경제 | 24 | 30 |
| | 토지공개념 | 15 | 46 |
| | 소비자주권 | 13 | 53 |

개헌 분야에서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앞서 권력구조가 상위 키워드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연임제로의 개헌이 전체 하위 키워드 가운데서도 4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내각제나 준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응답 빈도가 낮았음은 설령 개헌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연임제 이외에 다른 권력구조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권 중에서는 주거권 조항의 도입이 전체 6위로 꽤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하위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직접민주주의 이슈 중에서는 국민소환제 정도가 전체 15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직접민주주는 상위 키워드로서도 그러했듯 하위 키워드들도 특별히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도 상위 키워드 중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듯, 그 하위 키워드들 역시 특별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슈가 없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개헌 관련 정책이슈들이 별로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음은, 개헌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회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겠다.

**<표 4-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법제 | 18 | 38 |
| | 지방정부 입법 | 31 | 20 |
|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41 | 4 |
| 지방의회 | 구성원 전문성 | 26 | 25 |
| | 정책역량 강화 | 43 | 3 |
| | 사무직인사권 독립 | 9 | 58 |
| | 지방의회 다양화 | 15 | 46 |
| 지방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44 | 1 |
| | 행정수도 이전 | 14 | 49 |
| | 지역혁신성장거점 조성 | 37 | 11 |

지방자치 분야에서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키워드 조사 결과에서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던 것과 부합하게 수도권과밀화 해소가 하위 키워드 가운데서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선적 공약 이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정책이슈라 할 수 있을 지역혁신성장거점 조성 또한 11위의 응답률을 보여 꽤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위 키워드 중에서는 그리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데 반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가 전체 3위,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확보가 전체 4위의 응답률을 보이는 등 하위 키워드 순위에선 의외로 그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슈로 인식되진 않더라도, 응답자들이 지방자치의 실천적 제도개선에 대해선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4-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치안 | 코로나19 관련 위법 대응 | 11 | 55 |
| | 지능범죄 예방 | 15 | 46 |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 29 | 22 |
| | 데이트 폭력 대응 | 29 | 22 |
| | 아동폭력 대응 | 33 | 15 |
| 교통안전 | 스쿨존 교통안전 | 25 | 29 |
| |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 34 | 14 |
|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31 | 20 |
| 재난안전 | 위험방지체계 | 26 | 25 |
| | 총체적 지역접근 | 7 | 59 |
| | 재난불평등 | 26 | 25 |
| | 기후변화 | 38 | 8 |

사회안전 분야에서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치/행정/사법 분야 정책이슈 영역은 물론 상위 키워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위 키워드 중에서도 특별히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슈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재난안전과 관련해선 기후변화가 전체 8위로 집계돼 꽤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이슈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연재해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결국은 기후변화라고 응답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교통안전 분야에선 AI 등 최근의 급속한 기술혁신 추세 때문인지,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이슈가 다소 중요한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치안 이슈들은 대체로 별로 높은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아동폭력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정책이슈로 집계되었다.

### 2) 재정/경제/복지

<표 4-9> 재정/경제/복지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응답률 |
|---|---|---|---|
| 재정/경제/복지 | 공정거래 | 31 | 61% |
| | 사회복지 | 26 | 51% |
| | 조세 | 22 | 43% |
| | 재정 | 16 | 31% |
| | 사회적경제 | 7 | 14%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재정/경제/복지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조세정책기조였다. 전반적인 증세기조를 채택하여 사회복지나 공공지출을 강화할 것인지 감세기조를 택하여 경제적 활력 강화에 치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연금, 아동/육가,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재정건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복지 정책 영역에서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적 경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슈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재정/경제/복지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키워드 | 빈도 | 응답율 | 순위 |
|---|---|---|---|---|
| 조세 | 조세정책기조 | 29 | 57% | 1 |
| | 기업과세 | 15 | 29% | 9 |
| | 개인과세 | 9 | 18% | 13 |
| 재정 | 재정건전화 | 22 | 43% | 5 |
| | 재정효율화 방안 | 16 | 31% | 8 |
| | 포용적 재정운영 | 10 | 20% | 12 |
| 공정거래 | 재벌규제 | 17 | 33% | 7 |
|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25 | 49% | 4 |
| | 소상공인 지원 | 19 | 37% | 6 |
| 사회복지 | 소득보장 | 13 | 25% | 10 |
| | 연금 | 26 | 51% | 2 |
| | 아동/육아 | 26 | 51% | 2 |
| 사회적 경제 | 제도 | 11 | 22% | 11 |
| | 기업지원 | 3 | 6% | 15 |
| | 지역공동체 활성화 | 8 | 16% | 14 |

**<표 4-11> 조세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조세정책기조 | 증세여부 | 27 | 26 |
| | 조세부담율 | 24 | 31 |
| | 직-간접세비율 | 12 | 46 |
| | 공평과세 | 30 | 21 |
| 기업과세 | 법인세율 | 40 | 3 |
| | 법인세공제 | 15 | 42 |
| | 일감몰아주기과세 | 30 | 21 |
| 개인과세 | 소득과세 | 15 | 42 |
| | 금융과세 | 21 | 38 |
| | 상속·증여세 | 28 | 25 |
| | 부유세 | 30 | 21 |

조세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법인세율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부유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속증여세, 증세여부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조세공약 분야에서 재벌, 법인, 부유층 등 상대적으로 납세 능력이 높은 집단에 대한 증세여부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재정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재정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관리 | 34 | 8 |
| | 통합재정수지관리 | 34 | 8 |
| | 재정준칙법제화 | 18 | 40 |
| 재정 효율화 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 23 | 33 |
| | 세출개혁 | 24 | 31 |
| | 조세탈루억제 | 31 | 18 |
| | 국유자산관리 | 12 | 46 |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42 | 2 |
| | 균형발전예산 | 40 | 3 |
| | 국민참여예산 | 8 | 50 |

재정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복지재정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균형발전예산, 국가부채비율관리, 통합재정수지관리, 조세탈루억제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재정분야에서 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재정 투입과 부채비율이나 재정수지 관리라는 두 과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에 관심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공정거래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34 | 8 |
| | 일감몰아주기 | 33 | 13 |
| | 금산분리 | 26 | 29 |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기술보호 | 43 | 1 |
| | 공공조달 | 10 | 49 |
| | 집단소송제 | 27 | 26 |
|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11 | 48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관련 지원 | 39 | 7 |
| | 지역상권 활성화 | 30 | 21 |
| | 사회안전망 | 23 | 33 |

공정거래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 총수지배약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함께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사회복지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소득보장 | 기본소득 | 23 | 33 |
| | 기초자산 | 5 | 51 |
| | 근로장려금 | 15 | 42 |
| | 기초생활보장제 | 34 | 8 |
| | 부(負)의 소득세 | 17 | 41 |
| 연금 | 기초연금 | 33 | 13 |
| | 국민연금 개혁 | 40 | 3 |
| | 직역연금개혁 | 13 | 45 |
| 아동/육아 | 아동수당 | 19 | 39 |
| | 보육서비스 | 40 | 3 |
| | 육아휴직 | 33 | 13 |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개혁과 보육서비스가 함께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육아휴직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연금개혁과 보육 및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사회적경제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사회적 경제 제도 | 법률 정비 | 26 | 29 |
| | 기금조성 | 27 | 26 |
| | 교육과정 확대 | 26 | 29 |
|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 | 판로지원 | 22 | 37 |
| | 기업활성화 | 31 | 18 |
| | 지역사회 확산 | 31 | 18 |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 금융지원 | 33 | 13 |
|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34 | 8 |
| | 도시재생 | 23 | 33 |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가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회적 기업활성화, 사회적 경제의 지역사회 확산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고용증대나 취약계층 보호 등 실질적 효과성 증대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산업자원/건설교통

**<표 4-16>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산업자원 (에너지 포함) | 제조업지원 | 24 | 5 |
| | 중소 및 벤쳐기업 지원 | 35 | 4 |
| | 신재생에너지 | 41 | 3 |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주거안정 | 46 | 1 |
|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43 | 2 |
| | 교통 인프라 | 13 | 7 |
| | 건설산업지원 | 1 | 11 |
| 농업해양수산 | 농수산인 소득보전 | 6 | 9 |
| | 가축전염병 | 7 | 8 |
| | 농식품안전 | 20 | 6 |
| | 스마트농업 | 5 | 10 |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주거안정이었고, 다음으로 부동산세제 및 규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제조업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에서 단연 부동산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산업자원 부분에서도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차세대 산업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 탄소중립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방안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산업자원·에너지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32 | 11 |
| | 탄소중립 | 30 | 15 |
| | 저탄소 산업 육성 | 17 | 28 |
| | 탈원전 | 13 | 34 |
| 제조업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36 | 4 |
| | 부품소재 국산화 | 24 | 20 |
| | 혁신 클러스터 | 17 | 28 |
| | 스마트공장 | 10 | 37 |
| 중소 및 벤처기업지원 | 고용지원 | 39 | 1 |
| | 창업지원 | 31 | 13 |
| | 수출지원 | 12 | 35 |
| | 물류유통지원 | 10 | 37 |

건설교통 및 부동산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광역도로망 확충, 보유세, 도심재건축, 하도급 규제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주거안정 증대방안과 함께 부동산 세제와 교통인프라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건설교통 및 부동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 38 | 2 |
| | 도심 재건축 | 32 | 11 |
| | 주거비 지원 | 15 | 31 |
| | 신도시건설 | 7 | 41 |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33 | 9 |
| | 임대차규제 | 25 | 19 |
| | 거래세 | 19 | 25 |
| | 대출규제 | 15 | 31 |
| 교통인프라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35 | 6 |
| | 수도권 GTX 확충 | 23 | 22 |
| | 철도교통 확충 | 19 | 25 |
| | 고속도로 지하화 | 9 | 39 |
| | 공항 및 항만 확충 | 4 | 44 |
| 건설산업지원 | 하도급규제 | 31 | 13 |
| | 공정건설계약 | 29 | 16 |
|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23 | 22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7 | 41 |

<표 4-19>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 키워드 | 빈도 | 순위 |
|---|---|---|---|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농산물 수급안정 | 33 | 9 |
| | 자연재난시 농가구호 | 21 | 24 |
| | 농가 직불제 | 18 | 27 |
| | 농산물 가격보존 | 17 | 28 |
| 가축전염병 | 가축 방역 | 38 | 2 |
| | 동식물검역 | 24 | 20 |
| | 살처분보상 | 15 | 31 |
| | 가축백신지원 | 12 | 35 |
| 농식품 안전 | 축산물안전인증제 | 34 | 7 |
| | 농산물위생검사 | 28 | 17 |
| | 축산물이력관리 | 26 | 18 |
| 스마트농업 | 식품 R&D | 36 | 4 |
| | 스마트팜 | 34 | 7 |
| | 식품수출단지 | 8 | 40 |
| | 식품테마파크 | 7 | 41 |

농업해양수산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축방역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식품관련 연구개발, 스마트팜, 축산물 안전인증, 농산물 수급안정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축방역과 식품 안전분야와 농업 발전방안에 두루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 교육/인적자원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0>과 같이 1순위는 청년 일자리였고, 다음으로 저출산, 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노후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조사 대상인 전문가 그룹은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시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돌봄의 문제 등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 분야 중에서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슈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이슈 | 빈도 | 순위 |
|---|---|---|---|
| 교육 | 돌봄 | 22 | 3 |
| | 초중등교육 | 22 | 3 |
| | 대학교육 | 21 | 5 |
| | 교육거버넌스 | 6 | 15 |
| | 교육인프라 | 8 | 11 |
| 노동<br>(고용 및 일자리 포함) | 청년일자리 | 33 | 1 |
| | 여성 고용 | 7 | 12 |
| | 노인 일자리 | 4 | 17 |
| | 노동자 안전망 | 19 | 7 |
| | 노동현안 | 4 | 17 |
| 청년 및 여성 | 청년 복지 | 9 | 10 |
| | 청년 주거 | 10 | 9 |
| | 젠더 갈등 | 18 | 8 |
| | 여성 안전 | 6 | 15 |
| | 여성 건강 | 0 | 20 |
| | 저출산 | 30 | 2 |
| | 여성 대표성/성평등 | 7 | 12 |
| 노인<br>(고령화 포함) | 노인 돌봄 | 7 | 12 |
| | 노인 주거/교통 | 0 | 20 |
| | 노인 여가 | 1 | 19 |
| | 노후 보장(고령화) | 21 | 5 |

교육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4-21>과 같이 교육부가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대학구조조정, 사교육비 경감, 학교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델파이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교육감 선거, 혁신학교 등 일부 교육 거버넌스 주제와 초중등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는 중요한 이슈로 선택되지 않았다.

**<표 4-21> 교육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순위 |
|---|---|---|---|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27 | 19 |
| | 돌봄교실 | 24 | 27 |
| | 보육교사 | 16 | 60 |
| | 유연근무제 | 15 | 62 |
| | 아동수당 | 10 | 81 |
| 초중등교육 | 사교육비 경감 | 32 | 5 |
| | 민주시민교육 | 27 | 19 |
| | 자사고/특목고 | 21 | 39 |
| | 학제개편 | 8 | 87 |
| | 혁신학교 | 5 | 95 |
| 대학교육 | 대학구조조정 | 32 | 5 |
| | 입시개혁 | 29 | 16 |
| | 국립대 육성 | 14 | 68 |
| | 4차산업혁명 | 10 | 81 |
| | 국가장학금 확대 | 8 | 87 |
| 교육거버넌스 | 교육부 | 36 | 1 |
| | 시도교육청 | 22 | 36 |
| | 국가교육위원회 | 17 | 54 |
| | 전교조 | 11 | 78 |
| 교육인프라 | 학교인프라 개선 | 32 | 5 |
| | 교원양성체계 개편 | 30 | 11 |
| | 안전한 학교 | 23 | 31 |
| | 각종 고시 부활 | 8 | 87 |
| | 교육감 선거 | 7 | 91 |

노동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사망사고 책임 강화, 노인일자리 중 취업지원제도가 중요한 키워드로 채택되었다. 이외에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도 우선순위로 나타나서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고령화 시

대에 맞는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 노인 일자리 수당, 노동이사제, 청년고용할당 등의 하위 키워드들은 중요한 의제로 선택되지 않았다.

**<표 4-22> 노동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순위 |
|---|---|---|---|
| 청년 일자리 | 공정채용 | 28 | 17 |
| | 비정규직 감소 | 25 | 25 |
| | 지역인재채용 | 19 | 49 |
| | 창업지원 | 13 | 70 |
| | 청년고용할당 | 9 | 86 |
| 여성 고용 | 경력단절여성 | 26 | 24 |
| | 성별 임금격차 | 23 | 31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3 | 31 |
| | 취약계층여성 | 17 | 54 |
| | 비정규직 여성 | 2 | 101 |
| 노인 일자리 | 취업지원제도 | 32 | 5 |
|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31 | 10 |
| | 정부사업 일자리 | 17 | 54 |
| | 자영업 지원 | 8 | 87 |
| | 수당인상 | 5 | 95 |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32 | 5 |
| | 근로감독 강화 | 20 | 46 |
| | 노동시간 단축 | 17 | 54 |
| | 실업급여 확대 | 12 | 74 |
| | 최저임금 인상 | 12 | 74 |
| 노동현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30 | 11 |
| | 직업훈련 강화 | 22 | 36 |
| | 고용유연화 | 15 | 62 |
| | 연공서열제 개혁 | 15 | 62 |
| | 노동이사제 | 7 | 91 |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차별 인식 격차, 디지털성범죄 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젠더폭력, 젠더갈등이 중요한 사회갈등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갈등인 지역갈등, 세대갈등 외에 젠더갈등이 중요한 사회갈등의 잠재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도권 정치 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이외에 여성 건강검진 확대, 청년공공주택 등이 우선순위로 채택되었다. 반면, 대학 기숙사, 산후조리비용 등은 낮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응답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23>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순위 |
|---|---|---|---|
| 청년 복지 | 학자금 대출 | 21 | 39 |
| | 청년실업부조 | 21 | 39 |
| | 청년구직수당 | 20 | 46 |
| | 최저임금 | 18 | 52 |
| | 대학등록금 | 11 | 78 |
| 청년 주거 | 청년공공주택 | 30 | 11 |
| | 주거금융 지원 | 25 | 25 |
| | 1인 가구 | 21 | 39 |
| | 신혼부부 | 14 | 68 |
| | 대학 기숙사 | 3 | 100 |
| 젠더 갈등 | 성차별 인식 격차 | 33 | 3 |
| | 여성가족부 | 27 | 19 |
| | 젠더폭력 | 22 | 36 |
| | 여성할당제 | 13 | 70 |
| | 군복무 | 7 | 91 |
| 여성 안전 | 디지털성범죄 | 33 | 3 |
| | 폭력예방교육 | 19 | 49 |
| | CCTV | 15 | 62 |
| | 안심귀가서비스 | 12 | 74 |
| | 성매매 | 10 | 81 |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30 | 11 |
| | 분만인프라 구축 | 24 | 27 |
| | 생리대 지원 | 17 | 54 |
| | 여성 관련 암 예방 | 15 | 62 |
|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4 | 99 |
| 저출산 | 출산휴가 | 28 | 17 |
| | 난임시술비 지원 | 12 | 74 |
| | 다자녀 장학금 | 10 | 81 |
| | 산후조리비용 | 2 | 101 |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여성가족부 | 21 | 39 |
| | 성평등위원회 | 20 | 46 |
| | 비례대표제 | 18 | 52 |
| | 여성관리자 | 13 | 70 |
|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11 | 78 |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국민연금 강화, 맞춤형 공동주택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상교통, 농어촌 공영택시 등 노인 교통 관련 하위 키워드들은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 4-24>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순위 |
|---|---|---|---|
| 노인 돌봄 | 치매 | 23 | 31 |
| | 의료비 부담 경감 | 21 | 39 |
|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19 | 49 |
| | 국공립요양시설 | 16 | 60 |
|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10 | 81 |
| 노인 주거/교통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34 | 2 |
| | 맞춤형 공동주택 | 27 | 19 |
| | 영구임대주택 | 24 | 27 |
| | 농어촌 공영택시 | 5 | 95 |
| | 무상교통 | 1 | 103 |
| 노인 여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11 |
| | 존엄한 죽음 | 24 | 27 |
| | 노인생활체육 | 17 | 54 |
| | 평생교육 | 15 | 62 |
| | 경로당 개편 | 5 | 95 |
| 노후 보장(고령화) | 국민연금강화 | 27 | 19 |
| | 기초연금액 인상 | 23 | 31 |
| | 정년연장 | 21 | 39 |
| | 퇴직연금강화 | 13 | 70 |
|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 | 94 |

### 5) 문화/체육/관광

**<표 4-25> 문화/체육/관광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응답 빈도 | 응답률 |
|---|---|---|---|
| 문화/체육/관광 | 언론 및 방송 | 43 | 84% |
| | 문화 | 34 | 67% |
| | 관광 | 14 | 27% |
| | 스포츠 | 2 | 4%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 정책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언론 및 방송이고 2순위가 문화이며, 그다음으로는 관광, 스포츠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언론 및 방송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항상 중요한 정책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며, 문화의 경우 역시 다양한 정책이슈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풀이된다. 반면, 관광은 상대적으로 그 정책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스포츠의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6> 문화/체육/관광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 키워드 | 빈도 | 응답율 | 순위 |
|---|---|---|---|---|
| 문화 | 문화사회 | 13 | 25% | 9 |
| | 문화경제 | 19 | 37% | 5 |
| | 문화외교 | 17 | 33% | 6 |
| | 문화시민 | 14 | 27% | 7 |
| 언론 및 방송 | 언론개혁 | 44 | 86% | 1 |
| | 방송개혁 | 41 | 80% | 2 |
| | 포털개혁 | 35 | 69% | 3 |
| 관광 | 국내관광 | 23 | 45% | 4 |
| | 국제관광 | 7 | 14% | 10 |
| | 산업관광 | 5 | 10% | 11 |
| 스포츠 | 스포츠경제 | 3 | 6% | 12 |
| | 스포츠외교 | 2 | 4% | 13 |
| | 생활스포츠 | 14 | 27% | 7 |

문화/체육/관광 정책영역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개혁, 방송개혁, 포털개혁 등 언론 및 방송 관련 상위키워드들이 그 중요성에 있어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관광 정책이슈 가운데 국내관광 정도가 상위키워드로서 45%의 응답률을 보이며 4위로 집계되었다. 문화 정책이슈의 경우, 앞서 전체적으론 언론 및 방송 다음으로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상위키워드 중에 특별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책이슈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관광이나 스포츠 이슈 관련 상위키워드의 경우도 대부분 중요한 공약 이슈로 사실상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34 | 9 |
| | 비대면 문화화 | 19 | 32 |
| | 지역문화 발전 | 33 | 10 |
| 문화경제 | 저작권 확충 | 18 | 33 |
|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37 | 8 |
| | K-콘텐츠산업 진흥 | 31 | 13 |
| 문화외교 | 신한류확산 | 26 | 21 |
| | 국제 문화교류 | 31 | 14 |
| |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 | 26 | 21 |
| 문화시민 | 문화소비 지원 | 22 | 27 |
|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21 | 28 |
| | 문화인프라 확충 | 42 | 4 |

문화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상위키워드로서 문화 분야는 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문화인프라의 확충은 전체 4위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이 정책분야 가운데 그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문화경제 관련해선 융복합 문화인재의 양성과 K-콘텐츠산업의 진흥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에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응답자들이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문화화의 경우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화 속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규칙 등의 확립의 중요성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지역문화 발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한 요소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들 봤기 때문에 그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화외교 중 국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8>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33 | 10 |
| | 언론중재법 | 24 | 26 |
| | 징벌적 손해배상 | 18 | 33 |
| | 편집권 독립 | 9 | 42 |
| | 미디어바우처제 | 2 | 45 |
| | 지역언론 지원 | 5 | 44 |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43 | 2 |
| | 방송수신료제 | 20 | 29 |
| | 광고운영 규제 | 26 | 21 |
| 포털개혁 | 아웃링크 도입 | 13 | 38 |
| | 알고리즘 공개 | 30 | 14 |
| | 댓글 실명제 | 14 | 37 |
|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32 | 12 |

언론 및 방송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방송개혁 이슈 중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전체 2위로 매우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개혁 이슈는 상위키워드 가운데선 언론개혁보다 그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하위키워드 조사에선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개혁상의 편집권 독립은 그 맥락이 상당히 유사함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상위키워드 중 그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던 언론개혁 이슈 가운데선 가짜뉴스가 응답률이 비교적 제일 높았지만, 그 외의 정책이슈들의 경우 의외로 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한 여론의 적잖은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아울러 포털개혁 이슈 중에선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폐지하는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포털의 언론 전반에 대한 강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9>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생활스포츠 | 지역스포츠인프라 확충 | 41 | 5 |
| | 지역체육 공동체화 | 20 | 29 |
|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28 | 17 |
| 스포츠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29 | 16 |
| | 융복합 사업화 | 28 | 17 |
| | 지역·사회적 자본화 | 28 | 17 |
| 스포츠외교 |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 13 | 38 |
| | 스포츠 교류협력 | 44 | 1 |
| | 스포츠 한류 | 26 | 21 |

스포츠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상위키워드의 중요도 순위에서 이 분야가 확연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하위키워드 가운데 응답률이 1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조사기간이 도쿄 올림픽 직후였던 게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편, 생활스포츠 이슈 가운데 지역스포츠인프라의 확충 또한 꽤 중요성이 높은 공약 이슈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하위키워드는 상위키워드의 중요도에 부합하게 거의 없었다.

<표 4-30>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빈도 | 순위 |
|---|---|---|---|
| 국제관광 | 방역인프라 | 18 | 33 |
| | 국제행사 유치 | 13 | 38 |
| | K-관광 콘텐츠 개발 | 40 | 2 |
|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18 | 33 |
| 국내관광 | 교통숙박 연계관광 | 38 | 7 |
| | 안보관광 자원개발 | 6 | 43 |
| | 로컬관광 | 43 | 2 |
| 산업관광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20 | 29 |
| | 의료관광 | 28 | 17 |
| | 4차산업 체험관광 | 25 | 25 |
| | 교육관광 | 11 | 41 |

관광 분야에서 하위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국내관광 이슈가 높은 순위에 들었던 상위키워드의 중요도에 부합하게 로컬관광이 전체 2위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통숙박 연계관광 역시 7위로 그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관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대선 공약의 주요 정책이슈로까지 인식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편, 국제관광 이슈 가운데는 K-관광콘텐츠 개발이 하위키워드 중 전체 6위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의 콘텐츠 산업 진흥 추세를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 영역 및 키워드 등을 삭제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영역에 대한 재분류와 하위 키워드 추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을 문화/언론/관광/스포츠로 수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보건의료/환경으로 재분류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수정을 진행한 이후에 1차 조사가 실시된 지 약 2주 후인 2021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7일에 걸쳐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 참여하였던 51명 가운데 총 41명이 응답을 완료하여 80.3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결과는 <부록 4>를 참조).

**<표 4-31> 1, 2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변화**

| 연번 | 정책영역 | 1차 응답 순위 | 2차 응답 순위 |
|---|---|---|---|
| 1 | 정치/행정/사법 | 2 | 2 |
| 2 | **재정/경제/복지** | **1** | **1** |
| 3 | 국방/통일/외교통상 | 4 | 4 |
| 4 | 산업자원/건설교통 | 6 | 7 |
| 5 | 교육/인적자원 | 5 | 5 |
| 6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7 | 8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 | 3 | 6 |
| 8 | 보건의료/환경 | 3 | 3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정책영역별로 우선순위를 질문하였으며, 1순위는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복지 정책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부터 5순위까지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정치/행정/사법, 보건의료/환경, 국방/통일/외교통상, 교육/인적자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기존의 3순위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공

중보건/환경 영역이 재분류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영역은 6순위로 확인되었으며, 1차에서 6순위였던 산업자원/건설교통은 7순위로, 그리고 문화/언론/관광/스포츠는 7순위에서 8순위로 우선순위가 하락하였다.

### 1) 정치/행정/사법

**<표 4-32> 정치/행정/사법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정치/행정/사법 | 정치개혁 | 39 | 36 |
| | 사법개혁 | 24 | 22 |
| | 지방자치 | 15 | 12 |
| | 개헌 | 14 | 7 |
| | 사회안전 | 8 | 4 |

정치/사법/행정 정책영역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집계되었고, 사법개혁은 2위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지방자치, 개현, 사회안전 정책이슈의 순서 역시 1차와 2차 조사에서의 결과가 동일했다.

<표 4-3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선거제도 개혁 | 36 | 35 | 0.71 | 0.85 | 1 | 1 |
| **지방균형발전** | **33** | **27** | **0.65** | **0.66** | **2** | **3** |
| **검찰개혁** | **27** | **29** | **0.53** | **0.71** | **3** | **2** |
| 국회개혁 | 26 | 22 | 0.51 | 0.54 | 4 | 4 |
| **권력구조 개헌** | **20** | **13** | **0.39** | **0.32** | **5** | **7** |
| **정당개혁** | **18** | **17** | **0.35** | **0.41** | **6** | **5** |
| **법원개혁** | **18** | **17** | **0.35** | **0.41** | **6** | **5** |
| 재난안전 | 15 | 5 | 0.29 | 0.12 | 8 | 11 |
| 경제민주주의 | 14 | 12 | 0.27 | 0.29 | 9 | 9 |
| 지방정부 | 11 | 13 | 0.22 | 0.32 | 10 | 7 |
| 경찰개혁 | 10 | 4 | 0.20 | 0.10 | 11 | 12 |
| 지방의회 | 10 | 7 | 0.20 | 0.17 | 11 | 10 |
| 기본권 개헌 | 6 | 0 | 0.12 | 0.00 | 13 | 14 |
| 직접민주주의 | 2 | 0 | 0.04 | 0.00 | 14 | 14 |
| 치안 | 2 | 1 | 0.04 | 0.02 | 14 | 13 |
| 교통안전 | 2 | 0 | 0.04 | 0.00 | 14 | 14 |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의 상위 키워드 조사의 경우 역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1차 조사 때 2위의 응답률을 보였던 지방균형발전이 3위로, 3위였던 검찰개혁이 2위로 상향 조정된 것이나, 1차 조사 때 5위였던 권력구조 개헌이 7위로, 각각 6위였던 정당개혁과 법원개혁이 공동 5위로 상향 조정된 것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 상위 키워드는 없었다.

**<표 4-3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39 | 39 | 0.76 | 0.95 |
| | 선거구획정 | 33 | 29 | 0.65 | 0.71 |
| | 선거공영제 | 11 | 3 | 0.22 | 0.07 |
| | 여성대표성 | 10 | 5 | 0.20 | 0.12 |
| | 투표시간 | 2 | 0 | 0.04 | 0.00 |
| | 사전선거운동 기간 | - | 0 | - | 0.00 |
| | 표현의 자유 확대 | - | 6 | - | 0.15 |
| 정당개혁 | 국고보조금개선 | 36 | 31 | 0.71 | 0.76 |
| | 정치자금법 | 33 | 30 | 0.65 | 0.73 |
| | 지구당복원 | 22 | 13 | 0.43 | 0.32 |
| | 공천제도 | - | 7 | - | 0.17 |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23 | 28 | 0.45 | 0.68 |
| | 상시국정감사제 | 23 | 23 | 0.45 | 0.56 |
| | 행정입법감독 | 21 | 14 | 0.41 | 0.34 |
| | 국회국민청원 | 17 | 12 | 0.33 | 0.29 |
| | 불체포특권 | 12 | 5 | 0.24 | 0.12 |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들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추세 정도가 나타났을 뿐이다. 1차 조사 시기의 일부 건의를 수용해 선거제도개혁의 하위 키워드로 사전선거운동 기간 및 표현의 자유 확대를 포함시켰지만, 두 개 모두 최하위권의 응답률을 보여 1차 조사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정당개혁의 하위 키워드로 공천제도를 포함했지만, 이 역시 응답률이 17% 수준으로 경미하게 나와 1차 조사 시기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한편, 국회개혁 하위 키워드 중 인사청문회 개혁 키워드가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응답률 상승세를 보여줘 주목되었다.

**<표 4-3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44 | 40 | 0.86 | 0.98 |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37 | 35 | 0.73 | 0.85 |
| | 검사장직선제 | 14 | 7 | 0.27 | 0.17 |
| 법원개혁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33 | 35 | 0.65 | 0.85 |
| | 판결문 공개 | 28 | 30 | 0.55 | 0.73 |
| | 국민참여재판 | 18 | 13 | 0.35 | 0.32 |
| | 무작위사건배당 | 16 | 4 | 0.31 | 0.10 |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38 | 37 | 0.75 | 0.90 |
| | 정보수사 분리 | 38 | 39 | 0.75 | 0.95 |
| | 경찰대 폐지 | 14 | 6 | 0.27 | 0.15 |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들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추세가 사법개혁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이슈의 경우 1차 조사 때 65%에서 2차 조사 때 85% 응답률로 유독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표 4-3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권력구조 | 대통령연임제 | 41 | 37 | 0.80 | 0.90 |
| | 의원내각제 | 23 | 31 | 0.45 | 0.76 |
| | 준대통령제 | 18 | 9 | 0.35 | 0.22 |
| 기본권 | 주거권 | 40 | 누락 | 0.78 | 누락 |
| | 안전권 | 24 | 5 | 0.47 | 0.12 |
| | 생명권 | 18 | 20 | 0.35 | 0.49 |
| | 정보기본권 | 15 | 8 | 0.29 | 0.20 |
| 직접민주주의 | 국민소환제 | 33 | 34 | 0.65 | 0.83 |
| | 주민투표제 강화 | 26 | 31 | 0.51 | 0.76 |
| | 국민발안제 | 20 | 14 | 0.39 | 0.34 |
| | 주민참여예산제 | 17 | 16 | 0.33 | 0.39 |
| 경제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28 | 31 | 0.55 | 0.76 |
| | 동반상생성장 | 24 | 21 | 0.47 | 0.51 |
| | 토지공개념 | 15 | 16 | 0.29 | 0.39 |
| | 사회적경제 | 14 | 5 | 0.27 | 0.12 |
| | 소비자보호 | 13 | 6 | 0.25 | 0.15 |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헌 분야에서도 역시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들이 2차 조사 시기에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그 중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이슈 가운데 주민투표제의 강화나 경제민주주의 이슈 중 경제민주화 키워드의 경우가 꽤 높은 응답률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의원내각제 개헌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 때는 45%로 별로 높지 않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2차 조사 시점에선 76%의 매우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가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기본권 이슈 가운데 1차 델파이 조사 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주거권의 경우, 2차 조사 때 기술적 실수로 문항에서 누락되었다, 하지만 기본권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봤을 때 주거권이 2차 조사 때도 만약 포함되었더라면 무리 없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인바, 최종적인 비교분석에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41 | 36 | 0.80 | 0.88 |
| | 지방정부 입법 | 31 | 27 | 0.61 | 0.66 |
| | 지방정부 법제 | 18 | 7 | 0.35 | 0.17 |
| | 지방행정체계 개편 | - | 6 | - | 0.15 |
| 지방의회 | 정책역량 강화 | 43 | 39 | 0.84 | 0.95 |
| | 구성원 전문성 | 26 | 28 | 0.51 | 0.68 |
| | 지방의회 다양화 | 16 | 10 | 0.31 | 0.24 |
| | 사무직인사권 독립 | 9 | 3 | 0.18 | 0.07 |
| 지방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44 | 39 | 0.86 | 0.95 |
| |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 37 | 31 | 0.73 | 0.76 |
| | 행정수도 이전 | 14 | 11 | 0.27 | 0.27 |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다른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의 하위 키워드들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들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추세가 지방자치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표 4-3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치안 | 아동 폭력 | 33 | 32 | 0.65 | 0.78 |
| | 디지털 성범죄 | 29 | 38 | 0.57 | 0.93 |
| | 지능범죄 | 15 | 8 | 0.29 | 0.20 |
| | 코로나19 관련 위법 | 11 | 2 | 0.22 | 0.05 |
| | 데이트 폭력 | 5 | 1 | 0.10 | 0.02 |
| 교통안전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34 | 37 | 0.67 | 0.90 |
| |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 | 31 | 32 | 0.61 | 0.78 |
| | 스쿨존 교통안전 | 25 | 10 | 0.49 | 0.24 |
| 재난안전 | 기후변화 | 38 | 39 | 0.75 | 0.95 |
| | 위험방지체계 | 26 | 18 | 0.51 | 0.44 |
| | 재난 불평등 | 26 | 23 | 0.51 | 0.56 |
| | 총체적 지역접근 | 7 | 1 | 0.14 | 0.02 |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순위변동상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다른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분야 하위 키워드들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 키워드들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추세가 사회안전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및 자율주행 이슈나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1차 시기에 비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그 응답률이 꽤 많이 상승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이슈의 경우는 40% 포인트 가까이 그 응답률이 높아져 대폭 상승하는 양상으로 보여주었다.

### 2) 재정/경제/복지

1차 델파이 조사는 공정거래-사회복지-조세-재정-사회적 경제 순으로 집계가 된 반면 2차 델파이는 사회복지-조세-공정거래-재정-사회적 경제 순으로 집계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조세의 중요성이 상승하였으며 공정거래, 재정, 사회적 경제 이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공정거래의 순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인상적이며 상위키워드 순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내적타당성이 존재한다.

**<표 4-39> 재정경제복지 영역 정책이슈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재정/경제/복지 | 사회복지 | 26 | 29 |
| | 조세 | 22 | 22 |
| | 재정 | 16 | 12 |
| | 공정거래 | 31 | 17 |
| | 사회적경제 | 7 | 1 |

재정경제복지 분야의 상위키워드를 살펴보면 2차 델파이에서도 조세기조와 연금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유지되었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상승했지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소폭 낮아졌다.

<표 4-40> 재정경제복지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조세정책 기조 | 29 | 31 | 0.57 | 0.76 | 1 | 1 |
| 연금 | 26 | 30 | 0.51 | 0.73 | 2 | 2 |
| 아동/육아 | 26 | 20 | 0.51 | 0.49 | 3 | 3 |
|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 25 | 17 | 0.49 | 0.41 | 4 | 5 |
| 재정 건전화 | 22 | 15 | 0.43 | 0.37 | 5 | 6 |
| 소상공인 지원 | 19 | 19 | 0.37 | 0.46 | 6 | 4 |
| 재벌규제 | 17 | 13 | 0.33 | 0.32 | 7 | 8 |
| 재정 효율화 방안 | 16 | 13 | 0.31 | 0.32 | 8 | 8 |
| 기업 과세 | 15 | 10 | 0.29 | 0.24 | 9 | 10 |
| 소득보장 | 13 | 14 | 0.25 | 0.34 | 10 | 7 |
| 사회적 경제 제도 | 11 | 5 | 0.22 | 0.12 | 11 | 11 |
| 포용적 재정 운영 | 10 | 5 | 0.20 | 0.12 | 12 | 11 |
| 개인 과세 | 9 | 5 | 0.18 | 0.12 | 13 | 11 |
| 지역공동체 활성화 | 8 | 3 | 0.16 | 0.07 | 14 | 14 |
| 사회적 기업 지원 | 3 | 2 | 0.06 | 0.05 | 15 | 15 |

<표 4-41> 조세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조세정책 기조 | 공평과세 | 30 | 35 | 0.59 | 0.85 |
| | 증세논쟁 | 27 | 25 | 0.53 | 0.61 |
| | 조세부담율 | 24 | 16 | 0.47 | 0.39 |
| | 직·간접세비율 | 12 | 4 | 0.24 | 0.10 |
| 기업과세 | 법인세율 | 40 | 40 | 0.78 | 0.98 |
| | 일감몰아주기과세 | 30 | 37 | 0.59 | 0.90 |
| | 법인세공제 | 15 | 3 | 0.29 | 0.07 |
| 개인과세 | 부유세 | 30 | 34 | 0.59 | 0.83 |
| | 상속·증여세 | 28 | 34 | 0.55 | 0.83 |
| | 금융과세 | 21 | 10 | 0.41 | 0.24 |
| | 소득과세 | 15 | 3 | 0.29 | 0.07 |

조세에 대한 하위 키워드를 살펴보자. 공평과세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유세, 상속 증여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법인세공제, 금융과세,

소득과세의 중요성은 대폭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현상은 2차 델파이의 상위키워드 조사에서 조세 기조의 중요성이 대폭 높아졌는데 하위 키워드에서는 공평과세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측면의 감세-증세보다는 공평성이 담보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 4-42> 재정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재정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 34 | 34 | 0.67 | 0.83 |
| | 통합재정수지 | 34 | 33 | 0.67 | 0.80 |
| | 재정준칙 법제화 | 18 | 11 | 0.35 | 0.27 |
| 재정 효율화 방안 | 조세탈루억제 | 31 | 35 | 0.61 | 0.85 |
| | 세출개혁 | 24 | 28 | 0.47 | 0.68 |
| | 예비타당성조사 | 23 | 12 | 0.45 | 0.29 |
| | 국유자산관리 | 12 | 3 | 0.24 | 0.07 |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42 | 41 | 0.82 | 1.00 |
| | 균형발전예산 | 40 | 38 | 0.78 | 0.93 |
| | 국민참여예산 | 8 | 2 | 0.16 | 0.05 |

전반적으로 조세 이슈의 중요성은 2차에서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재정에 대한 하위 키워드를 살펴보자. 복지재정, 균형발전예산, 조세탈루 억제 순으로 응답률이 집계되었다. 국가부채비율, 통합재정수지, 조세탈루억제, 복지재정, 균형발전예산에 대한 응답률은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국유자산관리,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응답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준칙을 강하게 법제화하는 소위 '정치인의 손발묶기'(binding) 전략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3> 공정거래 이슈 하위키워드 1,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34** | **32** | **0.67** | **0.78** |
| | 일감몰아주기 | 33 | 34 | 0.65 | 0.83 |
| | 금산분리 | 26 | 14 | 0.51 | 0.34 |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기술보호 | 43 | 41 | 0.84 | 1.00 |
| | **집단소송제** | **27** | **30** | **0.53** | **0.73** |
|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11 | 7 | 0.22 | 0.17 |
| | 공공조달 | 10 | 2 | 0.20 | 0.05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관련 지원** | **39** | **31** | **0.76** | **0.76** |
| | **지역상권 활성화** | **30** | **30** | **0.59** | **0.73** |
| | 사회안전망 | 23 | 19 | 0.45 | 0.46 |

전반적으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중요성은 2차에서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하위키워드를 살펴보자.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역상권활성화, 집단소송제에 대한 응답이 매우 증가하였다. 반면, 금산분리와 공공조달에 대한 응답은 매우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모두가 지적한 것처럼 위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표 4-44> 사회복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 | 34 | 38 | 0.67 | 0.93 |
| | **기본소득** | **23** | **23** | **0.45** | **0.56** |
| | 부(負)의 소득세 | 17 | 13 | 0.33 | 0.32 |
| | 근로장려금 | 15 | 5 | 0.29 | 0.12 |
| | 기초자산 | 5 | 1 | 0.10 | 0.02 |
| 연금 | 국민연금 개혁 | 40 | 40 | 0.78 | 0.98 |
| | **기초연금** | **33** | **32** | **0.65** | **0.78** |
| | 직역연금개혁 | 13 | 8 | 0.25 | 0.20 |
| 아동/육아 | 보육서비스 | 40 | 41 | 0.78 | 1.00 |
| | 육아휴직 | 33 | 34 | 0.65 | 0.83 |
| | 아동수당 | 19 | 7 | 0.37 | 0.17 |

사회복지 이슈는 1, 2차 델파이에서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이다. 이에 대한 하위키워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 국민연금 개혁,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대로, 근로장려금, 기초자산제, 아동수당에 대한 응답률

은 하락하였다. 특히 소득보장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제와 기본소득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향후 기초생활보장제와 부의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생활보호를 확장하는 전략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전략 간의 경쟁 양상이 나타날 것을 암시한다.

**<표 4-45> 사회적 경제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사회적 경제제도 | **법률 정비** | **32** | **29** | **0.63** | **0.71** |
| | 기금조성 | 27 | 23 | 0.53 | 0.56 |
| | 교육과정 확대 | 26 | 21 | 0.51 | 0.51 |
| | 공공부분 ESG원칙 도입 | - | 5 | - | 0.12 |
| 사회적 기업지원 | **기업활성화** | **31** | **31** | **0.61** | **0.76** |
| | 지역사회 확산 | 31 | 34 | 0.61 | 0.83 |
| | 판로지원 | 22 | 9 | 0.43 | 0.22 |
| | ESG관련 기업지원 강화 | - | 3 | - | 0.07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34 | 37 | 0.67 | 0.90 |
| | 취약계층 금융지원 | 33 | 33 | 0.65 | 0.80 |
| | 도시재생 | 23 | 11 | 0.45 | 0.27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하위 키워드 조사에서 공공부분 ESG원칙 도입과 ESG관련 기업지원 강화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확산 지원책과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상승하였고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과 도시재생에 대한 응답률은 하락하였다.

### 3) 국방/통일/외교통상

**<표 4-46>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순위**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외교/안보 | 34 | 36 |
| | 통일 및 남북관계 | 32 | 29 |
| | **국방** | **16** | **5** |
| | **통상** | **15** | **11** |

델파이 조사 결과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는 1차,

2차 조사에서 모두 외교/안보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통일 및 남북관계로 집계되었다. 이는 현재 한반도가 처한 외교환경을 고려, 특히 2018년 남북 화해모드 이후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강 외교를 포함하여 유리한 외교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만큼 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로 제시될 것이다. 국방과 통상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2차 조사에서 통상의 중요성이 국방의 중요성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 상황과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통상에 관한 의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4-47>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키워드 | 빈도 | | 순위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통일 및 남북관계 | 한반도 평화체제 | 32 | 32 | 1 | 1 |
| | 남북교류협력 | 23 | 26 | 3 | 2 |
| | 비핵화 | 13 | 5 | 9 | 10 |
| | 종전선언 | 7 | 5 | 13 | 10 |
| | 남북경협 | 5 | 2 | 15 | 16 |
| | 통일인식 | 3 | 1 | 20 | 19 |
| 국방 | 국방개혁 | 22 | 14 | 4 | 7 |
| | 북핵문제 | 14 | 15 | 8 | 6 |
| | 사이버안보 | 10 | 4 | 11 | 12 |
| | 자주국방 | 7 | 4 | 13 | 12 |
| | K-방산 | 4 | 2 | 16 | 16 |
| 외교/안보 | 한미동맹 | 27 | 25 | 2 | 3 |
| | 한중관계 | 18 | 21 | 5 | 4 |
| | 한일관계 | 15 | 17 | 7 | 5 |
| | 다자외교 | 8 | 3 | 12 | 15 |
| | 공공외교 | 4 | 4 | 16 | 12 |
| | 개발협력 | 3 | 0 | 20 | 20 |
| | 재외국민 | 1 | 0 | 23 | 20 |
| 통상 | 환경기준 강화 | 16 | 10 | 6 | 9 |
| | 미중무역 갈등 | 11 | 11 | 10 | 8 |
| | 디지털 무역(DEPA) | 4 | 0 | 16 | 20 |
| | GVC 재편 | 4 | 2 | 16 | 16 |
| | 자유무역협정 | 3 | 0 | 20 | 20 |
| | 무역장벽확대 | 0 | 0 | 24 | 20 |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 키워드는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통일/남북관계 정책 이슈의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타났다. 통일/남북관계, 외교/안보의 한미동맹, 남북교류협력,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이 그 뒤를 이었고, 국방 이슈의 국방개혁, 북핵문제 등도 중요한 상위키워드로 나타났다. 통상 이슈의 환경기준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을 제외하고 1~10순위에 해당하는 응답이 통일 및 남북관계, 외교/안보, 국방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정책 이슈에 대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현재 한국이 당면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이슈 중에서는 환경기준 강화와 미중무역갈등을 주목할 만하다. 환경기준 강화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EU의 탄소국경세가 생기는 등 통상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중무역갈등은 글로벌 통상지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인 만큼 한국의 통상환경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4-48>은 통일 및 남북관계 정책 이슈에 해당하는 상위 및 하위키워드에 관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각 상위키워드 별로 비핵화 프로세스, 남북대화, 평화협정, 이산가족, 개성공단, 통일교육 등이 중요한 하위키워드로 조사되었다. 응답률 결과를 보면 종전선언의 정전협정/체제가 가장 높았고,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개성공단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비록 최근 북한의 도발로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므로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남북철도연결, 남북교역 등도 상위에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비핵화의 하위키워드 중 CVID/PVID와 6자회담은 1차와 2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CVID/PVID는 1차 조사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자회담은 오히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남북관계에 비추어 강력한 비핵화 원칙도 중요하지만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에 대한 응답률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상위키워드인 통일인식에 대한 응답률은 현저히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의 형성과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8> 통일 및 남북관계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비핵화 | 비핵화프로세스 | 31 | 36 |
| | CVID/PVID | 17 | 10 |
| | 6자회담 | 16 | 22 |
| | 대북제재 | 14 | 9 |
| | 주한미군철수 | 4 | 0 |
|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대화 | 28 | 32 |
| | 평화프로세스 | 26 | 23 |
| | 북미대화 | 15 | 12 |
| | 남북미정상회담 | 15 | 10 |
| | 9.19 공동성명 | 1 | 0 |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35 | 36 |
| | 정전협정/체제 | 28 | 38 |
| | 9.19 군사합의 | 9 | 3 |
| | 판문점선언 | 4 | 0 |
| | 주한미군 철수 | 4 | 0 |
| 남북교류협력 | 이산가족 | 24 | 27 |
| | 남북철도연결 | 24 | 25 |
| | 생태계 복원/DMZ | 19 | 17 |
| | 스포츠 교류/단일팀 | 8 | 5 |
| | 국군포로 | 7 | 3 |
| | 유해발굴 | 2 | 1 |
| 남북경협 | 개성공단 | 34 | 36 |
| | 남북교역 | 21 | 24 |
| | 금강산관광 | 16 | 11 |
| | 경제특구 | 10 | 6 |
| | 위탁가공 | 2 | 1 |
| 통일인식 | 통일교육 | 20 | 28 |
| | 북한이탈자주민 | 16 | 20 |
| | 평화인식 | 15 | 16 |
| | 북한인권 | 12 | 6 |
| | 대북인식 | 11 | 6 |
| | 통일여론 | 9 | 1 |

<표 4-49> 국방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국방개혁 | 군처우개선(군인권) | 25 | 24 |
| | 방산비리개혁 | 22 | 29 |
| | 징병제/모병제 | 18 | 19 |
| | 군사법제도개혁 | 8 | 3 |
| | 국방문민화 | 6 | 2 |
| | 여군확대 | 3 | 1 |
| | 예비군/동원훈련 | 1 | 0 |
| 북핵문제 | 한미동맹 | 29 | 31 |
| | 미중협력/미중관계 | 18 | 24 |
| | 북미회담 | 17 | 15 |
| | 한미일 안보협력 | 8 | 4 |
| | 핵우산 | 4 | 2 |
| | THAAD/사드 | 4 | 1 |
| | 전술핵배치 | 3 | 1 |
| 자주국방 | 방위산업 육성 | 23 | 34 |
| | 전시작전권 환수 | 21 | 22 |
| | KAMD/Kill-chain | 13 | 8 |
| | 주한미군 | 11 | 8 |
| | KF-X 프로젝트 | 8 | 2 |
| | 미사일주권 | 6 | 4 |
| K-방산 | 기술국산화 | 26 | 36 |
| | 우주산업/개발 | 19 | 27 |
| | 차세대 전투기 | 15 | 10 |
| | 방산수출 | 14 | 4 |
| | 민군융합 | 7 | 1 |
| 사이버안보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29 | 37 |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20 | 29 |
| | 사이버 보안 | 14 | 9 |
| | 사이버공격 대응 | 13 | 2 |
| | 북한 사이버 공격 | 7 | 1 |

국방 정책 이슈에서는 하위키워드 중 군처우개선(군인권), 방산비리개혁, 한미동맹, 미중관계, 방위산업 육성, 기술국산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중요한 순으로 집계되었다. 응답률을 보면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이 1, 2차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 기술국산화, 방위산업육성, 한미동맹, 방산비리개혁 등이 높게 나타났다.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꿔 말하면 현재 한국의 사이버 전문인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방위산업 기술의 국산화와 방위산업육성이 중요하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KF-21 출시와 맞물려 주목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한미미사일지침이 종료됨으로써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식단이나 성추행 문제 등 군인권 문제가 상위에 있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미중협력 등의 키워드도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아래의 <표 4-50>과 같이 외교/안보 정책이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하위키워드는 재외국민보호였다. 재외국민보호는 1, 2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상위키워드로서의 재외국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재외국민보호와 재외국민선거를 제외한 재외국민의 다른 하위키워드의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보호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국민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재외국민 유권자의 증가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이슈는 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재외국민보호 외에 다자안보협력, K-pop/한류, ODA, 다자안보협력, 미중패권경쟁, 문화외교 등의 하위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개발협력이나 공공외교 관련 하위키워드가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미동맹 등 양자관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개발협력이나 공공외교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교환경의 유리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향후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관계 중에서는 한중관계 중 미중패권경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하위키워드의 응답률은 1차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미중패권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한중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0> 외교/안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한미동맹 | 전시작전권환수 | 23 | 27 |
| | 주한미군 지위협정 | 23 | 23 |
| | 한미연합훈련 | 20 | 16 |
| | 쿼드 | 11 | 10 |
| | 한미미사일지침 | 9 | 3 |
| | 미군기지 반환 | 5 | 1 |
| | 주한미군감축 | 3 | 0 |
| 한중관계 | 미중패권경쟁 | 26 | 36 |
| | 북한문제 | 19 | 20 |
| | 사드갈등 | 16 | 10 |
| | 반중여론 | 14 | 10 |
| | 문화공정 | 12 | 4 |
| | 한중FTA | 8 | 0 |
| 한일관계 | 위안부/강제징용 | 29 | 26 |
| | 후쿠시마 오염수 | 23 | 26 |
| | 역사문제 | 17 | 16 |
| | 정상회담 | 14 | 8 |
| |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 12 | 4 |
| 공공외교 | K-pop/한류 | 33 | 37 |
| | 문화외교 | 28 | 31 |
| | 국가브랜드 | 24 | 10 |
| | 스포츠외교 | 2 | 0 |
| 개발협력 | ODA(공적개발원조) | 36 | 36 |
| | 다자개발협력 | 31 | 27 |
| | 인도적 지원 | 20 | 16 |
| | 유무상원조 | 4 | 1 |
| 다자외교 | 다자안보협력 | 32 | 39 |
| | 중견국외교(믹타) | 21 | 17 |
| | 신남방/신북방정책 | 20 | 15 |
| | 동북아 지역 안보 | 18 | 8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보호 | 42 | 41 |
| | 재외국민선거 | 18 | 24 |
| | 한상네트워크 | 12 | 7 |
| | 재외동포 | 11 | 6 |
| | 출입국 편의 | 7 | 0 |

<표 4-51> 통상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미중 무역갈등 | 반도체 경쟁 | 30 | 34 |
| | 보호무역 | 21 | 24 |
| | 수출입규제 | 19 | 16 |
| | 신남방정책 | 16 | 4 |
| | 환율변동 | 7 | 2 |
| 환경기준강화 | EU 탄소배출 강화 | 36 | 37 |
| | 탄소국경조정제도 | 23 | 32 |
| | 유럽 그린딜 | 15 | 6 |
| | USMCA 환경기준 강화 | 15 | 4 |
| 자유무역협정 | 동아시아FTA | 23 | 28 |
| | RCEP/CPTPP | 23 | 27 |
| | 한미FTA | 21 | 17 |
| | 한중FTA | 19 | 6 |
| 무역장벽확대 | 환경규제 | 24 | 38 |
| | 기술규제 | 15 | 29 |
| | 비관세규제 | 14 | 8 |
| | 무역기술장벽 | 11 | 2 |
| | 수출입규제 | 11 | 3 |
| 디지털무역 (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0 | 29 |
| | 디지털세 | 19 | 23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7 | 14 |
| | 디지털 무역협정 | 17 | 8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1 | 4 |
| | 디지털 통화 | 10 | 2 |
| GVC 재편 | 기술패권경쟁 | 35 | 36 |
| | 디커플링(탈중국화) | 27 | 27 |
| | 디지털 전환 | 13 | 11 |
| | GV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8 | 4 |
| | 반중국 무역연합 | 5 | 0 |

통상 정책이슈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집계되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하위키워드는 환경규제였다. 환경규제의 상위키워드인 무역장벽확대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이 생기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은 민감한 문제이다. 세부 의제로서 통상에서의 환경규제 관련 대책

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인다. 이 외에도 EU의 탄소배출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는 한국의 대 EU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규제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경쟁, 기술패권경쟁도 중요한 하위키워드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의 양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패권경쟁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 동아시아FTA, RCEP/CPTPP 등 지역 무역협정에 관한 키워드와 글로벌 빅데이터, 디지털세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키워드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드는 지역화 및 세계화의 심화와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그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 4) 산업자원/건설교통

**<표 4-52> 산업자원·건설교통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주거 안정 | 46 | 39 | 0.90 | 0.95 | 1 | 2 |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43 | 40 | 0.84 | 0.98 | 2 | 1 |
| 신재생에너지 | 41 | 33 | 0.80 | 0.80 | 3 | 5 |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35 | 34 | 0.69 | 0.83 | 4 | 3 |
| 제조업지원 | 24 | 26 | 0.47 | **0.63** | 5 | 6 |
| 농식품 안전 | 20 | 9 | 0.39 | 0.22 | 6 | 8 |
| 교통 인프라 | 13 | 10 | 0.25 | 0.24 | 7 | 7 |
| 가축전염병 | 7 | 3 | 0.14 | 0.07 | 8 | 10 |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6 | 2 | 0.12 | 0.05 | 9 | 11 |
| 스마트농업 | 5 | 4 | 0.10 | 0.10 | 10 | 9 |
| 건설산업지원 | 1 | 0 | 0.02 | 0.00 | 11 | 12 |

상위키워드를 살펴보면 2차 델파이에서도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 및 규제의 중요성이 높게 유지되었다.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제조업지원의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농업관련 이슈의 응답률은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패턴에 큰 변화는 없었다.

**<표 4-53> 산업자원·에너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제조업 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36 | 37 | 0.71 | 0.90 |
| | 부품소재 국산화 | 24 | 33 | 0.47 | 0.80 |
| | 혁신 클러스터 | 17 | 6 | 0.33 | 0.15 |
| | 스마트공장 | 10 | 2 | 0.20 | 0.05 |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고용지원 | 39 | 38 | 0.76 | 0.93 |
| | 창업지원 | 31 | 31 | 0.61 | 0.76 |
| | 수출지원 | 12 | 8 | 0.24 | 0.20 |
| | 물류유통지원 | 10 | 3 | 0.20 | 0.07 |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32 | 33 | 0.63 | 0.80 |
| | 탄소중립 | 30 | 31 | 0.59 | 0.76 |
| | 저탄소 산업 육성 | 17 | 13 | 0.33 | 0.32 |
| | 탈원전 | 13 | 3 | 0.25 | 0.07 |

산업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하위키워드 조사에서 차세대 산업지원, 부품소재 국산화 등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응답률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혁신클러스터, 스마트공장, 물류유통지원 탈원전에 대한 응답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표 4-54> 건설교통·부동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 38 | 34 | 0.75 | 0.83 |
| | 도심 재건축 | 32 | 34 | 0.63 | 0.83 |
| | 주거비 지원 | 15 | 7 | 0.29 | 0.17 |
| | 신도시건설 | 7 | 4 | 0.14 | 0.10 |
| |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상향 | - | 0 | - | 0.00 |
| 부동산 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33 | 33 | 0.65 | 0.80 |
| | **임대차규제** | **25** | **25** | **0.49** | **0.61** |
| | 거래세 | 19 | 18 | 0.37 | 0.44 |
| | 대출규제 | 15 | 4 | 0.29 | 0.10 |
| 교통 인프라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35 | 39 | 0.69 | 0.95 |
| | 수도권 GTX 확충 | 23 | 24 | 0.45 | 0.59 |
| | 철도교통 확충 | 19 | 13 | 0.37 | 0.32 |
| | 고속도로 지하화 | 9 | 2 | 0.18 | 0.05 |
| | 공항 및 항만 확충 | 4 | 2 | 0.08 | 0.05 |
| 건설산업 지원 | **하도급규제** | **31** | **30** | **0.61** | **0.73** |
| | 공정건설계약 | 29 | 35 | 0.57 | 0.85 |
|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23 | 16 | 0.45 | 0.39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7 | 0 | 0.14 | 0.00 |

건설교통·부동산 이슈는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영역이다. 이에 대한 하위 키워드 조사에서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상향 항목이 추가되었다. 공공임대주택, 도심 재건축, 보유세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부동산 대출규제는 하락하였다. 그 밖에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하도급 규제 등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 고속도로 지하화,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 등은 하락하였다. 주거 정책의 공급 영역과 규제 영역이 고르게 관심을 받았다.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하위키워드 조사에서 1차 조사와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번과 유사하게 식품 R&D와 가축 방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축산물안전인증제, 식품 R&D, 스마트팜, 농산물 수급안정, 자연재난시 농가 구호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축산물이력관리, 농가 직불제, 식품수출단지 등은 응답률이 하락하였다.

<표 4-55> 농업해양수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농수산인 소득보전 | **농산물 수급안정** | **33** | **35** | **0.65** | **0.85** |
| | **자연재난시 농가 구호** | **21** | **30** | **0.41** | **0.73** |
| | 농가 직불제 | 18 | 7 | 0.35 | 0.17 |
| | 농산물 가격보존 | 17 | 8 | 0.33 | 0.20 |
| 가축전염병 | 가축 방역 | 38 | 39 | 0.75 | 0.95 |
| | **동식물검역** | **24** | **31** | **0.47** | **0.76** |
| | 살처분보상 | 15 | 6 | 0.29 | 0.15 |
| | 가축백신지원 | 12 | 4 | 0.24 | 0.10 |
| 농식품안전 | 축산물안전인증제 | 34 | 37 | 0.67 | 0.90 |
| | 농산물위생검사 | 28 | 36 | 0.55 | 0.88 |
| | 축산물이력관리 | 26 | 7 | 0.51 | 0.17 |
| 스마트 농업 | 식품 R&D | 36 | 39 | 0.71 | 0.95 |
| | 스마트팜 | 34 | 38 | 0.67 | 0.93 |
| | 식품수출단지 | 8 | 1 | 0.16 | 0.02 |
| | 식품테마파크 | 7 | 1 | 0.14 | 0.02 |

### 5) 교육/인적자원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청년 일자리였고, 다음으로 저출산, 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노후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저출산-돌봄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으나 1차 조사 결과, 5순위였던 노후 보장(고령화)이 4순위가 되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 노동자 안전망, 대학교육 순이었다.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청년 일자리, 저출산, 돌봄, 고령화 등 청년 문제와 인구변화 이슈가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했고, 교육 관련 이슈들이 다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표 4-56> 교육/인적자원 상위 키워드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청년 일자리** | **33** | **34** | **0.65** | **0.83** | **1** | **1** |
| **저출산** | **30** | **32** | **0.59** | **0.78** | **2** | **2** |
| **돌봄** | **22** | **23** | **0.43** | **0.56** | **3** | **3** |
| **초중등교육** | **22** | **18** | **0.43** | **0.44** | **3** | **5** |
| 대학교육 | 21 | 14 | 0.41 | 0.34 | 5 | 7 |
| **노후 보장(고령화)** | **21** | **22** | **0.41** | **0.54** | **5** | **4** |
| 노동자 안전망 | 19 | 16 | 0.37 | 0.39 | 7 | 6 |
| 젠더 갈등 | 18 | 11 | 0.35 | 0.27 | 8 | 8 |
| 청년 주거 | 10 | 3 | 0.20 | 0.07 | 9 | 13 |
| 청년 복지 | 9 | 1 | 0.18 | 0.02 | 10 | 18 |
| 교육 인프라 | 8 | 5 | 0.16 | 0.12 | 11 | 10 |
| 여성 고용 | 7 | 3 | 0.14 | 0.07 | 12 | 13 |
| 여성 대표성/성평등 | 7 | 4 | 0.14 | 0.10 | 12 | 11 |
| 노인 돌봄 | 7 | 6 | 0.14 | 0.15 | 12 | 9 |
| 교육 거버넌스 | 6 | 2 | 0.12 | 0.05 | 15 | 15 |
| 여성 안전 | 6 | 2 | 0.12 | 0.05 | 15 | 15 |
| 노인 일자리 | 4 | 2 | 0.08 | 0.05 | 17 | 15 |
| 노동 현안 | 4 | 4 | 0.08 | 0.10 | 17 | 11 |
| 노인 여가 | 1 | 0 | 0.02 | 0.00 | 19 | 19 |
| 여성 건강 | 0 | 0 | 0.00 | 0.00 | 20 | 19 |
| 노인 주거/교통 | 0 | 0 | 0.00 | 0.00 | 20 | 19 |

교육이슈 하위 키워드를 보면 1차 조사 결과처럼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교육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교인프라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사교육비 경감, 대학구조조정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와 달리 대학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학교인프라 개선, 사교육비 경감 등의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가 상승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전 교육과정에 고르게 관심사가 반영되었다고 해석된다.

<표 4-57> 교육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27 | 35 | 0.53 | 0.85 |
| | 돌봄교실 | 24 | 27 | 0.47 | 0.66 |
| | 보육교사 | 16 | 7 | 0.31 | 0.17 |
| | 유연근무제 | 15 | 7 | 0.29 | 0.17 |
| | 아동수당 | 10 | 2 | 0.20 | 0.05 |
| 대학교육 | 대학구조조정 | 32 | 31 | 0.63 | 0.76 |
| | 입시개혁 | 29 | 28 | 0.57 | 0.68 |
| | 국립대 육성 | 14 | 10 | 0.27 | 0.24 |
| | 4차산업혁명 | 10 | 6 | 0.20 | 0.15 |
| | 국가장학금 확대 | 8 | 3 | 0.16 | 0.07 |
| 초중등 교육 | 사교육비 경감 | 32 | 34 | 0.63 | 0.83 |
| | 민주시민교육 | 27 | 29 | 0.53 | 0.71 |
| | 자사고/특목고 | 21 | 11 | 0.41 | 0.27 |
| | 학제개편 | 8 | 3 | 0.16 | 0.07 |
| | 혁신학교 | 5 | 0 | 0.10 | 0.00 |
| 교육 거버넌스 | 교육부 | 36 | 39 | 0.71 | 0.95 |
| | 시도교육청 | 22 | 23 | 0.43 | 0.56 |
| | 국가교육위원회 | 17 | 8 | 0.33 | 0.20 |
| | 전교조 | 11 | 7 | 0.22 | 0.17 |
| | 교육감 선거 | 7 | 1 | 0.14 | 0.02 |
| 교육 인프라 | 학교인프라 개선 | 32 | 36 | 0.63 | 0.88 |
| | 교원양성체계 개편 | 30 | 28 | 0.59 | 0.68 |
| | 안전한 학교 | 23 | 13 | 0.45 | 0.32 |
| | 각종 고시 부활 | 8 | 1 | 0.16 | 0.02 |

노동 이슈의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도 취업지원제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정채용, 사망사고 책임강화,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나타나서 1차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노인 고용 관련 하위 키워드의 순위가 하향하고, 공정채용, 사망사고 책임강화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1차 조사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층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정 이슈에 대한 관심사가 상승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58> 노동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청년 일자리 | 공정채용 | 28 | 32 | 0.55 | 0.78 |
| | 비정규직 감소 | 25 | 22 | 0.49 | 0.54 |
| | 지역인재채용 | 19 | 18 | 0.37 | 0.44 |
| | 창업지원 | 13 | 6 | 0.25 | 0.15 |
| | 청년고용할당 | 9 | 0 | 0.18 | 0.00 |
| 여성고용 | 경력단절여성 | 26 | 29 | 0.51 | 0.71 |
| | 성별 임금격차 | 23 | 20 | 0.45 | 0.49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3 | 20 | 0.45 | 0.49 |
| | 취약계층여성 | 17 | 6 | 0.33 | 0.15 |
| | 비정규직 여성 | 2 | 3 | 0.04 | 0.07 |
| 노인 일자리 | 취업지원제도 | 32 | 37 | 0.63 | 0.90 |
|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31 | 27 | 0.61 | 0.66 |
| | 정부사업 일자리 | 17 | 10 | 0.33 | 0.24 |
| | 자영업 지원 | 8 | 3 | 0.16 | 0.07 |
| | 수당인상 | 5 | 2 | 0.10 | 0.05 |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32 | 31 | 0.63 | 0.76 |
| | 근로감독 강화 | 20 | 25 | 0.39 | 0.61 |
| | 노동시간 단축 | 17 | 12 | 0.33 | 0.29 |
| | 실업급여 확대 | 12 | 8 | 0.24 | 0.20 |
| | 최저임금 인상 | 12 | 4 | 0.24 | 0.10 |
| 노동현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30 | 33 | 0.59 | 0.80 |
| | 직업훈련 강화 | 22 | 21 | 0.43 | 0.51 |
| | 고용유연화 | 15 | 15 | 0.29 | 0.37 |
| | 연공서열제 개혁 | 15 | 10 | 0.29 | 0.24 |
| | 노동이사제 | 7 | 1 | 0.14 | 0.02 |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육아휴직, 성차별 인식 격차, 청년공공주택, 건강검진 확대 등이었다. 선정된 우선순위 그룹에 큰 변동은 없었으나, 디지털성범죄, 건강검진 확대, 청년공공주택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표 4-59> 청년/여성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청년 복지 | 학자금 대출 | 21 | 25 | 0.41 | 0.61 |
| | 청년실업부조 | 21 | 29 | 0.41 | 0.71 |
| | 청년구직수당 | 20 | 15 | 0.39 | 0.37 |
| | 최저임금 | 18 | 8 | 0.35 | 0.20 |
| | 대학등록금 | 11 | 3 | 0.22 | 0.07 |
| 청년 주거 | 청년공공주택 | 30 | 33 | 0.59 | 0.80 |
| | 주거금융 지원 | 25 | 28 | 0.49 | 0.68 |
| | 1인 가구 | 21 | 14 | 0.41 | 0.34 |
| | 신혼부부 | 14 | 4 | 0.27 | 0.10 |
| | 대학 기숙사 | 3 | 1 | 0.06 | 0.02 |
| 젠더 갈등 | 성차별 인식 격차 | 33 | 33 | 0.65 | 0.80 |
| | 여성가족부 | 27 | 23 | 0.53 | 0.56 |
| | 젠더폭력 | 22 | 13 | 0.43 | 0.32 |
| | 여성할당제 | 13 | 8 | 0.25 | 0.20 |
| | 군복무 | 7 | 3 | 0.14 | 0.07 |
| 여성 안전 | 디지털성범죄 | 33 | 39 | 0.65 | 0.95 |
| | 폭력예방교육 | 19 | 22 | 0.37 | 0.54 |
| | CCTV | 15 | 12 | 0.29 | 0.29 |
| | 안심귀가서비스 | 12 | 5 | 0.24 | 0.12 |
| | 성매매 | 10 | 2 | 0.20 | 0.05 |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30 | 33 | 0.59 | 0.80 |
| | 분만인프라 구축 | 24 | 28 | 0.47 | 0.68 |
| | 생리대 지원 | 17 | 11 | 0.33 | 0.27 |
| | 여성 관련 암 예방 | 15 | 7 | 0.29 | 0.17 |
|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4 | 1 | 0.08 | 0.02 |
| 저출산 | 육아휴직 | 33 | 38 | 0.65 | 0.93 |
| | 출산휴가 | 28 | 32 | 0.55 | 0.78 |
| | 난임시술비 지원 | 12 | 5 | 0.24 | 0.12 |
| | 다자녀 장학금 | 10 | 4 | 0.20 | 0.10 |
| | 산후조리비용 | 2 | 1 | 0.04 | 0.02 |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여성가족부 | 21 | 26 | 0.41 | 0.63 |
| | 성평등위원회 | 20 | 26 | 0.39 | 0.63 |
| | 비례대표제 | 18 | 14 | 0.35 | 0.34 |
| | 여성관리자 | 13 | 7 | 0.25 | 0.17 |
|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11 | 5 | 0.22 | 0.12 |

2차 조사 결과,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역시 독거

노인 주거환경 개선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국민연금 강화, 맞춤형 공동주택 순으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0> 노인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노인 돌봄 | 치매 | 23 | 28 | 0.45 | 0.68 |
| | 의료비 부담 경감 | 21 | 26 | 0.41 | 0.63 |
|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19 | 15 | 0.37 | 0.37 |
| | 국공립요양시설 | 16 | 6 | 0.31 | 0.15 |
|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10 | 5 | 0.20 | 0.12 |
| 노인 주거/교통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34 | 35 | 0.67 | 0.85 |
| | 맞춤형 공동주택 | 27 | 31 | 0.53 | 0.76 |
| | 영구임대주택 | 24 | 12 | 0.47 | 0.29 |
| | 농어촌 공영택시 | 5 | 2 | 0.10 | 0.05 |
| | 무상교통 | 1 | 0 | 0.02 | 0.00 |
| 노인 여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34 | 0.59 | 0.83 |
| | 존엄한 죽음 | 24 | 22 | 0.47 | 0.54 |
| | 노인생활체육 | 17 | 15 | 0.33 | 0.37 |
| | 평생교육 | 15 | 8 | 0.29 | 0.20 |
| | 경로당 개편 | 5 | 1 | 0.10 | 0.02 |
| 노후 보장(고령화) | 국민연금강화 | 27 | 33 | 0.53 | 0.80 |
| | 기초연금액 인상 | 23 | 20 | 0.45 | 0.49 |
| | 정년연장 | 21 | 19 | 0.41 | 0.46 |
| | 퇴직연금강화 | 13 | 3 | 0.25 | 0.07 |
|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 | 3 | 0.12 | 0.07 |

###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표 4-61>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언론 및 방송 | 43 | 40 |
| | 문화 | 34 | 36 |
| | 관광 | 14 | 3 |
| | 스포츠 | 2 | 0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언론 및 방송이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집계되었고, 문화 분야가 2위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관광, 스포츠 정책이슈로 이어지는 순서 또한 1차와 2차 조사에서의 결과가 동일했다.

**<표 4-62>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34 | 36 | 0.67 | 0.88 |
| | 지역문화 발전 | 33 | 35 | 0.65 | 0.85 |
| | 비대면 문화화 | 19 | 6 | 0.37 | 0.15 |
| 문화경제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37 | 34 | 0.73 | 0.83 |
| | K-콘텐츠산업 진흥 | 31 | 33 | 0.61 | 0.80 |
| | 저작권 확충 | 18 | 7 | 0.35 | 0.17 |
| 문화외교 | 국제 문화교류 | 30 | 34 | 0.59 | 0.83 |
| | 신한류 확산 | 26 | 29 | 0.51 | 0.71 |
| | 전통문화 계승·홍보 | 26 | 13 | 0.51 | 0.32 |
| 문화시민 | 문화인프라 확충 | 42 | 35 | 0.82 | 0.85 |
| | 문화소비 지원 강화 | 22 | 26 | 0.43 | 0.63 |
|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21 | 14 | 0.41 | 0.34 |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키워드들 즉 디지털 문화화, 지역문화 발전, K-콘텐츠산업 진흥 등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일관된 추세 정도가 나타났을 뿐이다. 한편, 국제 문화교류의 경우, 그 응답률이 59%에서 83%로 높아져 문화 정책이슈 하위키워드 중에선 가장 비약적인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33 | 35 | 0.65 | 0.85 |
| | 언론중재법 | 24 | 28 | 0.47 | 0.68 |
| | 징벌적 손배 | 18 | 10 | 0.35 | 0.24 |
| | 편집권 독립 | 9 | 3 | 0.18 | 0.07 |
| | 지역언론 지원 | 5 | 2 | 0.10 | 0.05 |
| | 미디어바우처제 | 2 | 0 | 0.04 | 0 |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43 | 39 | 0.84 | 0.95 |
| | 광고운영 규제 | 26 | 28 | 0.51 | 0.68 |
| | 방송수신료제 | 20 | 10 | 0.39 | 0.24 |
| 포털개혁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32 | 33 | 0.63 | 0.80 |
| | 알고리즘 공개 | 30 | 30 | 0.59 | 0.73 |
| | 댓글실명제 | 14 | 11 | 0.27 | 0.27 |
| | 아웃링크 도입 | 13 | 4 | 0.25 | 0.10 |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키워드들 즉 가짜뉴스, 공영방송 독립성, 포털 뉴스편집 폐지 등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일관된 추세 정도가 나타났을 뿐이다. 한편, 언론중재법의 경우 1차 조사 때 그 응답률이 47%로 그리 높지 않았던 데 반해 2차 조사 때 68%로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논란 중인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이 2차 조사 시점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64>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생활스포츠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 41 | 37 | 0.80 | 0.90 |
|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28 | 25 | 0.55 | 0.61 |
| | 지역체육 공동체화 | 20 | 14 | 0.39 | 0.34 |
| 스포츠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29 | 34 | 0.57 | 0.83 |
| | 융복합 사업화 | 28 | 28 | 0.55 | 0.68 |
| | 지역·사회적 자본화 | 28 | 16 | 0.55 | 0.39 |
| 스포츠외교 | 스포츠 교류협력 | 44 | 38 | 0.86 | 0.93 |
| | 스포츠 한류 | 26 | 30 | 0.51 | 0.73 |
|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13 | 6 | 0.25 | 0.15 |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차 델파이 조사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의외의 하위키워드였던 스포츠 교류협력은 2차 조사 때도 동일하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다른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들의 경우는 순위 추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경우 1차 조사 때 57%에서 2차 조사 때 83%로 응답률이 높아져 가장 비약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표 4-65>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국제관광 | K-관광 콘텐츠 개발 | 40 | 38 | 0.78 | 0.93 |
| | 방역 인프라 | 18 | 22 | 0.35 | 0.54 |
|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18 | 14 | 0.35 | 0.34 |
| | 국제행사 유치 | 13 | 2 | 0.25 | 0.5 |
| 국내관광 | 로컬관광 | 43 | 39 | 0.84 | 0.95 |
| | 교통숙박 연계 관광 | 38 | 36 | 0.75 | 0.88 |
| | 안보관광 자원개발 | 6 | 1 | 0.12 | 0.02 |
| 산업관광 | 의료관광 | 28 | 30 | 0.55 | 0.73 |
| | 4차산업 체험관광 | 25 | 29 | 0.49 | 0.71 |
|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20 | 12 | 0.39 | 0.29 |
| | 교육관광 | 11 | 2 | 0.22 | 0.05 |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1차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하위키워드들 즉 K-관광콘텐츠 개발, 로컬관광, 교통숙박 연계 관광 등이 2차 조사 때 다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일관된 추세 정도가 나타났을 뿐이다. 이외에 다른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들의 경우는 순위 추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4차산업 체험관광의 경우 1차 조사 때 49%에서 2차 조사 때 71%로 응답률이 높아져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7) 과학기술/정보통신

**<표 4-66>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순위**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과학기술/정보통신 | 과학기술 | 29 | 40 |
| | 정보통신 | 17 | 37 |
| | 연구환경 | - | 2 |

우선 1차 델파이 조사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을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차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과 공중보건/환경은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책 영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보건의료/환경으로 구분하였고, 정책 이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연구환경'을, 보건의료/환경에는 '의료'를 추가하여 상위키워드를 재배치 한 뒤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66>의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빈도의 경우 1차와 2차 결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 정책 이슈가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정보통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차 조사에서 재배치한 연구환경 정책 이슈는 단 2명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국가이다. 이에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 후보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20대 대선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이슈는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표 4-67>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키워드 | 빈도 | | 순위[159]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과학기술 | 4차 산업혁명 | 24 | 37 | 4 | 1 |
| | 기초/기반연구 | 17 | 33 | 6 | 2 |
| | SW/인공지능(AI) | 14 | 33 | 8 | 2 |
| 정보통신 | 정보보호 | 11 | 26 | 10 | 6 |
| | 디지털경제 | 11 | 29 | 10 | 4 |
| | 디지털뉴딜 | 5 | 8 | 14 | 7 |
| | 디지털무역(DEPA) | 2 | 1 | 19 | 9 |
| 연구환경 | R&D | 10 | 27 | 13 | 5 |
| | 지식재산 | 4 | 4 | 15 | 8 |

159) 1차 결과에 따른 순위는 정책 영역 구분 전 공중보건/환경 영역과의 결과가 합산되어 반영된 것으

각 정책 이슈에 해당하는 상위키워드의 중요도는 <표 4-67>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온 정책은 역시 4차 산업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집약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이어 기초/기반연구와 SW/인공지능(AI)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기초/기반연구는 특정분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로 과학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SW/인공지능(AI)은 미래의 기술을 선도할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디지털경제와 R&D, 정보보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 디지털경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보보호는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문제로 개인의 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4-68>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기초/기반연구 | 생명과학 | 33 | 33 |
| | ICT/융합 | 22 | 31 |
| | 컴퓨팅 인프라 | 13 | 8 |
| | 항공우주 | 13 | 3 |
| | 의약학 | 12 | 5 |
| | 공학 | 2 | 0 |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AI) | 30 | 38 |
| | 빅데이터 | 19 | 28 |
| | 블록체인 | 11 | 7 |
| | 규제혁신 | 10 | 3 |
| | 디지털혁신 | 10 | 2 |
| | 일자리미래 | 8 | 2 |
| | 미래차 | 7 | 0 |
| SW/인공지능(AI) | 융합적 사고력 | 30 | 32 |
| | 교육 및 인력양성 | 29 | 30 |
| | 인공지능 윤리 | 17 | 8 |
| | 코딩교육 | 11 | 9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 | 1 |
| | 특허권 | 0 | 0 |

로 상위키워드의 수와 실제 순위가 일치하지 않음. 2차 결과는 정책 영역 구분 후 집계한 결과임.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생명과학, 융합적 사고력, 교육 및 인력양성, ICT/융합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로봇, VR,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많은 각종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 인공지능인 것이다. 미국은 2016년 이미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백악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중국 또한 국가 차원에서 AI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기술패권을 주도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키워드로서 교육 및 인력양성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주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는 등 연구기반에 대한 정책적, 인식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융합적 사고력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융합적 사고란, 과학, 인문사회, 디자인, 문화예술 등 서로 다른 영역의 혼합을 통해 이뤄지는 사고를 말한다. 현대의 기술은 한 가지 지식이 아닌 여러 영역의 융합에 의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의 방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도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ICT/융합이나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도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1순위, 2순위로 집계되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만큼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도 생명과학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3세로 10년 전보다 3.1세 증가하였다.[160] 평균수명의 증가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20대 대선에서 관련 정책공약이 주요 의제로 제시될 수 있다.

160)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heckFlag=N

<표 4-69> 연구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지식재산 | 핵심/원천기술 | 34 | 40 |
| | 기술보호/활용 | 22 | 27 |
| | 혁신기술 | 18 | 9 |
| | 국제표준화 | 11 | 3 |
| | 영업비밀/특허침해 | 7 | 1 |
| | 특허 부가가치 | 2 | 0 |
| R&D | 자율성확대 | 29 | 30 |
| | 연구개발비 | 24 | 30 |
| | 민관협력/투자확대 | 21 | 16 |
| | 연구윤리 | 8 | 3 |
| | 국방R&D | 4 | 1 |
| | 지역/관료주도형R&D | 3 | 0 |
| | 기술규제 | 2 | 0 |

연구환경 정책 이슈에서는 핵심/원천기술이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핵심/원천기술은 누가 어떤 분야를 선도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5,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규모이다.[161] 이 외에도 반도체 분야, 수소에너지 분야, AI 분야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보호/활용과 연구개발비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보호가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기술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연구개발비 확보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1) “내년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5200억 투자…24.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555

<표 4-70> 정보통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디지털뉴딜 | 디지털 격차해소 | 26 | 33 |
|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18 | 27 |
|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16 | 12 |
| | 메타버스 | 11 | 2 |
| | 비대면산업 | 11 | 3 |
| | 지능형 정부 | 9 | 3 |
| | 5G 고속도로 | 2 | 0 |
| 디지털무역(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2 | 29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5 | 24 |
| | 디지털 무역협정 | 14 | 9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4 | 8 |
| | 디지털세 | 13 | 5 |
| | 디지털 통화 | 10 | 3 |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26 | 40 |
| | 보이스피싱 | 17 | 16 |
| | 개인정보유출 | 17 | 13 |
| | 데이터보호 | 15 | 11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 | 0 |
| 디지털경제 | 디지털화폐 | 25 | 28 |
| | 디지털커머스 | 24 | 30 |
| | 데이터경제 | 22 | 17 |
| | 핀테크 | 12 | 5 |
| | 구독경제 | 6 | 0 |

<표 4-70>은 정보통신 정책 이슈의 하위키워드에 대한 조사 결과로 개인정보보호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차에서는 1차와 비교하여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CT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한 각종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유출 키워드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관련 키워드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 중 디지털 격차해소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과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5G의 보편화와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D.N.A와 글로벌 빅데이터, 초국가 전자상거래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D.N.A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빅데이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모바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 국가들이 연구 및 출시하고 있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디지털 커머스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간에 발생한 변화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대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디지털 경제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 8) 보건의료/환경

**<표 4-71>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순위**

| 정책영역 | 정책 이슈 | 1차 응답 빈도 | 2차 응답 빈도 |
|---|---|---|---|
| 보건의료/환경 | 환경 | 34 | 36 |
| | 공중보건 | 20 | 35 |
| | 의료 | - | 10 |

보건의료/환경 정책 영역에서는 환경과 공중보건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나타났다.[162] 환경과 공중보건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중보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논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분류한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10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최근 발생한 의료계의 파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공공의료와 의료개혁 관한 쟁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62) <표 4-66>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영역에서와 같이 1차 조사 이후 설문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영역의 구분이 발생하였고, 정책 이슈의 구분도 환경과 공중보건에서 환경, 공중보건, 의료로 세분화 하였고, 이에 따라 <표 4-71>과 같이 상위키워드를 재배치하였다.

<표 4-72>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 정책이슈 | 상위키워드 | 빈도 | | 순위[163]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공중보건 | 코로나19 | 29 | 32 | 2 | 3 |
| | 질병관리 | 4 | 6 | 15 | 8 |
| 의료 | 공공의료 | 25 | 34 | 3 | 2 |
| | 건강보험 | 18 | 27 | 5 | 4 |
| | 의료개혁 | 15 | 26 | 7 | 5 |
| 환경 | 기후변화/위기 | 34 | 40 | 1 | 1 |
| | 그린뉴딜 | 14 | 10 | 8 | 7 |
| | 대기오염 | 11 | 17 | 10 | 6 |
| | 자원순환 | 4 | 3 | 15 | 9 |
| | 해양/수자원 | 3 | 3 | 19 | 9 |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의 중요도는 <표 4-72>와 같이 나타났다. 상위키워드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키워드는 기후변화/위기였고, 공공의료, 코로나19, 건강보험, 의료개혁 등이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위기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후변화가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잦은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시급할 것을 전망된다.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이슈도 높은 순위로 집계되었다. 1차와 비교하여 2차 조사 때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지방의료원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의료 계획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의료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개혁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재정부담이,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과잉진료, 의료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관련 논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될 수 있다. 공중보건의 코로나19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고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방역을 비롯하여 백신접종, 생산 등 관련 의제가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3) 1차 결과에 따른 순위는 정책 영역 구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 영역과의 결과가 합산되어 반영된 것으로 상위키워드 수와 실제 순위가 일치하지 않음. 2차 결과는 정책 영역 구분 후 집계한 결과임.

<표 4-73> 공중보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코로나19 | 백신접종 | 28 | 33 |
| | 방역/K-방역 | 24 | 24 |
| | 백신생산 | 18 | 12 |
| | 백신주권 | 15 | 11 |
| | 백신여권 | 5 | 0 |
| | 거리두기 | 5 | 0 |
| 질병관리 | 감염병 예방 | 29 | 37 |
| | 국가검진사업 | 22 | 28 |
| | 의료비지원 | 16 | 9 |
| | 예방접종 | 14 | 3 |
| | 호스피스/완화의료 | 10 | 3 |

공중보건 정책 이슈에서는 감염병예방과 백신접종, 국가검진사업, 코로나 방역 등의 키워드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중 감염병 예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에볼라, 메르스를 비롯하여 최근 코로나19까지 광범위한 감염을 일으키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재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20대 대선에서도 관련 의제가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키워드로는 백신접종과 방역/K-방역이 높은 순위로 집계되었다. 백신접종은 현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문제와 백신 부작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집단면역 시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작용과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방역의 경우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정책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코로나19의 확산과 직결되는 만큼 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검진사업도 주요 키워드로 집계되었는데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검진사업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4-74> 의료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 | 28 | 34 |
| | 재정적자 | 21 | 32 |
| | 보험료 인상 | 16 | 7 |
| | 임신/출산비지원 | 16 | 6 |
| 공공의료 | 공공병원 | 25 | 30 |
| | 지방의료원육성 | 23 | 22 |
| | 공공의대 | 16 | 13 |
| | 의료질 | 11 | 8 |
| | 과잉진료/과소진료 | 10 | 5 |
| | 의대정원 | 7 | 2 |
| 의료개혁 | 의료법개정 | 27 | 29 |
| | 수술실 CCTV | 21 | 20 |
| | 의료권력 | 21 | 18 |
| | 의료수가 | 19 | 13 |
| | 의료파업 | 4 | 0 |

의료 정책 이슈의 하위키워드 중에서는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공공병원, 의료법개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20까지 국민 3,700만 명이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164] 이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급증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국고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델파이 조사에서도 재정적자에 관한 응답률이 높게 나왔고, 2차에서는 더욱 높게 나왔는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관련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육성, 의료법개정 등도 중 주요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공공의료 역시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위 키워드 외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 등의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 간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육성 등의 경

164) "[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시행 4주년 …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성과 뚜렷,"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234

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의료법개정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 쟁점 역시 의사협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CCTV 의무화 같은 경우 그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적 요구와 함께 이익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며, 20대 대선에서도 정책공약으로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아래 <표 4-75>와 같이 정책 이슈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슈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환경 이슈는 비단 국내 차원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이슈는 건강 문제를 비롯해 인간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환경 이슈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해양생태계와 해양오염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호흡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 이슈 조사에서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위기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하위키워드 중에서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의제로 조사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저감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구온난화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평균기온 상승을 이끌었고, 극단적인 경우 섬이 가라앉는 등 지구의 지형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보고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의 증가, 빈번한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자연재해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의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로 조사되었다. 미세플라스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 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다양한 생활용품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해양생태계와 해양오염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은 많은 어민들의 경제적 터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해양오염의 경우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표 4-75> 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 상위키워드 | 하위키워드 | 응답 수 | |
|---|---|---|---|
| | | 1차 | 2차 |
| 기후변화/위기 | 지구온난화 | 34 | 36 |
| | 탄소중립 | 25 | 23 |
| | 지속가능발전 | 25 | 20 |
| | 탄소배출권 | 4 | 2 |
| | 화석연료 | 3 | 0 |
| | 탄소국경세 | 0 | 0 |
| 자원순환 | 미세플라스틱 | 22 | 35 |
| | 폐기물부담금 | 13 | 18 |
| | 업사이클링 | 11 | 11 |
| | 순환센터 | 9 | 2 |
| | 제로웨이스트 | 6 | 1 |
| | 폐기물 재활용 | 30 | 14 |
| 그린뉴딜 | 신재생에너지 | 30 | 35 |
| | 탄소중립 | 20 | 33 |
| | 녹색산업 | 13 | 8 |
| | 순환경제 | 9 | 2 |
| | 수소경제 | 9 | 3 |
| | 도시숲 | 6 | 0 |
| | 스마트그리드 | 5 | 0 |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42 | 38 |
| | (중국발) 황사 | 21 | 24 |
| | 한중협력 | 13 | 10 |
| | 저감조치 | 12 | 9 |
| | 산성비 | 2 | 0 |
| | 저녹스보일러 | 1 | 0 |
| 해양/수자원 | 해양생태계 | 26 | 31 |
| | 해양오염 | 26 | 31 |
| | 해양폐기물 | 20 | 15 |
| | 상/하수도 | 14 | 2 |
| | 지하수 | 6 | 2 |

## 3. 소결 및 정책선거 전망

### 1) 정치/행정/사법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의 주요 정책이슈와 상위 키워드 및 하위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는 역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이 항상 가장 높은 정책이슈이고, 사법개혁의 경우는 최근 주요한 정책 쟁점으로서 그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위 키워드 수준에선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법원개혁, 지방균형발전 등이 주요 공약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유사한 맥락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나 검찰 수사권조정 등 대표적인 하위 키워드들 또한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는 권력구조 개헌 등이 꽤 중요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응답되었는데, 그럼에도 개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다른 개헌 이슈들의 경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상위 키워드와 하위 키워드 조사결과 간에 다소간 차이가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정책이슈로서 지방자치는 특별히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데 반해, 지방균형발전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각 2, 3위로 그 응답률이 최상위권에 들었다. 또한 이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균형발전 이슈의 하위 키워드인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경우 역시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전 분야의 하위 키워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오는 등, 본 정책 이슈도 대선에서 대단히 높은 중요성을 지닌 공약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었다. 그 외에 사회안전 정책영역에서는 비록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그 응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이슈 정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정책영역에서 다른 상위 키워드나 하위 키워드에 포함된 것들 가운데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된 공약 이슈는 특별히 없었다.

### 2) 재정/경제/복지 및 산업자원/건설교통

재정·조세·복지 정책영역과 산업자원·건설교통분야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책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위 영역 중 농업이나 건설분야는 대체로 공약의 흐름이 유사할 것이나 최근 관심이 높은 재분배와 부동산 이슈분야는 주요 대선후보간 입장이 크게 갈릴 이슈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는 약 20여 년간 크게 성장하였다. 복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복지수혜자 그룹과 비용의 부담자 그룹 간의 정치적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역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의 차이는 정당간에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정치와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후보자간 차별성도 큰 만큼 위 영역의 공약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위 분야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공약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뿐 아니라 공약 사이에 얼마나 내적인 정합성이 존재하는 가다. 복지팽창을 위해서는 재정적 엄격성보다는 팽창적 재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엄격한 재정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고령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복지지출을 억제할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 보호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반대로 규제를 약화할 경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처럼 정책적인 내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국방/통일/외교통상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영역은 통일 및 남북관계, 국방, 외교/안보, 통상의 정책 이슈로 세분할 수 있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안보 정책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집계되었고, 통일 및 남북관계가 그 뒤를 이었다. 각 정책 이슈 중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교류협력,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의 상위키워드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상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하위키워드를 살펴보면 통일 및 남북관계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남북대화, 평화협정, 정전협정/체제, 개성공단, 한미동맹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방 이슈 중에서는 방위산업육성이나 기술국산화, 사이버안보에서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미중패권경쟁과 ODA, 다자안보협력, 재외국민보호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 이슈 자체는 응답률이 비교적 낮게 나왔지만 하위키워드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EU 탄소배출 강화, 환경규제 등이 높게 나왔고, 반도체 경쟁과 기술패권경쟁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정책영역은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행정/사법이나 재정/경제 등의 정책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영역이다. 이는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영역은 국민 생활과의 직접 관련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은 엘리트의 성역에 갇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공약에 대한 주목도도 낮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12개 분야 중 9번이었던 외교·안보분야 공약은 대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전략 20개 중 18~20번으로 밀려났다.[165] 물론 정책 이슈별로 유권자들의 관

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다. 예컨대 북한 문나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 비교적 민감한 문제들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정책 이슈들의 경우 정책 중심이 아닌 정파성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20대 대선에도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영역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파성에 따른 이익의 관점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됨으로써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정책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교육/인적자원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은 교육, 노동, 청년 및 여성, 노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위의 영역들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그리고 4차산업혁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해당 분야의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난 공약들이 반복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엄밀한 평가 없이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청년, 노인 분야는 정당 간 차별성이 낮아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선 과정에서도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에서 기존 공약들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노인 분야는 공약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책선거 어젠다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약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해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5)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의 주요 정책이슈와 상위키워드 및 하위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는 언론 및 방송개혁과 문화 정책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및 방송의 경우, 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항상 중요한 정책이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특히 중요성이 높은 공약 이슈로 조사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문화 정책이슈의 경우, 상위키워드 수준에서 그 응답률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하위키워드 중에선 문화인프라 확충과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등 문화의 질적·경제적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슈들이 대선 공약으로서 중요성을 가

165) “[기자가만난세상] 대선, 외교·안보 안목 검증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9511469?OutUrl=naver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정책이슈로서 관광과 스포츠 분야는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문화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관광산업 진흥에 직결된 하위키워드이기 때문인지 K-관광콘텐츠 개발의 경우 그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왔고,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지 국내관광, 특히 로컬관광의 중요성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응답되었다. 무엇보다도 도쿄 올림픽 시점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인지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성이 높은 하위키워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에서 주요 대선 공약은 언론 및 방송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시될 소지가 커 보이고,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의 내용적 수준 제고에 관한 이슈들과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이슈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관광과 스포츠 정책이슈의 경우, 중요한 공약으로 다수가 포함될 것 같아 보이진 않으나, 일종의 스몰딜로서 꽤 영향력 있는 개별 공약들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6)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영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연구환경의 정책 이슈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은 ICT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지대하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하여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후보자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과 함께 기초연구,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상위키워드로 과학기술 정책 이슈 중 4차 산업혁명, 기초/기반연구/SW/인공지능(AI)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키워드의 중요도에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CT/융합,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 외에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핵심/원천기술과 연구개발을 위한 자율성확대,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여러 문제들, 예컨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응답률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ICT기술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20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정책 영역의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경우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 7) 보건의료/환경

보건의료/환경 정책 영역은 환경, 공중보건, 의료 정책 이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정책 이슈별로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보건의료/환경은 국민의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감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정책 이슈로는 환경과 공중보건 모두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상위키워드 중에서는 기후변화/위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후변화/위기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와 코로나19가 중요한 상위키워드로 집계되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하위키워드를 살펴보면 환경 관련 키워드로는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이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백신접종, 감염병 예방 등의 응답률이 높았고, 의료 부분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적자 문제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과거 주요 선거를 비롯하여 지난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들은 보건의료/환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20대 대선을 위해 경선에 참여중인 각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역시 해당 영역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공중보건의 경우 코로나19 종식과 새로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고, 현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관련 공약들은 국가재정 문제, 이익단체와의 관계 등 비교적 민감할 수 있는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처한 현실과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공약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슈로 역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필요한 정책 이슈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경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 Ⅴ. 결론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주기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러한 선거 과정 가운데 유권자가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소비자로서 정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잘 구현해 줄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치 체제는 분명 모범적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선거 구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하여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 등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 많은 관련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다만, 정책선거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서 정책선거 부재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있어 왔다(정회옥 2012; 조진만 2010; 조희정 2012; 유성진 2014). 사실 객관적 평가지표 상으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이래 전국단위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항상 정책선거 부재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치 단골 메뉴처럼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있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지역주의나 네거티브 폭로와 비방 등 우리 선거의 고질적 병폐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정책이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정책선거 구현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선거가 보다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보화 혁명에 힘입어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지적 세련도(sophistication)가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데 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지난 30년 동안 꾸준한 정치발전을 경험하면서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보편적 기대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관심도도 높아졌다. 또한,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한 것과 별개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일반시민의 지식 정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왔다.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책기반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한국 선거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민주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는데 더없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대량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구현이 가능해진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는 새로운 모델을 요구한다. 개별 정당의 정책 이슈별 공약이나 정책을 파편화되고 분산된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정책 수요나 관심에 따라 정책들을 정당별, 이슈별, 또는 지역별로 선택 분류하여 비교할 수 있고, 그러한 비교 작업을 통한 개별 유권자의 평가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간편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형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제고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은 상시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역동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선거 플랫폼이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와 잘 연계된다면 유권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접근과 활용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정책선거 플랫폼의 홍보 효과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정책선거 플랫폼을 통해 정책 경쟁과 비교→정책토론과 의견 공유→선거 참여→매니페스토 평가→다음 선거과정이라는 선순환의 상시적 구조가 구현된다면 디지털 시대 정책선거는 더욱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화 시대 유권자들이 새로이 경험하고 있는 정보 불확실성과 불충분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선거 구현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 및 지방 권력 선출이라는 두 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열리는 2022년을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 정책 분야들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연구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 정책 분야 및 현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반복된 회의와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라 할 만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내고 개별 정책영역 별로 주요한 어젠다와 키워드들을 발굴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책 이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정책 중심의 선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한 주요 정책 영역 별로 어떤 정책 어젠다와 키워드가 특히 중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우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경제/복지 정책영역과 정치/행정/사법 분야가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의 전공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경제 문제가 갖는 꾸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보건의료/환경 분야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선정되기 일수였던 국방이나 외교 분야보다 높은 순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보건 의료의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등 많은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결과일 것

이다.

정책영역별 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는 역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은 사실 우리 선거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전통적 정책이슈였고, 사법개혁의 경우는 최근 주요한 정책 쟁점으로서 그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위 키워드 수준에선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법원개혁, 지방균형발전 등이 주요 공약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유사한 맥락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나 검찰수사권조정 등 대표적인 하위 키워드들 또한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는 권력구조 개헌 등이 꽤 중요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로 선정되었는데, 그럼에도 개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다른 개헌 이슈들의 경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조세/복지 정책영역과 산업자원/건설교통분야의 정책 어젠다들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부동산 이슈가 한국 사회에 크게 부각된 만큼,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과 국가 부채문제 그리고 복지 재정 확충 문제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한 만큼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전문가 조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로 도출되었다. 부동산 정책과 복지 및 재정 정책은 정당이나 후보별로 이념적 지향에 따라 특히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정과 복지 문제는 정책 경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어서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위 영역들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 그리고 4차산업혁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하위 키워드들이 전문가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선 과정에서도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에서 기존 공약들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노인 분야는 공약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책 선거 어젠다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약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해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정책영역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공약 이슈로 언론 및 방송개혁과 문화 정책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 및 방송의 경우, 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항상 중요한 정책이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특히 중요성이 높은 공약 이슈로 조사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의 내용적 수준 제고에 관한 이슈들과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이슈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부각되었다. 관광과 스포츠 정책이슈의 경우, 정당별로 크게 차별화되는 공약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 팬데믹 위협과 함께 보건의료/환경은 이번 선거에서 그 어떤 정책 영역보다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이 부각되었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이슈로는 환경과 공중보건 모두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상위키워드 중에서는 기후변화/위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후변화/위기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와 코로나19가 중요한 상위키워드로 나타났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해당 분야 구체적인 하위키워드를 살펴보면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이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백신접종, 감염병 예방 등의 응답률이 높았고, 의료 부분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적자 문제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끝으로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영역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일 및 남북관계, 국방, 외교/안보, 통상의 하위 정책 영역 중에서 외교/안보 정책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집계되었고, 통일 및 남북관계가 뒤를 이었다. 각 정책 이슈 중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교류협력,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의 상위키워드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상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분야의 정책 이슈들은 사실 정책 내용 보다 정파성에 따라 유권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정책 영역인 만큼, 정파성에 따른 이익의 관점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됨으로써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정책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 선택(informed decision)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심층 토의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영역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였다(정책영역별 최종 키워드는 <부록 5>를 참조).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선거 정보 환경의 변화에 맞는 유권자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핵심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 연구진을 중심으로 심층 토의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 정책 이슈 키워드를 도출해 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의 주요 영역별 핵심 정책 어젠다와 키워드를 선별하고 순위를 매겨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효율적 이해를 돕고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과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결국, 본 연구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어젠다와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여 유권자들의 정책선거와 정보기반 투표(informed decision)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보기반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선

거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책선거 사업 추진모델을 제안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에 대한 장벽과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정책선거가 다수 유권자 저변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고영우. 2020.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구상.”『세무와 회계』 21권 1호, 65-87.

국민권익위원회. 2020.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2164 (검색일: 2021년 9월 30일).

금희조. 2013. “SNS의 활용과 정치적 소통의 양극화: 미국 퓨 리서치 데이터 분석.”『한국언론학보』57권 3호, 272-293.

기석도. 2019.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산업경제연구』32권 4호, 1467-1489.

김민호. 2021.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 대만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인문사회21』12권 1호, 883-898.

김범수·조화순. 2017. “네트워크사회의 변동요인과 포스트대의제의 등장.”『사회이론』52권, 225-262.

김범수·조화순. 2021. “시민참여형 전자입법을 통해 본 민주주의 제도 혁신.”『21세기정치학회보』31집 2호, 105-127.

김성태. 2013.『스마트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김영래. 2006. “매니페스토와 정치문화의 변화.” 김영래·이현출 편.『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서울: 논형.

김영래. 2008. “매니페스토와 정치선진화의 과제” 김영래·정형욱 편.『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서울: 논형.

김 욱. 2008. “매니페스토운동의 평가와 과제: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김영래·정형욱 편.『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서울: 논형.

김 욱. 2012. “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 평가.”『21세기정치학회보』22집 1호, 253-272.

김재용. 2006.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미와 도입 전략.” 김영래·이현출 편.『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서울: 논형.

김재용. 2019.『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매니페스토에 길을 묻다』. 서울: ㈜메디치미디어.

김재한.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통일전략』18권 3호, 73-112.

김현정. 2019.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세계지연구논총』37권 3호, 113-143.

김희민·리처드 포딩. 2007『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서울: 오름.

남광규. 2016. “남북대화의 국내적 활용과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평화학연구』

17권 3호, 25-44.
남기포. 2020. “국내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농협의 추진방향.”『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53집, 59-81.
노정규·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226-248.
문성묵. 2020. “남북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향후 과제.”『한국국가전략』5권 2호, 7-49.
박영석. 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21권 1호, 1-15.
박정호. 2021.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연구.”『사회과학연구』32권 1호, 215-236.
박종탁. 2021.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인문사회21』12권 3호, 2507-2517.
박훈민. 2020.『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변창구. 2016. “미중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통일전략』16권 3호, 193-220.
서남규·오하린·박경선·이옥희·이현옥. 202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보건경제와 정책연구』27권 1호, 119-147.
서린·최장우. 202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23권 2호, 45-72.
소네 야스노리. 2006. “일본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과 정치 변화.” 김영래·이현출 편.『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서울: 논형.
신범철. 2019.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전략연구』26권 2호, 37-76.
엄기홍. 2017. “합리적 선택 이론과 투표행태: 경제학적 관점.” 전용주 편.『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수길. 2006.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시민운동의 전망.”『시민사회와 NGO』4권 2호, 141-173.
오승규. 2020.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부동산법학』24권 3호, 19~45.
유성진. 2014.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 한계와 가능성.”『한국정치학회보』48집 5호, 97-117.
윤종빈. 2016. “한국 정책선거의 현황과 과제.”『선거연구』7호, 59-82.
음선필·김주영·정상우·한기영. 2014.『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숙. 2020.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행정논집』32권 4호, 741-758.
이민우·김민지. 2019.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인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0권 4호, 595-613.
이민화.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선진화 정책시리즈』 14-107.
이세진. 2021.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NARS 이슈와 논점』1837호.
이세진·김준현. 2021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NARS 이슈와 논점』1841호.
이영환. 201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를 중심으로.”『의정논총』, 14권 2호, 67-102.
이재묵. 2019. “유권자 세대교체와 한국 정당의 미래: 탐색적 연구.”『미래정치연구』9권 2호, 5-33.
이준원·김유경. 2018. “한류가 국가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광고PR실학연구』11권 2호, 123~148.
이찬호. 2012.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구축 방안.” 법제처 편.『201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이현출. 2004.『매니페스토(Manifesto): 국민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입법정보제141호)』서울: 국회도서관.
이현출. 2005.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9권 1호, 133-158.
이현출. 2006『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장영주·김태우. 2019.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NARS 현안분석』95호.
장우영. 2008. “사이버공간의 매니페스토 캠페인.”『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11권 3호, 123-143.
정준오. 2018.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전략연구』25권 1호, 47-103.
정회옥. 201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한국정당학회보』11권 2호, 125-155.
정회옥. 2016.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 실태 분석: 후보자 간 정책 차별성과 유권자 인식.”『한국정치연구』25권 3호, 167-195.
조우찬. 2018 “한반도 평화와 스포츠: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27권 2호, 87-105.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한국정당학회보』7권 2호. 111-135.

조진만. 2010. “2010 시민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한국정치학회보』44집 2호, 113-134.
조한석. 2003. “조세 정책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산업경제연구』13권 2호, 289-302.
조희정. 2012. “소셜미디어 매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한국정당학회보』11권 2호, 189-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규빈. 2020.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담론201』23권 3호, 39-71.
최영미. 2014. “한중일 삼국의 FTA 전략 : 미일의 TPP vs. 중국의 RCEP 하 한국의 전략적 선택.”『신아세아』21권 2호, 104-133.
최우선. 2018.『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정진. 2020. ‘매니페스토를 활용한 정책선거 활성화 과제.“『한국과 국제사회』4권 1호, 31-58.
하연섭. 2016.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한국정책학회보』25집 1호, 237-2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KISTEP 정책브리프 11호』. 음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재정학회. 2021.『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규섭·박주용·이덕재·이혜림. 2013. “트위터 팔로잉 관계에 대한 대표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 검증: 한국과 미국의 의회구성원들의 트위터 팔로워들 네트워크 비교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30권 1호, 295-336.
황용석·정재관·정다운. 2018.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5권 2호, 101-123.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mpbell, Augus., Converse, Philip., Miller, Warren and Stokes, Donald. 198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aw.
Gainous, Jason., and Wagner, Kevin. M. 2013. *Tweeting to power: The social media revolution in America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rgittai, Bonfadelli. 2002. The Internet and knowledge gap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65-84.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rcinese, Valentino. 2007. Does political knowledge increase turnout? Evidence from the 1997 British general election. *Public Choice.* 131(3): 387-411.

Lassen, D. Dreyer. 2005. The effect of information on voter turnout: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1): 103-118.

Lazarsfeld, Paul.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Election*.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Matsusaka, John. G. 1995. Explaining voter turnout patterns: An information theory. *Public choice*. 84(1-2): 91-117.

Norton, Philip, and David M. Wood. 1993. "The Personal Vote." In Norton Philip eds. *Back from Westminster: 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ir Constituents.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OECD. 2020a. *The OECD 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Six dimensions of a digital government.*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0b, *Digital Government in Chile - Improving Public Service Design and Delivery,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Paris: OECD Publishing.

Ramsden, John. 2005. *The Oxford Companion to twentieth century British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son, Derek. 1987. Britain,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1946-1981: an initial comparative analysis. In Ian. Budge, Derek. Robertson, and D. Hearl eds. *Ideology, strategy and party change: spatial analysis of post-war elections programmes in nineteen democrac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stein, Cass. R.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unstein, Cass. R. 2011. Empirically informed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8(4): 1349-1429.

Van Dijk., Jan AGM., and Hacker, Keneth. L. 2018. *Internet and democracy*

*in the network society*. London: Routledge.

Wellman, Barry, Anabel Quan-Haase, Jeffrey Boase, Wenhong Chen, Isabel Diaz, and Kakuko Miyata. 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8(3).

부록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 이슈와 키워드 발굴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참여 연구진들(서울시립대 이병하, 한국외대 이재묵, 순천대 김성조, 전북대 이선우, 인하대 장영덕)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최근 선거에서의 정당 공약 등을 분석하고, 몇 차례의 심층 토의 및 회의 과정을 거쳐 주요 정책 어젠다를 관련 분야별로 분류하고, 다시 대분야를 현안별 또는 세부 정책 영역별로 소분류하여 주요 정책 이슈의 세부 분야별 정책 어젠다 및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도출 및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정책 분야가 커버하는 범위가 방대한데다, 정책 분야별로 포함하는 세부 현안이 다양하고 그 중요도도 다를 수 있는 만큼, 훌륭한 동료 연구자분들의 지혜를 구하여 중요 정책 어젠다 및 키워드 도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총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제시된 **정책 영역과 키워드들 중 중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약 250개 키워드는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및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책의제로 활용**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09월 09일(목)까지 답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하여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 09. 05.

한국정당학회

연구책임자 :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문의처: aaabic@naver.com (연구보조원 정다빈)

**<질문 1>**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영역에 우선순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정책 영역 | 우선순위 표기 |
|---|---|---|
| 1 | 정치/행정/사법 | |
| 2 | 재정/경제/복지 | |
| 3 | 국방/통일/외교통상 | |
| 4 | 산업자원/건설교통 | |
| 5 | 교육/인적자원 | |
| 6 | 문화/체육/관광 |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

**<질문 1-1>** 앞의 '질문 1'에 제시된 영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나,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영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 |
|---|
| |

|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영역 |
|---|
| (1) |
| (2) |
| (3) |
| (4) |
| (5) |

**<질문 2>**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이슈 (정책영역별로 각각)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정책영역 | 연번 | 정책 이슈 | 중요 항목 표기(∨) |
|---|---|---|---|
| 정치/행정/사법 | 1 | 정치개혁 | |
| | 2 | 사법개혁 | |
| | 3 | 개헌 | |
| | 4 | 지방자치 | |
| | 5 | 사회안전 | |
| | 6 | 기타( ) | |
| 재정/경제/복지 | 1 | 조세 | |
| | 2 | 재정 | |
| | 3 | 공정거래 | |
| | 4 | 사회복지 | |
| | 5 | 사회적경제 | |
| | 6 | 기타( )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통일 및 남북관계 | |
| | 2 | 국방 | |
| | 3 | 외교/안보 | |
| | 4 | 통상 | |
| | 5 | 기타(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산업자원(에너지) | |
| | 2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
| | 3 | 농업해양수산 | |
| | 4 | 기타( ) | |
| 교육/인적자원 | 1 | 교육 | |
| | 2 | 노동(고용 및 일자리) | |
| | 3 | 청년/여성 | |
| | 4 | 노인/고령화 | |
| | 5 | 기타( ) | |
| 문화/체육/관광 | 1 | 문화 | |
| | 2 | 언론 및 방송 | |
| | 3 | 스포츠 | |
| | 4 | 관광 | |
| | 5 | 기타( ) | |

| 정책영역 | 연번 | 정책 이슈 | 중요 항목 표기(∨) |
|---|---|---|---|
|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1 | 과학/R&D | |
| | 2 | 정보통신 | |
| | 3 | 공중보건 | |
| | 4 | 환경 | |
| | 5 | 기타( ) | |

**<질문 2-1>** 앞의 '질문 2'에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이슈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 |
|---|
| |

**<질문 3>**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키워드에 정책영역별로 5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정책영역 | 연번 |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정치/행정/사법 | 1 | 선거제도 개혁 | |
| | 2 | 정당개혁 | |
| | 3 | 국회개혁 | |
| | 4 | 검찰개혁 | |
| | 5 | 법원개혁 | |
| | 6 | 경찰 개혁 | |
| | 7 | 권력구조 개헌 | |
| | 8 | 기본권 개헌 | |
| | 9 | 직접민주주의 | |
| | 10 | 경제민주주의 | |
| | 11 | 지방정부 | |
| | 12 | 지방의회 | |
| | 13 | 지방균형발전 | |
| | 14 | 치안 | |
| | 15 | 교통안전 | |
| | 16 | 재난안전 | |
| | 17 | 기타( ) | |

| | | | |
|---|---|---|---|
| 재정/경제/복지 | 1 | 조세정책 기조 | |
| | 2 | 기업 과세 | |
| | 3 | 개인 과세 | |
| | 4 | 재정 건전화 | |
| | 5 | 재정 효율화 방안 | |
| | 6 | 포용적 재정 운영 | |
| | 7 | 재벌규제 | |
| | 8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
| | 9 | 소상공인 지원 | |
| | 10 | 소득보장 | |
| | 11 | 연금 | |
| | 12 | 아동/육아 | |
| | 13 | 사회적경제 제도 | |
| | 14 | 사회적 기업지원 | |
| | 15 | 지역공동체 활성화 | |
| | 16 | 기타( ) | |

| | | |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비핵화 | |
| | 2 | 한반도 평화체제 | |
| | 3 | 종전선언 | |
| | 4 | 남북교류협력 | |
| | 5 | 남북경협 | |
| | 6 | 통일인식 | |
| | 7 | 국방개혁 | |
| | 8 | 북핵 문제 | |
| | 9 | 자주국방 | |
| | 10 | K-방산 | |
| | 11 | 사이버안보 | |
| | 12 | 한미동맹 | |
| | 13 | 한중관계 | |
| | 14 | 한일관계 | |
| | 15 | 공공외교 | |
| | 16 | 개발협력 | |
| | 17 | 다자외교 | |
| | 18 | 재외국민 | |
| | 19 | 미중무역갈등 | |
| | 20 | 환경기준 강화 | |
| | 21 | 자유무역협정 | |
| | 22 | 무역장벽확대 | |
| | 23 | 디지털 무역(DEPA) | |
| | 24 |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 |
| | 25 | 기타( ) | |

| | |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제조업지원 | |
| | 2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
| | 3 | 신재생에너지 | |
| | 4 | 주거 안정 | |
| | 5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
| | 6 | 교통 인프라 | |
| | 7 | 건설산업지원 | |
| | 8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
| | 9 | 가축전염병 | |
| | 10 | 농식품 안전 | |
| | 11 | 스마트농업 | |
| | 12 | 기타( ) | |

| | | | |
|---|---|---|---|
| 교육/<br>인적자원 | 1 | 돌봄 | |
| | 2 | 대학교육 | |
| | 3 | 초중등교육 | |
| | 4 | 교육 거버넌스 | |
| | 5 | 교육 인프라 | |
| | 6 | 청년 일자리 | |
| | 7 | 여성 고용 | |
| | 8 | 노인 일자리 | |
| | 9 | 노동자 안전망 | |
| | 10 | 노동 현안 | |
| | 11 | 청년 복지 | |
| | 12 | 청년 주거 | |
| | 13 | 젠더 갈등 | |
| | 14 | 여성 안전 | |
| | 15 | 여성 건강 | |
| | 16 | 저출산 | |
| | 17 | 여성 대표성/성평등 | |
| | 18 | 노인 돌봄 | |
| | 19 | 노인 주거/교통 | |
| | 20 | 노인 여가 | |
| | 21 | 노후 보장(고령화) | |
| | 22 | 기타( ) | |

| | | | |
|---|---|---|---|
| 문화/체육/<br>관광 | 1 | 문화사회 | |
| | 2 | 문화경제 | |
| | 3 | 문화외교 | |
| | 4 | 문화시민 | |
| | 5 | 언론개혁 | |
| | 6 | 방송개혁 | |
| | 7 | 포털개혁 | |
| | 8 | 생활스포츠 | |
| | 9 | 스포츠경제 | |
| | 10 | 스포츠 외교 | |
| | 11 | 국제관광 | |
| | 12 | 국내관광 | |
| | 13 | 산업관광 | |
| | 14 | 기타( ) | |

| | | | |
|---|---|---|---|
| 과학기술/<br>정보통신/<br>공중보건/<br>환경 | 1 | 지식재산 | |
| | 2 | 기초/기반연구 | |
| | 3 | 4차산업혁명 | |
| | 4 | SW/인공지능(AI) | |
| | 5 | R&D | |
| | 6 | 디지털뉴딜 | |
| | 7 | 디지털무역(DEPA) | |
| | 8 | 정보보호 | |
| | 9 | 디지털경제 | |
| | 10 | 4차산업혁명 | |
| | 11 | 코로나19 | |
| | 12 | 공공의료 | |
| | 13 | 의료개혁 | |
| | 14 | 질병관리 | |
| | 15 | 건강보험 | |
| | 16 | 기후변화/위기 | |
| | 17 | 자원순환 | |
| | 18 | 그린뉴딜 | |
| | 19 | 대기오염 | |
| | 20 | 해양/수자원 | |
| | 21 | 기타(  ) | |

**<질문 3-1>** 앞의 '질문 3'에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이슈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 |
| --- |
| |

**<질문 4>**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부 키워드를 정책 이슈별로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1. 정치/행정/사법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 경제 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
| | 여성대표성 | | | 토지공개념 | |
| | 선거구획정 | | | 사회적경제 | |
| | 투표시간 | | | 동반상생성장 | |
| | 선거공영제 | | | 소비자보호 | |
| 정당개혁 | 예비후보자제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법제 | |
| | 정치자금법 | | | 지방정부 입법 | |
| | 국고보조금개선 | |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
| | 지구당복원 | | 지방의회 | 구성원 전문성 | |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 | 정책역량 강화 | |
| | 상시국정감사제 | | | 사무직 인사권 | |
| | 국회국민청원 | | | 지방의회 다양화 | |
| | 불체포특권 | | 직접 민주주의 | 국민소환제 | |
| | 행정입법감독 | | | 국민발안제 | |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 | 주민투표제 강화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주민참여 예산제 | |
| | 검사장직선제 | | 기본권 | 안전에 대한 권리 | |
| 법원개혁 | 국민참여재판 | | | 주거권 | |
| | 판결문 공개 | | | 생명권 | |
| | 무작위사건배당 | | | 정보기본권 | |
|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 치안 | 코로나19 관련 위법 | |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 | 지능범죄 | |
| | 정보수사 분리 | | | 디지털 성범죄 | |
| | 경찰대 폐지 | | | 데이트 폭력 | |
| 권력구조 | 대통령 연임제 | | | 아동 폭력 | |
| | 의원내각제 | | 재난안전 | 위험방지체계 | |
| | 준대통령제 | | | 재난 불평등 | |
| 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 | 총체적 지역접근 | |
| | 행정수도 이전 | | | 기후변화 | |
| | 지역혁신 성장거점조성 | | 교통안전 | 스쿨존 교통안전 | |
| | | | |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 |
| | | |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2. 재정/경제/복지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조세정책 기조 | 증세논쟁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관련 지원 | |
| | 조세부담율 | | | 지역상권 활성화 | |
| | 직·간접세비율 | | | 사회안전망 | |
| | 공평과세 | | 소득보장 | 기본소득 | |
| 기업 과세 | 법인세율 | | | 기초자산 | |
| | 법인세공제 | | | 근로장려금 | |
| | 일감몰아주기과세 | | | 기초생활보장제 | |
| 개인 과세 | 소득과세 | | | 부(負)의 소득세 | |
| | 금융과세 | | 연금 | 기초연금 | |
| | 상속·증여세 | | | 국민연금 개혁 | |
| | 부유세 | | | 직역연금개혁 | |
| 재정 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 | 아동/육아 | 아동수당 | |
| | 통합재정수지 | | | 보육서비스 | |
| | 재정준칙 법제화 | | | 육아휴직 | |
| 재정 효율화 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 | 사회적경제 제도 | 법률 정비 | |
| | 세출개혁 | | | 기금조성 | |
| | 조세탈루억제 | | | 교육과정 확대 | |
| | 국유자산관리 | | 사회적 기업지원 | 판로지원 | |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 | 기업활성화 | |
| | 균형발전예산 | | | 지역사회 확산 | |
| | 국민참여예산 |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 금융지원 | |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
| | 일감몰아주기 | | | 도시재생 | |
| | 금산분리 | | | | |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기술보호 | | | | |
| | 공공조달 | | | | |
| | 집단소송제 | | | | |
|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 |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3. 국방/통일/외교통상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비핵화 | 비핵화 프로세스 | | 국방개혁 | 징병제/모병제 | |
| | CVID/PVID[166] | | | 군처우개선(군인권) | |
| | 6자회담 | | | 여군확대 | |
| | 대북제재 | | | 군사법제도개혁 | |
| | 주한미군철수 | | | 국방문민화 | |
| 한반도 평화체제 | 평화프로세스 | | | 예비군/동원훈련 | |
| | 남북대화 | | | 방산비리개혁 | |
| | 북미대화 | | 북핵문제 | 한미동맹 | |
| | 남북미정상회담 | | | 한미일 안보협력 | |
| | 9.19 공동성명 | | | 북미회담 | |
| 종전선언 | 정전협정/체제 | | | 미중협력/미중관계 | |
| | 평화협정 | | | 핵우산 | |
| | 판문점선언 | | | THAAD/사드 | |
| | 주한미군 철수 | | | 전술핵배치 | |
| | 9.19 군사합의 | | 자주국방 | KF-X 프로젝트 | |
| 남북 교류협력 | 스포츠교류/단일팀 | | | 방위산업 육성 | |
| | 이산가족 | | | 전시작전권 환수 | |
| | 생태계 복원/DMZ | | | 미사일주권 | |
| | 남북철도연결 | | | KAMD/Kill-chain[167] | |
| | 국군포로 | | | 주한미군 | |
| | 유해발굴 | | K-방산 | 차세대 전투기 | |
| 남북경협 | 개성공단 | | | 방산수출 | |
| | 남북교역 | | | 우주산업/개발 | |
| | 위탁가공 | | | 기술국산화 | |
| | 금강산관광 | | | 민군융합 | |
| | 경제특구 | | 사이버안보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
| 통일인식 | 통일교육 | |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
| | 통일여론 | | | 사이버 보안 | |
| | 대북인식 | | | 사이버공격 대응 | |
| | 평화인식 | | | 북한 사이버 공격 | |
| | 북한이탈자주민 | | | | |
| | 북한인권 | | | | |

166)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 PVID: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167)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ill-chain: 타격순환체계(공격형 방위 시스템)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한미동맹 | 한미연합훈련 | | 재외국민 | 출입국 편의 | |
| | 전시작전권환수 | | | 재외국민보호 | |
| | 주한미군감축 | | | 재외국민선거 | |
| | 미군기지 반환 | | | 한상네트워크 | |
| | 한미미사일지침 | | | 재외동포 | |
| | 주한미군 지위협정 | | 미중 무역갈등 | 환율변동 | |
| | 쿼드 | | | 보호무역 | |
| 한중관계 | 사드갈등 | | | 수출입규제 | |
| | 문화공정 | | | 반도체 경쟁 | |
| | 한중FTA | | | 신남방정책 | |
| | 북한문제 | | 환경기준 강화 | 유럽 그린딜 | |
| | 미중패권경쟁 | | | EU 탄소배출 강화 | |
| | 반중여론 | | | 탄소국경조정제도 | |
| 한일관계 | 위안부/강제징용 | | | USMCA 환경기준 강화[168] | |
| | 정상회담 | | 자유무역협정 | 동아시아FTA | |
| |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 | | 한미FTA | |
| | 후쿠시마 오염수 | | | 한중FTA | |
| | 역사문제 | | | RCEP/CPTPP[169] | |
| 공공외교 | 문화외교 | | 무역장벽확대 | 기술규제 | |
| | 스포츠외교 | | | 비관세규제 | |
| | K-pop/한류 | | | 환경규제 | |
| | 국가브랜드 | | | 무역기술장벽 | |
| 개발협력 | ODA(공적개발원조) | | | 수출입규제 | |
| | 인도적 지원 | | GVC 재편 | 디커플링(탈중국화) | |
| | 유무상원조 | | | 반중국 무역연합 | |
| | 다자개발협력 | | | GV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
| 디지털 무역 (DEPA) | 초국가 전자상거래 | | | 기술패권경쟁 | |
| | 디지털 무역협정 | | | 디지털 전환 | |
| | 글로벌 빅데이터 | | 다자외교 | 중견국외교(믹타) | |
| | 디지털세 | | | 다자안보협력 |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 | 동북아 지역 안보 | |
| | 디지털 통화 | | | 신남방/신북방정책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168)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169)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제조업 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 건설산업 지원 | 하도급규제 | |
| | 혁신 클러스터 | | | 공정건설계약 | |
| | 부품소재 국산화 | |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
| | 스마트공장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창업지원 |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농가 직불제 | |
| | 고용지원 | | | 농산물 수급안정 | |
| | 수출지원 | | | 농산물 가격보존 | |
| | 물류유통지원 | | | 자연재난시 농가구호 | |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 가축전염병 | 가축 방역 | |
| | 탄소중립 | | | 동식물검역 | |
| | 저탄소 산업 육성 | | | 가축백신지원 | |
| | 탈원전 | | | 살처분보상 | |
|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 | 농식품안전 | 축산물이력관리 | |
| | 도심 재건축 | | | 축산물안전인증제 | |
| | 신도시건설 | | | 농산물위생검사 | |
| | 주거비 지원 | | 스마트농업 | 스마트팜 | |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 | 식품 R&D | |
| | 거래세 | | | 식품수출단지 | |
| | 임대차규제 | | | 식품테마파크 | |
| | 대출규제 | | | | |
| 교통인프라 | 수도권 GTX 확충 | | | | |
|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 | | |
| | 철도교통 확충 | | | | |
| | 공항 및 항만 확충 | | | | |
| | 고속도로 지하화 | | |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5. 교육/인적자원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 노인 일자리 | 정부사업 일자리 | |
| | 아동수당 | | | 수당인상 | |
| | 돌봄교실 | | | 자영업 지원 | |
| | 보육교사 | |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
| | 유연근무제 | | | 취업지원제도 | |
| 대학교육 | 국립대 육성 |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
| | 국가장학금 확대 | | | 노동시간 단축 | |
| | 입시개혁 | | | 실업급여 확대 | |
| | 대학구조조정 | | | 근로감독 강화 | |
| | 4차산업혁명 | | | 최저임금 인상 | |
| 초중등교육 | 자사고/특목고 | | 노동 현안 | 직업훈련 강화 | |
| | 학제개편 | | | 노동이사제 | |
| | 혁신학교 | |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
| | 민주시민교육 | | | 고용유연화 | |
| | 사교육비 경감 | | | 연공서열제 개혁 | |
| 교육 거버넌스 | 교육부 | | 청년 복지 | 최저임금 | |
| | 국가교육위원회 | | | 대학등록금 | |
| | 시도교육청 | | | 학자금 대출 | |
| | 전교조 | | | 청년실업부조 | |
| | 교육감 선거 | | | 청년구직수당 | |
| 교육 인프라 | 각종 고시 부활 | | 청년 주거 | 신혼부부 | |
| | 학교인프라 개선 | | | 청년공공주택 | |
| | 안전한 학교 | | | 1인 가구 | |
| | 교원양성체계 개편 | | | 대학 기숙사 | |
| 청년 일자리 | 청년고용할당 | | | 주거금융 지원 | |
| | 비정규직 감소 | | 젠더 갈등 | 여성가족부 | |
| | 창업지원 | | | 군복무 | |
| | 공정채용 | | | 성차별 인식 격차 | |
| | 지역인재채용 | | | 여성할당제 | |
| 여성고용 | 비정규직 여성 | | | 젠더폭력 | |
| | 경력단절여성 | | 여성 안전 | CCTV | |
| | 성별 임금격차 | | | 폭력예방교육 | |
| | 취약계층여성 | | | 성매매 |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 | 디지털성범죄 | |
| | | | | 안심귀가서비스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 노인 주거/교통 | 영구임대주택 | |
| | 생리대 지원 | |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
| | 여성 관련 암 예방 | | | 맞춤형 공동주택 | |
| | 분만인프라 구축 | | | 무상교통 | |
|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 | 농어촌 공영택시 | |
| 저출산 | 육아휴직 | | 노인 여가 | 경로당 개편 | |
| | 난임시술비 지원 | | | 존엄한 죽음 | |
| | 산후조리비용 | | | 지역사회 프로그램 | |
| | 출산휴가 | | | 평생교육 | |
| | 다자녀 장학금 | | | 노인생활체육 | |
| 여성 대표성/ 성평등 | 여성가족부 | | 노후 보장 (고령화) | 기초연금액 인상 | |
| | 성평등위원회 | | | 국민연금강화 | |
|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 | 퇴직연금강화 | |
| | 비례대표제 | |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
| | 여성관리자 | | | 정년연장 | |
| 노인 돌봄 | 치매 | | | | |
| | 의료비 부담 경감 | | | | |
| | 국공립요양시설 | | | | |
|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 | | |
|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 |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6. 문화/체육/관광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 생활스포츠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 |
| | 비대면 문화화 | | | 지역체육 공동체화 | |
| | 지역문화 발전 | |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
| 문화경제 | K-콘텐츠산업 진흥 | | 스포츠 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
| | 저작권 확충 | | | 융복합 사업화 | |
|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 | 지역·사회적 자본화 | |
| 문화외교 | 신한류 확산 | | 스포츠 외교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
| | 국제 문화교류 | | | 스포츠 교류협력 | |
| | 전통문화 계승·홍보 | | | 스포츠 한류 | |
| 문화시민 | 문화소비 지원 강화 | | 국제관광 | 방역 인프라 | |
|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 | 국제행사 유치 | |
| | 문화인프라 확충 | | | K-관광 콘텐츠 개발 | |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
| | 언론중재법 | | 국내관광 | 교통숙박 연계 관광 | |
| | 편집권 독립 | | | 안보관광 자원개발 | |
| | 지역언론 지원 | | | 로컬관광 | |
| | 징벌적 손배 | | 산업관광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
| | 미디어바우처제 | | | 의료관광 | |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 | 4차산업 체험관광 | |
| | 방송수신료제 | | | 교육관광 | |
| | 광고운영 규제 | | | | |
| 포털개혁 | 아웃링크 도입 | | | | |
| | 알고리즘 공개 | | | | |
|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 | | |
| | 댓글 실명제 | | |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7.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지식재산 | 기술보호/활용 | | 디지털뉴딜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
| | 특허 부가가치 | |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
| | 혁신기술 | | | 5G 고속도로 | |
| | 영업비밀/특허침해 | | | 메타버스 | |
| | 국제표준화 | | | 지능형 정부 | |
| | 핵심/원천기술 | | | 비대면산업 | |
| 기초/기반 연구 | 컴퓨팅 인프라 | | | 디지털 격차해소 | |
| | 항공우주 | | 디지털무역 (DEPA) | 초국가 전자상거래 | |
| | 생명과학 | | | 디지털 무역협정 | |
| | 의약학 | | | 글로벌 빅데이터 | |
| | 공학 | | | 디지털세 | |
| | ICT/융합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AI) | | | 디지털 통화 | |
| | 빅데이터 |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
| | 블록체인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미래차 | | | 보이스피싱 | |
| | 규제혁신 | | | 데이터보호 | |
| | 디지털혁신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일자리미래 | | | 개인정보유출 | |
| SW/인공지능(AI) | 교육 및 인력양성 | | 디지털경제 | 디지털화폐 | |
| | 코딩교육 | | | 핀테크 | |
| | 융합적 사고력 | | | 디지털커머스 | |
| | 인공지능 윤리 | | | 구독경제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 데이터경제 | |
| | 특허권 | | 코로나19 | 방역/K-방역 | |
| R&D | 자율성확대 | | | 백신접종 | |
| | 지역/관료주도형R&D | | | 백신여권 | |
| | 연구개발비 | | | 백신주권 | |
| | 국방R&D | | | 백신생산 | |
| | 기술규제 | | | 거리두기 | |
| | 예비타당성 | | | | |
| | 민관협력/투자확대 | | | | |
| | 연구윤리 | | |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중요 항목 표기(∨) |
|---|---|---|---|---|---|
| 공공의료 | 공공의대 | | 자원순환 | 폐기물 재활용 | |
| | 공공병원 | | | 업사이클링 | |
| | 의대정원 | | | 미세플라스틱 | |
| | 의료질 | | | 제로웨이스트 | |
| | 지방의료원육성 | | | 폐기물부담금 | |
| | 과잉진료/과소진료 | | | 순환센터 | |
| 의료개혁 | 의료법개정 | | 그린뉴딜 | 탄소중립 | |
| | 수술실 CCTV | | | 순환경제 | |
| | 의료수가 | | | 도시숲 | |
| | 의료권력 | | | 신재생에너지 | |
| | 의료파업 | | | 스마트그리드 | |
| 질병관리 | 의료비지원 | | | 녹색산업 | |
| | 국가검진사업 | | | 수소경제 | |
| | 예방접종 |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
| | 감염병예방 | | | (중국발) 황사 | |
| | 호스피스/완화의료 | | | 한중협력 | |
| 건강보험 | 문재인 케어 | | | 산성비 | |
| | 보험료 인상 | | | 저녹스보일러 | |
| | 임신/출산비지원 | | | 저감조치 | |
| | 재정적자 | | 해양/수자원 | 상/하수도 | |
| | 보장성 강화 | | | 지하수 | |
| 기후변화/위기 | 지구온난화 | | | 해양생태계 | |
| | 탄소중립 | | | 해양폐기물 | |
| | 탄소배출권 | | | 해양오염 | |
| | 탄소국경세 | | | | |
| | 화석연료 | | | | |
| | 지속가능발전 | | | |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

※ 응답자 현황

| 성 명 | | 연락처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21.09.05~21.09.09)

총 51명 응답

**<질문 1>**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영역에 우선순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 | 정책 영역 | 평균값 |
|---|---|---|
| 1 | 재정/경제/복지 | 1.408 |
| 2 | 정치/행정/사법 | 3.204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3.633 |
| 4 | 국방/통일/외교통상 | 3.939 |
| 5 | 교육/인적자원 | 3.979 |
| 6 | 산업자원/건설교통 | 5.245 |
| 7 | 문화/체육/관광 | 6.551 |

**<질문 1-1>** 앞의 '질문 1'에 제시된 영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나,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영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 |
|---|
| • 과학기술/정보통신 문제와 공중 보건/환경문제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야 함<br>• 노동, 여성, 청소년, 아동<br>• 과학기술/정보통신과 공중보건/환경 은 성격이 다른 분야라고 생각됨. 7번 항목을 분리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br>• 너무 넓은 영역이어서 딱 떠오르지 않네요. 부동산과 교육, 코로나 문제일 것 같은데, 영역을 찍으라고 하니 어려워요.<br>•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 공중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이 구체화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br>•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br>과학기술/정보통신, 공중보건, 환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br>• 적절하다고 판단됨<br>• 복지정책이 재정과 경제와 동일 영역에 포함되는 것 보다는 공중보건과 복지 또는 보건을 세분화하여 공중보건, 의료, 복지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함<br>• 2,3,5 영역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 정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br>• 7번 영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공중보건/환경은 하나로 구분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변경은 어떨까요? |

2. 재정/경제/복지/공중보건 => 발전 or 분배
4. 산업자원/건설교통/환경 => 개발 or 보호
7. 과학기술/정보통신

- 소득재분배, 조세 추가
-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중보건, 환경 (또는 공중보건 대신 보건의료)의 두 가지로 구분 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지방소멸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절박한 문제가 행정의 일부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안타까움. 독자적 영역으로 독립해서 다룰 수 있으면 좋을듯해 보임
- 아래에서 다루는, 각 정책 영역 별 내용을 미리 한 번 보여주었으면 함. 예를 들어 노동문제의 경우 연번 2에 해당되는지, 연번 4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번 5에 해당되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음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영역

- 노동분야, 플랫폼 기업 규제문제
- 저출산 고령화
- 기후위기, 코로나19 방역
- 산업정책, 사회적 갈등 해소
- 보건, 의료
- 부동산, 공기업 개선, 지역 균형발전, 인구
- 시민권익, 노동
- 기타 영역으로 5년의 단기 정책과제가 아닌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져야할 10~20년 단위의 미래 국가비전과 관련된 정책영역을 별도로 추가하는 건 어떨지?

<질문 2> 정책 이슈 (정책영역별로 각각)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정책영역 | 순위 | 정책 이슈 | 응답 수 |
|---|---|---|---|
| 정치/행정/사법 | 1 | 정치개혁 | 39 |
| | 2 | 사법개혁 | 24 |
| | 3 | 지방자치 | 15 |
| | 4 | 개헌 | 14 |
| | 5 | 사회안전 | 8 |
| | 기타 | •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지방의 지속가능성 문제<br>• 정치영역은 그다지 | |

| | | | |
|---|---|---|---|
| 재정/경제/복지 | 1 | 사회복지 | 26 |
| | 2 | 조세 | 22 |
| | 3 | 재정 | 16 |
| | 4 | 공정거래 | 31 |
| | 5 | 사회적경제 | 7 |
| | 기타 | • 가짜 뉴스, YouTube 등을 비롯한 1인 미디어<br>• 코로나부터 회복 | |

| | | |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외교/안보 | 34 |
| | 2 | 통일 및 남북관계 | 32 |
| | 3 | 국방 | 16 |
| | 4 | 통상 | 15 |
| | 기타 | • | |

| | |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산업자원(에너지) | 46 |
| | 2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45 |
| | 3 | 농업해양수산 | 6 |
| | 기타 | • 부동산 정책<br>• 4차 산업혁명 관련 | |

| | | | |
|---|---|---|---|
| 교육/인적자원 | 1 | 노동(고용 및 일자리) | 37 |
| | 2 | 교육 | 27 |
| | 3 | 노인/고령화 | 20 |
| | 4 | 청년/여성 | 13 |
| | 기타 | • 저출산 | |

| 정책영역 | 순위 | 정책 이슈 | 응답 수 |
|---|---|---|---|
| 문화/체육/관광 | 1 | 언론 및 방송 | 43 |
| | 2 | 문화 | 34 |
| | 3 | 관광 | 14 |
| | 4 | 스포츠 | 2 |
| | 기타 | • 문화 중에서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한 이슈들<br>• 한류와 역사<br>• 정부가 가만 놔뒀으면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1 | 환경 | 34 |
| | 2 | 과학/R&D | 29 |
| | 3 | 공중보건 | 20 |
| | 4 | 정보통신 | 17 |
| | 기타 | • 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한 이슈들<br>• 의료보험 및 방역 | |

**<질문 2-1>** 앞의 '질문 2'에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이슈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 |
|---|
| • 보건, 의료<br>• 재정/경제/복지에서 5. 사회적 경제를 넘어 ESG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영을 제안드립니다.<br>• 교육/인적 자원에서 (여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저출산 포함을 제안드리며, 이 경우 구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br>3. 청년/여성/노인=> 인구특성별 구분<br>4. 고령화/저출산=> 사회문제별 구분<br>• 난민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 평화는 외교, 안보, 통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주제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핵 문제도 환경과 함께 명기할 필요가 있음.<br>• 노동, 시민권익, 이주자, 사회통합<br>• 4차 산업혁명 관련 준비<br>• 저출산 문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노인/고령화'인데, 고령화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독립적인 이슈로 다루거나, '저출산/고령화'로 수정이 필요함. |

**<질문 3>**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키워드에 정책영역별로 5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정책영역 | 순위 | 키워드 | 응답 수 |
|---|---|---|---|
| 정치/행정/사법 | 1 | 선거제도 개혁 | 36 |
| | 2 | 지방균형발전 | 33 |
| | 3 | 검찰개혁 | 27 |
| | 4 | 국회개혁 | 26 |
| | 5 | 권력구조 개헌 | 20 |
| | 6 | 정당개혁 | 18 |
| | 6 | 법원개혁 | 18 |
| | 8 | 재난안전 | 15 |
| | 9 | 경제민주주의 | 14 |
| | 10 | 지방정부 | 11 |
| | 11 | 경찰개혁 | 10 |
| | 11 | 지방의회 | 10 |
| | 13 | 기본권 개헌 | 6 |
| | 14 | 직접민주주의 | 2 |
| | 14 | 치안 | 2 |
| | 14 | 교통안전 | 2 |
| | 기타 |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뭐가 다른가요? | |

| | | | |
|---|---|---|---|
| 재정/경제/복지 | 1 | 조세정책 기조 | 29 |
| | 2 | 연금 | 26 |
| | 2 | 아동/육아 | 26 |
| | 4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25 |
| | 5 | 재정 건전화 | 22 |
| | 6 | 소상공인 지원 | 19 |
| | 7 | 재벌규제 | 17 |
| | 8 | 재정 효율화 방안 | 16 |
| | 9 | 기업 과세 | 15 |
| | 10 | 소득보장 | 13 |
| | 11 | 사회적경제 제도 | 11 |
| | 12 | 포용적 재정 운영 | 10 |
| | 13 | 개인 과세 | 9 |
| | 14 | 지역공동체 활성화 | 8 |
| | 15 | 사회적기업지원 | 3 |
| | 기타 | • 장애인, 고령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 |

| 정책영역 | 순위 | 키워드 | 응답 수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한반도 평화체재 | 32 |
| | 2 | 한미동맹 | 27 |
| | 3 | 남북교류협력 | 23 |
| | 4 | 국방개혁 | 22 |
| | 5 | 한중관계 | 18 |
| | 6 | 환경기준 강화 | 16 |
| | 7 | 한일관계 | 15 |
| | 8 | 북핵 문제 | 14 |
| | 9 | 비핵화 | 13 |
| | 10 | 미중무역할등 | 11 |
| | 11 | 사이버안보 | 10 |
| | 12 | 다자외교 | 8 |
| | 13 | 종전선언 | 7 |
| | 13 | 자주국방 | 7 |
| | 15 | 남북경협 | 5 |
| | 16 | K-방산 | 4 |
| | 16 | 공공외교 | 4 |
| | 16 | 디지털 무역(DEPA) | 4 |
| | 16 |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 4 |
| | 20 | 통일인식 | 3 |
| | 20 | 개발협력 | 3 |
| | 20 | 자유무역협정 | 3 |
| | 23 | 재외국민 | 1 |
| | 24 | 무역장벽확대 | 0 |
| | 기타 | - | |

| | |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주거 안정 | 46 |
| | 2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43 |
| | 3 | 신재생에너지 | 41 |
| | 4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35 |
| | 5 | 제조업지원 | 24 |
| | 6 | 농식품 안전 | 20 |
| | 7 | 교통 인프라 | 13 |
| | 8 | 가축전염병 | 7 |
| | 9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6 |
| | 10 | 스마트농업 | 5 |
| | 11 | 건설산업지원 | 1 |
| | 기타 | • 세제를 늘리는 건가요? 줄이는 건가요? | |

| 정책영역 | 순위 | 키워드 | 응답 수 |
|---|---|---|---|
| 교육/인적 자원 | 1 | 청년 일자리 | 33 |
| | 2 | 저출산 | 30 |
| | 3 | 돌봄 | 22 |
| | 3 | 초중등교육 | 22 |
| | 5 | 대학교육 | 21 |
| | 5 | 노후 보장(고령화) | 21 |
| | 7 | 노동자 안전망 | 19 |
| | 8 | 젠더 갈등 | 18 |
| | 9 | 청년 주거 | 10 |
| | 10 | 청년 복지 | 9 |
| | 11 | 교육 인프라 | 8 |
| | 12 | 여성 고용 | 7 |
| | 12 | 여성 대표성/성평등 | 7 |
| | 12 | 노인 돌봄 | 7 |
| | 15 | 교육 거버넌스 | 6 |
| | 15 | 여성 안전 | 6 |
| | 17 | 노인 일자리 | 4 |
| | 17 | 노동 현안 | 4 |
| | 19 | 노인 여가 | 1 |
| | 20 | 여성 건강 | 0 |
| | 20 | 노인 주거/교통 | 0 |
| | 기타 | - | |

| | | | |
|---|---|---|---|
| 문화/체육/ 관광 | 1 | 언론개혁 | 44 |
| | 2 | 방송개혁 | 41 |
| | 3 | 포털개혁 | 35 |
| | 4 | 국내관광 | 23 |
| | 5 | 문화경제 | 19 |
| | 6 | 문화외교 | 17 |
| | 7 | 문화시민 | 14 |
| | 7 | 생활스포츠 | 14 |
| | 9 | 문화사회 | 13 |
| | 10 | 국제관광 | 7 |
| | 11 | 산업관광 | 5 |
| | 12 | 스포츠경제 | 3 |
| | 13 | 스포츠 외교 | 2 |
| | 기타 | • 가짜 뉴스, YouTube 등을 비롯한 1인 미디어<br>• 한류 지원<br>• 그냥 놔뒀으면, 큰 정부 반대<br>•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 |

| 정책영역 | 순위 | 키워드 | 응답 수 |
|---|---|---|---|
| 교육/인적 자원 | 1 | 기후변화/위기 | 34 |
| | 2 | 코로나19 | 29 |
| | 3 | 공공의료 | 25 |
| | 4 | 4차산업혁명 | 22 |
| | 5 | 건강보험 | 18 |
| | 6 | 기초/기반연구 | 17 |
| | 7 | 의료개혁 | 15 |
| | 8 | SW/인공지능(AI) | 14 |
| | 8 | 그린뉴딜 | 14 |
| | 10 | 정보보호 | 11 |
| | 10 | 디지털경제 | 11 |
| | 10 | 대기오염 | 11 |
| | 13 | R&D | 10 |
| | 14 | 디지털뉴딜 | 5 |
| | 15 | 지식재산 | 4 |
| | 15 | 질병관리 | 4 |
| | 15 | 자원순환 | 4 |
| | 18 | 해양/수자원 | 3 |
| | 19 | 디지털무역(DEPA) | 2 |
| | 29 | 4차산업혁명 | 2 |
| | 기타 | • 3과 10이 중복됩니다.<br>• 3, 10 보기 중복 | |

**<질문 3-1>** 앞의 '질문 3'에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 이슈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 |
|---|
| • 비핵화가 정치 항목에만 포함됨. 환경문제에도 포함되어야 할 듯<br>• 과학기술 선택지에 4차 산업혁명이 두 번 중복되어 있음<br>• 플랫폼 노동 문제 |

**<질문 4>**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부 키워드를 정책 이슈별로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1. 정치/행정/사법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44 |
| 1 | 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44 |
| 3 | 지방의회 | 정책역량 강화 | 43 |
| 4 | 권력구조 | 대통령 연임제 | 41 |
| 4 | 지방정부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41 |
| 6 | 기본권 | 주거권 | 40 |
| 7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39 |
| 8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38 |
| 8 | 경찰개혁 | 정보수사 분리 | 38 |
| 8 | 재난안전 | 기후변화 | 38 |
| 11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37 |
| 11 | 균형발전 | 지역혁신 성장거점조성 | 37 |
| 13 | 정당개혁 | 국고보조금개선 | 36 |
| 14 | 교통안전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34 |
| 15 | 선거제도 개혁 | 선거구획정 | 33 |
| 15 | 정당개혁 | 정치자금법 | 33 |
| 15 | 법원개혁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33 |
| 15 | 직접민주주의 | 국민소환제 | 33 |
| 15 | 치안 | 아동 폭력 | 33 |
| 20 | 지방정부 | 지방정부 입법 | 31 |
| 20 | 교통안전 |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 31 |
| 22 | 치안 | 디지털 성범죄 | 29 |
| 23 | 법원개혁 | 판결문 공개 | 28 |
| 23 | 경제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28 |
| 25 | 지방의회 | 구성원 전문성 | 26 |
| 25 | 직접민주주의 | 주민투표제 강화 | 26 |
| 25 | 재난안전 | 위험방지체계 | 26 |
| 25 | 재난안전 | 재난 불평등 | 26 |
| 29 | 교통안전 | 스쿨존 교통안전 | 25 |
| 30 | 경제민주주의 | 동반상생성장 | 24 |
| 30 | 기본권 | 안전에 대한 권리 | 24 |
| 32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23 |
| 32 | 국회개혁 | 상시국정감사제 | 23 |
| 32 | 권력구조 | 의원내각제 | 23 |
| 35 | 정당개혁 | 지구당복원 | 22 |
| 36 | 국회개혁 | 행정입법감독 | 21 |
| 37 | 직접민주주의 | 국민발안제 | 20 |
| 38 | 법원개혁 | 국민참여재판 | 18 |

| | | | |
|---|---|---|---|
| 38 | 권력구조 | 준대통령제 | 18 |
| 38 | 지방정부 | 지방정부 법제 | 18 |
| 38 | 기본권 | 생명권 | 18 |
| 42 | 국회개혁 | 국회국민청원 | 17 |
| 42 |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 예산제 | 17 |
| 44 | 법원개혁 | 무작위사건배당 | 16 |
| 44 | 지방의회 | 지방의회 다양화 | 16 |
| 46 | 경제민주주의 | 토지공개념 | 15 |
| 46 | 기본권 | 정보기본권 | 15 |
| 46 | 치안 | 지능범죄 | 15 |
| 49 |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 14 |
| 49 | 경찰개혁 | 경찰대 폐지 | 14 |
| 49 | 균형발전 | 행정수도 이전 | 14 |
| 49 | 경제민주주의 | 사회적경제 | 14 |
| 53 | 경제민주주의 | 소비자보호 | 13 |
| 54 | 국회개혁 | 불체포특권 | 12 |
| 55 | 선거제도 개혁 | 선거공영제 | 11 |
| 55 | 치안 | 코로나19 관련 위법 | 11 |
| 57 | 선거제도 개혁 | 여성대표성 | 10 |
| 58 | 지방의회 | 사무직 인사권 | 9 |
| 59 | 재난안전 | 총체적 지역접근 | 7 |
| 60 | 정당개혁 | 예비후보자제 | 6 |
| 61 | 치안 | 데이트 폭력 | 5 |
| 62 | 선거제도 개혁 | 투표시간 | 2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정당개혁 - 예비후보자제 ?
- 선거제도 개혁- 청년대표성
- 정당개혁- 공천제도, 기본권-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 메가시티) 활성화 문제, 지역정당 허용 문제,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 2. 재정/경제/복지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기술보호 | 43 |
| 2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42 |
| 3 | 기업 과세 | 법인세율 | 40 |
| 3 | 포용적 재정운영 | 균형발전예산 | 40 |
| 3 | 연금 | 국민연금 개혁 | 40 |
| 3 | 아동/육아 | 보육서비스 | 40 |
| 7 | 소상공인지원 | 코로나관련 지원 | 39 |
| 8 | 재정 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 34 |
| 8 | 재정 건전화 | 통합재정수지 | 34 |
| 8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34 |
| 8 |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 | 34 |
| 8 | 지역공동체활성화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34 |
| 13 | 재벌규제 | 일감몰아주기 | 33 |
| 13 | 연금 | 기초연금 | 33 |
| 13 | 아동/육아 | 육아휴직 | 33 |
| 13 | 지역공동체활성화 | 취약계층 금융지원 | 33 |
| 17 | 아동/육아 | 법률 정비 | 32 |
| 18 | 재정 효율화 방안 | 조세탈루억제 | 31 |
| 18 | 사회적기업지원 | 기업활성화 | 31 |
| 18 | 사회적기업지원 | 지역사회 확산 | 31 |
| 21 | 조세정책기조 | 공평과세 | 30 |
| 21 | 기업 과세 | 일감몰아주기과세 | 30 |
| 21 | 개인 과세 | 부유세 | 30 |
| 21 | 소상공인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 30 |
| 25 | 개인 과세 | 상속·증여세 | 28 |
| 26 | 조세정책기조 | 증세논쟁 | 27 |
| 26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집단소송제 | 27 |
| 26 | 사회적경제제도 | 기금조성 | 27 |
| 29 | 재벌규제 | 금산분리 | 26 |
| 29 | 사회적경제제도 | 교육과정 확대 | 26 |
| 31 | 조세정책기조 | 조세부담율 | 24 |
| 31 | 재정 효율화 방안 | 세출개혁 | 24 |
| 33 | 재정 효율화 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 23 |
| 33 | 소상공인지원 | 사회안전망 | 23 |
| 33 | 소득보장 | 기본소득 | 23 |
| 33 | 지역공동체활성화 | 도시재생 | 23 |
| 37 | 사회적기업지원 | 판로지원 | 22 |
| 38 | 개인 과세 | 금융과세 | 21 |
| 39 | 아동/육아 | 아동수당 | 19 |
| 40 | 재정 건전화 | 재정준칙 법제화 | 18 |
| 41 | 소득보장 | 부(負)의 소득세 | 17 |
| 42 | 기업 과세 | 법인세공제 | 15 |
| 42 | 개인 과세 | 소득과세 | 15 |
| 42 | 소득보장 | 근로장려금 | 15 |

| | | | |
|---|---|---|---|
| 45 | 연금 | 직역연금개혁 | 13 |
| 46 | 조세정책기조 | 직·간접세비율 | 12 |
| 46 | 재정 효율화 방안 | 국유자산관리 | 12 |
| 48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11 |
| 49 |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 | 공공조달 | 10 |
| 50 | 포용적 재정운영 | 국민참여예산 | 8 |
| 51 | 소득보장 | 기초자산 | 5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
| 없음 |

## 3. 국방/통일/외교통상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재외국민 | 재외국민보호 | 42 |
| 2 | 개발협력 | ODA(공적개발원조) | 36 |
| 2 | 환경기준강화 | EU 탄소배출 강화 | 36 |
| 4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35 |
| 4 | GVC 재편 | 기술패권경쟁 | 35 |
| 6 | 남북경협 | 개성공단 | 34 |
| 7 | 공공외교 | K-pop/한류 | 33 |
| 8 | 다자외교 | 다자안보협력 | 32 |
| 9 | 비핵화 | 비핵화 프로세스 | 31 |
| 9 | 개발협력 | 다자개발협력 | 31 |
| 11 | 미중무역갈등 | 반도체 경쟁 | 30 |
| 12 | 북핵문제 | 한미동맹 | 29 |
| 12 | 사이버안보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29 |
| 12 | 한일관계 | 위안부/강제징용 | 29 |
| 15 |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대화 | 28 |
| 15 | 종전선언 | 정전협정/체제 | 28 |
| 15 | 공공외교 | 문화외교 | 28 |
| 18 | GVC 재편 | 디커플링(탈중국화) | 27 |
| 19 | 한반도 평화체제 | 평화프로세스 | 26 |
| 19 | K-방산 | 기술국산화 | 26 |
| 19 | 한중관계 | 미중패권경쟁 | 26 |
| 22 | 국방개혁 | 군처우개선(군인권) | 25 |
| 23 | 남북교류협력 | 이산가족 | 24 |
| 23 | 남북교류협력 | 남북철도연결 | 24 |
| 23 | 공공외교 | 국가브랜드 | 24 |
| 23 | 무역장벽확대 | 환경규제 | 24 |
| 27 | 자주국방 | 방위산업 육성 | 23 |
| 27 | 한미동맹 | 전시작전권환수 | 23 |
| 27 | 한미동맹 | 주한미군 지위협정 | 23 |
| 27 | 한일관계 | 후쿠시마 오염수 | 23 |
| 27 | 환경기준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 | 23 |
| 27 | 자유무역협정 | 동아시아FTA | 23 |
| 27 | 자유무역협정 | RCEP/CPTPP | 23 |
| 34 | 국방개혁 | 방산비리개혁 | 22 |
| 35 | 남북경협 | 남북교역 | 21 |
| 35 | 자주국방 | 전시작전권 환수 | 21 |
| 35 | 미중무역갈등 | 보호무역 | 21 |
| 35 |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 | 21 |
| 35 | 다자외교 | 중견국외교(믹타) | 21 |
| 40 | 통일인식 | 통일교육 | 20 |
| 40 | 사이버안보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20 |
| 40 | 한미동맹 | 한미연합훈련 | 20 |
| 40 | 개발협력 | 인도적 지원 | 20 |
| 40 | 디지털무역(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0 |

| | | | |
|---|---|---|---|
| 40 | 다자외교 | 신남방/신북방정책 | 20 |
| 46 | 남북교류협력 | 생태계 복원/DMZ | 19 |
| 46 | K-방산 | 우주산업/개발 | 19 |
| 46 | 한중관계 | 북한문제 | 19 |
| 46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세 | 19 |
| 46 | 미중무역갈등 | 수출입규제 | 19 |
| 46 | 자유무역협정 | 한중FTA | 19 |
| 52 | 국방개혁 | 징병제/모병제 | 18 |
| 52 | 북핵문제 | 미중협력/미중관계 | 18 |
| 52 | 재외국민 | 재외국민선거 | 18 |
| 52 | 다자외교 | 동북아 지역 안보 | 18 |
| 56 | 비핵화 | C1ID/P1ID | 17 |
| 56 | 북핵문제 | 북미회담 | 17 |
| 56 | 한일관계 | 역사문제 | 17 |
| 56 | 디지털무역(DEPA)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7 |
| 56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무역협정 | 17 |
| 61 | 비핵화 | 6자회담 | 16 |
| 61 | 남북경협 | 금강산관광 | 16 |
| 61 | 통일인식 | 북한이탈자주민 | 16 |
| 61 | 한중관계 | 사드갈등 | 16 |
| 61 | 미중무역갈등 | 신남방정책 | 16 |
| 66 | 한반도 평화체제 | 북미대화 | 15 |
| 66 |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미정상회담 | 15 |
| 66 | 통일인식 | 평화인식 | 15 |
| 66 | K-방산 | 차세대 전투기 | 15 |
| 66 | 환경기준강화 | 유럽 그린딜 | 15 |
| 66 | 환경기준강화 | USMCA 환경기준 강화 | 15 |
| 66 | 무역장벽확대 | 기술규제 | 15 |
| 73 | 비핵화 | 대북제재 | 14 |
| 73 | K-방산 | 방산수출 | 14 |
| 73 | 사이버안보 | 사이버 보안 | 14 |
| 73 | 한중관계 | 반중여론 | 14 |
| 73 | 한일관계 | 정상회담 | 14 |
| 73 | 무역장벽확대 | 비관세규제 | 14 |
| 79 | 자주국방 | KAMD/Kill-chain | 13 |
| 79 | 사이버안보 | 사이버공격 대응 | 13 |
| 79 | GVC 재편 | 디지털 전환 | 13 |
| 82 | 통일인식 | 북한인권 | 12 |
| 82 | 한중관계 | 문화공정 | 12 |
| 82 | 한일관계 | GSOMIA | 12 |
| 82 | 재외국민 | 한상네트워크 | 12 |
| 86 | 통일인식 | 대북인식 | 11 |
| 86 | 자주국방 | 주한미군 | 11 |
| 86 | 한미동맹 | 쿼드 | 11 |
| 86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1 |
| 86 | 재외국민 | 재외동포 | 11 |
| 86 | 무역장벽확대 | 무역기술장벽 | 11 |
| 86 | 무역장벽확대 | 수출입규제 | 11 |
| 93 | 남북경협 | 경제특구 | 10 |

| | | | |
|---|---|---|---|
| 93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통화 | 10 |
| 95 | 종전선언 | 9.19 군사합의 | 9 |
| 95 | 통일인식 | 통일여론 | 9 |
| 95 | 한미동맹 | 한미미사일지침 | 9 |
| 98 | 남북교류협력 | 스포츠교류/단일팀 | 8 |
| 98 | 국방개혁 | 군사법제도개혁 | 8 |
| 98 | 북핵문제 | 한미일 안보협력 | 8 |
| 98 | 자주국방 | KF-X 프로젝트 | 8 |
| 98 | 한중관계 | 한중FTA | 8 |
| 98 | GVC 재편 | G1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8 |
| 104 | 남북교류협력 | 국군포로 | 7 |
| 104 | K-방산 | 민군융합 | 7 |
| 104 | 사이버안보 | 북한 사이버 공격 | 7 |
| 104 | 재외국민 | 출입국 편의 | 7 |
| 104 | 미중무역갈등 | 환율변동 | 7 |
| 109 | 국방개혁 | 국방문민화 | 6 |
| 109 | 자주국방 | 미사일주권 | 6 |
| 111 | 한미동맹 | 미군기지 반환 | 5 |
| 111 | GVC 재편 | 반중국 무역연합 | 5 |
| 113 | 비핵화 | 주한미군철수 | 4 |
| 113 | 종전선언 | 판문점선언 | 4 |
| 113 | 종전선언 | 주한미군 철수 | 4 |
| 113 | 북핵문제 | 핵우산 | 4 |
| 113 | 북핵문제 | THAAD/사드 | 4 |
| 113 | 개발협력 | 유무상원조 | 4 |
| 119 | 국방개혁 | 여군확대 | 3 |
| 119 | 북핵문제 | 전술핵배치 | 3 |
| 119 | 한미동맹 | 주한미군감축 | 3 |
| 122 | 남북교류협력 | 유해발굴 | 2 |
| 122 | 남북경협 | 위탁가공 | 2 |
| 122 | 공공외교 | 스포츠외교 | 2 |
| 125 | 한반도 평화체제 | 9.19 공동성명 | 1 |
| 125 | 국방개혁 | 예비군/동원훈련 | 1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예시: 정책 이슈 - 그 외 키워드) |
|---|
| 없음 |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중소 및 벤처기업지원 | 고용지원 | 39 |
| 2 | 주거안전 | 공공임대주택 | 38 |
| 2 | 가축전염병 | 가축 방역 | 38 |
| 4 | 제조업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36 |
| 4 | 스마트농업 | 식품 R&D | 36 |
| 6 | 교통인프라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35 |
| 7 | 농식품 안전 | 축산물안전인증제 | 34 |
| 7 | 스마트농업 | 스마트팜 | 34 |
| 9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33 |
| 9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농산물 수급안정 | 33 |
| 11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32 |
| 11 | 주거안전 | 도심 재건축 | 32 |
| 13 | 중소 및 벤처기업지원 | 창업지원 | 31 |
| 13 | 건설산업지원 | 하도급규제 | 31 |
| 15 | 신재생에너지 | 탄소중립 | 30 |
| 16 | 건설산업지원 | 공정건설계약 | 29 |
| 17 | 농식품 안전 | 농산물위생검사 | 28 |
| 18 | 농식품 안전 | 축산물이력관리 | 26 |
| 19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임대차규제 | 25 |
| 20 | 제조업지원 | 부품소재 국산화 | 24 |
| 20 | 가축전염병 | 동식물검역 | 24 |
| 22 | 교통인프라 | 수도권 GTX 확충 | 23 |
| 22 | 건설산업지원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23 |
| 24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자연재난시 농가구호 | 21 |
| 25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거래세 | 19 |
| 25 | 교통인프라 | 철도교통 확충 | 19 |
| 27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농가 직불제 | 18 |
| 28 | 제조업지원 | 혁신 클러스터 | 17 |
| 28 | 신재생에너지 | 저탄소 산업 육성 | 17 |
| 28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농산물 가격보존 | 17 |
| 31 | 주거안전 | 주거비 지원 | 15 |
| 31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대출규제 | 15 |
| 31 | 가축전염병 | 살처분보상 | 15 |
| 34 | 신재생에너지 | 탈원전 | 13 |
| 35 | 중소 및 벤처기업지원 | 수출지원 | 12 |
| 35 | 가축전염병 | 가축백신지원 | 12 |
| 37 | 제조업지원 | 스마트공장 | 10 |
| 37 | 중소 및 벤처기업지원 | 물류유통지원 | 10 |
| 39 | 교통인프라 | 고속도로 지하화 | 9 |
| 40 | 스마트농업 | 식품수출단지 | 8 |
| 41 | 주거안전 | 신도시건설 | 7 |
| 41 | 건설산업지원 | 해외시장진출지원 | 7 |
| 41 | 스마트농업 | 식품테마파크 | 7 |
| 44 | 교통인프라 | 공항 및 항만 확충 | 4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 --- |
| • 주거안정- 1인 가구 최저주거 기준 상향 |

## 5. 교육/인적자원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교육거버넌스 | 교육부 | 36 |
| 2 | 노인 주거/교통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34 |
| 3 | 젠더 갈등 | 성차별 인식 격차 | 33 |
| 3 | 여성 안전 | 디지털성범죄 | 33 |
| 5 | 대학교육 | 대학구조조정 | 32 |
| 5 | 초중등교육 | 사교육비 경감 | 32 |
| 5 | 교육 인프라 | 학교인프라 개선 | 32 |
| 5 | 노인일자리 | 취업지원제도 | 32 |
| 5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32 |
| 10 | 노인일자리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31 |
| 11 | 교육 인프라 | 교원양성체계 개편 | 30 |
| 11 | 노동 현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30 |
| 11 | 청년 주거 | 청년공공주택 | 30 |
| 11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30 |
| 11 | 노인 여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 16 | 대학교육 | 입시개혁 | 29 |
| 17 | 청년 일자리 | 공정채용 | 28 |
| 17 | 저출산 | 출산휴가 | 28 |
| 19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27 |
| 19 | 초중등교육 | 민주시민교육 | 27 |
| 19 | 젠더 갈등 | 여성가족부 | 27 |
| 19 | 노인 주거/교통 | 맞춤형 공동주택 | 27 |
| 19 | 노후 보장(고령화) | 국민연금강화 | 27 |
| 24 | 여성고용 | 경력단절여성 | 26 |
| 25 | 청년 일자리 | 비정규직 감소 | 25 |
| 25 | 청년 주거 | 주거금융 지원 | 25 |
| 27 | 돌봄 | 돌봄교실 | 24 |
| 27 | 여성 건강 | 분만인프라 구축 | 24 |
| 27 | 노인 주거/교통 | 영구임대주택 | 24 |
| 27 | 노인 여가 | 존엄한 죽음 | 24 |
| 31 | 교육 인프라 | 안전한 학교 | 23 |
| 31 | 여성고용 | 성별 임금격차 | 23 |
| 31 | 여성고용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3 |
| 31 | 노인 돌봄 | 치매 | 23 |
| 31 | 노후 보장(고령화) | 기초연금액 인상 | 23 |
| 36 | 교육거버넌스 | 시도교육청 | 22 |
| 36 | 노동 현안 | 직업훈련 강화 | 22 |
| 36 | 젠더 갈등 | 젠더폭력 | 22 |
| 39 | 초중등교육 | 자사고/특목고 | 21 |
| 39 | 청년 복지 | 학자금 대출 | 21 |
| 39 | 청년 복지 | 청년실업부조 | 21 |
| 39 | 청년 주거 | 1인 가구 | 21 |
| 39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여성가족부 | 21 |
| 39 | 노인 돌봄 | 의료비 부담 경감 | 21 |

| | | | |
|---|---|---|---|
| 39 | 노후 보장(고령화) | 정년연장 | 21 |
| 46 | 노동자 안전망 | 근로감독 강화 | 20 |
| 46 | 청년 복지 | 청년구직수당 | 20 |
| 46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성평등위원회 | 20 |
| 49 | 청년 일자리 | 지역인재채용 | 19 |
| 49 | 여성 안전 | 폭력예방교육 | 19 |
| 49 | 노인 돌봄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19 |
| 52 | 청년 복지 | 최저임금 | 18 |
| 52 | 여성 대표성/성평등 | 비례대표제 | 18 |
| 54 | 교육거버넌스 | 국가교육위원회 | 17 |
| 54 | 여성고용 | 취약계층여성 | 17 |
| 54 | 노인일자리 | 정부사업 일자리 | 17 |
| 54 | 노동자 안전망 | 노동시간 단축 | 17 |
| 54 | 여성 건강 | 생리대 지원 | 17 |
| 54 | 노인 여가 | 노인생활체육 | 17 |
| 60 | 돌봄 | 보육교사 | 16 |
| 60 | 노인 돌봄 | 국공립요양시설 | 16 |
| 62 | 돌봄 | 유연근무제 | 15 |
| 62 | 노동 현안 | 고용유연화 | 15 |
| 62 | 노동 현안 | 연공서열제 개혁 | 15 |
| 62 | 여성 안전 | CCTV | 15 |
| 62 | 여성 건강 | 여성 관련 암 예방 | 15 |
| 62 | 노인 여가 | 평생교육 | 15 |
| 68 | 대학교육 | 국립대 육성 | 14 |
| 68 | 청년 주거 | 신혼부부 | 14 |
| 70 | 청년 일자리 | 창업지원 | 13 |
| 70 | 젠더 갈등 | 여성할당제 | 13 |
| 70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여성관리자 | 13 |
| 70 | 노후 보장(고령화) | 퇴직연금강화 | 13 |
| 74 | 노동자 안전망 | 실업급여 확대 | 12 |
| 74 | 노동자 안전망 | 최저임금 인상 | 12 |
| 74 | 여성 안전 | 안심귀가서비스 | 12 |
| 74 | 저출산 | 난임시술비 지원 | 12 |
| 78 | 교육거버넌스 | 전교조 | 11 |
| 78 | 청년 복지 | 대학등록금 | 11 |
| 78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11 |
| 81 | 돌봄 | 아동수당 | 10 |
| 81 | 대학교육 | 4차산업혁명 | 10 |
| 81 | 여성 안전 | 성매매 | 10 |
| 81 | 저출산 | 다자녀 장학금 | 10 |
| 81 | 노인 돌봄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10 |
| 86 | 청년 일자리 | 청년고용할당 | 9 |
| 87 | 대학교육 | 국가장학금 확대 | 8 |
| 87 | 초중등교육 | 학제개편 | 8 |
| 87 | 교육 인프라 | 각종 고시 부활 | 8 |
| 87 | 노인일자리 | 자영업 지원 | 8 |
| 91 | 교육거버넌스 | 교육감 선거 | 7 |
| 91 | 노동 현안 | 노동이사제 | 7 |
| 91 | 젠더 갈등 | 군복무 | 7 |

| | | | |
|---|---|---|---|
| 94 | 노후 보장(고령화)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 |
| 95 | 초중등교육 | 혁신학교 | 5 |
| 95 | 노인일자리 | 수당인상 | 5 |
| 95 | 노인 주거/교통 | 농어촌 공영택시 | 5 |
| 95 | 노인 여가 | 경로당 개편 | 5 |
| 99 | 여성 건강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4 |
| 100 | 청년 주거 | 대학 기숙사 | 3 |
| 101 | 여성고용 | 비정규직 여성 | 2 |
| 101 | 저출산 | 산후조리비용 | 2 |
| 103 | 노인 주거/교통 | 무상교통 | 1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
| • 노인돌봄 -> 지역돌봄체제(community care)<br>• 여성안전 -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제 폐지),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br>• 여성건강 - 자궁경부암 국가책임제 |

## 6. 문화/체육/관광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스포츠 외교 | 스포츠 교류협력 | 44 |
| 2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43 |
| 2 | 국내관광 | 로컬관광 | 43 |
| 4 | 문화시민 | 문화인프라 확충 | 42 |
| 5 | 생활스포츠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 41 |
| 6 | 국제관광 | K-관광 콘텐츠 개발 | 40 |
| 7 | 국내관광 | 교통숙박 연계 관광 | 38 |
| 8 | 문화경제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37 |
| 9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34 |
| 10 | 문화사회 | 지역문화 발전 | 33 |
| 10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33 |
| 12 | 포털개혁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32 |
| 13 | 문화경제 | K-콘텐츠산업 진흥 | 31 |
| 14 | 문화외교 | 국제 문화교류 | 30 |
| 14 | 포털개혁 | 알고리즘 공개 | 30 |
| 16 | 스포츠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29 |
| 17 | 생활스포츠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28 |
| 17 | 스포츠경제 | 융복합 사업화 | 28 |
| 17 | 스포츠경제 | 지역·사회적 자본화 | 28 |
| 17 | 산업관광 | 의료관광 | 28 |
| 21 | 문화외교 | 신한류 확산 | 26 |
| 21 | 문화외교 | 전통문화 계승·홍보 | 26 |
| 21 | 방송개혁 | 광고운영 규제 | 26 |
| 21 | 스포츠 외교 | 스포츠 한류 | 26 |
| 25 | 산업관광 | 4차산업 체험관광 | 25 |
| 26 | 언론개혁 | 언론중재법 | 24 |
| 27 | 문화시민 | 문화소비 지원 강화 | 22 |
| 28 | 문화시민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21 |
| 29 | 방송개혁 | 방송수신료제 | 20 |
| 29 | 생활스포츠 | 지역체육 공동체화 | 20 |
| 29 | 산업관광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20 |
| 32 | 문화사회 | 비대면 문화화 | 19 |
| 33 | 문화경제 | 저작권 확충 | 18 |
| 33 | 언론개혁 | 징벌적 손배 | 18 |
| 33 | 국제관광 | 방역 인프라 | 18 |
| 33 | 국제관광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18 |
| 37 | 포털개혁 | 댓글 실명제 | 14 |
| 38 | 포털개혁 | 아웃링크 도입 | 13 |
| 38 | 스포츠 외교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13 |
| 38 | 국제관광 | 국제행사 유치 | 13 |
| 41 | 산업관광 | 교육관광 | 11 |
| 42 | 언론개혁 | 편집권 독립 | 9 |
| 43 | 국내관광 | 안보관광 자원개발 | 6 |
| 44 | 언론개혁 | 지역언론 지원 | 5 |

| | | | |
|---|---|---|---|
| 45 | 언론개혁 | 미디어바우처제 | 2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
| 없음 |

## 7. 과학기술/정보통신/공중보건/환경

| 순위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 1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42 |
| 2 | 지식재산 | 핵심/원천기술 | 34 |
| 2 | 기후변화/위기 | 지구온난화 | 34 |
| 4 | 기초/기반연구 | 생명과학 | 33 |
| 5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AI) | 30 |
| 5 | SW/인공지능(AI) | 융합적 사고력 | 30 |
| 5 | 자원순환 | 폐기물 재활용 | 30 |
| 5 | 그린뉴딜 | 신재생에너지 | 30 |
| 9 | SW/인공지능(AI) | 교육 및 인력양성 | 29 |
| 9 | R&D | 자율성확대 | 29 |
| 9 | 질병관리 | 감염병예방 | 29 |
| 12 | 코로나20 | 백신접종 | 28 |
| 12 |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 | 28 |
| 14 | 의료개혁 | 의료법개정 | 27 |
| 15 | 디지털뉴딜 | 디지털 격차해소 | 26 |
| 15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26 |
| 15 | 해양/수자원 | 해양생태계 | 26 |
| 15 | 해양/수자원 | 해양오염 | 26 |
| 19 | 디지털경제 | 디지털화폐 | 25 |
| 19 | 공공의료 | 공공병원 | 25 |
| 19 | 기후변화/위기 | 탄소중립 | 25 |
| 19 | 기후변화/위기 | 지속가능발전 | 25 |
| 23 | R&D | 연구개발비 | 24 |
| 23 | 디지털경제 | 디지털커머스 | 24 |
| 23 | 코로나19 | 방역/K-방역 | 24 |
| 26 | 공공의료 | 지방의료원육성 | 23 |
| 27 | 지식재산 | 기술보호/활용 | 22 |
| 27 | 기초/기반연구 | ICT/융합 | 22 |
| 27 | 디지털무역(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2 |
| 27 | 디지털경제 | 데이터경제 | 22 |
| 27 | 질병관리 | 국가검진사업 | 22 |
| 27 | 자원순환 | 미세플라스틱 | 22 |
| 33 | R&D | 민관협력/투자확대 | 21 |
| 33 | 의료개혁 | 수술실 CCT1 | 21 |
| 33 | 의료개혁 | 의료권력 | 21 |
| 33 | 건강보험 | 재정적자 | 21 |
| 33 | 대기오염 | (중국발) 황사 | 21 |
| 38 | 그린뉴딜 | 탄소중립 | 20 |
| 38 | 해양/수자원 | 해양폐기물 | 20 |
| 40 | 5차산업혁명 | 빅데이터 | 19 |
| 40 | 의료개혁 | 의료수가 | 19 |
| 42 | 지식재산 | 혁신기술 | 18 |
| 42 | 디지털뉴딜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18 |
| 42 | 코로나23 | 백신생산 | 18 |

| | | | |
|---|---|---|---|
| 45 | SW/인공지능(AI) | 인공지능 윤리 | 17 |
| 45 | 정보보호 | 보이스피싱 | 17 |
| 45 | 정보보호 | 개인정보유출 | 17 |
| 48 | 디지털뉴딜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16 |
| 48 | 공공의료 | 공공의대 | 16 |
| 48 | 질병관리 | 의료비지원 | 16 |
| 48 | 건강보험 | 보험료 인상 | 16 |
| 48 | 건강보험 | 임신/출산비지원 | 16 |
| 53 | 디지털무역(DEPA)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5 |
| 53 | 정보보호 | 데이터보호 | 15 |
| 53 | 코로나22 | 백신주권 | 15 |
| 56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무역협정 | 14 |
| 56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4 |
| 56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14 |
| 56 | 질병관리 | 예방접종 | 14 |
| 56 | 해양/수자원 | 상/하수도 | 14 |
| 61 | 기초/기반연구 | 컴퓨팅 인프라 | 13 |
| 61 | 기초/기반연구 | 항공우주 | 13 |
| 61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세 | 13 |
| 61 | 자원순환 | 폐기물부담금 | 13 |
| 61 | 그린뉴딜 | 녹색산업 | 13 |
| 61 | 대기오염 | 한중협력 | 13 |
| 67 | 기초/기반연구 | 의약학 | 12 |
| 67 | 디지털경제 | 핀테크 | 12 |
| 67 | 대기오염 | 저감조치 | 12 |
| 70 | 지식재산 | 국제표준화 | 11 |
| 70 | 6차산업혁명 | 블록체인 | 11 |
| 70 | SW/인공지능(AI) | 코딩교육 | 11 |
| 70 | 디지털뉴딜 | 메타버스 | 11 |
| 70 | 디지털뉴딜 | 비대면산업 | 11 |
| 70 | 공공의료 | 의료질 | 11 |
| 70 | 자원순환 | 업사이클링 | 11 |
| 77 | 8차산업혁명 | 규제혁신 | 10 |
| 77 | 9차산업혁명 | 디지털혁신 | 10 |
| 77 | 디지털무역(DEPA) | 디지털 통화 | 10 |
| 77 | 공공의료 | 과잉진료/과소진료 | 10 |
| 77 | 질병관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 10 |
| 77 | 건강보험 | 문재인 케어 | 10 |
| 83 | 디지털뉴딜 | 지능형 정부 | 9 |
| 83 | 자원순환 | 순환센터 | 9 |
| 83 | 그린뉴딜 | 순환경제 | 9 |
| 83 | 그린뉴딜 | 수소경제 | 9 |
| 87 | 10차산업혁명 | 일자리미래 | 8 |
| 87 | R&D | 연구윤리 | 8 |
| 89 | 지식재산 | 영업비밀/특허침해 | 7 |
| 89 | 7차산업혁명 | 미래차 | 7 |
| 89 | 공공의료 | 의대정원 | 7 |
| 92 | 디지털경제 | 구독경제 | 6 |
| 92 | 자원순환 | 제로웨이스트 | 6 |

| | | | |
|---|---|---|---|
| 92 | 그린뉴딜 | 도시숲 | 6 |
| 92 | 해양/수자원 | 지하수 | 6 |
| 96 | SW/인공지능(AI)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 |
| 96 | 코로나21 | 백신여권 | 5 |
| 96 | 코로나24 | 거리두기 | 5 |
| 96 | 그린뉴딜 | 스마트그리드 | 5 |
| 100 | R&D | 국방R&D | 4 |
| 100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 |
| 100 | 의료개혁 | 의료파업 | 4 |
| 100 | 기후변화/위기 | 탄소배출권 | 4 |
| 104 | R&D | 지역/관료주도형R&D | 3 |
| 104 | 기후변화/위기 | 화석연료 | 3 |
| 106 | 지식재산 | 특허 부가가치 | 2 |
| 106 | 기초/기반연구 | 공학 | 2 |
| 106 | R&D | 기술규제 | 2 |
| 106 | R&D | 예비타당성 | 2 |
| 106 | 디지털뉴딜 | 5G 고속도로 | 2 |
| 106 | 대기오염 | 산성비 | 2 |
| 112 | 대기오염 | 저녹스보일러 | 1 |
| 113 | SW/인공지능(AI) | 특허권 | 0 |
| 113 | 기후변화/위기 | 탄소국경세 | 0 |

| 제시된 키워드 외에 추가 기타 항목 |
|---|
|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중복여지<br>•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중복 |

부록 3.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 이슈와 키워드 발굴에 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진행하는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을 정리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결과와 함께 제시된 **정책 영역과 키워드들 중 중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약 250개 키워드는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 정당 및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책의제로 활용**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09월 30일(수)까지 답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하여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 09. 24.

한국정당학회

연구책임자 :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문의처: aaabic@naver.com (연구보조원 정다빈)

**<질문 1>**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영역에 우선순위를 모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정책 영역 | 1차조사 응답 순위 | 우선순위 표기 |
|---|---|---|---|
| 1 | 정치/행정/사법 | 2 | |
| 2 | 재정/경제 | 1 | |
| 3 | 국방/통일/외교통상 | 4 | |
| 4 | 산업자원/건설교통 | 6 | |
| 5 | 교육/인적자원 | 5 | |
| 6 | 문화/체육/관광 | 7 |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 | 3 | |
| 8 | 보건의료/환경 | 3 | |

**<질문 2>**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이슈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초과하여 선택 시 무효 처리)**

| 정책영역 | 연번 | 정책 이슈 | 1차 조사 응답 빈도 | 중요 항목 표기(∨) |
|---|---|---|---|---|
| 정치/행정/사법 | 1 | 정치개혁 | 39 | |
| | 2 | 사법개혁 | 24 | |
| | 3 | 지방자치 | 15 | |
| | 4 | 개헌 | 14 | |
| | 5 | 사회안전 | 8 | |
| 재정/경제/복지 | 1 | 사회복지 | 26 | |
| | 2 | 조세 | 22 | |
| | 3 | 재정 | 16 | |
| | 4 | 공정거래 | 31 | |
| | 5 | 사회적경제 | 7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외교/안보 | 34 | |
| | 2 | 통일 및 남북관계 | 32 | |
| | 3 | 국방 | 16 | |
| | 4 | 통상 | 15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산업자원(에너지) | 46 | |
| | 2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45 | |
| | 3 | 농업해양수산 | 6 | |
| 교육/인적자원 | 1 | 노동(고용 및 일자리) | 37 | |
| | 2 | 교육 | 27 | |
| | 3 | 노인/고령화 | 20 | |
| | 4 | 청년/여성 | 13 | |
| 문화/체육/관광 | 1 | 언론 및 방송 | 43 | |
| | 2 | 문화 | 34 | |
| | 3 | 관광 | 14 | |
| | 4 | 스포츠 | 2 | |
| 과학기술/정보통신 | 1 | 과학기술 | 29 | |
| | 2 | 정보통신 | 17 | |
| | 3 | 연구환경 | - | |
| | 4 | 기타 ( ) | | |
| 보건의료/환경 | 1 | 환경 | 34 | |
| | 2 | 공중보건 | 20 | |
| | 3 | 의료 | - | |
| | 4 | 기타 ( ) | | |

**<질문 3>**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키워드 5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를 초과하여 선택 시 무효 처리)**

| 정책이슈 | 연번 | 키워드 | 1차 조사 응답 빈도 | 중요 항목 표기(∨) |
|---|---|---|---|---|
| 정치/행정/사법 | 1 | 선거제도 개혁 | 36 | |
| | 2 | 지방균형발전 | 33 | |
| | 3 | 검찰개혁 | 27 | |
| | 4 | 국회개혁 | 26 | |
| | 5 | 권력구조 개헌 | 20 | |
| | 6 | 정당개혁 | 18 | |
| | 7 | 법원개혁 | 18 | |
| | 8 | 재난안전 | 15 | |
| | 9 | 경제민주주의 | 14 | |
| | 10 | 지방정부 | 11 | |
| | 11 | 경찰개혁 | 10 | |
| | 12 | 지방의회 | 10 | |
| | 13 | 기본권 개헌 | 6 | |
| | 14 | 직접민주주의 | 2 | |
| | 15 | 치안 | 2 | |
| | 16 | 교통안전 | 2 | |

| | | | | |
|---|---|---|---|---|
| 재정/경제/복지 | 1 | 조세정책 기조 | 29 | |
| | 2 | 연금 | 26 | |
| | 3 | 아동/육아 | 26 | |
| | 4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25 | |
| | 5 | 재정 건전화 | 22 | |
| | 6 | 소상공인 지원 | 19 | |
| | 7 | 재벌규제 | 17 | |
| | 8 | 재정 효율화 방안 | 16 | |
| | 9 | 기업 과세 | 15 | |
| | 10 | 소득보장 | 13 | |
| | 11 | 사회적경제 제도 | 11 | |
| | 12 | 포용적 재정 운영 | 10 | |
| | 13 | 개인 과세 | 9 | |
| | 14 | 지역공동체 활성화 | 8 | |
| | 15 | 사회적기업지원 | 3 | |
| | 16 | 교통안전 | 2 | |

| 정책이슈 | 연번 | 키워드 | 1차 조사 응답 빈도 | 중요 항목 표기(∨) |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한반도 평화체재 | 32 | |
| | 2 | 한미동맹 | 27 | |
| | 3 | 남북교류협력 | 23 | |
| | 4 | 국방개혁 | 22 | |
| | 5 | 한중관계 | 18 | |
| | 6 | 환경기준 강화 | 16 | |
| | 7 | 한일관계 | 15 | |
| | 8 | 북핵 문제 | 14 | |
| | 9 | 비핵화 | 13 | |
| | 10 | 미중무역갈등 | 11 | |
| | 11 | 사이버안보 | 10 | |
| | 12 | 다자외교 | 8 | |
| | 13 | 종전선언 | 7 | |
| | 14 | 자주국방 | 7 | |
| | 15 | 남북경협 | 5 | |
| | 16 | K-방산 | 4 | |
| | 17 | 공공외교 | 4 | |
| | 18 | 디지털 무역(DEPA) | 4 | |
| | 19 |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 4 | |
| | 20 | 통일인식 | 3 | |
| | 21 | 개발협력 | 3 | |
| | 22 | 자유무역협정 | 3 | |
| | 23 | 재외국민 | 1 | |
| | 24 | 무역장벽확대 | 0 | |

| | | |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주거 안정 | 46 | |
| | 2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43 | |
| | 3 | 신재생에너지 | 41 | |
| | 4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35 | |
| | 5 | 제조업지원 | 24 | |
| | 6 | 농식품 안전 | 20 | |
| | 7 | 교통 인프라 | 13 | |
| | 8 | 가축전염병 | 7 | |
| | 9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6 | |
| | 10 | 스마트농업 | 5 | |
| | 11 | 건설산업지원 | 1 | |

| 정책이슈 | 연번 | 키워드 | 1차 조사 응답 빈도 | 중요 항목 표기(∨) |
|---|---|---|---|---|
| 교육/인적자원 | 1 | 청년 일자리 | 33 | |
| | 2 | 저출산 | 30 | |
| | 3 | 돌봄 | 22 | |
| | 4 | 초중등교육 | 22 | |
| | 5 | 대학교육 | 21 | |
| | 6 | 노후 보장(고령화) | 21 | |
| | 7 | 노동자 안전망 | 19 | |
| | 8 | 젠더 갈등 | 18 | |
| | 9 | 청년 주거 | 10 | |
| | 10 | 청년 복지 | 9 | |
| | 11 | 교육 인프라 | 8 | |
| | 12 | 여성 고용 | 7 | |
| | 13 | 여성 대표성/성평등 | 7 | |
| | 14 | 노인 돌봄 | 7 | |
| | 15 | 교육 거버넌스 | 6 | |
| | 16 | 여성 안전 | 6 | |
| | 17 | 노인 일자리 | 4 | |
| | 18 | 노동 현안 | 4 | |
| | 19 | 노인 여가 | 1 | |
| | 20 | 여성 건강 | 0 | |
| | 21 | 노인 주거/교통 | 0 | |

| | | | | |
|---|---|---|---|---|
| 문화/체육/관광 | 1 | 언론개혁 | 44 | |
| | 2 | 방송개혁 | 41 | |
| | 3 | 포털개혁 | 35 | |
| | 4 | 국내관광 | 23 | |
| | 5 | 문화경제 | 19 | |
| | 6 | 문화외교 | 17 | |
| | 7 | 문화시민 | 14 | |
| | 8 | 생활 스포츠 | 14 | |
| | 9 | 문화사회 | 13 | |
| | 10 | 국제관광 | 7 | |
| | 11 | 산업관광 | 5 | |
| | 12 | 스포츠경제 | 3 | |
| | 13 | 스포츠외교 | 2 | |

| 정책이슈 | 연번 | 키워드 | 1차 조사 응답 빈도 | 중요 항목 표기(∨) |
|---|---|---|---|---|
| 과학기술/ 정보통신 | 1 | 4차산업혁명 | 24 | |
| | 2 | 기초/기반연구 | 17 | |
| | 3 | SW/인공지능(AI) | 14 | |
| | 4 | 정보보호 | 11 | |
| | 5 | 디지털경제 | 11 | |
| | 6 | R&D | 10 | |
| | 7 | 디지털뉴딜 | 5 | |
| | 8 | 지식재산 | 4 | |
| | 9 | 디지털무역(DEPA) | 2 | |

| | | | | |
|---|---|---|---|---|
| 보건의료/환경 | 1 | 기후변화/위기 | 34 | |
| | 2 | 코로나19 | 29 | |
| | 3 | 공공의료 | 25 | |
| | 4 | 건강보험 | 18 | |
| | 5 | 의료개혁 | 15 | |
| | 6 | 그린뉴딜 | 14 | |
| | 7 | 대기오염 | 11 | |
| | 8 | 질병관리 | 4 | |
| | 9 | 자원순환 | 4 | |
| | 10 | 해양/수자원 | 3 | |

**<질문 4>**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부 키워드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초과하여 선택 시 무효 처리)**

## 1. 정치/행정/사법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39 | |
| | 선거구획정 | 33 | |
| | 선거공영제 | 11 | |
| | 여성대표성 | 10 | |
| | 투표시간 | 2 | |
| | 사전선거운동 기간 | - | |
| | 표현의 자유 확대 | - | |
| 정당개혁 | 국고보조금개선 | 36 | |
| | 정치자금법 | 33 | |
| | 지구당복원 | 22 | |
| | 공천제도 | - | |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23 | |
| | 상시국정감사제 | 23 | |
| | 행정입법감독 | 21 | |
| | 국회국민청원 | 17 | |
| | 불체포특권 | 12 | |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44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37 | |
| | 검사장 직선제 | 14 | |
| 법원개혁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33 | |
| | 판결문 공개 | 28 | |
| | 국민참여재판 | 18 | |
| | 무작위사건배당 | 16 | |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38 | |
| | 정보수사 분리 | 38 | |
| | 경찰대 폐지 | 14 | |
| 권력구조 | 대통령 연임제 | 41 | |
| | 의원내각제 | 23 | |
| | 준대통령제 | 18 | |
| 기본권 | 안전에 대한 권리 | 24 | |
| | 생명권 | 18 | |
| | 정보기본권 | 15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직접 민주주의 | 국민소환제 | 33 | |
| | 주민투표제 강화 | 26 | |
| | 국민발안제 | 20 | |
| | 주민참여 예산제 | 17 | |
| 경제 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28 | |
| | 동반상생성장 | 24 | |
| | 토지공개념 | 15 | |
| | 사회적경제 | 14 | |
| | 소비자보호 | 13 |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41 | |
| | 지방정부 입법 | 31 | |
| | 지방정부 법제 | 18 | |
| | 지방행정체계 개편 | - | |
| 지방의회 | 정책역량 강화 | 43 | |
| | 구성원 전문성 | 26 | |
| | 지방의회 다양화 | 16 | |
| | 사무직 인사권 | 9 | |
| 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44 | |
| | 지역혁신 성장거점조성 | 37 | |
| | 행정수도 이전 | 14 | |
| 치안 | 아동 폭력 | 33 | |
| | 디지털 성범죄 | 29 | |
| | 지능범죄 | 15 | |
| | 코로나19 관련 위법 | 11 | |
| | 데이트 폭력 | 5 | |
| 교통안전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34 | |
| |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 | 31 | |
| | 스쿨존 교통안전 | 25 | |
| 재난안전 | 기후변화 | 38 | |
| | 위험방지체계 | 26 | |
| | 재난 불평등 | 26 | |
| | 총체적 지역접근 | 7 | |

## 2. 재정/경제/복지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조세정책 기조 | 공평과세 | 30 | |
| | 증세논쟁 | 27 | |
| | 조세부담율 | 24 | |
| | 직·간접세비율 | 12 | |
| 기업과세 | 법인세율 | 40 | |
| | 일감몰아주기과세 | 30 | |
| | 법인세공제 | 15 | |
| 개인과세 | 부유세 | 30 | |
| | 상속·증여세 | 28 | |
| | 금융과세 | 21 | |
| | 소득과세 | 15 | |
| 재정 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 34 | |
| | 통합재정수지 | 34 | |
| | 재정준칙 법제화 | 18 | |
| 재정 효율화 방안 | 조세탈루억제 | 31 | |
| | 세출개혁 | 24 | |
| | 예비타당성조사 | 23 | |
| | 국유자산관리 | 12 | |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42 | |
| | 균형발전예산 | 40 | |
| | 국민참여예산 | 8 | |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34 | |
| | 일감몰아주기 | 33 | |
| | 금산분리 | 26 | |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기술보호 | 43 | |
| | 집단소송제 | 27 | |
|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11 | |
| | 공공조달 | 10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관련 지원 | 39 | |
| | 지역상권 활성화 | 30 | |
| | 사회안전망 | 23 | |
|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 | 34 | |
| | 기본소득 | 23 | |
| | 부(負)의 소득세 | 17 | |
| | 근로장려금 | 15 | |
| | 기초자산 | 5 | |
| 연금 | 국민연금 개혁 | 40 | |
| | 기초연금 | 33 | |
| | 직역연금개혁 | 13 | |
| 아동/ 육아 | 보육서비스 | 40 | |
| | 육아휴직 | 33 | |
| | 아동수당 | 19 | |
| 사회적 경제제도 | 법률 정비 | 32 | |
| | 기금조성 | 27 | |
| | 교육과정 확대 | 26 | |
| | 공공부분 ESG원칙 도입 | - | |
| 사회적 기업지원 | 기업활성화 | 31 | |
| | 지역사회 확산 | 31 | |
| | 판로지원 | 22 | |
| | ESG관련 기업지원 강화 | - |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34 | |
| | 취약계층 금융지원 | 33 | |
| | 도시재생 | 23 | |

## 3. 국방/통일/외교통상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비핵화 | 비핵화 프로세스 | 31 | |
| | CVID/PVID[170] | 17 | |
| | 6자회담 | 16 | |
| | 대북제재 | 14 | |
| | 주한미군철수 | 4 | |
|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대화 | 28 | |
| | 평화프로세스 | 26 | |
| | 북미대화 | 15 | |
| | 남북미정상회담 | 15 | |
| | 9.19 공동성명 | 1 | |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35 | |
| | 정전협정/체제 | 28 | |
| | 9.19 군사합의 | 9 | |
| | 판문점선언 | 4 | |
| | 주한미군 철수 | 4 | |
| 남북 교류협력 | 이산가족 | 24 | |
| | 남북철도연결 | 24 | |
| | 생태계 복원/DMZ | 19 | |
| | 스포츠 교류/단일팀 | 8 | |
| | 국군포로 | 7 | |
| | 유해발굴 | 2 | |
| 남북경협 | 개성공단 | 34 | |
| | 남북교역 | 21 | |
| | 금강산관광 | 16 | |
| | 경제특구 | 10 | |
| | 위탁가공 | 2 | |
| 통일인식 | 통일교육 | 20 | |
| | 북한이탈자주민 | 16 | |
| | 평화인식 | 15 | |
| | 북한인권 | 12 | |
| | 대북인식 | 11 | |
| | 통일여론 | 9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국방개혁 | 군처우개선(군인권) | 25 | |
| | 방산비리개혁 | 22 | |
| | 징병제/모병제 | 18 | |
| | 군사법제도개혁 | 8 | |
| | 국방문민화 | 6 | |
| | 여군확대 | 3 | |
| | 예비군/동원훈련 | 1 | |
| 북핵문제 | 한미동맹 | 29 | |
| | 미중협력/미중관계 | 18 | |
| | 북미회담 | 17 | |
| | 한미일 안보협력 | 8 | |
| | 핵우산 | 4 | |
| | THAAD/사드 | 4 | |
| | 전술핵배치 | 3 | |
| 자주국방 | 방위산업 육성 | 23 | |
| | 전시작전권 환수 | 21 | |
| | KAMD/Kill-chain[171] | 13 | |
| | 주한미군 | 11 | |
| | KF-X 프로젝트 | 8 | |
| | 미사일주권 | 6 | |
| K-방산 | 기술국산화 | 26 | |
| | 우주산업/개발 | 19 | |
| | 차세대 전투기 | 15 | |
| | 방산수출 | 14 | |
| | 민군융합 | 7 | |
| 사이버 안보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29 | |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20 | |
| | 사이버 보안 | 14 | |
| | 사이버공격 대응 | 13 | |
| | 북한 사이버 공격 | 7 | |

170)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171)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ill-chain: 타격순환체계(공격형 방위 시스템)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한미동맹 | 전시작전권환수 | 23 | |
| | 주한미군 지위협정 | 23 | |
| | 한미연합훈련 | 20 | |
| | 쿼드 | 11 | |
| | 한미미사일지침 | 9 | |
| | 미군기지 반환 | 5 | |
| | 주한미군감축 | 3 | |
| 한중관계 | 미중패권경쟁 | 26 | |
| | 북한문제 | 19 | |
| | 사드갈등 | 16 | |
| | 반중여론 | 14 | |
| | 문화공정 | 12 | |
| | 한중FTA | 8 | |
| 한일관계 | 위안부/강제징용 | 29 | |
| | 후쿠시마 오염수 | 23 | |
| | 역사문제 | 17 | |
| | 정상회담 | 14 | |
| |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 12 | |
| 공공외교 | K-pop/한류 | 33 | |
| | 문화외교 | 28 | |
| | 국가브랜드 | 24 | |
| | 스포츠외교 | 2 | |
| 개발협력 | ODA(공적개발원조) | 36 | |
| | 다자개발협력 | 31 | |
| | 인도적 지원 | 20 | |
| | 유무상원조 | 4 | |
| 다자외교 | 다자안보협력 | 32 | |
| | 중견국외교(믹타) | 21 | |
| | 신남방/신북방정책 | 20 | |
| | 동북아 지역 안보 | 18 |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보호 | 42 | |
| | 재외국민선거 | 18 | |
| | 한상네트워크 | 12 | |
| | 재외동포 | 11 | |
| | 출입국 편의 | 7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미중 무역갈등 | 반도체 경쟁 | 30 | |
| | 보호무역 | 21 | |
| | 수출입규제 | 19 | |
| | 신남방정책 | 16 | |
| | 환율변동 | 7 | |
| 환경기준 강화 | EU 탄소배출 강화 | 36 | |
| | 탄소국경조정제도 | 23 | |
| | 유럽 그린딜 | 15 | |
| | USMCA 환경기준 강화[172] | 15 | |
| 자유무역 협정 | 동아시아FTA | 23 | |
| | RCEP/CPTPP[173] | 23 | |
| | 한미FTA | 21 | |
| | 한중FTA | 19 | |
| 무역장벽 확대 | 환경규제 | 24 | |
| | 기술규제 | 15 | |
| | 비관세규제 | 14 | |
| | 무역기술장벽 | 11 | |
| | 수출입규제 | 11 | |
| 디지털 무역 (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0 | |
| | 디지털세 | 19 |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7 | |
| | 디지털 무역협정 | 17 |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1 | |
| | 디지털 통화 | 10 | |
| GVC 재편 | 기술패권경쟁 | 35 | |
| | 디커플링(탈중국화) | 27 | |
| | 디지털 전환 | 13 | |
| | GV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8 | |
| | 반중국 무역연합 | 5 | |

172)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173)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제조업 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36 | |
| | 부품소재 국산화 | 24 | |
| | 혁신 클러스터 | 17 | |
| | 스마트공장 | 10 | |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고용지원 | 39 | |
| | 창업지원 | 31 | |
| | 수출지원 | 12 | |
| | 물류유통지원 | 10 | |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32 | |
| | 탄소중립 | 30 | |
| | 저탄소 산업 육성 | 17 | |
| | 탈원전 | 13 | |
|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 38 | |
| | 도심 재건축 | 32 | |
| | 주거비 지원 | 15 | |
| | 신도시건설 | 7 | |
| |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상향 | - | |
| 부동산 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33 | |
| | 임대차규제 | 25 | |
| | 거래세 | 19 | |
| | 대출규제 | 15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교통 인프라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35 | |
| | 수도권 GTX 확충 | 23 | |
| | 철도교통 확충 | 19 | |
| | 고속도로 지하화 | 9 | |
| | 공항 및 항만 확충 | 4 | |
| 건설산업 지원 | 하도급규제 | 31 | |
| | 공정건설계약 | 29 | |
|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23 |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7 | |
| 농수산인 소득보전 | 농산물 수급안정 | 33 | |
| | 자연재난시 농가 구호 | 21 | |
| | 농가 직불제 | 18 | |
| | 농산물 가격보존 | 17 | |
| 가축 감염병 | 가축 방역 | 38 | |
| | 동식물검역 | 24 | |
| | 살처분보상 | 15 | |
| | 가축백신지원 | 12 | |
| 농식품 안전 | 축산물안전인증제 | 34 | |
| | 농산물위생검사 | 28 | |
| | 축산물이력관리 | 26 | |
| 스마트 농업 | 식품 R&D | 36 | |
| | 스마트팜 | 34 | |
| | 식품수출단지 | 8 | |
| | 식품테마파크 | 7 | |

## 5. 교육/인적자원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27 | |
| | 돌봄교실 | 24 | |
| | 보육교사 | 16 | |
| | 유연근무제 | 15 | |
| | 아동수당 | 10 | |
| 대학교육 | 대학구조조정 | 32 | |
| | 입시개혁 | 29 | |
| | 국립대 육성 | 14 | |
| | 4차산업혁명 | 10 | |
| | 국가장학금 확대 | 8 | |
| 초중등 교육 | 사교육비 경감 | 32 | |
| | 민주시민교육 | 27 | |
| | 자사고/특목고 | 21 | |
| | 학제개편 | 8 | |
| | 혁신학교 | 5 | |
| 교육 거버넌스 | 교육부 | 36 | |
| | 시도교육청 | 22 | |
| | 국가교육위원회 | 17 | |
| | 전교조 | 11 | |
| | 교육감 선거 | 7 | |
| 교육 인프라 | 학교인프라 개선 | 32 | |
| | 교원양성체계 개편 | 30 | |
| | 안전한 학교 | 23 | |
| | 각종 고시 부활 | 8 | |
| 청년 일자리 | 공정채용 | 28 | |
| | 비정규직 감소 | 25 | |
| | 지역인재채용 | 19 | |
| | 창업지원 | 13 | |
| | 청년고용할당 | 9 | |
| 여성고용 | 경력단절여성 | 26 | |
| | 성별 임금격차 | 23 |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3 | |
| | 취약계층여성 | 17 | |
| | 비정규직 여성 | 2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노인 일자리 | 취업지원제도 | 32 | |
|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31 | |
| | 정부사업 일자리 | 17 | |
| | 자영업 지원 | 8 | |
| | 수당인상 | 5 | |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32 | |
| | 근로감독 강화 | 20 | |
| | 노동시간 단축 | 17 | |
| | 실업급여 확대 | 12 | |
| | 최저임금 인상 | 12 | |
| 노동현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30 | |
| | 직업훈련 강화 | 22 | |
| | 고용유연화 | 15 | |
| | 연공서열제 개혁 | 15 | |
| | 노동이사제 | 7 | |
| 청년 복지 | 학자금 대출 | 21 | |
| | 청년실업부조 | 21 | |
| | 청년구직수당 | 20 | |
| | 최저임금 | 18 | |
| | 대학등록금 | 11 | |
| 청년 주거 | 청년공공주택 | 30 | |
| | 주거금융 지원 | 25 | |
| | 1인 가구 | 21 | |
| | 신혼부부 | 14 | |
| | 대학 기숙사 | 3 | |
| 젠더 갈등 | 성차별 인식 격차 | 33 | |
| | 여성가족부 | 27 | |
| | 젠더폭력 | 22 | |
| | 여성할당제 | 13 | |
| | 군복무 | 7 | |
| 여성 안전 | 디지털성범죄 | 33 | |
| | 폭력예방교육 | 19 | |
| | CCTV | 15 | |
| | 안심귀가서비스 | 12 | |
| | 성매매 | 10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30 | |
| | 분만인프라 구축 | 24 | |
| | 생리대 지원 | 17 | |
| | 여성 관련 암 예방 | 15 | |
|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4 | |
| 저출산 | 육아휴직 | 33 | |
| | 출산휴가 | 28 | |
| | 난임시술비 지원 | 12 | |
| | 다자녀 장학금 | 10 | |
| | 산후조리비용 | 2 | |
| 여성 대표성/ 성평등 | 여성가족부 | 21 | |
| | 성평등위원회 | 20 | |
| | 비례대표제 | 18 | |
| | 여성관리자 | 13 | |
|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11 | |
| 노인 돌봄 | 치매 | 23 | |
| | 의료비 부담 경감 | 21 | |
|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19 | |
| | 국공립요양시설 | 16 | |
|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10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노인 주거/ 교통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34 | |
| | 맞춤형 공동주택 | 27 | |
| | 영구임대주택 | 24 | |
| | 농어촌 공영택시 | 5 | |
| | 무상교통 | 1 | |
| 노인 여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
| | 존엄한 죽음 | 24 | |
| | 노인생활체육 | 17 | |
| | 평생교육 | 15 | |
| | 경로당 개편 | 5 | |
| 노후 보장 (고령화) | 국민연금강화 | 27 | |
| | 기초연금액 인상 | 23 | |
| | 정년연장 | 21 | |
| | 퇴직연금강화 | 13 | |
|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 | |

## 6. 문화/체육/관광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34 | |
| | 지역문화 발전 | 33 | |
| | 비대면 문화화 | 19 | |
| 문화경제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37 | |
| | K-콘텐츠산업 진흥 | 31 | |
| | 저작권 확충 | 18 | |
| 문화외교 | 국제 문화교류 | 30 | |
| | 신한류 확산 | 26 | |
| | 전통문화 계승·홍보 | 26 | |
| 문화시민 | 문화인프라 확충 | 42 | |
| | 문화소비 지원 강화 | 22 | |
|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21 | |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33 | |
| | 언론중재법 | 24 | |
| | 징벌적 손배 | 18 | |
| | 편집권 독립 | 9 | |
| | 지역언론 지원 | 5 | |
| | 미디어바우처제 | 2 | |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43 | |
| | 광고운영 규제 | 26 | |
| | 방송수신료제 | 20 | |
| 포털개혁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32 | |
| | 알고리즘 공개 | 30 | |
| | 댓글 실명제 | 14 | |
| | 아웃링크 도입 | 13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생활 스포츠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 41 | |
|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28 | |
| | 지역체육 공동체화 | 20 | |
| 스포츠 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29 | |
| | 융복합 사업화 | 28 | |
| | 지역·사회적 자본화 | 28 | |
| 스포츠 외교 | 스포츠 교류협력 | 44 | |
| | 스포츠 한류 | 26 | |
|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13 | |
| 국제관광 | K-관광 콘텐츠 개발 | 40 | |
| | 방역 인프라 | 18 | |
|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18 | |
| | 국제행사 유치 | 13 | |
| 국내관광 | 로컬관광 | 43 | |
| | 교통숙박 연계 관광 | 38 | |
| | 안보관광 자원개발 | 6 | |
| 산업관광 | 의료관광 | 28 | |
| | 4차산업 체험관광 | 25 | |
|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20 | |
| | 교육관광 | 11 | |

## 7. 과학기술/정보통신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기초/ 기반연구 | 생명과학 | 33 | |
| | ICT/융합 | 22 | |
| | 컴퓨팅 인프라 | 13 | |
| | 항공우주 | 13 | |
| | 의약학 | 12 | |
| | 공학 | 2 | |
| 4차산업 혁명 | 인공지능(AI) | 30 | |
| | 빅데이터 | 19 | |
| | 블록체인 | 11 | |
| | 규제혁신 | 10 | |
| | 디지털혁신 | 10 | |
| | 일자리미래 | 8 | |
| | 미래차 | 7 | |
| SW/ 인공지능 (AI) | 융합적 사고력 | 30 | |
| | 교육 및 인력양성 | 29 | |
| | 인공지능 윤리 | 17 | |
| | 코딩교육 | 11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 | |
| | 특허권 | 0 | |
| 지식재산 | 핵심/원천기술 | 34 | |
| | 기술보호/활용 | 22 | |
| | 혁신기술 | 18 | |
| | 국제표준화 | 11 | |
| | 영업비밀/특허침해 | 7 | |
| | 특허 부가가치 | 2 | |
| R&D | 자율성확대 | 29 | |
| | 연구개발비 | 24 | |
| | 민관협력/투자확대 | 21 | |
| | 연구윤리 | 8 | |
| | 국방R&D | 4 | |
| | 지역/관료주도형R&D | 3 | |
| | 기술규제 | 2 | |
| | 예비타당성 | 2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격차해소 | 26 | |
|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18 | |
|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16 | |
| | 메타버스 | 11 | |
| | 비대면산업 | 11 | |
| | 지능형 정부 | 9 | |
| | 5G 고속도로 | 2 | |
| 디지털 무역 (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2 |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5 | |
| | 디지털 무역협정 | 14 |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4 | |
| | 디지털세 | 13 | |
| | 디지털 통화 | 10 | |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26 | |
| | 보이스피싱 | 17 | |
| | 개인정보유출 | 17 | |
| | 데이터보호 | 15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 | |
| 디지털 경제 | 디지털화폐 | 25 | |
| | 디지털커머스 | 24 | |
| | 데이터경제 | 22 | |
| | 핀테크 | 12 | |
| | 구독경제 | 6 | |

## 8. 보건의료/환경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코로나19 | 백신접종 | 28 | |
| | 방역/K-방역 | 24 | |
| | 백신생산 | 18 | |
| | 백신주권 | 15 | |
| | 백신여권 | 5 | |
| | 거리두기 | 5 | |
| 질병관리 | 감염병예방 | 29 | |
| | 국가검진사업 | 22 | |
| | 의료비지원 | 16 | |
| | 예방접종 | 14 | |
| | 호스피스/완화의료 | 10 | |
|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 | 28 | |
| | 재정적자 | 21 | |
| | 보험료 인상 | 16 | |
| | 임신/출산비지원 | 16 | |
| 공공의료 | 공공병원 | 25 | |
| | 지방의료원육성 | 23 | |
| | 공공의대 | 16 | |
| | 의료질 | 11 | |
| | 과잉진료/과소진료 | 10 | |
| | 의대정원 | 7 | |
| 의료개혁 | 의료법개정 | 27 | |
| | 수술실 CCTV | 21 | |
| | 의료권력 | 21 | |
| | 의료수가 | 19 | |
| | 의료파업 | 4 | |

| 정책 이슈 | 하위 키워드 | 1차 빈도 | 표기 (∨) |
|---|---|---|---|
| 기후변화/위기 | 지구온난화 | 34 | |
| | 탄소중립 | 25 | |
| | 지속가능발전 | 25 | |
| | 탄소배출권 | 4 | |
| | 화석연료 | 3 | |
| | 탄소국경세 | 0 | |
| 자원순환 | 미세플라스틱 | 22 | |
| | 폐기물부담금 | 13 | |
| | 업사이클링 | 11 | |
| | 순환센터 | 9 | |
| | 제로웨이스트 | 6 | |
| | 폐기물 재활용 | 30 | |
| 그린뉴딜 | 신재생에너지 | 30 | |
| | 탄소중립 | 20 | |
| | 녹색산업 | 13 | |
| | 순환경제 | 9 | |
| | 수소경제 | 9 | |
| | 도시숲 | 6 | |
| | 스마트그리드 | 5 | |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42 | |
| | (중국발) 황사 | 21 | |
| | 한중협력 | 13 | |
| | 저감조치 | 12 | |
| | 산성비 | 2 | |
| | 저녹스보일러 | 1 | |
| 해양/수자원 | 해양생태계 | 26 | |
| | 해양오염 | 26 | |
| | 해양폐기물 | 20 | |
| | 상/하수도 | 14 | |
| | 지하수 | 6 | |

※ 응답자 현황

| 성 명 | | 연락처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21.09.24~21.09.30)

51명 중 총 41명 응답(80.39%)

**<질문 1>**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영역에 우선순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정책 영역(분야) | 1차 조사 응답 순위 | 2차 조사 응답 순위 |
|---|---|---|---|
| 1 | 정치/행정/사법 | 2 | 2 |
| 2 | 재정/경제 | 1 | **1** |
| 3 | 국방/통일/외교통상 | 4 | 4 |
| 4 | 산업자원/건설교통 | 6 | 7 |
| 5 | 교육/인적자원 | 5 | 5 |
| 6 | 문화/체육/관광 | 7 | 8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 | 3 | **6** |
| 8 | 보건의료/환경 | 3 | **3** |

<질문 2> 정책 이슈 (정책영역별로 각각)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작성해주십시오)

| 정책영역 | 연번 | 정책 이슈 | 1차 조사 응답 빈도 | 2차 조사 응답 빈도 |
|---|---|---|---|---|
| 정치/행정/사법 | 1 | 정치개혁 | 39 | 36 |
| | 2 | 사법개혁 | 24 | 22 |
| | 3 | 지방자치 | 15 | 12 |
| | 4 | 개헌 | 14 | 7 |
| | 5 | 사회안전 | 8 | 4 |
| 재정/경제/복지 | 1 | 사회복지 | 26 | 29 |
| | 2 | 조세 | 22 | 22 |
| | 3 | 재정 | 16 | 12 |
| | 4 | 공정거래 | 31 | 17 |
| | 5 | 사회적경제 | 7 | 1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외교/안보 | 34 | 36 |
| | 2 | 통일 및 남북관계 | 32 | 29 |
| | 3 | 국방 | 16 | 5 |
| | 4 | 통상 | 15 | 11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산업자원(에너지) | 46 | 40 |
| | 2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45 | 39 |
| | 3 | 농업해양수산 | 6 | 0 |
| 교육/인적자원 | 1 | 노동(고용 및 일자리) | 37 | 38 |
| | 2 | 교육 | 27 | 23 |
| | 3 | 노인/고령화 | 20 | 14 |
| | 4 | 청년/여성 | 13 | 6 |
| 문화/체육/관광 | 1 | 언론 및 방송 | 43 | 40 |
| | 2 | 문화 | 34 | 36 |
| | 3 | 관광 | 14 | 3 |
| | 4 | 스포츠 | 2 | 0 |
| 과학기술/정보통신 | 1 | 과학기술 | 29 | 40 |
| | 2 | 정보통신 | 17 | 37 |
| | 3 | 연구환경 | - | 2 |
| | 4 | 기타 | | 0 |
| 보건의료/환경 | 1 | 환경 | 34 | 36 |
| | 2 | 공중보건 | 20 | 35 |
| | 3 | 의료 | - | 10 |
| | 4 | 기타 | | 0 |

**<질문 3>**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상위 키워드에 정책영역별로 5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영역 | 연번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정치/행정/사법 | 1 | 선거제도 개혁 | 36 | 35 | 0.71 | 0.85 | 1 | 1 |
| | 2 | 지방균형발전 | 33 | 27 | 0.65 | 0.66 | 2 | 3 |
| | 3 | 검찰개혁 | 27 | 29 | 0.53 | 0.71 | 3 | 2 |
| | 4 | 국회개혁 | 26 | 22 | 0.51 | 0.54 | 4 | 4 |
| | 5 | 권력구조 개헌 | 20 | 13 | 0.39 | 0.32 | 5 | 7 |
| | 6 | 정당개혁 | 18 | 17 | 0.35 | 0.41 | 6 | 5 |
| | 7 | 법원개혁 | 18 | 17 | 0.35 | 0.41 | 6 | 5 |
| | 8 | 재난안전 | 15 | 5 | 0.29 | 0.12 | 8 | 11 |
| | 9 | 경제민주주의 | 14 | 12 | 0.27 | 0.29 | 9 | 9 |
| | 10 | 지방정부 | 11 | 13 | 0.22 | 0.32 | 10 | 7 |
| | 11 | 경찰개혁 | 10 | 4 | 0.20 | 0.10 | 11 | 12 |
| | 12 | 지방의회 | 10 | 7 | 0.20 | 0.17 | 11 | 10 |
| | 13 | 기본권 개헌 | 6 | 0 | 0.12 | 0.00 | 13 | 14 |
| | 14 | 직접민주주의 | 2 | 0 | 0.04 | 0.00 | 14 | 14 |
| | 15 | 치안 | 2 | 1 | 0.04 | 0.02 | 14 | 13 |
| | 16 | 교통안전 | 2 | 0 | 0.04 | 0.00 | 14 | 14 |

| | | | | | | | | |
|---|---|---|---|---|---|---|---|---|
| 재정/경제/복지 | 1 | 조세정책 기조 | 29 | 31 | 0.57 | 0.76 | 1 | 1 |
| | 2 | 연금 | 26 | 30 | 0.51 | 0.73 | 2 | 2 |
| | 3 | 아동/육아 | 26 | 20 | 0.51 | 0.49 | 3 | 3 |
| | 4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25 | 17 | 0.49 | 0.41 | 4 | 5 |
| | 5 | 재정 건전화 | 22 | 15 | 0.43 | 0.37 | 5 | 6 |
| | 6 | 소상공인 지원 | 19 | 19 | 0.37 | 0.46 | 6 | 4 |
| | 7 | 재벌규제 | 17 | 13 | 0.33 | 0.32 | 7 | 8 |
| | 8 | 재정 효율화 방안 | 16 | 13 | 0.31 | 0.32 | 8 | 8 |
| | 9 | 기업 과세 | 15 | 10 | 0.29 | 0.24 | 9 | 10 |
| | 10 | 소득보장 | 13 | 14 | 0.25 | 0.34 | 10 | 7 |
| | 11 | 사회적경제 제도 | 11 | 5 | 0.22 | 0.12 | 11 | 11 |
| | 12 | 포용적 재정 운영 | 10 | 5 | 0.20 | 0.12 | 12 | 11 |
| | 13 | 개인 과세 | 9 | 5 | 0.18 | 0.12 | 13 | 11 |
| | 14 | 지역공동체 활성화 | 8 | 3 | 0.16 | 0.07 | 14 | 14 |
| | 15 | 사회적기업지원 | 3 | 2 | 0.06 | 0.05 | 15 | 15 |

| 정책영역 | 연번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국방/통일/외교통상 | 1 | 한반도 평화체재 | 32 | 32 | 0.63 | 0.78 | 1 | 1 |
| | 2 | 한미동맹 | 27 | 25 | 0.53 | 0.61 | 2 | 3 |
| | 3 | 남북교류협력 | 23 | 26 | 0.45 | 0.63 | 3 | 2 |
| | 4 | 국방개혁 | 22 | 14 | 0.43 | 0.34 | 4 | 7 |
| | 5 | 한중관계 | 18 | 21 | 0.35 | 0.51 | 5 | 4 |
| | 6 | 환경기준 강화 | 16 | 10 | 0.31 | 0.24 | 6 | 9 |
| | 7 | 한일관계 | 15 | 17 | 0.29 | 0.41 | 7 | 5 |
| | 8 | 북핵 문제 | 14 | 15 | 0.27 | 0.37 | 8 | 6 |
| | 9 | 비핵화 | 13 | 5 | 0.25 | 0.12 | 9 | 10 |
| | 10 | 미중무역할등 | 11 | 11 | 0.22 | 0.27 | 10 | 8 |
| | 11 | 사이버안보 | 10 | 4 | 0.20 | 0.10 | 11 | 12 |
| | 12 | 다자외교 | 8 | 3 | 0.16 | 0.07 | 12 | 15 |
| | 13 | 종전선언 | 7 | 5 | 0.14 | 0.12 | 13 | 10 |
| | 14 | 자주국방 | 7 | 4 | 0.14 | 0.10 | 13 | 12 |
| | 15 | 남북경협 | 5 | 2 | 0.10 | 0.05 | 15 | 16 |
| | 16 | K-방산 | 4 | 2 | 0.08 | 0.05 | 16 | 16 |
| | 17 | 공공외교 | 4 | 4 | 0.08 | 0.10 | 16 | 12 |
| | 18 | 디지털 무역(DEPA) | 4 | 0 | 0.08 | 0.00 | 16 | 20 |
| | 19 | GVC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 4 | 2 | 0.08 | 0.05 | 16 | 16 |
| | 20 | 통일인식 | 3 | 1 | 0.06 | 0.02 | 20 | 19 |
| | 21 | 개발협력 | 3 | 0 | 0.06 | 0.00 | 20 | 20 |
| | 22 | 자유무역협정 | 3 | 0 | 0.06 | 0.00 | 20 | 20 |
| | 23 | 재외국민 | 1 | 0 | 0.02 | 0.00 | 23 | 20 |
| | 24 | 무역장벽확대 | 0 | 0 | 0.00 | 0.00 | 24 | 20 |

| | | | | | | | | |
|---|---|---|---|---|---|---|---|---|
| 산업자원/건설교통 | 1 | 주거 안정 | 46 | 39 | 0.90 | 0.95 | 1 | 2 |
| | 2 | 부동산세제 및 규제 | 43 | 40 | 0.84 | 0.98 | 2 | 1 |
| | 3 | 신재생에너지 | 41 | 33 | 0.80 | 0.80 | 3 | 5 |
| | 4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35 | 34 | 0.69 | 0.83 | 4 | 3 |
| | 5 | 제조업지원 | 24 | 26 | 0.47 | 0.63 | 5 | 6 |
| | 6 | 농식품 안전 | 20 | 9 | 0.39 | 0.22 | 6 | 8 |
| | 7 | 교통 인프라 | 13 | 10 | 0.25 | 0.24 | 7 | 7 |
| | 8 | 가축전염병 | 7 | 3 | 0.14 | 0.07 | 8 | 10 |
| | 9 | 농수산인 소득 보전 | 6 | 2 | 0.12 | 0.05 | 9 | 11 |
| | 10 | 스마트농업 | 5 | 4 | 0.10 | 0.10 | 10 | 9 |
| | 11 | 건설산업지원 | 1 | 0 | 0.02 | 0.00 | 11 | 12 |

| 정책영역 | 연번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교육/인적자원 | 1 | 청년 일자리 | 33 | 34 | 0.65 | 0.83 | 1 | 1 |
| | 2 | 저출산 | 30 | 32 | 0.59 | 0.78 | 2 | 2 |
| | 3 | 돌봄 | 22 | 23 | 0.43 | 0.56 | 3 | 3 |
| | 4 | 초중등교육 | 22 | 18 | 0.43 | 0.44 | 3 | 5 |
| | 5 | 대학교육 | 21 | 14 | 0.41 | 0.34 | 5 | 7 |
| | 6 | 노후 보장(고령화) | 21 | 22 | 0.41 | 0.54 | 5 | 4 |
| | 7 | 노동자 안전망 | 19 | 16 | 0.37 | 0.39 | 7 | 6 |
| | 8 | 젠더 갈등 | 18 | 11 | 0.35 | 0.27 | 8 | 8 |
| | 9 | 청년 주거 | 10 | 3 | 0.20 | 0.07 | 9 | 13 |
| | 10 | 청년 복지 | 9 | 1 | 0.18 | 0.02 | 10 | 18 |
| | 11 | 교육 인프라 | 8 | 5 | 0.16 | 0.12 | 11 | 10 |
| | 12 | 여성 고용 | 7 | 3 | 0.14 | 0.07 | 12 | 13 |
| | 13 | 여성 대표성/성평등 | 7 | 4 | 0.14 | 0.10 | 12 | 11 |
| | 14 | 노인 돌봄 | 7 | 6 | 0.14 | 0.15 | 12 | 9 |
| | 15 | 교육 거버넌스 | 6 | 2 | 0.12 | 0.05 | 15 | 15 |
| | 16 | 여성 안전 | 6 | 2 | 0.12 | 0.05 | 15 | 15 |
| | 17 | 노인 일자리 | 4 | 2 | 0.08 | 0.05 | 17 | 15 |
| | 18 | 노동 현안 | 4 | 4 | 0.08 | 0.10 | 17 | 11 |
| | 19 | 노인 여가 | 1 | 0 | 0.02 | 0.00 | 19 | 19 |
| | 20 | 여성 건강 | 0 | 0 | 0.00 | 0.00 | 20 | 19 |
| | 21 | 노인 주거/교통 | 0 | 0 | 0.00 | 0.00 | 20 | 19 |
| 문화/체육/관광 | 1 | 언론개혁 | 44 | 38 | 0.86 | 0.93 | 1 | 1 |
| | 2 | 방송개혁 | 41 | 36 | 0.80 | 0.88 | 2 | 2 |
| | 3 | 포털개혁 | 35 | 34 | 0.69 | 0.83 | 3 | 6 |
| | 4 | 국내관광 | 23 | 11 | 0.45 | 0.27 | 4 | 4 |
| | 5 | 문화경제 | 19 | 19 | 0.37 | 0.46 | 5 | 3 |
| | 6 | 문화외교 | 17 | 22 | 0.33 | 0.54 | 6 | 7 |
| | 7 | 문화시민 | 14 | 7 | 0.27 | 0.17 | 7 | 5 |
| | 8 | 생활스포츠 | 14 | 13 | 0.27 | 0.32 | 7 | 8 |
| | 9 | 문화사회 | 13 | 5 | 0.25 | 0.12 | 9 | 9 |
| | 10 | 국제관광 | 7 | 3 | 0.14 | 0.07 | 10 | 10 |
| | 11 | 산업관광 | 5 | 2 | 0.10 | 0.05 | 11 | 11 |
| | 12 | 스포츠경제 | 3 | 1 | 0.06 | 0.02 | 12 | 12 |
| | 13 | 스포츠외교 | 2 | 0 | 0.04 | 0.00 | 13 | 12 |

| 정책영역 | 연번 | 상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순위 |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 과학기술/정보통신 | 1 | 4차산업혁명 | 24 | 37 | 0.47 | 0.90 | 4 | 1 |
| | 2 | 기초/기반연구 | 17 | 33 | 0.33 | 0.80 | 6 | 2 |
| | 3 | SW/인공지능(AI) | 14 | 33 | 0.27 | 0.80 | 8 | 2 |
| | 4 | 정보보호 | 11 | 26 | 0.22 | 0.63 | 10 | 6 |
| | 5 | 디지털경제 | 11 | 29 | 0.22 | 0.71 | 10 | 4 |
| | 6 | R&D | 10 | 27 | 0.20 | 0.66 | 13 | 5 |
| | 7 | 디지털뉴딜 | 5 | 8 | 0.10 | 0.20 | 14 | 7 |
| | 8 | 지식재산 | 4 | 4 | 0.08 | 0.10 | 15 | 8 |
| | 9 | 디지털무역(DEPA) | 2 | 1 | 0.04 | 0.02 | 19 | 9 |
| 보건의료/환경 | 1 | 기후변화/위기 | 34 | 40 | 0.67 | 0.98 | 1 | 1 |
| | 2 | 코로나19 | 29 | 32 | 0.57 | 0.78 | 2 | 3 |
| | 3 | 공공의료 | 25 | 34 | 0.49 | 0.83 | 3 | 2 |
| | 4 | 건강보험 | 18 | 27 | 0.35 | 0.66 | 5 | 4 |
| | 5 | 의료개혁 | 15 | 26 | 0.29 | 0.63 | 7 | 5 |
| | 6 | 그린뉴딜 | 14 | 10 | 0.27 | 0.24 | 8 | 7 |
| | 7 | 대기오염 | 11 | 17 | 0.22 | 0.41 | 10 | 6 |
| | 8 | 질병관리 | 4 | 6 | 0.08 | 0.15 | 15 | 8 |
| | 9 | 자원순환 | 4 | 3 | 0.08 | 0.07 | 15 | 9 |
| | 10 | 해양/수자원 | 3 | 3 | 0.06 | 0.07 | 19 | 9 |

**<질문 4>**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하위 키워드를 정책 이슈별로 2개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치/행정/사법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비례대표제 | 39 | 39 | 0.76 | 0.95 |
| | 선거구획정 | 33 | 29 | 0.65 | 0.71 |
| | 선거공영제 | 11 | 3 | 0.22 | 0.07 |
| | 여성대표성 | 10 | 5 | 0.20 | 0.12 |
| | 투표시간 | 2 | 0 | 0.04 | 0.00 |
| | 사전선거운동 기간 | - | 0 | - | 0.00 |
| | 표현의 자유 확대 | - | 6 | - | 0.15 |
| 정당개혁 | 국고보조금개선 | 36 | 31 | 0.71 | 0.76 |
| | 정치자금법 | 33 | 30 | 0.65 | 0.73 |
| | 지구당복원 | 22 | 13 | 0.43 | 0.32 |
| | 공천제도 | - | 7 | - | 0.17 |
| 국회개혁 | 인사청문회 | 23 | 28 | 0.45 | 0.68 |
| | 상시국정감사제 | 23 | 23 | 0.45 | 0.56 |
| | 행정입법감독 | 21 | 14 | 0.41 | 0.34 |
| | 국회국민청원 | 17 | 12 | 0.33 | 0.29 |
| | 불체포특권 | 12 | 5 | 0.24 | 0.12 |
| 검찰개혁 | 검찰수사권조정 | 44 | 40 | 0.86 | 0.98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37 | 35 | 0.73 | 0.85 |
| | 검사장 직선제 | 14 | 7 | 0.27 | 0.17 |
| 법원개혁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 | 33 | 35 | 0.65 | 0.85 |
| | 판결문 공개 | 28 | 30 | 0.55 | 0.73 |
| | 국민참여재판 | 18 | 13 | 0.35 | 0.32 |
| | 무작위사건배당 | 16 | 4 | 0.31 | 0.10 |
| 경찰개혁 | 지방자치경찰 | 38 | 37 | 0.75 | 0.90 |
| | 정보수사 분리 | 38 | 39 | 0.75 | 0.95 |
| | 경찰대 폐지 | 14 | 6 | 0.27 | 0.15 |
| 권력구조 | 대통령 연임제 | 41 | 37 | 0.80 | 0.90 |
| | 의원내각제 | 23 | 31 | 0.45 | 0.76 |
| | 준대통령제 | 18 | 9 | 0.35 | 0.22 |
| 기본권 | 주거권[174] | 40 | (누락) | 0.78 | (누락) |
| | 안전에 대한 권리 | 24 | 5 | 0.47 | 0.12 |
| | 생명권 | 18 | 20 | 0.35 | 0.49 |
| | 정보기본권 | 15 | 8 | 0.29 | 0.20 |

174) 2차 델파이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키워드가 누락되어 응답이 진행되지 않음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직접 민주주의 | 국민소환제 | 33 | 34 | 0.65 | 0.83 |
| | 주민투표제 강화 | 26 | 31 | 0.51 | 0.76 |
| | 국민발안제 | 20 | 14 | 0.39 | 0.34 |
| | 주민참여 예산제 | 17 | 16 | 0.33 | 0.39 |
| 경제 민주주의 | 경제민주화 | 28 | 31 | 0.55 | 0.76 |
| | 동반상생성장 | 24 | 21 | 0.47 | 0.51 |
| | 토지공개념 | 15 | 16 | 0.29 | 0.39 |
| | 사회적경제 | 14 | 5 | 0.27 | 0.12 |
| | 소비자보호 | 13 | 6 | 0.25 | 0.15 |
| 지방정부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 41 | 36 | 0.80 | 0.88 |
| | 지방정부 입법 | 31 | 27 | 0.61 | 0.66 |
| | 지방정부 법제 | 18 | 7 | 0.35 | 0.17 |
| | 지방행정체계 개편 | - | 6 | - | 0.15 |
| 지방의회 | 정책역량 강화 | 43 | 39 | 0.84 | 0.95 |
| | 구성원 전문성 | 26 | 28 | 0.51 | 0.68 |
| | 지방의회 다양화 | 16 | 10 | 0.31 | 0.24 |
| | 사무직 인사권 | 9 | 3 | 0.18 | 0.07 |
| 균형발전 | 수도권과밀화 해소 | 44 | 39 | 0.86 | 0.95 |
| | 지역혁신 성장거점조성 | 37 | 31 | 0.73 | 0.76 |
| | 행정수도 이전 | 14 | 11 | 0.27 | 0.27 |
| 치안 | 아동 폭력 | 33 | 32 | 0.65 | 0.78 |
| | 디지털 성범죄 | 29 | 38 | 0.57 | 0.93 |
| | 지능범죄 | 15 | 8 | 0.29 | 0.20 |
| | 코로나19 관련 위법 | 11 | 2 | 0.22 | 0.05 |
| | 데이트 폭력 | 5 | 1 | 0.10 | 0.02 |
| 교통안전 | 전기차 및 자율주행 | 34 | 37 | 0.67 | 0.90 |
| |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 | 31 | 32 | 0.61 | 0.78 |
| | 스쿨존 교통안전 | 25 | 10 | 0.49 | 0.24 |
| 재난안전 | 기후변화 | 38 | 39 | 0.75 | 0.95 |
| | 위험방지체계 | 26 | 18 | 0.51 | 0.44 |
| | 재난 불평등 | 26 | 23 | 0.51 | 0.56 |
| | 총체적 지역접근 | 7 | 1 | 0.14 | 0.02 |

## 2. 재정/경제/복지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조세정책 기조 | 공평과세 | 30 | 35 | 0.59 | 0.85 |
| | 증세논쟁 | 27 | 25 | 0.53 | 0.61 |
| | 조세부담율 | 24 | 16 | 0.47 | 0.39 |
| | 직·간접세비율 | 12 | 4 | 0.24 | 0.10 |
| 기업과세 | 법인세율 | 40 | 40 | 0.78 | 0.98 |
| | 일감몰아주기과세 | 30 | 37 | 0.59 | 0.90 |
| | 법인세공제 | 15 | 3 | 0.29 | 0.07 |
| 개인과세 | 부유세 | 30 | 34 | 0.59 | 0.83 |
| | 상속·증여세 | 28 | 34 | 0.55 | 0.83 |
| | 금융과세 | 21 | 10 | 0.41 | 0.24 |
| | 소득과세 | 15 | 3 | 0.29 | 0.07 |
| 재정 건전화 | 국가부채비율 | 34 | 34 | 0.67 | 0.83 |
| | 통합재정수지 | 34 | 33 | 0.67 | 0.80 |
| | 재정준칙 법제화 | 18 | 11 | 0.35 | 0.27 |
| 재정 효율화 방안 | 조세탈루억제 | 31 | 35 | 0.61 | 0.85 |
| | 세출개혁 | 24 | 28 | 0.47 | 0.68 |
| | 예비타당성조사 | 23 | 12 | 0.45 | 0.29 |
| | 국유자산관리 | 12 | 3 | 0.24 | 0.07 |
| 포용적 재정운영 | 복지재정 | 42 | 41 | 0.82 | 1.00 |
| | 균형발전예산 | 40 | 38 | 0.78 | 0.93 |
| | 국민참여예산 | 8 | 2 | 0.16 | 0.05 |
| 재벌규제 | 총수지배약화 | 34 | 32 | 0.67 | 0.78 |
| | 일감몰아주기 | 33 | 34 | 0.65 | 0.83 |
| | 금산분리 | 26 | 14 | 0.51 | 0.34 |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기술보호 | 43 | 41 | 0.84 | 1.00 |
| | 집단소송제 | 27 | 30 | 0.53 | 0.73 |
| | 전자금융소비자보호 | 11 | 7 | 0.22 | 0.17 |
| | 공공조달 | 10 | 2 | 0.20 | 0.05 |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관련 지원 | 39 | 31 | 0.76 | 0.76 |
| | 지역상권 활성화 | 30 | 30 | 0.59 | 0.73 |
| | 사회안전망 | 23 | 19 | 0.45 | 0.46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 | 34 | 38 | 0.67 | 0.93 |
| | 기본소득 | 23 | 23 | 0.45 | 0.56 |
| | 부(負)의 소득세 | 17 | 13 | 0.33 | 0.32 |
| | 근로장려금 | 15 | 5 | 0.29 | 0.12 |
| | 기초자산 | 5 | 1 | 0.10 | 0.02 |
| 연금 | 국민연금 개혁 | 40 | 40 | 0.78 | 0.98 |
| | 기초연금 | 33 | 32 | 0.65 | 0.78 |
| | 직역연금개혁 | 13 | 8 | 0.25 | 0.20 |
| 아동/육아 | 보육서비스 | 40 | 41 | 0.78 | 1.00 |
| | 육아휴직 | 33 | 34 | 0.65 | 0.83 |
| | 아동수당 | 19 | 7 | 0.37 | 0.17 |
| 사회적 경제제도 | 법률 정비 | 32 | 29 | 0.63 | 0.71 |
| | 기금조성 | 27 | 23 | 0.53 | 0.56 |
| | 교육과정 확대 | 26 | 21 | 0.51 | 0.51 |
| | 공공부분 ESG원칙 도입 | - | 5 | - | 0.12 |
| 사회적 기업지원 | 기업활성화 | 31 | 31 | 0.61 | 0.76 |
| | 지역사회 확산 | 31 | 34 | 0.61 | 0.83 |
| | 판로지원 | 22 | 9 | 0.43 | 0.22 |
| | ESG관련 기업지원 강화 | - | 3 | - | 0.07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 | 34 | 37 | 0.67 | 0.90 |
| | 취약계층 금융지원 | 33 | 33 | 0.65 | 0.80 |
| | 도시재생 | 23 | 11 | 0.45 | 0.27 |

## 3. 국방/통일/외교통상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비핵화 | 비핵화 프로세스 | 31 | 36 | 0.61 | 0.88 |
| | CVID/PVID | 17 | 10 | 0.33 | 0.24 |
| | 6자회담 | 16 | 22 | 0.31 | 0.54 |
| | 대북제재 | 14 | 9 | 0.27 | 0.22 |
| | 주한미군철수 | 4 | 0 | 0.08 | 0.00 |
|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대화 | 28 | 32 | 0.55 | 0.78 |
| | 평화프로세스 | 26 | 23 | 0.51 | 0.56 |
| | 북미대화 | 15 | 12 | 0.29 | 0.29 |
| | 남북미정상회담 | 15 | 10 | 0.29 | 0.24 |
| | 9.19 공동성명 | 1 | 0 | 0.02 | 0.00 |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35 | 36 | 0.69 | 0.88 |
| | 정전협정/체제 | 28 | 38 | 0.55 | 0.93 |
| | 9.19 군사합의 | 9 | 3 | 0.18 | 0.07 |
| | 판문점선언 | 4 | 0 | 0.08 | 0.00 |
| | 주한미군 철수 | 4 | 0 | 0.08 | 0.00 |
| 남북 교류협력 | 이산가족 | 24 | 27 | 0.47 | 0.66 |
| | 남북철도연결 | 24 | 25 | 0.47 | 0.61 |
| | 생태계 복원/DMZ | 19 | 17 | 0.37 | 0.41 |
| | 스포츠 교류/단일팀 | 8 | 5 | 0.16 | 0.12 |
| | 국군포로 | 7 | 3 | 0.14 | 0.07 |
| | 유해발굴 | 2 | 1 | 0.04 | 0.02 |
| 남북경협 | 개성공단 | 34 | 36 | 0.67 | 0.88 |
| | 남북교역 | 21 | 24 | 0.41 | 0.59 |
| | 금강산관광 | 16 | 11 | 0.31 | 0.27 |
| | 경제특구 | 10 | 6 | 0.20 | 0.15 |
| | 위탁가공 | 2 | 1 | 0.04 | 0.02 |
| 통일인식 | 통일교육 | 20 | 28 | 0.39 | 0.68 |
| | 북한이탈자주민 | 16 | 20 | 0.31 | 0.49 |
| | 평화인식 | 15 | 16 | 0.29 | 0.39 |
| | 북한인권 | 12 | 6 | 0.24 | 0.15 |
| | 대북인식 | 11 | 6 | 0.22 | 0.15 |
| | 통일여론 | 9 | 1 | 0.18 | 0.02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국방개혁 | 군처우개선(군인권) | 25 | 24 | 0.49 | 0.59 |
| | 방산비리개혁 | 22 | 29 | 0.43 | 0.71 |
| | 징병제/모병제 | 18 | 19 | 0.35 | 0.46 |
| | 군사법제도개혁 | 8 | 3 | 0.16 | 0.07 |
| | 국방문민화 | 6 | 2 | 0.12 | 0.05 |
| | 여군확대 | 3 | 1 | 0.06 | 0.02 |
| | 예비군/동원훈련 | 1 | 0 | 0.02 | 0.00 |
| 북핵문제 | 한미동맹 | 29 | 31 | 0.57 | 0.76 |
| | 미중협력/미중관계 | 18 | 24 | 0.35 | 0.59 |
| | 북미회담 | 17 | 15 | 0.33 | 0.37 |
| | 한미일 안보협력 | 8 | 4 | 0.16 | 0.10 |
| | 핵우산 | 4 | 2 | 0.08 | 0.05 |
| | THAAD/사드 | 4 | 1 | 0.08 | 0.02 |
| | 전술핵배치 | 3 | 1 | 0.06 | 0.02 |
| 자주국방 | 방위산업 육성 | 23 | 34 | 0.45 | 0.83 |
| | 전시작전권 환수 | 21 | 22 | 0.41 | 0.54 |
| | KAMD/Kill-chain | 13 | 8 | 0.25 | 0.20 |
| | 주한미군 | 11 | 8 | 0.22 | 0.20 |
| | KF-X 프로젝트 | 8 | 2 | 0.16 | 0.05 |
| | 미사일주권 | 6 | 4 | 0.12 | 0.10 |
| K-방산 | 기술국산화 | 26 | 36 | 0.51 | 0.88 |
| | 우주산업/개발 | 19 | 27 | 0.37 | 0.66 |
| | 차세대 전투기 | 15 | 10 | 0.29 | 0.24 |
| | 방산수출 | 14 | 4 | 0.27 | 0.10 |
| | 민군융합 | 7 | 1 | 0.14 | 0.02 |
| 사이버 안보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29 | 37 | 0.57 | 0.90 |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20 | 29 | 0.39 | 0.71 |
| | 사이버 보안 | 14 | 9 | 0.27 | 0.22 |
| | 사이버공격 대응 | 13 | 2 | 0.25 | 0.05 |
| | 북한 사이버 공격 | 7 | 1 | 0.14 | 0.02 |
| 한미동맹 | 전시작전권환수 | 23 | 27 | 0.45 | 0.66 |
| | 주한미군 지위협정 | 23 | 23 | 0.45 | 0.56 |
| | 한미연합훈련 | 20 | 16 | 0.39 | 0.39 |
| | 쿼드 | 11 | 10 | 0.22 | 0.24 |
| | 한미미사일지침 | 9 | 3 | 0.18 | 0.07 |
| | 미군기지 반환 | 5 | 1 | 0.10 | 0.02 |
| | 주한미군감축 | 3 | 0 | 0.06 | 0.00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한중관계 | 미중패권경쟁 | 26 | 36 | 0.51 | 0.88 |
| | 북한문제 | 19 | 20 | 0.37 | 0.49 |
| | 사드갈등 | 16 | 10 | 0.31 | 0.24 |
| | 반중여론 | 14 | 10 | 0.27 | 0.24 |
| | 문화공정 | 12 | 4 | 0.24 | 0.10 |
| | 한중FTA | 8 | 0 | 0.16 | 0.00 |
| 한일관계 | 위안부/강제징용 | 29 | 26 | 0.57 | 0.63 |
| | 후쿠시마 오염수 | 23 | 26 | 0.45 | 0.63 |
| | 역사문제 | 17 | 16 | 0.33 | 0.39 |
| | 정상회담 | 14 | 8 | 0.27 | 0.20 |
| |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 12 | 4 | 0.24 | 0.10 |
| 공공외교 | K-pop/한류 | 33 | 37 | 0.65 | 0.90 |
| | 문화외교 | 28 | 31 | 0.55 | 0.76 |
| | 국가브랜드 | 24 | 10 | 0.47 | 0.24 |
| | 스포츠외교 | 2 | 0 | 0.04 | 0.00 |
| 개발협력 | ODA(공적개발원조) | 36 | 36 | 0.71 | 0.88 |
| | 다자개발협력 | 31 | 27 | 0.61 | 0.66 |
| | 인도적 지원 | 20 | 16 | 0.39 | 0.39 |
| | 유무상원조 | 4 | 1 | 0.08 | 0.02 |
| 다자외교 | 다자안보협력 | 32 | 39 | 0.63 | 0.95 |
| | 중견국외교(믹타) | 21 | 17 | 0.41 | 0.41 |
| | 신남방/신북방정책 | 20 | 15 | 0.39 | 0.37 |
| | 동북아 지역 안보 | 18 | 8 | 0.35 | 0.20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보호 | 42 | 41 | 0.82 | 1.00 |
| | 재외국민선거 | 18 | 24 | 0.35 | 0.59 |
| | 한상네트워크 | 12 | 7 | 0.24 | 0.17 |
| | 재외동포 | 11 | 6 | 0.22 | 0.15 |
| | 출입국 편의 | 7 | 0 | 0.14 | 0.00 |
| 미중 무역갈등 | 반도체 경쟁 | 30 | 34 | 0.59 | 0.83 |
| | 보호무역 | 21 | 24 | 0.41 | 0.59 |
| | 수출입규제 | 19 | 16 | 0.37 | 0.39 |
| | 신남방정책 | 16 | 4 | 0.31 | 0.10 |
| | 환율변동 | 7 | 2 | 0.14 | 0.05 |
| 환경기준 강화 | EU 탄소배출 강화 | 36 | 37 | 0.71 | 0.90 |
| | 탄소국경조정제도 | 23 | 32 | 0.45 | 0.78 |
| | 유럽 그린딜 | 15 | 6 | 0.29 | 0.15 |
| | USMCA 환경기준 강화 | 15 | 4 | 0.29 | 0.10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자유무역협정 | 동아시아FTA | 23 | 28 | 0.45 | 0.68 |
| | RCEP/CPTPP | 23 | 27 | 0.45 | 0.66 |
| | 한미FTA | 21 | 17 | 0.41 | 0.41 |
| | 한중FTA | 19 | 6 | 0.37 | 0.15 |
| 무역장벽확대 | 환경규제 | 24 | 38 | 0.47 | 0.93 |
| | 기술규제 | 15 | 29 | 0.29 | 0.71 |
| | 비관세규제 | 14 | 8 | 0.27 | 0.20 |
| | 무역기술장벽 | 11 | 2 | 0.22 | 0.05 |
| | 수출입규제 | 11 | 3 | 0.22 | 0.07 |
| 디지털 무역 (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0 | 29 | 0.39 | 0.71 |
| | 디지털세 | 19 | 23 | 0.37 | 0.56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7 | 14 | 0.33 | 0.34 |
| | 디지털 무역협정 | 17 | 8 | 0.33 | 0.20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1 | 4 | 0.22 | 0.10 |
| | 디지털 통화 | 10 | 2 | 0.20 | 0.05 |
| GVC 재편 | 기술패권경쟁 | 35 | 36 | 0.69 | 0.88 |
| | 디커플링(탈중국화) | 27 | 27 | 0.53 | 0.66 |
| | 디지털 전환 | 13 | 11 | 0.25 | 0.27 |
| | GVC(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8 | 4 | 0.16 | 0.10 |
| | 반중국 무역연합 | 5 | 0 | 0.10 | 0.00 |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제조업 지원 | 차세대 산업 지원 | 36 | 37 | 0.71 | 0.90 |
| | 부품소재 국산화 | 24 | 33 | 0.47 | 0.80 |
| | 혁신 클러스터 | 17 | 6 | 0.33 | 0.15 |
| | 스마트공장 | 10 | 2 | 0.20 | 0.05 |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고용지원 | 39 | 38 | 0.76 | 0.93 |
| | 창업지원 | 31 | 31 | 0.61 | 0.76 |
| | 수출지원 | 12 | 8 | 0.24 | 0.20 |
| | 물류유통지원 | 10 | 3 | 0.20 | 0.07 |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 | 32 | 33 | 0.63 | 0.80 |
| | 탄소중립 | 30 | 31 | 0.59 | 0.76 |
| | 저탄소 산업 육성 | 17 | 13 | 0.33 | 0.32 |
| | 탈원전 | 13 | 3 | 0.25 | 0.07 |
|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 38 | 34 | 0.75 | 0.83 |
| | 도심 재건축 | 32 | 34 | 0.63 | 0.83 |
| | 주거비 지원 | 15 | 7 | 0.29 | 0.17 |
| | 신도시건설 | 7 | 4 | 0.14 | 0.10 |
| |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상향 | - | 0 | - | 0.00 |
| 부동산 세제 및 규제 | 보유세 | 33 | 33 | 0.65 | 0.80 |
| | 임대차규제 | 25 | 25 | 0.49 | 0.61 |
| | 거래세 | 19 | 18 | 0.37 | 0.44 |
| | 대출규제 | 15 | 4 | 0.29 | 0.10 |
| 교통 인프라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 35 | 39 | 0.69 | 0.95 |
| | 수도권 GTX 확충 | 23 | 24 | 0.45 | 0.59 |
| | 철도교통 확충 | 19 | 13 | 0.37 | 0.32 |
| | 고속도로 지하화 | 9 | 2 | 0.18 | 0.05 |
| | 공항 및 항만 확충 | 4 | 2 | 0.08 | 0.05 |
| 건설산업 지원 | 하도급규제 | 31 | 30 | 0.61 | 0.73 |
| | 공정건설계약 | 29 | 35 | 0.57 | 0.85 |
| | 건설근로자권익보호 | 23 | 16 | 0.45 | 0.39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7 | 0 | 0.14 | 0.00 |
| 농수산인 소득보전 | 농산물 수급안정 | 33 | 35 | 0.65 | 0.85 |
| | 자연재난시 농가 구호 | 21 | 30 | 0.41 | 0.73 |
| | 농가 직불제 | 18 | 7 | 0.35 | 0.17 |
| | 농산물 가격보존 | 17 | 8 | 0.33 | 0.20 |
| 가축 감염병 | 가축 방역 | 38 | 39 | 0.75 | 0.95 |
| | 동식물검역 | 24 | 31 | 0.47 | 0.76 |
| | 살처분보상 | 15 | 6 | 0.29 | 0.15 |
| | 가축백신지원 | 12 | 4 | 0.24 | 0.10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농식품 안전 | 축산물안전인증제 | 34 | 37 | 0.67 | 0.90 |
| | 농산물위생검사 | 28 | 36 | 0.55 | 0.88 |
| | 축산물이력관리 | 26 | 7 | 0.51 | 0.17 |
| 스마트 농업 | 식품 R&D | 36 | 39 | 0.71 | 0.95 |
| | 스마트팜 | 34 | 38 | 0.67 | 0.93 |
| | 식품수출단지 | 8 | 1 | 0.16 | 0.02 |
| | 식품테마파크 | 7 | 1 | 0.14 | 0.02 |

## 5. 교육/인적자원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돌봄 | 국공립어린이집 | 27 | 35 | 0.53 | 0.85 |
| | 돌봄교실 | 24 | 27 | 0.47 | 0.66 |
| | 보육교사 | 16 | 7 | 0.31 | 0.17 |
| | 유연근무제 | 15 | 7 | 0.29 | 0.17 |
| | 아동수당 | 10 | 2 | 0.20 | 0.05 |
| 대학교육 | 대학구조조정 | 32 | 31 | 0.63 | 0.76 |
| | 입시개혁 | 29 | 28 | 0.57 | 0.68 |
| | 국립대 육성 | 14 | 10 | 0.27 | 0.24 |
| | 4차산업혁명 | 10 | 6 | 0.20 | 0.15 |
| | 국가장학금 확대 | 8 | 3 | 0.16 | 0.07 |
| 초중등 교육 | 사교육비 경감 | 32 | 34 | 0.63 | 0.83 |
| | 민주시민교육 | 27 | 29 | 0.53 | 0.71 |
| | 자사고/특목고 | 21 | 11 | 0.41 | 0.27 |
| | 학제개편 | 8 | 3 | 0.16 | 0.07 |
| | 혁신학교 | 5 | 0 | 0.10 | 0.00 |
| 교육 거버넌스 | 교육부 | 36 | 39 | 0.71 | 0.95 |
| | 시도교육청 | 22 | 23 | 0.43 | 0.56 |
| | 국가교육위원회 | 17 | 8 | 0.33 | 0.20 |
| | 전교조 | 11 | 7 | 0.22 | 0.17 |
| | 교육감 선거 | 7 | 1 | 0.14 | 0.02 |
| 교육 인프라 | 학교인프라 개선 | 32 | 36 | 0.63 | 0.88 |
| | 교원양성체계 개편 | 30 | 28 | 0.59 | 0.68 |
| | 안전한 학교 | 23 | 13 | 0.45 | 0.32 |
| | 각종 고시 부활 | 8 | 1 | 0.16 | 0.02 |
| 청년 일자리 | 공정채용 | 28 | 32 | 0.55 | 0.78 |
| | 비정규직 감소 | 25 | 22 | 0.49 | 0.54 |
| | 지역인재채용 | 19 | 18 | 0.37 | 0.44 |
| | 창업지원 | 13 | 6 | 0.25 | 0.15 |
| | 청년고용할당 | 9 | 0 | 0.18 | 0.00 |
| 여성고용 | 경력단절여성 | 26 | 29 | 0.51 | 0.71 |
| | 성별 임금격차 | 23 | 20 | 0.45 | 0.49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3 | 20 | 0.45 | 0.49 |
| | 취약계층여성 | 17 | 6 | 0.33 | 0.15 |
| | 비정규직 여성 | 2 | 3 | 0.04 | 0.07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노인 일자리 | 취업지원제도 | 32 | 37 | 0.63 | 0.90 |
| |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 31 | 27 | 0.61 | 0.66 |
| | 정부사업 일자리 | 17 | 10 | 0.33 | 0.24 |
| | 자영업 지원 | 8 | 3 | 0.16 | 0.07 |
| | 수당인상 | 5 | 2 | 0.10 | 0.05 |
| 노동자 안전망 | 사망사고 책임 강화 | 32 | 31 | 0.63 | 0.76 |
| | 근로감독 강화 | 20 | 25 | 0.39 | 0.61 |
| | 노동시간 단축 | 17 | 12 | 0.33 | 0.29 |
| | 실업급여 확대 | 12 | 8 | 0.24 | 0.20 |
| | 최저임금 인상 | 12 | 4 | 0.24 | 0.10 |
| 노동현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30 | 33 | 0.59 | 0.80 |
| | 직업훈련 강화 | 22 | 21 | 0.43 | 0.51 |
| | 고용유연화 | 15 | 15 | 0.29 | 0.37 |
| | 연공서열제 개혁 | 15 | 10 | 0.29 | 0.24 |
| | 노동이사제 | 7 | 1 | 0.14 | 0.02 |
| 청년 복지 | 학자금 대출 | 21 | 25 | 0.41 | 0.61 |
| | 청년실업부조 | 21 | 29 | 0.41 | 0.71 |
| | 청년구직수당 | 20 | 15 | 0.39 | 0.37 |
| | 최저임금 | 18 | 8 | 0.35 | 0.20 |
| | 대학등록금 | 11 | 3 | 0.22 | 0.07 |
| 청년 주거 | 청년공공주택 | 30 | 33 | 0.59 | 0.80 |
| | 주거금융 지원 | 25 | 28 | 0.49 | 0.68 |
| | 1인 가구 | 21 | 14 | 0.41 | 0.34 |
| | 신혼부부 | 14 | 4 | 0.27 | 0.10 |
| | 대학 기숙사 | 3 | 1 | 0.06 | 0.02 |
| 젠더 갈등 | 성차별 인식 격차 | 33 | 33 | 0.65 | 0.80 |
| | 여성가족부 | 27 | 23 | 0.53 | 0.56 |
| | 젠더폭력 | 22 | 13 | 0.43 | 0.32 |
| | 여성할당제 | 13 | 8 | 0.25 | 0.20 |
| | 군복무 | 7 | 3 | 0.14 | 0.07 |
| 여성 안전 | 디지털성범죄 | 33 | 39 | 0.65 | 0.95 |
| | 폭력예방교육 | 19 | 22 | 0.37 | 0.54 |
| | CCTV | 15 | 12 | 0.29 | 0.29 |
| | 안심귀가서비스 | 12 | 5 | 0.24 | 0.12 |
| | 성매매 | 10 | 2 | 0.20 | 0.05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여성 건강 | 건강검진 확대 | 30 | 33 | 0.59 | 0.80 |
| | 분만인프라 구축 | 24 | 28 | 0.47 | 0.68 |
| | 생리대 지원 | 17 | 11 | 0.33 | 0.27 |
| | 여성 관련 암 예방 | 15 | 7 | 0.29 | 0.17 |
| | 외모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 4 | 1 | 0.08 | 0.02 |
| 저출산 | 육아휴직 | 33 | 38 | 0.65 | 0.93 |
| | 출산휴가 | 28 | 32 | 0.55 | 0.78 |
| | 난임시술비 지원 | 12 | 5 | 0.24 | 0.12 |
| | 다자녀 장학금 | 10 | 4 | 0.20 | 0.10 |
| | 산후조리비용 | 2 | 1 | 0.04 | 0.02 |
| 여성 대표성/성평등 | 여성가족부 | 21 | 26 | 0.41 | 0.63 |
| | 성평등위원회 | 20 | 26 | 0.39 | 0.63 |
| | 비례대표제 | 18 | 14 | 0.35 | 0.34 |
| | 여성관리자 | 13 | 7 | 0.25 | 0.17 |
| |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 11 | 5 | 0.22 | 0.12 |
| 노인 돌봄 | 치매 | 23 | 28 | 0.45 | 0.68 |
| | 의료비 부담 경감 | 21 | 26 | 0.41 | 0.63 |
|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19 | 15 | 0.37 | 0.37 |
| | 국공립요양시설 | 16 | 6 | 0.31 | 0.15 |
|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10 | 5 | 0.20 | 0.12 |
| 노인 주거/교통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34 | 35 | 0.67 | 0.85 |
| | 맞춤형 공동주택 | 27 | 31 | 0.53 | 0.76 |
| | 영구임대주택 | 24 | 12 | 0.47 | 0.29 |
| | 농어촌 공영택시 | 5 | 2 | 0.10 | 0.05 |
| | 무상교통 | 1 | 0 | 0.02 | 0.00 |
| 노인 여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34 | 0.59 | 0.83 |
| | 존엄한 죽음 | 24 | 22 | 0.47 | 0.54 |
| | 노인생활체육 | 17 | 15 | 0.33 | 0.37 |
| | 평생교육 | 15 | 8 | 0.29 | 0.20 |
| | 경로당 개편 | 5 | 1 | 0.10 | 0.02 |
| 노후 보장(고령화) | 국민연금강화 | 27 | 33 | 0.53 | 0.80 |
| | 기초연금액 인상 | 23 | 20 | 0.45 | 0.49 |
| | 정년연장 | 21 | 19 | 0.41 | 0.46 |
| | 퇴직연금강화 | 13 | 3 | 0.25 | 0.07 |
|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6 | 3 | 0.12 | 0.07 |

## 6. 문화/체육/관광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문화사회 | 디지털 문화화 | 34 | 36 | 0.67 | 0.88 |
| | 지역문화 발전 | 33 | 35 | 0.65 | 0.85 |
| | 비대면 문화화 | 19 | 6 | 0.37 | 0.15 |
| 문화경제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 | 37 | 34 | 0.73 | 0.83 |
| | K-콘텐츠산업 진흥 | 31 | 33 | 0.61 | 0.80 |
| | 저작권 확충 | 18 | 7 | 0.35 | 0.17 |
| 문화외교 | 국제 문화교류 | 30 | 34 | 0.59 | 0.83 |
| | 신한류 확산 | 26 | 29 | 0.51 | 0.71 |
| | 전통문화 계승·홍보 | 26 | 13 | 0.51 | 0.32 |
| 문화시민 | 문화인프라 확충 | 42 | 35 | 0.82 | 0.85 |
| | 문화소비 지원 강화 | 22 | 26 | 0.43 | 0.63 |
| |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21 | 14 | 0.41 | 0.34 |
| 언론개혁 | 가짜뉴스 | 33 | 35 | 0.65 | 0.85 |
| | 언론중재법 | 24 | 28 | 0.47 | 0.68 |
| | 징벌적 손배 | 18 | 10 | 0.35 | 0.24 |
| | 편집권 독립 | 9 | 3 | 0.18 | 0.07 |
| | 지역언론 지원 | 5 | 2 | 0.10 | 0.05 |
| | 미디어바우처제 | 2 | 0 | 0.04 | 0.00 |
| 방송개혁 | 공영방송 독립성 | 43 | 39 | 0.84 | 0.95 |
| | 광고운영 규제 | 26 | 28 | 0.51 | 0.68 |
| | 방송수신료제 | 20 | 10 | 0.39 | 0.24 |
| 포털개혁 | 포털 뉴스편집 폐지 | 32 | 33 | 0.63 | 0.80 |
| | 알고리즘 공개 | 30 | 30 | 0.59 | 0.73 |
| | 댓글 실명제 | 14 | 11 | 0.27 | 0.27 |
| | 아웃링크 도입 | 13 | 4 | 0.25 | 0.10 |
| 생활 스포츠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 | 41 | 37 | 0.80 | 0.90 |
| |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 | 28 | 25 | 0.55 | 0.61 |
| | 지역체육 공동체화 | 20 | 14 | 0.39 | 0.34 |
| 스포츠 경제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 | 29 | 34 | 0.57 | 0.83 |
| | 융복합 사업화 | 28 | 28 | 0.55 | 0.68 |
| | 지역·사회적 자본화 | 28 | 16 | 0.55 | 0.39 |
| 스포츠 외교 | 스포츠 교류협력 | 44 | 38 | 0.86 | 0.93 |
| | 스포츠 한류 | 26 | 30 | 0.51 | 0.73 |
|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13 | 6 | 0.25 | 0.15 |
| 국제관광 | K-관광 콘텐츠 개발 | 40 | 38 | 0.78 | 0.93 |
| | 방역 인프라 | 18 | 22 | 0.35 | 0.54 |
| |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 | 18 | 14 | 0.35 | 0.34 |
| | 국제행사 유치 | 13 | 2 | 0.25 | 0.05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국내관광 | 로컬관광 | 43 | 39 | 0.84 | 0.95 |
| | 교통숙박 연계 관광 | 38 | 36 | 0.75 | 0.88 |
| | 안보관광 자원개발 | 6 | 1 | 0.12 | 0.02 |
| 산업관광 | 의료관광 | 28 | 30 | 0.55 | 0.73 |
| | 4차산업 체험관광 | 25 | 29 | 0.49 | 0.71 |
| |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 | 20 | 12 | 0.39 | 0.29 |
| | 교육관광 | 11 | 2 | 0.22 | 0.05 |

## 7. 과학기술/정보통신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기초/기반연구 | 생명과학 | 33 | 33 | 0.65 | 0.80 |
| | ICT/융합 | 22 | 31 | 0.43 | 0.76 |
| | 컴퓨팅 인프라 | 13 | 8 | 0.25 | 0.20 |
| | 항공우주 | 13 | 3 | 0.25 | 0.07 |
| | 의약학 | 12 | 5 | 0.24 | 0.12 |
| | 공학 | 2 | 0 | 0.04 | 0.00 |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AI) | 30 | 38 | 0.59 | 0.93 |
| | 빅데이터 | 19 | 28 | 0.37 | 0.68 |
| | 블록체인 | 11 | 7 | 0.22 | 0.17 |
| | 규제혁신 | 10 | 3 | 0.20 | 0.07 |
| | 디지털혁신 | 10 | 2 | 0.20 | 0.05 |
| | 일자리미래 | 8 | 2 | 0.16 | 0.05 |
| | 미래차 | 7 | 0 | 0.14 | 0.00 |
| SW/인공지능(AI) | 융합적 사고력 | 30 | 32 | 0.59 | 0.78 |
| | 교육 및 인력양성 | 29 | 30 | 0.57 | 0.73 |
| | 인공지능 윤리 | 17 | 8 | 0.33 | 0.20 |
| | 코딩교육 | 11 | 9 | 0.22 | 0.22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5 | 1 | 0.10 | 0.02 |
| | 특허권 | 0 | 0 | 0.00 | 0.00 |
| 지식재산 | 핵심/원천기술 | 34 | 40 | 0.67 | 0.98 |
| | 기술보호/활용 | 22 | 27 | 0.43 | 0.66 |
| | 혁신기술 | 18 | 9 | 0.35 | 0.22 |
| | 국제표준화 | 11 | 3 | 0.22 | 0.07 |
| | 영업비밀/특허침해 | 7 | 1 | 0.14 | 0.02 |
| | 특허 부가가치 | 2 | 0 | 0.04 | 0.00 |
| R&D | 자율성확대 | 29 | 30 | 0.57 | 0.73 |
| | 연구개발비 | 24 | 30 | 0.47 | 0.73 |
| | 민관협력/투자확대 | 21 | 16 | 0.41 | 0.39 |
| | 연구윤리 | 8 | 3 | 0.16 | 0.07 |
| | 국방R&D | 4 | 1 | 0.08 | 0.02 |
| | 지역/관료주도형R&D | 3 | 0 | 0.06 | 0.00 |
| | 기술규제 | 2 | 0 | 0.04 | 0.00 |
| | 예비타당성 | 2 | 0 | 0.04 | 0.00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격차해소 | 26 | 33 | 0.51 | 0.80 |
|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18 | 27 | 0.35 | 0.66 |
|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 16 | 12 | 0.31 | 0.29 |
| | 메타버스 | 11 | 2 | 0.22 | 0.05 |
| | 비대면산업 | 11 | 3 | 0.22 | 0.07 |
| | 지능형 정부 | 9 | 3 | 0.18 | 0.07 |
| | 5G 고속도로 | 2 | 0 | 0.04 | 0.00 |
| 디지털 무역 (DEPA) | 글로벌 빅데이터 | 22 | 29 | 0.43 | 0.71 |
| | 초국가 전자상거래 | 15 | 24 | 0.29 | 0.59 |
| | 디지털 무역협정 | 14 | 9 | 0.27 | 0.22 |
| | 디지털 콘텐츠 수출 | 14 | 8 | 0.27 | 0.20 |
| | 디지털세 | 13 | 5 | 0.25 | 0.12 |
| | 디지털 통화 | 10 | 3 | 0.20 | 0.07 |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26 | 40 | 0.51 | 0.98 |
| | 보이스피싱 | 17 | 16 | 0.33 | 0.39 |
| | 개인정보유출 | 17 | 13 | 0.33 | 0.32 |
| | 데이터보호 | 15 | 11 | 0.29 | 0.27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 | 0 | 0.08 | 0.00 |
| 디지털 경제 | 디지털화폐 | 25 | 28 | 0.49 | 0.68 |
| | 디지털커머스 | 24 | 30 | 0.47 | 0.73 |
| | 데이터경제 | 22 | 17 | 0.43 | 0.41 |
| | 핀테크 | 12 | 5 | 0.24 | 0.12 |
| | 구독경제 | 6 | 0 | 0.12 | 0.00 |

## 8. 보건의료/환경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코로나19 | 백신접종 | 28 | 33 | 0.55 | 0.80 |
| | 방역/K-방역 | 24 | 24 | 0.47 | 0.59 |
| | 백신생산 | 18 | 12 | 0.35 | 0.29 |
| | 백신주권 | 15 | 11 | 0.29 | 0.27 |
| | 백신여권 | 5 | 0 | 0.10 | 0.00 |
| | 거리두기 | 5 | 0 | 0.10 | 0.00 |
| 질병관리 | 감염병예방 | 29 | 37 | 0.57 | 0.90 |
| | 국가검진사업 | 22 | 28 | 0.43 | 0.68 |
| | 의료비지원 | 16 | 9 | 0.31 | 0.22 |
| | 예방접종 | 14 | 3 | 0.27 | 0.07 |
| | 호스피스/완화의료 | 10 | 3 | 0.20 | 0.07 |
|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 | 28 | 34 | 0.55 | 0.83 |
| | 재정적자 | 21 | 32 | 0.41 | 0.78 |
| | 보험료 인상 | 16 | 7 | 0.31 | 0.17 |
| | 임신/출산비지원 | 16 | 6 | 0.31 | 0.15 |
| 공공의료 | 공공병원 | 25 | 30 | 0.49 | 0.73 |
| | 지방의료원육성 | 23 | 22 | 0.45 | 0.54 |
| | 공공의대 | 16 | 13 | 0.31 | 0.32 |
| | 의료질 | 11 | 8 | 0.22 | 0.20 |
| | 과잉진료/과소진료 | 10 | 5 | 0.20 | 0.12 |
| | 의대정원 | 7 | 2 | 0.14 | 0.05 |
| 의료개혁 | 의료법개정 | 27 | 29 | 0.53 | 0.71 |
| | 수술실 CCTV | 21 | 20 | 0.41 | 0.49 |
| | 의료권력 | 21 | 18 | 0.41 | 0.44 |
| | 의료수가 | 19 | 13 | 0.37 | 0.32 |
| | 의료파업 | 4 | 0 | 0.08 | 0.00 |
| 기후변화/위기 | 지구온난화 | 34 | 36 | 0.67 | 0.88 |
| | 탄소중립 | 25 | 23 | 0.49 | 0.56 |
| | 지속가능발전 | 25 | 20 | 0.49 | 0.49 |
| | 탄소배출권 | 4 | 2 | 0.08 | 0.05 |
| | 화석연료 | 3 | 0 | 0.06 | 0.00 |
| | 탄소국경세 | 0 | 0 | 0.00 | 0.00 |

| 상위 키워드 | 하위 키워드 | 응답 수 | | 응답률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 자원순환 | 미세플라스틱 | 22 | 35 | 0.43 | 0.85 |
| | 폐기물부담금 | 13 | 18 | 0.25 | 0.44 |
| | 업사이클링 | 11 | 11 | 0.22 | 0.27 |
| | 순환센터 | 9 | 2 | 0.18 | 0.05 |
| | 제로웨이스트 | 6 | 1 | 0.12 | 0.02 |
| | 폐기물 재활용 | 30 | 14 | 0.59 | 0.34 |
| 그린뉴딜 | 신재생에너지 | 30 | 35 | 0.59 | 0.85 |
| | 탄소중립 | 20 | 33 | 0.39 | 0.80 |
| | 녹색산업 | 13 | 8 | 0.25 | 0.20 |
| | 순환경제 | 9 | 2 | 0.18 | 0.05 |
| | 수소경제 | 9 | 3 | 0.18 | 0.07 |
| | 도시숲 | 6 | 0 | 0.12 | 0.00 |
| | 스마트그리드 | 5 | 0 | 0.10 | 0.00 |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42 | 38 | 0.82 | 0.93 |
| | (중국발) 황사 | 21 | 24 | 0.41 | 0.59 |
| | 한중협력 | 13 | 10 | 0.25 | 0.24 |
| | 저감조치 | 12 | 9 | 0.24 | 0.22 |
| | 산성비 | 2 | 0 | 0.04 | 0.00 |
| | 저녹스보일러 | 1 | 0 | 0.02 | 0.00 |
| 해양/<br>수자원 | 해양생태계 | 26 | 31 | 0.51 | 0.76 |
| | 해양오염 | 26 | 31 | 0.51 | 0.76 |
| | 해양폐기물 | 20 | 15 | 0.39 | 0.37 |
| | 상/하수도 | 14 | 2 | 0.27 | 0.05 |
| | 지하수 | 6 | 2 | 0.12 | 0.05 |

부록 5.

# 정책영역별 최종 키워드

## 1) 정치/행정/사법

| 정치개혁 | 사법개혁 | 개헌 | 지방자치 | 사회안전 |
|---|---|---|---|---|
| 1) 선거제도 개혁 | 1) 검찰개혁 | 1) 권력구조 | 1) 지방정부 | 1) 치안 |
| · (연동형)비례대표제<br>· 선거구획정<br>· 여성대표성<br>· 선거공영제<br>· 투표시간<br>· 표현의 자유 확대<br>· 사전선거운동 기간 | · 검찰수사권조정<br>·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br>· 검사장 직선제 | · 대통령연임제<br>· 의원내각제<br>· 준대통령제 |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br>· 지방정부 입법<br>· 지방정부 법제<br>· 지방행정체계 개편 | · 디지털 성범죄<br>· 아동 폭력<br>· 지능범죄<br>· 코로나19 관련 위법<br>· 데이트 폭력 |
| 2) 정당개혁 | 2) 법원개혁 | 2) 기본권 | 2) 지방의회 | 2) 교통안전 |
| · 국고보조금개선<br>· 정치자금법<br>· 공천제도<br>· 지구당 복원 | · 법관인사위원회 독립성<br>· 판결문 공개<br>· 국민참여재판<br>· 무작위사건배당 | · 주거권<br>· 생명권<br>· 정보기본권<br>· 안전권 | · 정책역량 강화<br>· 구성원 전문성<br>· 지방의회 다양화<br>· 사무직 인사권 | · 전기차 및 자율주행<br>·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br>· 스쿨존 교통안전 |
| 3) 국회개혁 | 3) 경찰개혁 | 3) 직접민주주의 | 3) 균형발전 | 3) 재난안전 |
| · 인사청문회<br>· 상시국정감사제<br>· 행정입법감독<br>· 국회국민청원<br>· 불체포특권 | · 정보수사분리<br>· 지방자치경찰<br>· 경찰대 폐지 | · 국민소환제<br>· 주민투표제 강화<br>· 주민참여예산제<br>· 국민발안제<br>**4) 경제민주주의**<br>· 경제민주화<br>· 동반상생성장<br>· 토지공개념<br>· 소비자보호 (소비자주권)<br>· 사회적경제 | · 수도권과밀화 해소<br>· 지역혁신성장 거점조성<br>· 행정수도 이전 | · 기후변화<br>· 재난 불평등<br>· 위험방지체계<br>· 총체적 지역접근 |

## 2) 재정/경제/복지

| 조세 | 재정 | 공정거래 | 사회복지 | 사회적경제 |
|---|---|---|---|---|
| 1) 조세정책 기조 | 1) 재정건전화 | 1) 재벌규제 | 1) 소득보장 | 1) 제도 |
| · 공평과세<br>· 증세논쟁<br>· 조세부담율<br>· 직·간접세비율 | · 국가부채비율<br>· 통합재정수지<br>· 재정준칙 법제화 | · 일감몰아주기<br>· 총수지배약화<br>· 금산분리 | · 기초생활보장제<br>· 기본소득<br>· 부(負)의 소득세<br>· 근로장려금<br>· 기초자산 | · 법률 정비<br>· 기금조성<br>· 교육과정 확대<br>· 공공부문 ESG원칙 도입 |
| 2) 기업과세 | 2) 재정 효율화 방안 | 2)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 2) 연금 | 2) 기업지원 |
| · 법인세율<br>· 일감몰아주기과세<br>· 법인세공제 | · 조세탈루억제<br>· 세출개혁<br>· 예비타당성조사<br>· 국유자산관리 | · 기술보호<br>· 집단소송제<br>· 전자금융소비자 보호<br>· 공공조달 | · 국민연금 개혁<br>· 기초연금<br>· 직역연금개혁 | · 기업활성화<br>· 지역사회 확산<br>· 판로지원<br>· ESG관련 기업지원 강화 |
| 3) 개인과세 | 3) 포용적 재정운영 | 3) 소상공인 지원 | 3) 아동/육아 | 3) 지역공동체 활성화 |
| · 부유세<br>· 상속·증여세<br>· 금융과세<br>· 소득과세 | · 복지재정<br>· 균형발전예산<br>· 국민참여예산 | · 코로나19 관련 지원<br>· 지역상권 활성화<br>· 사회안전망 | · 보육서비스<br>· 육아휴직<br>· 아동수당 | · 보호계층 일자리 확대<br>· 취약계층 금융지원<br>· 도시재생 |

## 3) 국방/통일/외교통상

| 통일 및 남북관계 | 국방 | 외교/안보 | 통상 |
|---|---|---|---|
| **1) 비핵화** | **1) 국방개혁** | **1) 한미동맹** | **1) 미중무역갈등** |
| · 비핵화 프로세스<br>· 6자회담<br>· CVID/PVID<br>· 대북제재 | · 군처우개선(군인권)<br>· 방산비리개혁<br>· 징병제/모병제 | · 전시작전권환수<br>· 주한미군 지위협정<br>· 한미연합훈련<br>· 쿼드<br>· 한미미사일지침 | · 반도체 경쟁<br>· 보호무역<br>· 수출입규제 |
| **2) 한반도 평화체제** | **2) 북핵문제** | **2) 한중관계** | **2) 환경기준 강화** |
| · 남북대화<br>· 평화프로세스<br>· 북미대화<br>· 남북미정상회담 | · 한미동맹<br>· 미중협력/미중관계<br>· 북미회담 | · 미중패권경쟁<br>· 북한문제<br>· 사드갈등<br>· 반중여론<br>· 문화공정 | · EU 탄소배출 강화<br>· 탄소국경조정제도<br>· 유럽 그린딜<br>· USMCA 환경기준 강화 |
| **3) 종전선언** | **3) 자주국방** | **3) 한일관계** | **3) 자유무역협정** |
| · 정전협정/체제<br>· 평화협정<br>· 9.19 군사합의 | · 방위산업 육성<br>· 전시작전권 환수<br>· KAMD/Kill-chain<br>· 주한미군 | · 위안부/강제징용<br>· 후쿠시마 오염수<br>· 역사문제<br>· 정상회담<br>·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 · 동아시아FTA<br>· RCEP/CPTPP<br>· 한미FTA<br>· 한중FTA |

<table>
<tr><th>통일 및 남북관계</th><th>국방</th><th>외교/안보</th><th>통상</th></tr>
<tr><td>4) 남북교류협력</td><td>4) K-방산</td><td>4) 공공외교</td><td>4) 무역장벽확대</td></tr>
<tr><td>· 이산가족<br>· 남북철도연결<br>· 생태계 복원/DMZ<br>· 스포츠교류/단일팀</td><td>· 기술국산화<br>· 우주산업/개발<br>· 차세대 전투기<br>· 방산수출</td><td>· K-pop/한류<br>· 문화외교<br>· 국가브랜드</td><td>· 환경규제<br>· 기술규제<br>· 비관세규제</td></tr>
<tr><td>5) 남북경협</td><td>5) 사이버안보</td><td>5) 개발협력</td><td>5) 디지털 무역(DEPA)</td></tr>
<tr><td>· 개성공단<br>· 남북교역<br>· 금강산관광<br>· 경제특구</td><td rowspan="4">·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br>· 국가사이버안보전략<br>· 사이버 보안<br>· 사이버공격 대응</td><td>· ODA(공적개발원조)<br>· 다자개발협력<br>· 인도적 지원</td><td>· 글로벌 빅데이터<br>· 디지털세<br>· 초국가 전자상거래</td></tr>
<tr><td>6) 통일 인식</td><td>6) 다자외교</td><td>6) GVC 재편</td></tr>
<tr><td rowspan="3">· 통일교육<br>· 북한이탈자주민<br>· 평화인식<br>· 북한인권<br>· 대북인식</td><td>· 다자안보협력<br>· 중견국외교(믹타)<br>· 신남방/신북방정책<br>· 동북아 지역 안보</td><td rowspan="3">· 기술패권경쟁<br>· 디커플링(탈중국화)<br>· 디지털 전환</td></tr>
<tr><td>7) 재외국민</td></tr>
<tr><td>· 재외국민보호<br>· 재외국민선거<br>· 한상네트워크</td></tr>
</table>

## 4) 산업자원/건설교통

| 산업자원(에너지) | 건설교통 및 부동산 | 농업해양수산 |
|---|---|---|
| **1) 제조업 지원** | **1) 주거안정** | **1) 농수산인 소득보전** |
| · 차세대 산업 지원<br>· 부품소재 국산화<br>· 혁신 클러스터<br>· 스마트공장 | · 공공임대주택<br>· 도심 재건축<br>· 주거비지원<br>· 신도시건설<br>·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상향 | · 농산물 수급안정<br>· 자연재난시 농가구호<br>· 농산물 가격보존<br>· 농가 직불제 |
| **2)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 **2) 부동산세제 및 규제** | **2) 가축전염병** |
| · 고용지원<br>· 창업지원<br>· 수출지원<br>· 물류유통지원 | · 보유세<br>· 임대차규제<br>· 거래세<br>· 대출규제 | · 가축 방역<br>· 동식물검역<br>· 살처분보상<br>· 가축백신지원 |
| **3) 신재생에너지** | **3) 교통 인프라** | **3) 농식품안전** |
| · 신재생에너지 확대<br>· 탄소중립<br>· 저탄소 산업 육성<br>· 탈원전 | · 광역도로교통망 확충<br>· 수도권 GTX 확충<br>· 철도교통 확충<br>· 고속도로 지하화<br>· 공항 및 항만 확충 | · 축산물안전인증제<br>· 농산물위생검사<br>· 축산물이력관리 |
| | **4) 건설산업지원** | **4) 스마트농업** |
| | · 공정건설계약<br>· 하도급규제<br>· 건설근로자 권익보호<br>· 해외시장진출 지원 | · 식품 R&D<br>· 스마트팜<br>· 식품수출단지<br>· 식품테마파크 |

## 5) 교육/인적 자원

| 교육 | 노동 | 청년 및 여성 | 노인/고령화 |
|---|---|---|---|
| 1) 돌봄 | 1) 청년 일자리 | 1) 청년 복지 | 1) 노인 돌봄 |
| · 국공립어린이집<br>· 돌봄교실<br>· 보육교사<br>· 유연근무제<br>· 아동수당 | · 공정채용<br>· 비정규직 감소<br>· 지역인재채용<br>· 창업지원<br>· 청년고용할당 | · 청년실업부조<br>· 학자금 대출<br>· 청년구직수당<br>· 최저임금<br>· 대학등록금 | · 치매<br>· 의료비 부담 경감<br>· 찾아가는 돌봄서비스<br>· 국공립요양시설<br>·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 2) 대학교육 | 2) 여성 고용 | 2) 청년 주거 | 2) 노인 주거/교통 |
| · 대학구조조정<br>· 입시개혁<br>· 국립대 육성<br>· 4차산업혁명<br>· 국가장학금 확대 | · 경력단절여성<br>· 성별 임금격차<br>· 포괄적 차별금지법<br>· 취약계층여성<br>· 비정규직 여성 | · 청년공공주택<br>· 주거금융 지원<br>· 1인가구<br>· 신혼부부<br>· 대학 기숙사 | · 독거노인<br>주거환경 개선<br>· 맞춤형 공동주택<br>· 영구임대주택<br>· 농어촌 공영택시<br>· 무상교통 |
| 3) 초중등교육 | 3) 노인 일자리 | 3) 젠더 갈등 | 3) 노인 여가 |
| · 사교육비 경감<br>· 민주시민교육<br>· 자사고/특목고<br>· 학제개편<br>· 혁신학교 | · 취업지원제도<br>· 고령친화적<br>사업장 구축<br>· 정부사업 일자리<br>· 자영업 지원<br>· 수당인상 | · 성차별 인식 격차<br>· 여성가족부<br>· 젠더폭력<br>· 여성할당제<br>· 군복무 | · 지역사회 프로그램<br>· 존엄한 죽음<br>· 노인생활체육<br>· 평생교육<br>· 경로당 개편 |

<table>
<tr><th>교육</th><th>노동</th><th>청년 및 여성</th><th>노인/고령화</th></tr>
<tr><td>4) 교육거버넌스</td><td>4) 노동자 안전망</td><td>4) 여성 안전</td><td>4) 노후 보장(고령화)</td></tr>
<tr><td>· 교육부<br>· 시도교육청<br>· 국가교육위원회<br>· 전교조<br>· 교육감 선거</td><td>· 사망사고 책임 강화<br>· 근로감독 강화<br>· 노동시간 단축<br>· 실업급여 확대<br>· 최저임금 인상</td><td>· 디지털성범죄<br>· 폭력예방교육<br>· CCTV<br>· 안심귀가서비스<br>· 성매매</td><td rowspan="8">· 국민연금강화<br>· 기초연금액 인상<br>· 정년연장<br>· 퇴직연금강화<br>· 연령차별금지 법제화</td></tr>
<tr><td>5) 교육인프라</td><td>5) 노동현안</td><td>5) 여성 건강</td></tr>
<tr><td rowspan="6">· 학교인프라 개선<br>· 교원양성체계 개편<br>· 안전한 학교<br>· 각종 고시 부활</td><td rowspan="6">· 플랫폼 노동자 보호<br>· 직업훈련 강화<br>· 고용유연화<br>· 연공서열제 개혁<br>· 노동이사제</td><td>· 건강검진 확대<br>· 분만인프라 구축<br>· 생리대 지원<br>· 여성 관련 암 예방<br>· 외모 관련<br>미디어 가이드라인</td></tr>
<tr><td>6) 저출산</td></tr>
<tr><td>· 육아휴직<br>· 출산휴가<br>· 난임시술비 지원<br>· 다자녀 장학금<br>· 산후조리비용</td></tr>
<tr><td>7) 여성 대표성/성평등</td></tr>
<tr><td>· 여성가족부<br>· 성평등위원회<br>· 비례대표제<br>· 여성관리자<br>·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td></tr>
</table>

##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 문화 | 언론 및 방송 | 스포츠 | 관광 |
|---|---|---|---|
| 1) 문화사회 | 1) 언론개혁 | 1) 생활스포츠 | 1) 국제관광 |
| · 디지털 문화화<br>· 지역문화 발전<br>· 비대면 문화화 | · 가짜뉴스<br>· 언론중재법<br>· 징벌적 손배<br>· 편집권 독립<br>· 지역언론 지원<br>· 미디어바우처제 | · 지역스포츠 인프라 확충<br>· 아마추어 체육교육 다양화<br>· 지역체육 공동체화 | · K-관광 콘텐츠 개발<br>· 방역 인프라<br>· 외국인관광 지원인프라<br>· 국제행사 유치 |
| 2) 문화경제 | 2) 방송개혁 | 2) 스포츠경제 | 2) 국내관광 |
| · 융복합 문화인재 양성<br>· K-콘텐츠산업 진흥<br>· 저작권 확충 | · 공영방송 독립성<br>· 광고운영 규제<br>· 방송수신료제 |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화<br>· 융복합 사업화<br>· 지역·사회적 자본화 | · 로컬관광<br>· 교통숙박 연계 관광<br>· 안보관광 자원개발 |
| 3) 문화외교 | 3) 포털개혁 | 3) 스포츠 외교 | 3) 산업관광 |
| · 국제 문화교류<br>· 신한류 확산<br>· 전통문화 계승·홍보 | · 포털 뉴스편집 폐지<br>· 알고리즘 공개<br>· 댓글 실명제<br>· 아웃링크 도입 | · 스포츠 교류협력<br>· 스포츠 한류<br>·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 · 의료관광<br>· 4차산업 체험관광<br>· 산업현장 및 상품관광<br>· 교육관광 |
| 4) 문화시민 | | | |
| · 문화인프라 확충<br>· 문화소비 지원 강화<br>· 문화가치 회복 및 확산 | | | |

## 7) 과학기술/정보통신

<table>
<tr><th>과학기술</th><th>연구환경</th><th>정보통신</th></tr>
<tr><td>1) 기초/기반연구</td><td>1) 지식재산</td><td>1) 디지털뉴딜</td></tr>
<tr><td>· 생명과학<br>· ICT/융합<br>· 컴퓨팅 인프라</td><td>· 핵심/원천기술<br>· 기술보호/활용<br>· 혁신기술</td><td>· 디지털 격차해소<br>· D.N.A<br>(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r>·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td></tr>
<tr><td>2) 4차산업혁명</td><td>2) R&D</td><td>2) 디지털무역(DEPA)</td></tr>
<tr><td>· 인공지능(AI)<br>· 빅데이터<br>· 블록체인</td><td rowspan="4">· 자율성확대<br>· 민관협력/투자확대<br>· 연구개발비</td><td>· 글로벌 빅데이터<br>· 초국가 전자상거래<br>· 디지털 무역협정<br>· 디지털콘텐츠 수출</td></tr>
<tr><td>3) SW/인공지능(AI)</td><td>3) 정보보호</td></tr>
<tr><td rowspan="2">· 융합적 사고력<br>· 교육 및 인력양성<br>· 인공지능 윤리</td><td>· 개인정보보호<br>· 보이스피싱<br>· 개인정보유출<br>· 데이터보호</td></tr>
<tr><td>4) 디지털경제</td></tr>
<tr><td></td><td>· 디지털화폐<br>· 디지털커머스<br>· 데이터경제</td></tr>
</table>

## 8) 보건의료/환경

<table>
<tr><th>공중보건</th><th>의료</th><th>환경</th></tr>
<tr><td>1) 코로나19</td><td>1) 건강보험</td><td>1) 기후변화/위기</td></tr>
<tr><td>· 백신접종<br>· 방역/K-방역<br>· 백신생산<br>· 백신주권</td><td>· 보장성 강화<br>· 재정적자</td><td>· 지구온난화<br>· 탄소중립<br>· 지속가능발전</td></tr>
<tr><td>2) 질병관리</td><td>2) 공공의료</td><td>2) 자원순환</td></tr>
<tr><td rowspan="4">· 감염병예방<br>· 국가검진사업<br>· 의료비지원</td><td>· 공공의대<br>· 공공병원<br>· 의료질<br>· 지방의료원육성</td><td>· 미세플라스틱<br>· 폐기물 부담금<br>· 폐기물 재활용<br>· 업사이클링</td></tr>
<tr><td>3) 의료개혁</td><td>3) 그린뉴딜</td></tr>
<tr><td rowspan="2">· 의료법개정<br>· 수술실 CCTV<br>· 의료권력<br>· 의료수가</td><td>· 신재생에너지<br>· 탄소중립<br>· 녹색산업</td></tr>
<tr><td>4) 대기오염</td></tr>
<tr><td></td><td>· 미세먼지<br>· (중국발) 황사<br>· 한중협력<br>· 저감조치</td></tr>
<tr><td></td><td>5) 해양/수자원</td></tr>
<tr><td></td><td>· 해양생태계<br>· 해양오염<br>· 해양폐기물</td></tr>
</table>